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281-10

2018년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이용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이하 시행내용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시행내용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관한 지원사업 등 농업, 축산업, 수산업 및 임업 분야 구조조정사업의 시행 내용을 담아 '9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는 1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2장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3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4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5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2017년 농림수산업 시책 추진 방향,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예산 편성 규모 및 방향을 분석·평가하였습니다. 2장, 3장, 4장, 5장은 2017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배경, 시행내용 및 성과, 향후계획을 담았습니다.

'94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가 설립되었고 4개의 부속서를 통하여 다자간 및 복수국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으로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내용보고서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으로 인한 세계무역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차례

2018년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 1

제1절 2018년 농림수산업 시책 추진 방향	3
1. 농림축산식품 부문	3
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3
나. 농촌형 복지지원 강화	4
다. 농촌 경제 활성화	4
라. 청년층 농업 유입 확대	5
마. 친환경·고품질 먹거리 공급	5
바. 스마트 농업 확산	6
사. 유통구조 개선	6
2. 임업 부문	6
가. 산림자원의 육성 및 산림사업 관리 강화	7
나. 임산업 경쟁력 강화	7
다.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8
라.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생태계 보전	8
마.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9
바. 국제 산림협력 확대	9
사. 산림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10
3. 수산업 부문	10
가. 우리바다 되살리기로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12
나. 양식업의 첨단화로 新성장동력 창출	12
다. 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및 수산식품의 수출산업화	13
라.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어항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	13
제2절 2018년 투융자 실적 및 성과	14
1. 농업·농촌 부문	14
2. 임업·산촌 부문	18
3. 수산업·어촌 부문	20
가. 수산·어촌 투융자 실적	20
나. 수산·어촌 투융자 성과	21

차례

2018년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

제3절 2018년 농림수산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23
1. 농림축산식품 부문	23
2. 임업 부문	27
3. 수산업·어촌 부문	30



제2 장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 33

제1절 협동조합 개혁	35
1. 농협 개혁	35
2. 산림조합 개선	39
3. 수협 개혁	42
제2절 농림수산물 유통 효율화	44
1. 농산물 유통 개혁	44
가.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44
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46
다. 소비자와 산지 간 직접거래 활성화	49
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51
2. 임산물 유통 개선	54
3.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57
제3절 농림수산분야 규제 개혁	59
1. 농림축산식품 부문	59
2. 산림 부문	63
3. 해양수산 부문	67

차례

2018년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



제3 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 71

제1절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	73
1. 농지은행제도	73
2.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	79
3.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81
4. 농업종합자금 제도 개선	84
5. 농업핵심인력 육성	86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86
나. 농업법인 활성화	89
다. 농업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92
라. 농업경영체 컨설팅 활성화	94
6. 독립가 등 입업인력 육성	97
가. 전문입업인 육성	97
나. 기능인 영립단 육성	99
7. 수산업 인력 육성	101
8. 자율관리공동체 운영	104
제2절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107
1. 농업생산기반 확충	107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07
나. 밭 기반 정비사업	108
다.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	110
라. 수리시설 개보수	111
마.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112
바. 농촌용수개발사업	114
사. 대단위 농업개발 및 간척사업	117
2. 농업의 기계화	121
3. 농업시설의 현대화	123
가.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123
나.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124
다. 축산시설 현대화	126
4.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	128
5. 양식시설 현대화	131

차례

2018년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

제3절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132
1. 식품산업의 육성	132
2.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135
3. 종자산업의 육성	138
4. 곤충산업 육성	142
5. 종축산업의 육성	146
6. 수산식품산업 육성	151
7. 관상어 산업의 육성	153
8. 유어산업 활성화 추진	155
제4절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159
1. 농림축산식품기술개발사업 추진	159
2.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163
3. 산림지능정보화 추진	170
4.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추진	176
5. 수산 정보화 촉진	178
제5절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및 효율적 수입관리	182
1. 농식품 수출 확대	182
2. 농림부문 수입관리 대책	186
가.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186
나.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한 수입관리	189
3. 수산물 수출 확대	191
4. 수산부문 수입관리 대책	193
제6절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업환경 보전	197
1.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197
가.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추진	197
나.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확대	201
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203
라.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204
2. 농업환경오염 경감	207
가.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207
나. 친환경 비료 지원	209
3. 농업환경(토양)의 유지·개량	211
4. 친환경어업 육성	212

차례

2018년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

제7절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화	216
1. 농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216
가. 농촌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	216
나. 농업의 6차산업화	219
다. 향토자원 산업화	221
라. 농공단지 조성	225
마. 어촌관광 활성화 및 도어교류 확대	226
바. 어촌 6차산업화 추진	230
사. 특화어항 개발	232
2. 농업의 경영 안정화	234
가. 농업재해보험 확대	234
나.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237
다. 임업재해보험 내실화	238
라. 어업재해보험 확대	240



제4 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 245

제1절 쌀 산업	247
1. 효율적인 수급조절	247
2. 민간유통기능 강화	248
3.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250
4. 쌀 소비 촉진	252
제2절 채소산업	254
1. 노지채소	254
2. 시설채소	256
제3절 과수·화훼산업	259
1. 과수산업	259
2. 화훼산업	261
제4절 축산업	264
1. 한우산업	264
2. 낙농산업	266

차례

2018년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

3. 양돈산업	269
4. 양계산업	270
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71
6.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273
7.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275
8. 가축질병 방역 강화	277
9. 축산물등급판정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282
10. 축산물이력제 추진	285
11.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291
제5절 임업	294
1.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조성	294
가. 산림용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294
나.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299
다. 경제림육성단지 운영활성화	301
라. 숲 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305
2.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309
가.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체계 구축	309
나.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316
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321
라.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324
마.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328
바.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330
사.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332
3.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339
가.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339
나. 임업 기계화 촉진	342
다.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346
라. 단기임산물 소득 증대 및 안정성 강화	348
마. 국산 목재의 이용촉진	351
바. 목재 재활용 촉진 기반 조성	353
4. 살기 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354
가.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354
나. 휴양공간 확충·서비스 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356
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국민건강증진, 산림치유 활성화	359
라. 등산·트레킹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362

차례

2018년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

마. 자연친화적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수목장립 활성화	364
바. 도시림 조성·관리	366
사. 가로수 조성·관리	368
아. 명상숲 조성	373
5.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375
가. 국제기구 설립 및 산림협력 강화	375
나. 해외조립 확대	377
제6절 수산업	379
1.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379
가.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379
나.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	382
다. 국내외 어업질서 확립	389
2. 양식산업 활성화 추진	392
가. 양식산업의 첨단화·규모화 추진	392
나. 내수면 어업 활성화	393
다. 위생협력강화	396
라. 수산물 검역·방역 개선	397
마. 생산단계 안전성 강화	399
바. 지속적인 어장환경 개선	401
3. 수산식품산업 육성	402
가.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402
나. 수산물이력제 사업 확대	403
다. 수산물 소비홍보 촉진 강화	404
라. 수산물 수급안정 대책	406
4. 원양산업 경쟁력 제고	408
가. 원양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408
나. 수산분야 국제협력 강화	410
다. 지속가능한 해외수산자원 확보	416
라. IUU 어업근절 및 통제관리 시스템 구축	419
마. 원양어업 안전관리 체계 구축	421

차례

2018년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 423

제1절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425
1. 일반농산어촌개발	425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430
3. 농촌마을하수도 설치	433
4. 하수처리 등 환경 개선사업	435
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435
나.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	436
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437
제2절 교육여건 개선	439
1. 농어촌 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 운영	439
2.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440
3.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443
제3절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444
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및 개선	444
2.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446
가.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446
나. 의료취약지역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447
다. 공중보건 의사 농어촌 우선배치	448
제4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및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450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450
2. 농촌 보육여건 개선	452
3. 취약농가 인력지원	453
4. 사회적 경제	455

표 차례

2018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표 1-1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15
표 1-2 임업·산촌부문 투융자 내역	18
표 1-3 수산업·어촌부문 투융자 실적	21
표 1-4 농림축산식품부 부문별 재정배분 규모	26
표 1-5 회계별 투융자 내역	27
표 1-6 부문별 투융자 내역	28
표 1-7 수산·어촌 부문 투융자 내역	32
표 2-1 2016~2018년 농축산물 신유통경로 거래액	47
표 2-2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현황	55
표 2-3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56
표 2-4 2018년 산림분야 주요 규제개선 사례	64
표 3-1 농지은행 주요사업 연혁	74
표 3-2 前 농지규모화사업 추진 실적	74
표 3-3 前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실적	75
표 3-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실적	76
표 3-5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임대 추진실적	77
표 3-6 농지연금 월 지급금 예시(중신형 기준, 감정평가)	77
표 3-7 농지연금 사업 추진 실적	78
표 3-8 경영이양 사업추진 실적('97년~'18년)	80
표 3-9 농업종합자금 지원 실적	85
표 3-10 기존 정책자금과 종합자금 지원방식 비교	86
표 3-11 2018년 지역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87
표 3-12 2018년 지역별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88
표 3-13 농업법인 연차별 운영 추이	90
표 3-14 농업법인당 주요 경영지표	91
표 3-15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95
표 3-16 전문임업인육성자금 지원조건	98
표 3-17 최근 3년간 임업기능인 영립단 조직 현황	100
표 3-18 수산업경영인 육성실적	102
표 3-19 귀어·귀촌 지원실적	103
표 3-20 자율관리 참여공동체수	104
표 3-21 2011년~2015년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통한 효과(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106
표 3-22 대구형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108
표 3-23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109
표 3-24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110
표 3-25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111
표 3-26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현황	112

표 차례

2018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표 3-27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113
표 3-28 방조제 개보수 추진현황	114
표 3-29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115
표 3-30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116
표 3-31 소규모 용수개발 추진 현황	116
표 3-32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116
표 3-33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중 지구 개발유형	118
표 3-34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	119
표 3-35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현황	120
표 3-36 연도별 건조·저장시설 지원현황	124
표 3-37 축종별 시설현대화 지원 전·후 생산성 비교	127
표 3-38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예산	127
표 3-39 어촌종합개발사업 개요	128
표 3-40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 지역현황(31개 시·군 124개 읍·면)	129
표 3-41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요	130
표 3-42 작물별 품종보호등록 현황	140
표 3-43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141
표 3-44 연도별 육묘업 등록현황	141
표 3-45 국내 근축산업 현황	143
표 3-46 주요 가축개량 추세	147
표 3-47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국고 지원 현황	152
표 3-48 국내 낚시 인구 현황	156
표 3-49 낚시터, 낚시어선, 유어장 현황	156
표 3-50 농림축산식품 기술개발사업 유형	160
표 3-51 농식품 기술개발 과제관리 현황(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관리)	162
표 3-52 1994~2018년 농식품기술개발 완료과제 성과활용현황	162
표 3-53 국가산림통합정보체계 구성도	172
표 3-54 산림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174
표 3-55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유형	177
표 3-56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과제관리 현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관리, '13.12. 이관)	177
표 3-57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성과현황 (2018년까지)	178
표 3-58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농림축산)	183
표 3-59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184
표 3-60 관세율할당(TRQ) 운용 품목(63개)	187
표 3-61 2018년 수입관리방식별 품목내역	188
표 3-62 2018년 할당관세 운용 현황	189
표 3-63 특별긴급관세(SSG) 품목 및 발동현황	190
표 3-64 수산물 수출 현황	192

표 차례

2018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표 3-65	최근 5년간 조정관세 현황	194
표 3-66	자유무역협정(FTA)별 관세율할당(TRQ) 운영현황	195
표 3-67	2018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예산 현황	199
표 3-68	주요 항목별 추진 성과	200
표 3-69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추진 실적	208
표 3-70	연도별 유기질 비료 지원현황	209
표 3-71	연도별 화학비료 소비 현황	210
표 3-72	연도별 토양개량제 지원현황	212
표 3-73	연도별 사업추진경과 및 실적	215
표 3-74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222
표 3-75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실적	223
표 3-76	농공단지 부처별 지원 현황	225
표 3-77	자매결연 체결 실적	228
표 3-78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태 현황	229
표 3-79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	231
표 3-80	특화어항 개발 개요	233
표 3-81	농작물재해보험 추진 실적	235
표 3-82	가축재해보험 추진 실적	236
표 3-83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현황	239
표 3-84	임업인 재해보험 가입률 현황	239
표 3-85	양식보험 대상품목 현황	241
표 4-1	화훼생산현황	261
표 4-2	농업 중 화훼산업 비중	262
표 4-3	우유 수급상황	267
표 4-4	학교우유급식 우유소비량 현황	268
표 4-5	최근 5년간 우유급식물 변화	268
표 4-6	축산물이력제 단계별 운영현황('18.12월 기준)	289
표 4-7	우수 축산물브랜드 추진 성과	292
표 4-8	산림분야 품종보호 대상 중	296
표 4-9	산림분야 신품종보호 출원현황	296
표 4-10	산림유전자원 보유현황	297
표 4-11	종자 공급원 조성 실적	298
표 4-12	묘목생산 기반조성 사업실적	298
표 4-13	최근 5년간 조림사업 추진 실적	300
표 4-14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현황	303
표 4-15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1998~2018)	306
표 4-16	연도별 임목축적	306

표 차례

2018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표 4-17 제4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	308
표 4-18 2019년 숲가꾸기 추진계획	308
표 4-19 연도별 산불피해 현황	310
표 4-20 최근 10년 원인별·계절별 산불발생 현황	310
표 4-21 산불진화 인력 현황	313
표 4-22 장비 확충 현황	314
표 4-23 최근 5년간 산림병해충 발생현황	317
표 4-24 최근 10년 산사태 피해 현황	321
표 4-25 연도별 사방사업 예산	323
표 4-26 권역별 국립수목원 기능 및 역할	325
표 4-27 산림박물관 개관 현황	326
표 4-28 전국 녹색댐 조성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329
표 4-29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증진	330
표 4-30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실적	331
표 4-31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적	332
표 4-32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면적	333
표 4-33 백두대간보호지역 3차기 자원실태조사	334
표 4-34 정맥 2차기 자원실태조사	334
표 4-35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유토지 매수현황	336
표 4-36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현황	337
표 4-37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현황	337
표 4-38 2018년 임도시설 추진실적	341
표 4-39 2018년 임도시설 추진계획	342
표 4-40 임업기계장비 보유 현황	343
표 4-41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 및 보유장비 현황	344
표 4-42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현황	344
표 4-4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계장비	345
표 4-44 임업용 면세석유류 공급현황	345
표 4-45 최근 3년간 임업기능인 영립단 조직 현황	346
표 4-46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현황	349
표 4-47 산림복합경영 지원 현황	349
표 4-48 2018년 목재 수급 실적	352
표 4-49 자연휴양림 조성현황	357
표 4-50 자연휴양림 이용자 추이	357
표 4-51 산림욕장 조성현황	358
표 4-52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현황	358
표 4-53 도시숲의 규모별 유형과 기능	367
표 4-54 최근 5년간 가로수 조성실적	369
표 4-55 2018년말 가로수 수종별·시도별 조성 현황	370
표 4-56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	371

표 차례

2018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표 4-57 특색있는 가로수 가지치기 사례	371
표 4-58 가로수 수형관리 유형	372
표 4-59 명상숲 조성 실적	373
표 4-60 명상숲 조성 사례	374
표 4-61 명상숲 효과 분석 및 국민의식 조사 결과	374
표 4-62 해외조립 추진 실적	378
표 4-63 감적 필요 어선척수	380
표 4-64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투자계획	381
표 4-65 2018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384
표 4-66 연안바다목장 추진 현황	385
표 4-67 바다숲 추진 현황 및 계획	386
표 4-68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현황	387
표 4-69 수산종자 매입·방류 현황	388
표 4-70 연도별 국내어선 불법 어업 단속 현황	389
표 4-71 연도별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현황	390
표 4-72 2018년도 정부비축사업 실적	407
표 4-73 해외어장 자원조사 추진실적	418
표 5-1 일반농산어촌 123개 시·군	426
표 5-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426
표 5-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예시	428
표 5-4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도별 예산 내역	429
표 5-5 농촌주택개량사업 개요	431
표 5-6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 추이	433
표 5-7 시·도별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현황	434
표 5-8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예산 추이	434
표 5-9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지원 추진실적	435
표 5-1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	437
표 5-1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학생선발 현황	439
표 5-12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유형	440
표 5-13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현황	441
표 5-14 최근 5년간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지원 현황	443
표 5-15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실적	445
표 5-16 2018년도 공중보건 의사 배치현황	448
표 5-17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451
표 5-18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451
표 5-19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실적	452
표 5-20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추진실적	454

그림 차례

2018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그림 2-1 규제비용관리제 개념도	66
그림 3-1 스마트 팜 2.0 서비스 개념도	165
그림 3-2 농경지 전자지도 팜맵	166
그림 3-3 2018~2019년 팜맵 기반농업활동 지원정보 개방	167
그림 3-4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연계도	168
그림 3-5 국가산림정보화 추진 현황	170
그림 3-6 산림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73
그림 3-7 산림공간정보 관리자서비스 운영체계	175
그림 3-8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183
그림 3-9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프로세스	232
그림 4-1 축산물 이력정보 조회방법	290
그림 4-2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현황	304
그림 4-3 외국과의 임도밀도 비교	340
그림 4-4 등산로 정비현황	363
그림 4-5 미세먼지 저감 개념도	366
그림 4-6 도시숲 조성 사례	368
그림 4-7 수산방역통합시스템 구성	398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제1절 2018년 농림수산업 시책 추진 방향

제2절 2018년 투융자 실적 및 성과

제3절 2018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제 1 장

2018년 농림수산업
시책 추진 방향

1

농림축산식품 부문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강해림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 국산 농산물 소비 정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기후변화 등의 환경 변화는 농업·농촌의 미래 전망에 위기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그간의 성장 위주 농정 패러다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바, 농업인과 소비자의 수요와 관점을 충실히 반영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18)하였다. 동 계획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2018년의 주요 농정시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지난 2년간 쌀값 안정, 직접지불제 지원 강화 등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8년에는 최초로 농가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섰다('12년 3,103만원 → '15년 3,722만원 → '18년 4,207만원). 수확기 선제적인 시장격리,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도입으로 벼 재배면적을 2만 7천ha 감축하는 등 쌀값 안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캠페인, '찾아가는 양조장' 관광상품 개발 등 쌀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식량원조(7개국, 쌀 6.2만톤)를 통해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여 쌀 수급을 안정화하였다. 아울러 직불제의 농업인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밭·조건불리지역·친환경직불금' 단가를 ha당 5~20만원 인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유기 지속직불 지급기한을 기존 3년에서 영구 지급으로 개선하였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지원도 확대하였다. 재해 피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 복귀를

위해 농약대·대과대 등의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재해복구비 지원 항목에 새로운 품목(블루베리·식용곤충 등)을 추가하였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증가(‘16년 27.5% → ‘18년 33.1%)했고, 금년 재해 피해 농가 9만 1천호가 재해보험의 수혜(8,235억원)를 받았다. 또한, 안전사고가 잦은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료 산정 주기를 단축(3년→1년)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보험 수준 보험 상품(2종)을 개발하여 안전보험 가입 농가가 크게 증가(‘17년 71만 → ‘18년 80만)하였다.

나. 농촌형 복지지원 강화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하고, 저출산과 초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촌 소멸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한편, 젊은 귀농·귀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촌 사회적경제 활동이 확대되는 등 혁신 창출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문화복지센터, 작은도서관 등과 같은 복합 생활서비스 공급거점 186개소, 마을 단위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거점 438개소를 조성하여 농촌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100원 택시와 같은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전체 군지역으로 확대(‘17년 18개소 → ‘18년 87개소)했고, 택시형과 함께 버스형까지 추가 운영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의료·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버스를 87회 운영하였고, 무료 건강검진(5천명)도 실시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을 인상하였고, 지원대상도 확대(‘17년 376천명 → ‘18년 378천명)하였다.

금년부터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9개소 대상으로 돌봄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범죄피해 가족·다문화 여성 등에게 재활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였다.

다. 농촌 경제 활성화

창업교육, 컨설팅, 전용매장 설치 등 창업부터 판로까지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해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는 9.1% 증가(‘17년 1,397명 → ‘18년 1,524명)했으며,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농촌융복합산업화지구를 조성('17년 16개소 → '18년 20개소)하여 농산물 매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였다. 또한,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형·체험형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으며, 농촌체험 휴양 마을에 통·번역기를 보급하고 영어 표지판을 설치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인 결과 농촌관광객은 11.3% 늘었다('17년 1,111만명 → '18년 1,237만명).

라. 청년층 농업 유입 확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성장 가능성이 크고 농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선발하여 농업 분야의 창업과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만 40세 이하,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 1,600명을 선발하여 초기 생활안정자금(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창업자금 저리 대출 및 농지 임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성장 단계에 따른 영농기술·경영 교육도 실시하였다. 선발된 청년들 중 창업 예정자 및 영농 경력 1년 이하 청년이 1,305명으로 신규 농업인이 전체 지원 대상의 81.6%였으며, 귀농 청년은 938명(전체의 71.9%)으로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마. 친환경·고품질 먹거리 공급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위해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과 광역 산지유통 조직 육성 등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하여 유기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9%('17년 20,673ha → '18년 24,666ha) 증가하였다. 또한, 축산 분야에 있어서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 밀도를 유럽연합의 기준(0.05㎡/마리 → 0.075㎡)으로 강화하였고, '계란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였다.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강화하였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1,815호)으로 축산환경 개선과 축산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의 관리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지구('17~'18년 31개소)를 조성하여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원하였다.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 대비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183만명)를 지속 확대하였으며, 작물별 농약제품 안내서와 농약안전사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다. 전국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24만명)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과채로 만든 과일 간식을 공급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바. 스마트 농업 확산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지원을 통해 스마트 온실을 4,900ha, 스마트 축사를 1,425호까지 확대하였다. 청년 인력 육성, 기술혁신, 전후방 산업 성장, 규모화·집적화로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2개소를 선정하였다. 또한, 스마트팜 기자재 보급확산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원에 기자재 구동기·센서 22종에 대해 KS 국가표준으로 등록하였다.

사. 유통구조 개선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이 불안할 때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고,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받는 ‘채소가격안정제’를 정착하여 대상품목을 늘리고(‘16년 2개 → ‘17년 4개 → ‘18년 6개), 물량을 확대(평년 생산량의 5% → 8% → 10%)하였다. 중소농의 시장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 선별·출하 조직인 ‘기초생산자조직’을 육성(‘17년 2,405개 → ‘18년 2,655개)하고, 생산자가 마케팅과 수급 조절 역할을 수행하는 ‘의무자조금’ 품목을 확대(‘16년 3개 → ‘18년 10개)하였다. 또한, 대도시형 직매장, 1도 1대표 장터 등 새로운 직거래 모델 발굴, 중소농의 공영홈쇼핑 입점 기준 완화 및 수수료 인하(20% → 8%) 등으로 신유통 경로를 활성화하여 직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18.8% 증가하였다. 혁신도시의 공공 기관과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로컬푸드 중심의 공공 급식 지원 표준 조례’를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지역 농산물이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임업 부문

 산림청 산림정책과 사무관 최서희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은 그간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황폐했던 우리 산림이 지금의 울창한 숲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제는 숲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 뿐 아니라, 어떻게 가치있게 활용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인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산림 정책에도 ‘사람’과 ‘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졌다. 이에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산림자원 가치제고, 임업인 소득 증진, 산림산업 활성화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추진 중에 있다. 더불어, 산림을 국민들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가. 산림자원의 육성 및 산림사업 관리 강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우량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이용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중심의 집중적 산림경영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사업(조림·숲가꾸기, 임도 등)을 집중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와 지역산업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경영조직 육성 등을 통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우량 종자·묘목 공급을 위해 채종원, 스마트 양묘시스템 등을 확대하고,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 조림·숲가꾸기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개선, 교육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작업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제정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시행해나갈 계획이다.

나. 임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 임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과 가공유통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밤·감·대추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해외 마케팅을 집중 추진하고 ‘임산물 수출 OK 지원팀’을 통한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임업 경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가입률을 제고할 예정이며,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임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도입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국산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의무화하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자원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 상향(1.5→2.0)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규정 마련, 관계자 교육 등 이용 기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농식품부·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별채부산물을 축사깔개용 톱밥으로 지속 생산·보급하여 축사악취 문제 해결 및 친환경 퇴비 생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다.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국민들이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을 증진하기 위해서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자연휴양림, 국가숲길, 지역 특화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을 확대 조성하여 산림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며, 소외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물량 및 수혜범위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복지전문업을 중심으로 민간이 중심이 되는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민간시장 활성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대하여 미세먼지 등 도시 내 환경문제를 저감하고 산림복지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점차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과 연계하여 미세먼지 저감숲, 바람길숲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도시녹화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숲의 조성·관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취약지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동체 정원’ 조성 등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라.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생태계 보전

산림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의 적정 수준을 평가하고 생태적 산지이용 방안을 도입·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사유림을 통합한 시·군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특히, 국유림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국유림 명품숲을 발굴하여 지역 랜드마크로 발전시키는 등 국유림의 산림문화·관광자원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백두대간,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핵심구역을 중심으로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나가고 있다. 생물자원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산림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기후·식생대별 수목원 조성사업(세종, 새만금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백두대간·민북지역 등의 산림 훼손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체계적인 산림복원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북지역의 산림관리를 위한 전담팀(민북지역 국유림관리소)을 구성하는 등 기반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마.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빅데이터,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대응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헬기 전진배치 등 특별 산불대책을 추진하며, 대형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대형급 진화헬기를 단계적확충하고 무인항공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산사태 취약지역(24천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정비를 강화하고 산악기상관측망 확충, 산사태 위험지도 고도화 등을 통해 산사태에 대한 예측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전량방제 및 과학적 예찰 강화로 피해를 줄여나가고, 유관 부처와 공동 예찰 및 방제를 추진해 주요 산림병해충에 대한 맞춤형 집중 방제를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바. 국제 산림협력 확대

FAO 주관 제15차 세계산림총회(2021)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내실 있게 준비하고, 건조지 녹화사업, 몽골·중국 사막화 방지 조립 등 ODA 사업과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녹화를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설립을 완료하여 국제사회의 산림분야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국익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해외 산림 투자기업 대상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투자 리스크 경감 및 현지지원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제 목재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남북산림협력을 추진하여 한반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북한 산림생태계의 복구를 위해 필요한 종자의 채취·저장을 확대하고 북한과 기후조건이 유사한 지역에 양묘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 산림황폐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DB 구축을 강화하고, 국제기구·민간단체·학계 등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사. 산림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매개체로써 일자리를 지원하여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산림일자리발전소를 신설하여 현장밀착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일자리 발전소를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지역 기반 산림비즈니스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산림형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신규 전문일자리인 ‘나무의사’ 제도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나갈 예정이며, 산림기술자의 교육 및 자격·경력 관리를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산림기술자 등 산림분야 취업자 보수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 지원, 고용환경 실태조사·분석 등을 토대로 산림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자 한다.

3

수산업 부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서기관 송준석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1950년대에 수산업 성장의 기초가 마련된 이후, 1970~1980년대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선진수산물국으로 도약하였으며, 국민 식량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 품목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국제적으로 WTO 체제의 출범과 수산물의 전면 수입개방,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1996년 11월)에 따른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 체결(1998년 11월)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 여건과 공해조업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고, 연근해 어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한·중 간에도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2001년 6월 발효되었고, 러시아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어업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명태 등의 어획 쿼터를 점차 줄여 나가는 등 우리나라 주변 수역은 본격적인 EEZ가 적용되는 신 해양질서 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수산물의 국내 수요 증가와 우리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9년 11월 출범한 WTO-DDA 협상에서는 고갈위기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 보조금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회원국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어 합의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적으로도 그간 매립·간척에 의한 연안어장의 축소와 산업화에 따른 연안 연근해 수산자원량은 그동안의 자원관리 노력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감소세에서 벗어나 다소 회복 추세에 있으나, 2016년 이후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44년 만에 100만 톤 이하로 떨어지는 등 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어장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어종의 변화와 어획량의 증감 등 어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수온 상승에 따른 해파리 출현과 갯 녹음 발생, 고수온 피해 등은 수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으나, 참다랑어 등 고가의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은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여건변화로 수산업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나라 수산업은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소득·고용 기회의 제공, 해양환경 보전, 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어려운 어업현실과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극복하고, 21세기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다각적인 대응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18년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혁신성장과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우리 바다 되살리기로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양식산업의 첨단화로 新성장 동력 창출, 수산물 유통 혁신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조성 및 어가소득 증대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우리바다 되살리기로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 및 해양생태계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량의 불확실성 증대,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사라지는 어종 되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어구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과학적·적극적 수산자원관리와 불법조업 대응 강화로 어업생산량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중성 어종 자원회복과 수산자원 서식지 조성을 위해 바다 사막화 방지와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바다숲 및 바다목장 조성을 추진하고, 어린 물고기 보호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강화를 위해 휴어제 도입과 세목망 제도 개선, 개별양도성 할당제(ITQ)와 같은 선진할당제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연근해 어업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면서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한 지도선 공동순시 및 단속공무원 교차 승선 등 공동 단속을 강화 하고, 차세대 안전·복지 어선 확산 및 안전한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어선등록기준 개선, 표준어선 개발 추진과 노후 어선·장비교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구멍조끼 보급 및 어선위치확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 어선 전략적 감척과 유령어업(Ghost fishing) 저감을 추진하고 연안어업 품목별 단체 및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을 통해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나. 양식업의 첨단화로 新성장동력 창출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첨단양식 기술개발과 참다랑어, 뱀장어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상업화 및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첨단양식체계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내수면 양식산업 등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질병, 약품사용 등에 대해 예방적 양식생산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안전성 검사율을 확대, 부적합 이력 양식장 관리 강화, 약품 실태 점검 강화 등 생산단계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온 관측시스템 확충 및 이상수온 자동 알림 앱 등 기후변화 관측체계와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요령을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천수만, 완도 등 상습 재해 어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식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 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및 수산식품의 수출산업화

수산물 유통효율화 기반 확충 및 위생·물류 환경 강화를 위해 산지 위판장을 단계적으로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으로 전환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건립과 자갈치·부산공동어시장 등 수산시장 현대화 및 유통종합단지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 지원센터를 ASEAN 등 유망시장으로 확대하고 주요 수출국과 유망국으로 대상으로 K-SEAFOOD Global Week'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 가공 클러스터 조성, 김산업 집중 육성, 수출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수출 특화 글로벌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가공품의 식염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 등 수산식품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어식백세 캠페인 확대 및 이달의 수산물 홍보 등을 통해 수산물의 대국민 소비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라.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어항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바다가꿈 프로젝트와 귀어귀촌 마을 조성을 통해 어촌의 정주여건에 따른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귀어귀촌인에 대한 창업·주택마련 자금 지원, 청년영어정착자금 지원, 어촌테마 마을 조성 및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한 어촌관광수익 창출 등 어업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어촌을 조성하고 있다.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생활형 SOC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어항 지정 확대, 어항 안전시설물 확충, ICT 기반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운영 등 어항의 안전관리 강화 및 청정어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지역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산직불금의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 단가를 인상을 추진하고 양식재해보험의 재해보장 품목 확대,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 확대, 재할 급여 법정 급여화 등을 통해 어가소득지지 및 수산정책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투융자
실적 및 성과

1

농업·농촌 부문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김보민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2018년도 농업·농촌 부문 투융자 예산현액은 국고기준으로 15조 8,024억원이었으며 14조 3,589억원을 집행하였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수부족 및 농어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쌀변동직불금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1조 4,435억원을 이·불용하였다.

주요 투융자 프로그램별 집행실적은 농업생산기반확충 2조 4,167억원, 농가영양안정 2조 6,491억원, 양곡관리 1조 7,518억원,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1조 4,218억원, 축산업진흥 1조 272억원, 경쟁력제고 2,675억원,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1조 2,624억원,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등 기타 3조 6,228억원이었다.

구체적인 회계별·프로그램별 투융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1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	2018년 집행내역				집행률 (B/A)
		예산현액(A)	집행액(B)	차년이월	불용액	
■ 회계별 투융자 실적	145,831	158,024	143,589	3,883	10,552	90.9
◇ 예산 일반지출	85,824	98,002	92,318	3,864	1,820	94.2
○ 일반회계	6,562	6,778	6,445	93	240	95.1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8,782	58,119	55,176	1,419	1,524	94.9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53	441	394	-	47	89.4
○ 지역발전특별회계	13,444	16,080	13,722	2,351	7	85.3
○ 양곡관리특별회계	16,583	16,583	16,582	-	1	100.0
◇ 기금 일반지출	60,007	60,022	51,271	19	8,732	85.4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532	21,532	20,942	-	590	97.3
○ 농지관리기금	11,551	11,551	10,832	-	719	93.8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1,007	11,007	5,593	-	5,415	50.8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406	6,406	4,506	1	1,899	70.3
○ 축산발전기금	9,404	9,419	9,291	18	110	98.6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06	106	106	-	-	100.0
■ 프로그램별	145,831	158,024	143,589	3,883	10,552	90.9
○ 농업생산기반확충	19,763	25,891	24,167	1,101	623	93.3
○ 농가경영안정	31,348	33,637	26,491	8	7,139	78.8
○ 양곡관리	18,207	18,208	17,518	-	691	96.2
○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14,644	14,644	14,218	-	426	97.1
○ 축산업진흥	10,508	10,523	10,272	18	234	97.6
○ 경쟁력제고	2,876	2,864	2,675	-	189	93.4
○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12,257	14,796	12,624	2,139	33	85.3
○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등 기타	36,228	37,461	35,624	617	1,217	95.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9

농업·농촌 투융자 성과

2018년도 농업·농촌 부문의 투융자를 통해 크게 5가지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고용증가, 수급안정, 식품안전성 제고 등에 기여하였고 유례없는 이상기후와 가축 질병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촌경제와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주요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고용증가

- 농림어업 분야 고용이 '17년 3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 전년 동기대비 월 평균 59천명 증가하여 고용안전망 역할 수행

<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천명) >

	<'17 상반기>		<'17 하반기>		<'18.1~11>
(전 체)	-12.3	⇨	24.6	⇨	58.6
(자영자+무급종사)	- 6.0	⇨	24.4	⇨	57.4
(상 용 근 로)	6.0	⇨	6.5	⇨	5.3

- 청년층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농지·자금기술 등 지원을 체계화하고, 스마트팜 확산, 법인 취업 지원 등 농식품 분야 취·창업 뒷받침

● 농산물 수급안정

- 쌀은 지난해 수확기 선제적인 시장격리(37만톤)로 20년 수준까지 떨어졌던 산지가격 상승, 이례적인 수확기 쌀값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양곡 공매 실시(11월, 5만톤)

● 식품안전성 제고

- 계란 살충제 검출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 수립(부처합동, '17.12) 및 농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 전체 산란계 농가(1,500호) 살충제 검사 실시, 축사 내 잔류 농약의 세척·설비교체 지원, 방제용품 도입으로 계란 안전성 확보
 - * 계란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농가 수 : ('17) 78호 → ('18) 9 (88%↓)
- 농약 등 위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로 농산물 부적합률 감소
 - * 농산물 부적합률 : ('17) 1.9% → ('18.11) 1.4

● 이상기후 대응

- 봄철 냉해,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긴급 급수·약제 지원, 채소 수매비축과 계약물량의 탄력 방출로 가격 급등세 진정
 - * (사례) 7~8월 폭염으로 배추 가격이 급등(평년 대비 40%↑)하였으나, 1일 유통량의 5% 수준인 100톤을 매일 출하하여 9월부터 가격 상승세 진정(평년대비 3.2%↓)
- 재해복구비 인상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 * 재해복구비 ('17) 실거래가의 52% → ('18) 66 / 재해보험 대상품목수 ('17) 53개 → ('18) 57

● 가축질병 발생 등에도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 (AI) 예년보다 1~2일 빠른 이동중지명령, 반경 3km 엄격한 살처분 등 신속 초동 대처와 오리사육제한(전체 마리수의 37%)이 AI 감소에 기여
 - * AI 발생건수 : ('16~'17) 383건 → ('17~'18) 22
- (구제역) 돼지에서 미접종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돼지에 최초 발생한 유형임에도 2건으로 차단하는 등 사전비축 백신으로 긴급 대처

2 임업·산촌 부문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이규명

2018년도 임업부문 투융자 지원실적은 국고기준으로 2017년도 추경을 포함한 20,612억원 보다 0.8% 감소한 20,456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822억원, 농특회계 6,601억원, 지특회계 3,492억원 및 책특회계 541억원이 편성되었다.

부문별로는 산림자원육성·관리에 5,702억원,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에 2,521억원 및 산림복지서비스증진에 3,056억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구체적인 회계·부문별 투융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2 임업·산촌부문 투융자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7예산		2018예산 (B)	증 감 (B-A)	%	
	본예산	추경(A)				
계	20,111	20,612	20,456	△156	△0.8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9,430	9,839	9,822	△17	△0.2
	■ 농 특 회 계	6,828	6,828	6,601	△227	△3.3
	■ 지 특 회 계	3,273	3,365	3,492	127	3.8
	■ 책 특 회 계	580	580	541	△39	△6.7
부 문 별	■ 산림자원육성·관리	5,976	6,052	5,702	△350	△5.8
	■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383	2,383	2,521	138	5.8
	■ 산림복지서비스증진	2,819	2,878	3,056	178	6.2
	■ 산림재해예방·대응	5,247	5,594	5,156	△438	△7.8
	■ 산림생태계보전	648	648	907	259	40.0
	■ 국제산림협력 및 R&D	1,040	1,040	1,071	31	3.0
	■ 산림행정지원	1,998	2,017	2,043	26	1.3

자료 : 산림청, 2018년

1) 대·내외 정책여건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파리협정 발효('16.11)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 온실 가스감축 목표(3.1억tCO₂예상) 달성 및 국내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제도권 내로 편입되었다.

또한 한·중 FTA체결('15.12) 등에 따라 임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산림의 고유 기능과 연계한 산림생명산업 등 융복합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한편, 기존의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 위주에서의 산림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건강증진원으로서의 산림 △일자리 창출원으로서의 산림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산림 등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2) 투융자 성과

임업부문은 그동안 국토녹화, 산림자원화 기반조성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녹색복지국가 구현 단계로 발전해 왔으며, 기간별 성과는 아래와 같다.

- 1·2차 치산녹화기간('73~'87)에 국토녹화 달성
- 3차 산지자원화기간('88~'97)에 녹화바탕위에 산지자원화기반 조성
- 4차 산림기본계획기간('98~'07)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5차 산림기본계획기간('08~'17)에 녹색복지국가 구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평균임목축적은 1차 치산녹화 시행년도인 1973년 11m³/ha이던 것이 2018년말 150.0m³/ha로 증가하였으며, 국산재 생산 및 활용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목재자급률도 15.2%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림단지 중심의 조림·숲가꾸기 사업 집중 투자를 통해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임도시설 및 임업기계 보급 등 지속적인 경영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임업 생산성을 제고하였으며, 맞춤형 경영지원 및 귀산촌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국민생활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산림휴양·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 수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도시숲·가로수 등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등에 따라 연중 발생하는 산림재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예측·대응력을 강화하고 재해예방시설·인력 등 통합하는 등 내실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청 50주년을 맞아 산림의 미래비전을 선포(10.18)하고, 우리나라 산림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6차 산림기본계획('18~'27)을 수립하였다.

3 수산업·어촌 부문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서덕훈

가. 수산·어촌 투융자 실적

수산·어촌 부문은 2017년 투융자 규모를 국고기준 2조 1,703억 원으로 계획하여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2조 2,770억원) 대비 94.6%인 2조 1,545억 원이 집행되었다. 2018년 투융자 실적은 집행액 기준 2017년 2조 325억 원 대비 1,220억 원(2.8%)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4,476억 원(20.8%), 농특회계 9,271억 원(43.0%), 지특회계 2,816억 원(13.1%), 예특회계 211억 원(1.0%), 수발기금 4,770억 원(22.1%)이 집행되었다.

프로그램 별로는 전체 집행액 2조 1,545억 원 중 산지/소비자 유통자금, 비축 등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에 3,605억 원(16.1%), 어업기반정비, 국가어항,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등 어촌·어항 개발에 4,823억 원(22.7%), 수산자원조성,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어업 지도단속 등 수산자원 관리에 4,676억 원(22.6%),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수협경영정상화, 어선원 보험 등 수산경영에 3,842억 원(17.3%)이 투입되었다.

표 1-3 수산업·어촌부문 투융자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16 예산	2017예산						증 감 (B-A)		
	예산액 (A)	본예산	추경(B)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불용액	(B-A)	%	
계	21,313	21,116	21,703	22,770	21,545	616	608	390	1.8	
회계· 기금별	■ 일반회계	3,957	4,335	4,335	4,828	4,476	219	133	378	9.6
	■ 농특회계	8,734	9,114	9,244	9,757	9,271	370	116	510	5.8
	■ 지특회계	2,684	2,778	2,778	2,834	2,816	18	0	94	3.5
	■ 예특회계	184	211	211	211	211	0	0	27	14.7
	■ 수발기금	5,754	5,135	5,135	5,139	4,770	9	359	△619	△10.8
프로 그램별	■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4,465	4,647	4,676	5,246	4,861	296	89	211	4.7
	■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4,754	3,605	3,605	3,632	3,462	16	154	△1,149	△24.2
	■ 식품산업 육성	497	459	459	463	413	24	26	△38	△7.6
	■ 수산경영	4,227	3,842	3,842	3,939	3,719	18	202	△385	△9.1
	■ 어촌어항개발	4,647	4,728	4,823	5,070	4,900	133	37	176	3.8
	■ 원양협력	465	1,882	1,888	1,892	1,833	22	37	1,423	306.0
	■ 수산행정 등 기타	2,258	1,953	2,410	2,528	2,357	107	63	152	6.7

자료 : 해양수산부, 2018년

나. 수산·어촌 투융자 성과

수산·어촌 부문은 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융자를 강화하였고, 그 투융자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근해어업 자원 회복을 위하여 금어기 확대(살오징어, 대구 등), 바다숲('18, 3,108ha/누적 18,360ha) 및 바다목장('18, 안산, 고창 등 6개소/누적 36개소) 조성, 명태 인공종자 대량방류('18, 91만마리) 등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를 더욱 강화하였다.

둘째,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하여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운영, 불법어선 몰수·폐선, 중국 싸쓸이 그물(범장망) 강제 철거 및 중국정부의 자국어선 관리감독 강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단속을 강화한 결과 불법어선 나포실적이 전년대비 7.2%('17년 278척) 감소하였다.

셋째, 양식업의 경우 양식산업혁신종합대책('18.8)을 수립하여 양식업의 체계적인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배합사료 활성화 로드맵('18.11)을 마련하여 배합사료 사용을 확대, 양식장

스마트시스템 도입('18.10) 등을 통해 양식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넷째, ASEAN 등 유망 新시장 개척을 위해 '18년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신설을 비롯한 총 10개소의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국제인증마케팅 등 프리미엄화 지원함으로써 '18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인 23.8억불을 달성하였다.

다섯째, 수산물 유통혁신을 위해 유통혁신 로드맵('18.5)을 마련하고 저온유통체계 구축 방안('18.11)을 수립하여 신선한 수산물의 공급과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소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18.12)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여섯째, 조건불리지원금 지원대상 도서를 15개소 추가한 381개소로 확대하고, 소형·영세 어선원에 대한 의무 보험가입 및 양식수산물 보험품목 확대 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지원하는 등 수산업·어촌 발전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다.

2018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 농림축산식품 부문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이원형

예산편성 방향

기본방향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철학인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재정지원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한정된 재원 하에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재정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재검토하는 등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중점편성 방향

새 정부의 주요 농정 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강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의 이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특히, 쌀값 하락,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불안, 이상 기후에 따른 재해 발생 등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후계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안정,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기반 구축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였다.

우선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 도입,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강화

등 농산물 가격불안을 최소화하고 직불제 지원과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둘째, 농식품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확산 등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등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가축질병 예방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였다.

셋째, 농촌 생활여건 개선 등 삶의 질 제고와 맞춤형 지역개발 지원하고, 농촌 융복합 산업 고도화 및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을 조성하는데 투자를 확대하였다.

예산편성 규모

2018년 예산의 전체 모습

2018년 농림축산식품 예산의 전체 규모는 14조 4,996억원으로 2017년 대비 0.08%(109억원) 증가하였다. 농식품부 소관 5개 예산의 규모는 8조 5,794억원이며, 7개 기금의 규모는 5조 9,202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 13조 3,613억원, 식품업 분야 6,954억원 등을 투자하였다.

부문별 규모 및 주요 특징

첫째, 쌀 수급안정 및 쌀값 회복 총력 지원을 위한 예산은 '17년 대비 15.3% 증액한 1조 7,948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340만원을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5만ha, 1,368억원)해 쌀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여 쌀값 회복을 지원하고, 5만톤 규모의 쌀 식량원조 신규 추진(460억원)을 통해 국격을 높였다.

둘째, 직불제를 확충하고 재해·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17년 대비 1.6% 증가한 3조 5,432억원을 지원했다. 쌀 고정직불과 조건불리직불 단가를 ha당 5만원씩 인상하고 친환경 농업 직불은 품목별 생산비 차이 등을 감안해 10~20만원 인상하였다. 또한 재해보험 품목 확대(농작물 53개→ 57개 품목 등, 3,031억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595억원) 강화 등 재해 및 농작업 중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확충했다.

셋째, 자율적인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와 유통 효율화 등 제 값 받는 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1조 5,472억원을 지원했다. 농가에 생산·출하량 조절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계약물량에 대해 평년가격의 80%까지는 보장하는 채소류 생산안정제(168억원)를 확대하고, 계약재배 지원(2,593억원)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220억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공영홈쇼핑 등 신유통 활성화 지원(530억원)을 확대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과수, 화훼 등 품목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마케팅 지원(83억원)을 강화했다.

넷째, AI 등 반복되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17년 대비 16.0% 증액된 4,775억원을 투자했다. 밀집지역 축산 농장의 이전·폐업을 지원하는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사업(5개소, 90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가금농장 CCTV 지원(2,570개소), 공동방제단 확대 운영(450개 → 540개 반)등도 반영했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가축질병을 예방했다.

다섯째, 청년층 영농 창업 활성화와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17년 대비 11.7% 증가한 1조 2,528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후계농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로 자금, 기술, 농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편, 창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91억원)을 도입하고, 맞춤형 농지지원(3,783억원)과 후계축산농 축사임대 사업(27억원)을 추진했다. 또한 식품·외식산업 육성을 통한 연관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121억원) 기업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외식창업자에게 창업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외식창업 인큐베이팅도 확대(1개소 → 5개소)했다.

여섯째,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농식품 전후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은 '17년보다 2.8% 증가한 4,963억원으로 편성했다. 스마트 원예단지를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자동 사료급여, 착유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축사 600개소를 신규 보급했다. 또한 시설 중심 스마트팜을 노지채소로 확산하기 위해 노지채소 스마트팜 모델 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했다. 이와 함께 첨단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 R&D 투자(2,131억원)도 확대했다.

일곱째, 동물보호·복지 확산과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65억원을 지원했다. 동물보호센터 3개소 추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반려견 등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8억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26천마리, 8억원) 등의 사업을 신규 추진해 반려동물 관련 기초 공공서비스를 제공했다.

여덟째,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17년대비 8.8% 증가한 907억원을 투자했다.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관련 안전성 조사(233억원)를 확대하고 축산식품

안전관리(18억원), 도축검사(155억원), 친환경 인증관리(62억원) 등을 지원했다.

아홉째, 교통·보육 등 농촌 특화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는 '17년 대비 5.7% 증액된 1조335억원을 투자했다.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 모델을 확대(18개소→82개소)하고, 농업인 자녀 및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131억원)도 추진했다. 고령화된 농촌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3,472억원)을 강화하고, 농지연금 지원대상도 확대(6,645건→8,557건)했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지역자원과 생산·가공·관광 등을 연계하는 융복합산업 육성과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1,155억원을 반영했다. 6차산업 창업자금 지원(300억원), 6차산업 네트워크 구축(25개소→35개소)과 6차산업지구 신규 4개소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또한 돌봄농장(9개소)을 조성해 장애인 등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도입(5억원)하였으며, 농촌 재능나눔 캠페인,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137억원) 등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표 1-4 농림축산식품부 부문별 재정배분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17예 산(A)	'18예산(B)	전년대비 증감	
			(B-A)	%
총지출(예산+기금)	144,887	144,996	109	0.08
◇ 예산 일반지출	80,762	85,794	5,032	6.2
◇ 기금 일반지출	64,125	59,202	△4,923	△7.7
I. 사업비	141,044	140,917	△127	△0.1
▣ 농업·농촌	133,247	133,613	366	0.3
○ 혁신성장·체질강화	27,972	29,126	1,154	4.1
○ 농가소득·경영안정	37,397	35,176	△2,221	△5.9
○ 농촌복지·지역개발	17,006	16,538	△468	△2.8
○ 양곡관리·유통혁신	30,807	33,101	2,294	7.4
○ 재해대비·기반정비	20,065	19,672	△393	△2.0
▣ 식품업	7,478	6,954	△524	△7.0
▣ 기타사업비	319	350	31	9.7
II. 기본적 경비	3,843	4,079	236	6.1

2

임업 부문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이규명

가. 편성방향

2018년도 산림예산의 기본방향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산림사업의 체질 개선 및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투자 내실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는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과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소득이 되는 임업으로 산림산업 부가가치 제고,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산림복지 활성화, 산림재해 예방·대응 내실화 및 체계적 산림보호·관리와 그리고 국제사회의 그린리더십 구현 및 미래유망산업 발굴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나. 예산규모

201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9,611억원으로 전년대비 2.8%(273억원)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농특회계 전년도이월금과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감소에 기인 한다.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조 456억원으로 전년대비(추경포함) 0.8%(156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정부예산의 0.50%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822억원, 농특회계 6,601억원, 지특회계 3,492억원 및 책특회계 541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5 회계별 투융자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17예산		2018예산 (B)	증 감 (B-A)	%	
	본예산	추경(A)				
계	20,111	20,612	20,456	△156	△0.8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9,430	9,839	9,822	△17	△0.2
	■ 농 특 회 계	6,828	6,828	6,601	△227	△3.3
	■ 지 특 회 계	3,273	3,365	3,492	127	3.8
	■ 책 특 회 계	580	580	541	△39	△6.7

자료 : 산림청, 2018년

다. 부문별 투자실적

부문별 투자규모는 산림자원 육성·관리에 5,702억원, 산림복지서비스증진에 3,056억원,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521억원, 산림자원 보호 6,063억원, 국제산림협력 등 1,071억원, 산림행정지원 등에 2,043억원이며 2017년 대비 증액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1-6 부문별 투융자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17예산		2018예산 (B)	증 감 (B-A)	%	
	본예산	추경(A)				
계	20,111	20,612	20,456	△156	△0.8	
부 문 별	■ 산림자원육성·관리	5,976	6,052	5,702	△350	△5.8
	■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383	2,383	2,521	138	5.8
	■ 산림복지서비스증진	2,819	2,878	3,056	178	6.2
	■ 산림재해예방·대응	5,247	5,594	5,156	△438	△7.8
	■ 산림생태계보전	648	648	907	259	40.0
	■ 국제산림협력 및 R&D	1,040	1,040	1,071	31	3.0
	■ 산림행정지원	1,998	2,017	2,043	26	1.3

자료 : 산림청, 2018

부문별 세부 투자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산림자원 육성·관리 부문에서는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의 숲가꾸기, 조림사업 투자 확대, 우량 종자생산 및 묘목 생산성 제고, 산림탄소 흡수강화 및 산림경영 효율화 지원, 산림경영관리 인프라 확충 및 임업기능인력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하였다.

- 숲가꾸기 : ('17) 2,551억원 → ('18) 2,090억원
* 공공산림가꾸기 : ('17) 1,494명, 152억원 → ('18) 1,494명, 172억원
- 조 림 : ('17) 999억원 → ('18) 1,122억원
- 임도시설 : ('17) 1,503억원 → ('18) 1,558억원
- 사유림 매수 : ('17) 637억원 → ('18) 637억원

둘째, 산림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산림교육 운영 및 산촌 활성화 지원 강화, 산림 휴양·치유 및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에 투자를 지속하였다.

- 산림교육센터 운영 : ('17) 21억원 → ('18) 21억
- 치유의 숲 조성 : ('17) 235억원 → ('18) 309억원
- 도시숲·경관숲 등 생활림 조성 : ('17) 677억원 → ('18) 668억원

셋째,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청정임산물의 생산·유통·가공 지원 강화, 임업인 소득·경영안정 지원 및 기술보급,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임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집중 투자하였다.

- 청정임산물이용증진 : ('17) 621억원 → ('18) 602억원
-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 이차보전) : ('17) 671억원 → ('18) 605억원
- 귀산촌인창업자금지원 : ('17) 240억원 → ('18) 340억원
- 임산물수출촉진 : ('17) 67억원 → ('18) 68억원

넷째, 산림재해방지 부문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림재해의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산림재해 관련 일자리를 통합 운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산불예방·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투자의 중점을 두었다. 또, 사방댐 등 구조물 중심의 사방대책에서 경계피난 등 예측고도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재선충병 피해 감소 추이를 감안하여 방제방식을 다변화 하였다.

- 산림재해일자리 : ('17) 689억원 → ('18) 867억원
-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 ('17) 10억원 → ('18) 63억원
- 산불방지대책 : ('17) 150억원 → ('18) 155억원
- 사방사업 : ('17) 2,329억원 → ('18) 1,795억원
- 산림병해충방제 : ('17) 1,133억원 → ('18) 1,107억원

다섯째, 백두대간 및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훼손된 산림의 생태적 복원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에 따른 운영비 예산과 국립중앙수목원 3차년도 조성 예산을 적기 반영하였다.

- 산림생물다양성증진 : ('17) 144억원 → ('18) 202억원
- 산림복원 : ('17) 147억원 → ('18) 147억원
-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 ('17) 120억원 → ('18) 249억원


여섯째, 국제산림협력 및 R&D 부문에서는 국제산림협력 강화 및 임업분야 신산업 및 실용화 기술개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 국제산림협력 : ('17) 61억원 → ('18) 60억원
- 산림과학연구 : ('17) 428억원 → ('18) 418억원
- 산림생물종연구 : ('17) 150억원 → ('18) 148억원
-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 : ('17) 56억원 → ('18) 84억원
- 기후영향 적응연구 : ('18 신규) 40억원
-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 ('18 신규) 14억원

마지막으로, 산림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산림통계 및 정보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 국가산림통계 : ('17) 28억원 → ('18) 27억원
- 산림자원정보화 : ('17) 96억원 → ('18) 102억원
- 산림공간정보기반 조성 : ('17) 78억원 → ('18) 75억원

3 수산업·어촌 부문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허남기

가. 예산편성 방향

2018년도 수산·어촌 부문 예산은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한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업인 삶의 질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재정지원을 강화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위해 바다목장·바다숲을 지속 조성하고 유실어구 수거를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등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수산물 수출 지원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어촌·어항 개발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어촌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운용 규모 및 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하였다.

나. 예산편성 규모

2018년도 세출예산(기금지출 포함) 규모는 2조 1,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5억 원(1.7%)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4,335억 원(11.2%), 농특회계 9,114억 원(4.9%), 지특회계 2,778억 원(△3.5%), 예특회계 211억 원(14.7%), 수발기금 5,135억 원(△10.8%)이 편성되었다.

세부 편성방향별로 살펴보면 우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에 전년 대비 5% 증가한 4,360억원을 투입하였다. 바다목장·바다숲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735억원을 투입하여 수산자원 회복을 지속 지원하고, 연안어장 환경개선(79억원), 친환경 어구보급(94억원) 등을 확대하여 어장오염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어업지도선을 건조(1,211억원)하여 불법어업 대응에도 힘쓰고, 어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100억원)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둘째,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확대’에 5,646억원을 투입하여 지원을 강화하였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신규 3개소 구축(36억원)하고, 소비지분산물류센터 2개소 건립을 계속(69억원)하는 등 유통체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수산물 위생관리(149억원),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66억원)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수산물 해외시장개척(309억원), 우수수산물지원(1,330억원) 등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셋째,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살기좋은 어촌’에 6,142억원을 편성하였다. 어선원 및 어선보험(1,133억원), 어업재해보험(328억원) 등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였다. 또한, 조건불리 직불제 지원 확대(102억원), 청년 영어정착 지원(6억원) 등을 통해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노후화가 진행 중인 어촌의 활력 높이기에도 주력하였다. 더불어 어업활동의 기반인 국가어항 조성에 대한 투자도 확대(1,997억원)하고, 어촌6차산업화(95억원)도 지속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 ODA를 확대(91억원)하고,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을 증액(45억원)하여 세계 수산업계에서 우리 수산업의 지위를 높이고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표 1-7 수산·어촌 부문 투융자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17예산	2018예산	증 감 (B-A)	%
		예산액(A)	예산액(B)		
계		21,208	21,573	365	1.7
회 계 · 기 금 별	■ 일반 회 계	3,897	4,335	438	11.2
	■ 농 특 회 계	8,689	9,114	425	4.9
	■ 지 특 회 계	2,684	2,778	94	3.5
	■ 예 특 회 계	184	211	27	14.7
	■ 수 받 기 금	5,754	5,135	△619	△10.8
부 문 별	■ 지속가능 어업생산 및 수산자원관리	4,093	4,360	267	6.5
	■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확대	5,398	5,646	248	4.6
	■ 어업인 삶의 질 향상	3,573	3,224	△349	△9.8
	■ 살기좋은 어촌 조성	2,850	2,918	68	2.4
	■ 국제협력 및 원양산업 활성화	204	250	46	22.5
	■ 기타(인건비, 기본경비, R&D, 정보화)	5,090	5,175	85	1.7

자료 : 해양수산부,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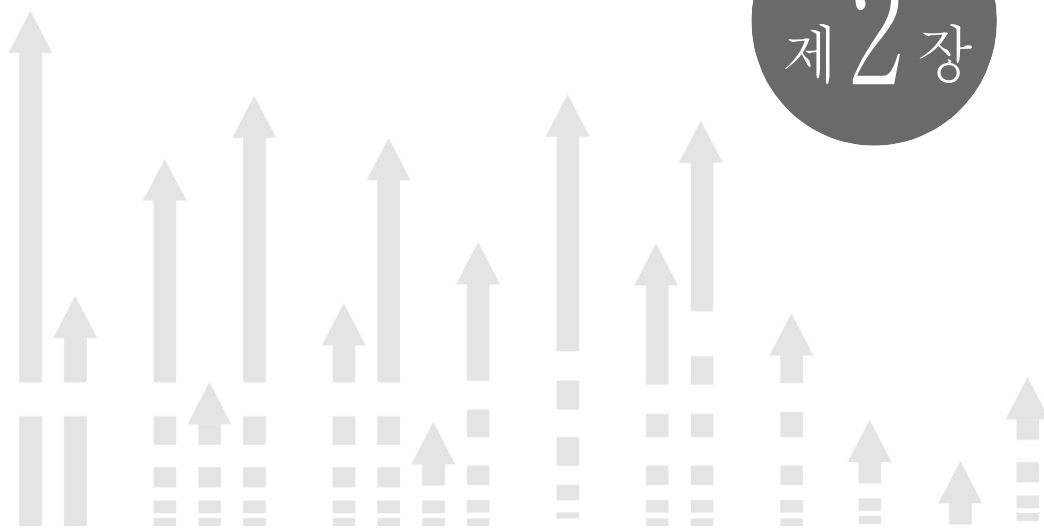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제1절 협동조합 개혁

제2절 농림수산물 유통 효율화


제3절 농림수산분야 규제 개혁


제 2 장



1

농협 개혁

 농업금융정책과 서기관 김세진

 시행배경

'90년대 중반부터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농축산물 판매 등 농업인이 원하는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과 함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및 신용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이 마련(2007.3.29)되어 추진 중이었으나,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 수익이 농협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어 사업구조 개편의 시급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농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협 운영구조 개선」 및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등 2단계에 걸쳐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우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이사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 등 농협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을 2009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농협중앙회를 3개의 별도 법인(중앙회, 농업경제지주, 농업금융지주)으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 농협법 개정안이 2011년 3월에 공포되었다.

정부는 실질적인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각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였으며,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1·2차 개혁안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농민단체 주관의 전국 순회토론회,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립하였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도 포함하였으며,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농협경제사업활성화 강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시행내용 및 성과

그 동안 정부의 개혁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여전히 경제사업에 소홀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경쟁력 있고 실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1단계로,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 촉진과 조합의 운영구조 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협법을 개정·공포(2009. 6. 9)하였다.

1단계 농협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규제완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자산규모 2천5백억 원 이상인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중앙회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수를 감축(현 : 21명 이상→ 30명 이내)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켰으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농협개혁 2단계로,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건의(2009.3.31)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잠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권역별 설명회(2009.7) 등을 통해 농업인(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정부안을 확정(2009.12)하고, 국회에 제출(2009.12.16)하였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식품위 상정(2010.2)을 거쳐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으며, 국회 공청회(2.11) 및 법안상정 대체 토론(2.22)을 개최하고, 사업분리 방식, 경제사업 활성화, 부족 자본금 지원, 조세·보험 특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총 6차례의 심사소위('10.2.24, 4.14, 4.19, 4.22, 12.6, '11.3.3)와 2차례의 농식품위 전체회의(4.16, 6.21)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의결하였으며, 2011년 3월 31일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2단계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원 조합에 대한 지도·지원,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병행하던 농협중앙회를 지도 및 농정활동을 수행하는 중앙회,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경제지주, 금융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금융지주로 분리하였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토록 하였으며,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이전 장치 마련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해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농협법 개정안 공포 이후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사업무구조개편지원단을 구성(2011.3.31)하여 농업협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 등의 작업을 추진하였다.

농협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회의 신용사업 이관에 따라 기존의 신용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했으며, 전무이사 및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중앙회 근무요건 이외에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까지 포함,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해주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권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신설,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채권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농협중앙회에 일부 위탁하였다. 동 농협법시행령은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2012년 1월 6일 공포되었다.

개정 농협법에 따라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며,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동일자로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완전 이관되었고, 중앙회의 경제사업은 농협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2015년 2월 유통·판매 관련 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1차 이관되었고, 2016년 12월 나머지 경제사업 모두가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되며, 완료되었다.

특히, 2014년도에는 경제사업의 이관과정에 있어 경제지주의 조합 자금지원, 계통거래 시 공정거래법 저촉우려 문제와 중앙회의 외부출자한도 제한 등 법적·세무적 쟁점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이관 제약해소를 위한 T/F를 농식품부와 농협 공동으로 운영하여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경제사업 이관 시 법·세무적 제약사항을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농협법을 2014년 12월 31일자로 추가적으로 개정하여 사업구조개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6년도에는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된 이후의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운영방향의 정립을 위한 농협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농식품부·농협 합동 TF를 구성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 법안 작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중앙회는 조합 지도·지원 기능에 적합토록 운영규정을 보완하였고, 경제지주는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와 조합 경제사업 조성·협력, 중앙회·조합과의 연결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농협중앙회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개선이 있었다. 이에 따른 농협법은 2016년 12월 27일 공포되어, 중앙회의 나머지 경제사업이 모두 이관된 2017년 1월 1일 이후의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의 지배구조 재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지주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으로써 경제지주 경영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경제지주가 자회사를 지도·감독하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농협 경제지주의 책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편,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근본 취지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 분야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농협경제사업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1년 8월까지 추진하였다. 동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중앙회는 2012년 9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12~2020년까지 4.96조원의 경제사업 신규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협법 제135조의3에 따라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를 통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상황을 평가점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농협 사업전담대표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 근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족자본금5조원을 지원(이차보전) 하기로 하였으며, '18년 2분기까지 4.5조원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고, '22년 3분기까지 남은 0.5조원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농협중앙회와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여 사후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향후계획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농협사업구조개편을 통해 농협의 경제사업 투자증가와 경제지주의 농·축산물 책임판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판매농협 실현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아직 출발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협이 당초 사업구조개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활성화 이행과정을 점검·평가해 나갈 것이며, 사업이관 후 중앙회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협으로 거듭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

산림조합 개선


 산림청 산림정책과 사무관 임창욱

 시행배경

산림조합은 1962년 산림법이 제정되면서 과거 리·동 단위의 산림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1980년 산림조합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개별법으로 제정되면서 독립적인 법체계를 가진 협동조합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9년에는 임명제였던 산림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조합원과 조합장이 선출하는 직선제로 전환하였으며, 1993년에는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되었다가 2000년에는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따라 산림조합체제로 환원하였다.

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직되며,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권익향상을 목표로 2018년 현재 전국에 142개 산림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산림조합은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 산사태 등 재해의 신속한 복구와 같은 국가 산림정책을 수행하여 험벗었던 국토를 녹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78년도부터 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17년 현재 880명)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경영과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기술지도, 임업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기계 보급, 임업정책자금 대출취급 등 국가사무를 충실히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산림휴양 등 국민들의 산림수요 증가, 자율적인 시장경쟁체제로의 전환, 산림사업법인의 증가, 국가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산림조합에 대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구조개선 추진배경과 기반 마련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신용사업을 뒤늦게 시작하였지만, 양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신용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IMF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고금리 조달구조의 지속, 부실채권의 증가, 유가증권 투자실패 등 일부조합에서 부실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감사원, 금융감독원, 국회 등에서 부실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2005년도에 최초로 산림조합중앙회소속 14개 회원조합 전체에 대해 회계 법인으로 하여금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실사결과 2004년말 기준으로 자산은 2조 3,165억원, 부채는 2조 1,200억원, 자본은 1,96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고흥 등 28개 조합에서 274억원의 자본이 잠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영진단위원회는 경영진단결과 부실조합과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개선을 위해서 농·수협외의 사례와 같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산림청은 건의를 받아들여 2006년부터 정부안으로 법률제정을 추진하여 2007. 8. 3 법률을 제정하고 6개월 후인 2008. 2. 4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법률시행일 이전에 각각 제정을 마무리하여 법률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2008년도에 신규로 산림조합 구조개선사업 1차년도 예산 56억원을 확보하여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사업을 5년간('08 ~ '12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 부실조합 등 지정과 구조개선 추진

부실조합 등을 선정하기 위해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35개 조합을 대상으로 회계 법인이 2007년말 기준으로 재무실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는 19개 조합을 부실조합 등으로 심의·의결하였다. 19개 조합 중에서 산림청은 순자본비율 기준으로 -15%미만인 6개 조합을 부실조합으로 지정하였고, 산림조합중앙회는 순자본비율 기준 -15%이상 2%미만인 10개 조합과 자산건전성 등이 취약한 3개 조합을 합쳐 모두 13개 조합을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하였다.

2007년말 기준 6개 부실조합에 대하여는 대구조합 합병('08), 전북표고조합 파산('08), 고흥조합 신용사업 양도('09)를 하였으며, 1개 조합은 부실우려 조합으로 편입('10)되어 추가 부실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기 시정조치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2개 조합은 경영개선으로 경영정상화('10, '11) 되어 '11년말 구조조정사업을 완료하였다.

2010년말 기준 부실우려 9개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별 부실원인을 분석한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경비절감, 자기자본 증대, 이익배당 제한, 신용사업 활성화, 불용자산 처분과 같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를 해당조합에 각각 조치하였다. 이 중 순자본비율이 낮은 7개 조합은 2012년까지 정상조합 기준인 순자본비율 2%를 목표로 경영개선을 추진하여 165억원(국비 145억원, 산림조합 2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5년간 구조개선 사업결과 2008년

19개 조합에서 2012년말 10개 조합으로 감소하였다.

2013년 부터는 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 순자본비율 2%미만인 6개 조합에 9억원, 2014년말 기준 순자본비율 2%미만인 5개 조합에 8.5억원, 2015년말 기준 순자본비율 2%미만인 5개 조합에 5.4억원을 지원하여 경영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3년 10개에 달하던 부실(우려)조합수가 2018년말 기준 2개로 대폭 감축되었다.


앞으로도 부실 및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는 적기시정조치와 경영개선약정관리를 위하여 매분기 평가 실시와 지도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산림조합 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실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킴으로서 산림조합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조합원과 예금자 보호 및 산촌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향후계획

부실 및 부실우려조합 등의 구조개선 추진은 조합원과 예금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입업과 산촌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5년간 국고 145억원을 지원하여 2012년까지 구조개선을 완료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3.9억원으로 2018년말 기준 순자본비율 2%미만 1개 조합 및 신용사업 미실시 1개 조합의 경영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실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경영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여 시정하는 등 산림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수협 개혁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사무관 박천일

시행 배경

수협중앙회는 1962년 4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정에 따라 설립되어 지난 56여년 동안 어업인 등의 경제적 지위와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왔다. 우리나라가 수산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 현재 수협중앙회는 91개의 회원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구별수협 70개, 업종별수협 19개, 수산물가공수협 2개 이다. 수협은 국내 최대의 수산단체로서 어업인을 위한 경제·교육·지도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수협은행은 국내 유일의 수산금융 기관으로 어업인 금융지원을 적극 수행하면서 수산업 종사자와 수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자기자본비율 8% 이상, 보통주 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BIS 바젤Ⅲ 규정을 2010년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13년 12월부터 동 기준을 국내은행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수협은행은 협동조합 체제로는 바젤Ⅲ에서 요구하는 자본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적용을 유예 받고, 바젤Ⅲ 규정 적용을 위한 사업구조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은행 자본규제 강화(바젤Ⅲ) 및 국제회계기준(IFRS) 등의 금융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근본적인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시행 내용 및 성과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바젤Ⅲ 도입과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될 경우 과거와 같은 협동조합 체제로는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수협선진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수협중앙회 선진화 방안(2013. 1)」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기본방안(2013. 9)」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수협은 자본 확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2016.5.29)하여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여 독립법인 형태인 수협은행을 출범(2016.12.1)시켰다.

또한, 경제사업 부문도 과거 단순한 위판 중심에서 시장개방과 달라진 수산업 여건을 감안하여 유통·판매·마케팅·수출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였다.

단위수협의 경영상태도 정부 지원과 자구 노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91개 단위수협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7개 조합이 부실 우려조합으로 지정되었으며, 전년 대비 2개 조합이 감소하는 등 경영개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계획


앞으로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전문 유통채널을 구축하여 경제사업 매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한편, 수협은행은 시중 은행과의 무한 경쟁 속에서도 조속히 재무 구조와 영업 구조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단위수협 경영개선 업무는 자금지원 및 구조개선 등의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정상조합이 부실조합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업무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농산물 유통 개혁


가.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유통정책과 사무관 김아림

 시행배경

농산물 생산은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 변동성이 크고 수급 및 가격 변동이 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안정적인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기상 요인 영향이 큰 노지채소와 과수의 수급안정을 위해 노지채소는 '95년부터, 과실은 '01년부터 수급안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산계획 단계부터 사전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99년부터 9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관측사업을 시행하여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관측정보(과종의향·작황·가격정보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자, 유통인 등 시장참여자의 관측 정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관측 품목을 확대하여 '18년 현재 총 35개 품목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그 동안 계약재배를 통한 채소수급안정사업은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 사업주체를 일선 농협에서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15년에는 계약재배농가 경영안정 및 강화된 수급의무를 부여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16년에는 기존의 일시·긴급수매방식이었던 배추·무 수급사업을 상시비축방식으로 개선하여 수급불안 대응력을 제고하였다.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자단체의 시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01년에 사과·배를 대상으로 과실 계약출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단감('02년)과 감귤('03년)을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였다.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00년부터 생산자 등이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정부가 같은 규모의 자금을 1:1 매칭펀드 형식(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00년 파프리카, 참다래를 시작으로 '18년에는 지원 대상 품목을 25개로 확대하였다. '12년에는 자조금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공포('12.2.22.)하였으며, '15년 5월 인삼 품목에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이후 '18년까지 친환경, 감귤, 파프리카 등 10개 품목의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었다.


향후계획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수급조절 기능 제고를 위해 '19년에는 품목 평년 생산량의 15%까지 사업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소가격안정제 확대와 더불어 수급 상황에 따라 사전면적조절 등 수급조절 이행을 위한 중앙주산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는 한편, 노지 채소·과채·과수 등 품목별 조직화 수준에 맞는 가격안정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2년까지 19개 품목에 대해 의무자조금 도입을 추진, 자조금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해당 품목의 수급조절, 소비촉진, 시장개척 등 마케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조금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수급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그간 여러 기관 및 시스템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농산물 생산·유통정보를 연계·표준화하고,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수급예측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이 작동하는 자율적인 농산물 수급환경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유통정책과 서기관 박은영

시행배경

2010년 가을 이상기후로 인한 배추 생산량 감소는 배추의 소비자 가격을 평년에 비해 최고 3.5배까지 올리면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세계 유수의 언론사인 TIME지는 2010년 10월 7일자 기사(Cabbage Crisis : South Korea Runs Out of Kimchi)를 통해 김치 종주국인 한국에서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 부족이 국가적 위기(national crisis)를 야기하였다고 표현하였다. 배추가격 폭등을 계기로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락하는 것을 막고 유통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채소류에 중점을 둔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마련('11.1)하고 2012년까지 이를 추진하였다.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유통비용절감’ 및 ‘가격변동성 완화’를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13.5월)’을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2014년 5월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 대책의 핵심적인 사항은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유통주체들의 유통효율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거래 확대,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및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에 따라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의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내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우선 소비되는 먹거리 공급체계인 지역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17.12)하였다.

시행내용 및 성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수립 이후 다양한 농산물 유통정책들이 많이 추진되었는데, 주요 추진 과제는 로컬푸드 직매장 등 신유통 확대,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농산물 직거래·B2B 및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등 신유통 확대

2013년부터 ‘소비자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사업, 직거래장터 및 직거래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완주군 용진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직매장 사업자에 대해서 인테리어·시설 및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 결과, 2012년 3개소에 불과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이 2018년말에는 229개소까지 증가하였다. 직거래 장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철 농산물을 한데 모아 가정으로 배송하는 형태의 직거래인 ‘꾸러미사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였고, ‘09년부터 농수산물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였고,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농산물은 '18년 기준 2조 9780억원에 달한다.

또한, 직거래의 장점 및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거래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직거래 유형별 우수 사례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직거래 페스티벌을 개최(3회)하여 직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였다.

아울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거래소’를 거래액은 2018년 2조 2,117억원(수산/가공제외)을 기록하였다.

직거래, 사이버거래소,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등의 신유통이 확산된 결과, 2018년 신유통을 통한 거래액은 약 10조 2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3% 증가하였다.

표 2-1 2016~2018년 농축산물 신유통경로 거래액

(단위: 억원)

구분	직거래	공영홈쇼핑	aT 사이버거래소	농협 직접도매사업	협동조합형 축산물패커	합 계
2016년	28,151	1,541	22,320	12,024	22,857	86,893
2017년	34,606	1,893	22,117	12,283	23,535	94,434
2018년	40,516	2,248	22,022	12,454	25,059	102,299

한편, ‘15년 6월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7월에는 공영 홈쇼핑을 개국, '17년도에 이어, 18년 농식품 매출액이 2,248억 원에 달하는 등 농산물의 새로운 유통경로로서의 자리매김 하고 있다.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

국내 농산물 유통체계는 가락시장으로 대표되는 도매시장, 대형마트와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 등 주요 채널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되고 있으며, 높은 가격변동성 등 비효율성과 중소농의 판로부족 현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순환되는 유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는 2018년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농식품부·지자체·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추진 TF와 민간 전문 자문단을 구성(‘18.7.)하고,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나주 혁신도시 14개 공공기관과 화천·포천 2개 접경지역 군 급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추진하였다. 더불어 지자체의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로컬푸드 중심의 공공급식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배포하고,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연계한 농림사업(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7개)의 패키지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18.12.)하여 지자체 중심의 로컬푸드 공급확대 여건을 마련하였다.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농업 선진국과 같이 산지(產地)가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될수록 도매시장의 역할은 축소되고 소매시장이 중계 기구로서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농협을 비롯한 산지가 제대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도매시장¹⁾이 농산물 유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례로 채소를 보면 전체 생산량의 40% 내외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생산량 중 자가소비, 감모 등을 제외하고 실제 유통물량을 생산량의 82% 정도로 가정한다면 절반 가까이 채소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고 볼 수 있다.

도매시장은 소규모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효율적인 집하·분산·중계라는 유통의 순기능 외에 경매라는 일일(一日) 수요공급량에 의한 가격결정이라는 불합리한 측면도 크다. 이러한 도매시장의 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2년 2월에 농안법을 개정하여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하였고, 같은 해 8월에 시행하였다.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하여 2013년 8월에는 정가·수의매매 지침을 마련하였고, 농안

1) 현재 우리나라에는 32개의 공영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을 통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4년 10월부터는 중도매인간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또한, 정가·수의매매 관련 정책자금 지원,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출하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 등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이 '12년 8.9%에서 '18년 18.8%²⁾로 증가하였다.


또한 산지에서 도매시장까지 이동하는 물류거리 단축 등 비용 절감을 위해 '19년 온라인 경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온라인을 통한 송품장 등 정보등록, 선거래 후물류 경매방법 등 온라인경매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였다.

향후계획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13.5월)’ 및 보완대책(‘14.5월)’을 추진한 결과,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 비중이 2014년 14%에서 2015년 16%로 증가, 2016년 17.4%, 2017년 18.9%, 2018년 20.7%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유통비용절감액 추정치도 2016년 8,702억원, 2017년 9,860억원, 2018년 1조 1,042억원으로 지속 증가하였다.³⁾

향후에도 유통비용 절감 및 수급안정을 위하여 직거래 확대 등 신유통 경로 확산을 통해 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농산물이 지역의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우선 소비되는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구축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소비자와 산지 간 직접거래 활성화

 유통정책과 사무관 김남주

시행배경

도농교류 확대, 농산물 유통경로 다원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직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단축으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직거래장터 등을 지원하고

- 2)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시 수입농산물을 제외한 국산 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 실적에 한하도록 한 감사원 지적(‘17.1)에 따라 정가수의매매 비중 산출 기준을 국산 농산물 거래비중으로 재정비
- 3) 온라인쇼핑 등 일부 경로에 대한 조사방법이 변경되어 신유통경로 거래액 및 유통비용절감액 재정비

있으며, 2008년부터는 소비지 유통·식품·외식업체와 산지조직 간의 직거래(B2B)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전자방식의 직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직거래는 크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의 직거래와 중간 유통경로를 생략하고 생산자 조직과 대량 수요처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광의의 직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주체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과천 경마공원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을 개장하여 2009년에는 방문객 수 29만명에 5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8년엔 100만명에 120억원의 매출을 올려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물가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전국 농협 지역본부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정례 운영되는 직거래장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명절 등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지역 별로 임시 장터를 열어 농산물 공급망을 늘리고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3년 32개소에서 2018년 전국 229개소로 확대되어 로컬푸드와 직거래의 대표모델로 성장하였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이외에도 생산자단체와 소비지 업체 간의 직접 거래를 확대하여 대규모로 직거래의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소비지 유통·식품·외식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조직과의 직거래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비지와 산지가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내에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온라인 상으로 판매조직과 구매조직이 회원사로 가입하여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정산소를 갖추어 대금결제 등 거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에는 2조 9,780억원으로 성장하여 농수산 분야 B2B 거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직거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15년 6월 22일 제정하였다.

향후계획

소비자·생산자 간 직거래 확대로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국내산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On-line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수요 맞춤형 농가 D/B’를 구축하여 온라인 사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활성화를 통해 학교급식 확대 등 온라인을 활용한 B2B 직거래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로컬푸드직매장에 레스토랑, 로컬요리교실, 먹거리교육문화시설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추가하여 단순 지역농산물 판매처에서 나아가 도농상생·교류의 공간 및 로컬푸드 식문화 공유·확산의 중요한 공간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유통정책과 사무관 김민호

시행배경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정부는 1985년부터 2004년까지 가락동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강서도매시장까지 32개의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하였다. 32개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과 유희공간, 물류시설 부족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신속한 유통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에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공영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와 거래제도 다변화 등의 노력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와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정부는 공영 도매시장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농민에겐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겐 신선하고 빠른 농수산물 유통을 제공하며 유통비용 감소와 거래제도 다변화를 통해 농수산물 수급안정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공영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공영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고품질·신선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물류·경매장 구조개선, 저온저장 시설, 가공·포장 등 농수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9년 공영도매시장(32개소)을 대상으로 시설노후화가 심하고, 유통물량 과다로 시설이 부족한 공영도매시장(서울가락시장, 대전오정시장, 광주각화시장, 충남천안시장, 경기수원시장, 경북안동시장, 경기구리시장)을 선정하여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40%, 지방비 30%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전오정도매시장은 '09년에서 '13년까지 연면적 42,933㎡, 3층의 규모로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였고, 충남천안도매시장은 '12년에서 '16년까지 연면적 30,456㎡,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사업을 실시하였다. 가락도매시장의 경우, '09년에서 '21년(13년간)까지 연면적 513,159㎡,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도·소매권역을 분리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기수원도매시장은 '17년에서 '20년까지 연면적 49,828㎡,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각화도매시장의 경우 당초 '09년부터 '13년까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도매시장 유통인들이 사업기간 영업손해, 시설물 배치 등의 이유로 시설현대화를 적극 반대하여 사업을 포기하였다. 경북안동도매시장은 '18년부터 '20년까지 연면적 28,931㎡,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기구리도매시장은 '19년부터 '22년까지 31,066㎡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효율적으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사업집행점검 등을 통해 도매시장 물류체계 개선 및 유통효율화 기반 확충을 위한 기반을 충실히 구축하였다.

운영효율화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관계자 등 도매시장 유통인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도매시장 평가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도매시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경매제도로 인한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 및 비상장품목 거래안전성 제고를 위해 매매

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고,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2012년 2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개정하여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도매시장이 투명성·공정성 중심에서 효율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정가·수의매매 확대,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을 통한 규제완화로 유통주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정가·수의매매 예약거래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및 도매시장법인 등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도매시장 물류 효율화를 위해 최소출하단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안법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과징금 납부 방식을 변경하고 경매사 행정처분 사유 구체화, 과밀부담금 면제 등을 통해 유통종사자의 권익보호 강화 및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과징금 체납처분에 따른 행정력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도매시장 가격결정을 경매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로 다양화하기 위해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 등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거래 안정성이 낮은 가락시장의 비상장 품목 및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에 대해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여 정산조직을 통한 대금 결제 실시로 출하자를 보호하기도 하였다.

향후계획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규제완화를 통한 도매시장 유통주체 경쟁력 강화 및 출하자 거래대금 정산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금정산조직 설립·자금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 및 농산물 유통 효율화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도매시장 유통주체 간 경쟁촉진, 상물분리 거래제도 마련, 정가·수의매매 추진 등 유통 및 물류효율화를 위한 각종 대책 및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임산물 유통 개선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김정훈

시행배경

임산물은 대부분 가을에 수확기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시설 등이 부족하여 수확 후 홍수출하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또한 생산자는 저가에 출하하고 소비자는 고가에 구매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친환경 임산물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으며, FTA 체결 등으로 국내 임산물 시장개방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자조직 중심의 임산물유통체계 기반을 확충하고 원료상태로 유통되는 임산물의 부가가치제고를 위하여 유통·가공분야 지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생산의 규모화와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져있다. 아울러, 소비촉진사업 지원과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생산정보 제공을 위한 관측사업, 실시간 가격·유통 정보제공을 위한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 지원, 1차 상품의 가공을 위한 시설 및 유통자재 지원과 생산·가공·체험·관광 등을 융합한 6차산업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WTO 체제 출범, FTA 협상진행 이후 시장개방 등 자유무역 확대로 목제품과 버섯, 잣, 대추, 호두, 산채류 등 값싼 외국 임산물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 임산물과 당당히 겨루어 나갈 수 있는 국내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유통기반시설 확충, 산지의 전문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지원 강화, 생산자의 시장 교섭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 등 효과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의 산지와 소비자가 가깝게 연결되는 직거래 판매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주요 생산지역에 각종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하여 생산자 단체가 생산한 청정임산물의 직거래 유통을 위해 현재까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122개소를 지원하였다.

표 2-2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합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소	122	86	10	7	7	12
금액	50,278	43,278	3,500	3,500	3,500	3,500

자료 : 산림청, 2018년

최근 임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소비추세는 안정성과 가격보다는 질 위주로 소비자의 관심도가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력보다는 지역별 차별화·표준화된 품질과 브랜드를 활용한 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표준출하규격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물을 생산에서 가공·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 공동출하를 통해 단기임산물의 수급불안과 소비지시장의 급격한 구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저장·건조시설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산물 가공장비를 유통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18년 62.4억원)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표시등록 품목의 명품화 및 상품화를 위한 디자인개발·저장포장라인시설 지원('18년 28.4억원)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표시등록제도를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2006년 3월에 양양 송이를 제1호로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장흥 표고, 산청 곱감, 정안 밤 등 56개 품목을 등록 완료하였다. 앞으로도 지역별 명품 임산물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확대하고 국내 지역특산물에 대하여 보호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외국 임산물 관련 상품과 차별화 및 대응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표 2-3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등록연도	등록번호	품목	등록연도	등록번호	품목
2006 (8)	1	양양 송이	2010 (6)	30	거제맹종죽순
	2	장흥 표고버섯		31	태백 곰취
	3	산청 꽃감		32	인제 곰취
	4	정안 밤	2011 (7)	33	덕유산고로쇠수액
	5	울릉도 삼나물		34	진도 구기자
	6	울릉도 미역취		35	횡성 참숯
	7	울릉도 참고비		36	담양 죽순
	8	울릉도 부지갱이		37	무주 머루와인
2007 (5)	9	경산 대추		38	충주 밤
	10	봉화 송이		39	함양 꽃감
	11	청양 구기자	2012 (5)	40	울릉도 우산고로쇠수액
	12	상주 꽃감		41	강릉 개두릅
	13	남해 창선고사리		42	화순 작약
2008 (7)	14	영덕 송이		43	화순 목단
	15	구례 산수유		44	원주 옷칠액
	16	광양백운산고로쇠수액	2013 (2)	45	무주 천마
	17	영암 대봉감		46	원주 옷칠액
	18	천안 호두	2014 (5)	47	청양 표고
	19	문경 오미자		48	청양 밤
	20	무주 머루		49	무주 후두
2009 (6)	21	울진 송이	50	인제 고로쇠수액	
	22	횡성 더덕	51	영월 곤드레	
	23	악양대봉감	2016 (2)	52	장수 오미자
	24	영동 꽃감		53	부여 표고
	25	가평 잣	2017 (2)	54	무주 오미자
	26	홍천 잣		55	평창 산양삼
2010 (6)	27	보은 대추	2018 (1)	56	밀양 대추
	28	청도 반시			
	29	정선 곤드레			

자료 : 산림청, 2018년

임산물에 대한 관측의 필요성을 느끼며 2003년부터 밤에 대한 관측정보 제공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6개 품목(밤, 표고버섯, 뽕은감, 대추, 조경수, 산채류)에 대하여 산지 생산량, 시장가격, 수출 및 수입전망 등 해외 시장동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생산자에게는 생산·출하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임업관측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18년 6억원)하고 있다.

향후계획

대부분 원료상태로 유통되어 부가가치가 낮은 임산물을 다양한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임산물로 거듭나도록 유통·가공분야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며, 지리적표시등록 등을 통한 임산물의 명품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임산물 먹거리 수요에 맞춰 공급하고, 생산·유통·가격 등 다양한 정보제공과 수입 임산물과 차별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박정인

시행배경

최근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간편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건강·안전을 중시하는 소비경향이 강화되는 등 식품 유통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영양가치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반면, 수산물 유통은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유통구조, 제한된 유통경로로 인한 경쟁부족, 산지·도매·소매 등의 유통단계별 인프라 구축 미흡 및 수산물 생산의 불확실성과 계절성 등에 따른 가격 불안정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의 영세성 등으로 유통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연근해 수산물의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조성, 수산물 유통단계의 고부가가치화, 수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수산물 유통산업의 도약기반 마련을 위한 유통혁신 로드맵('18~'22)을 수립하게 되었다.

시행내용 및 성과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먼저, 수산물 유통의 첫 출발점인 산지위판장의 위생여건을 개선코자 「산지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제정·고시('18.5) 하였으며, 수산물 양륙·선별·위판·배송 전과정에 위생시설을 갖춘 '청정위판장' 조성을 추진하여 '19년도에 1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제한된 유통경로로 경쟁이 부족하고, 산지·도매·소매 등 유통단계(6단계)가 복잡하여 수산물 유통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인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유통경로인 거점유통센터(FPC) 건립을 '12년도부터 추진하여 '18년 현재 5개소(속초·한림·완도·경주·고성)를 완공하였고, 3개소(인천, 강릉, 장흥)가 신규 건립 중에 있다. 또한, 전국 소비지로의 신속한 유통을 돕기 위해 '16년부터 소비자 분산물류센터를 인천에 건립 중에 있으며, '18년에는 호남권(나주)에 1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자분산물류센터가 완공되면 기존 6단계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4단계로 단축하게 된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영홈쇼핑 입점지원('18년 25개 업체), 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온라인 쇼핑몰 등과 연계한 홍보 지원 등도 적극 실시하였다.


또한, 수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화를 위해 수산물 가격안정 관리대상 품목을 선정·집중관리하고, 정부비축사업 개선 등 '수산물 가격안정대책 개선 방안('18. 2)'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수산물 수급상황을 정확히 분석·진단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종합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향후계획

소비자에게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어업인에게는 수취가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정 위판장 건립('19. 1개소)을 추진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19. 신규 1개소)와 소비자분산물류센터(계속 2개소)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며, 또한 소비자가 손쉽게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 중심의 유통망 확충 등을 통해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나갈 것이다.

농림수산분야 규제 개혁

1 농림축산식품 부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남정원

시행배경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행정규제는 대부분이 국민의 먹거리 관련 안전·유통관리 및 농축산물의 품질, 검역·검사와 관련된 불가피한 규제이다.

2018년은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로 우리경제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측되는 등 국내외 경제부진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쌀관세화 등 농식품 시장 개방으로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청년층·지역업체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악화, 소비위축 등이 나타나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 사회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 및 서민생활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발굴 및 개선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투자확대 및 경제적 효율성과 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미흡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강화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소비자 보호 등 민생 관련 규제는 합리화를 통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좋은 규제를 구현하며, 불공정한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경쟁 촉진과 동반성장을 지원 하는 한편, 기업 활동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애로 해소, 규제부담 완화 등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농식품 부문 규제개혁은 농업 관련 진입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하여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의 불편요인 해소 및 시설기준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2018년은 농업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고,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특별공모, 규제개선 TF, 규제개선 전문가포럼, 농식품분야 분야별 핵심규제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용역 운영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약40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70여건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규제개혁신문고, 대국민 대상 특별공모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제기한 다양한 현장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였으며, 농식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규제개선 TF 운영하였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

2018년은 농업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고,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을 추진 하였다.

-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 (창업 생태계)기술력·가능성 중심으로 농지, 자금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창업지원
 - (인프라 구축)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 기업·연구기관·농업인 공동 연구실증으로 기술개발 지원, 제품화·수출까지 연계
 - (확산거점 조성)스마트팜 집적화, 창업, 기술혁신(R&D)등 생산·교육 연구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 간척지 조성중인 토지의 문화예술사업 임시사용 확대
 -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 신설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청년농 참여 확대
-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 농산물의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다양화
 - 가축시설 등의 소독방법 다양화
 -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규격 네거티브 전환
- 대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 농작물재해 보험업 적용 대상품목 확대
 - 농지의 임대차 허용사유 확대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수행주체 확대

규제개혁 추진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효과 제고를 위한 홍보 실시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의 조기 정착을 통한 체감도 제고를 위해 수혜자 대상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다.

기존의 언론·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전문지 홍보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공감과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홍보대상을 분류하여 맞춤형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규제개혁 추진 성과 확산을 위하여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성과사례 책자발간



방송보도



현장간담회



인포그래픽 제작

* 홍보실적(99건) : 성과사례집(1건), TV보도(43건), 신문보도(208건) 등

규제개혁 성과

2018년은 농식품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신산업을 육성하고,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스마트팜 확산 촉진, 신산업창출 등 적극 추진하여 농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였다.

2018년에 우리부에서 추진한 주요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향후 10년간 총 3조 1,154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러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개혁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2018년 규제개혁평가에서 “우수 부처”로 선정되었다.

향후계획


2019년은 반려동물산업, 스마트팜 등 농식품 분야 유망 신산업을 혁신과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농식품 분야 일자리·소득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동안의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실효성·체감도가 큰 과제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규제개혁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개선이 완료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사례집, 언론 홍보 등 다양한 수단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고객의 체감도를 높여 가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농촌활력 창출 및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등을 위해 농식품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변화된 농업 경영환경에 맞게 과도한 규제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특별공모, 연구용역 등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해 현장으로부터의 각종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2

산림 부문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원동복

 시행배경

산림훼손에 대한 우려로 산림자원 보존의 필요성이 여전한 반면 산림분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이용규제 완화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 현상, 미세먼지·폭염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산림휴양·치유 등과 관련된 휴양시설의 조성 및 운영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자원의 보존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개선에 중점을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성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기준·절차 및 생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국민과 임업인의 불편·부담을 해소 하였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등 4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규제를 적극 개선하였고, 8건의 과제를 추가 발굴 하였으며, ‘미이용 임목부산물 활용 촉진’ 등 산림분야 에너지신소재 육성을 통한 8건의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 등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을 통해 향후 3년간 6,013명의 산림분야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기간 전면 확대’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유발하는 장기 숙원 규제 개선으로 국민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였다.

표 2-4 2018년 산림분야 주요 규제개선 사례

연번	과 제 명	개 선 내 용
1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에 목재제품 신기술이 적용된 제조업을 포함 * (당초) 펄프업, 탄광업, 연간 3천㎡ 이상 국내산 원자재 이용·가공사업, 파티클보드, 목재칩제조업, 목재펠릿제조업 (변경) 목재제품 신기술이 적용된 제조업 카테고리 추가 (예) 방부목재 테크재, 난연목재
2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으로 나열된 품목(79개) 외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 마련
3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임산물의 정의에 목재제품 중 일부품목만 열거되었던 것을 목재제품 전부가 포함되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
4	목재펠릿 사용원료 분류 개선	펠릿의 사용원료를 침엽수와 활엽수의 톱밥 등과 이를 분쇄한 것으로 제한하던 것을 산지개발 과정에서 나온 산물, 제재부산물,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을 포함
5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지정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지정 * '19.12.31.까지 35%, '21.12.31.까지 40%, '23.12.31.까지 45%, '24.1.1. 이후 50%
6	미이용 임목 부산물 활용 촉진	벌채지 또는 조림지의 임목부산물에 대한 수집·활용 촉진을 위해 임목부산물을 바이오 에너지 자원으로 수집·활용될 수 있도록 REC 가중치 부여 등 활용 촉진 방안 마련
7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 이외에도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8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 완화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려고 할 때, 현황도호가 있어야만 산지전용 가능하던 것을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 전체가 농지로 돌려써야있는 경우 현황도호 없이 산지전용 허용
9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기준 완화	집성재에 대한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에 영문표기도 가능하도록 개선
10	산림복지전문업 등 등록·심사 처리기간 단축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및 변경 등록 처리기간, 목재펠릿 보일러의 등록심사기간을 단축 * 처리기간 (산림복지전문업)등록 20일→15일, 변경등록 15일→10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등록·변경등록 30일→20일 (목재펠릿보일러)등록심사 3개월 이내→2개월 이내, 연장 2개월 이내→1개월 이내
11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국립자연휴양림시설 내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 동반 입장을 금지하던 것을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12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확대	산림레포츠시설 종류에 동력을 활용한 산악오토바이 등 추가
13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를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산림조합,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
14	버섯중균생산업자 등록 요건 완화	버섯중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 중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버섯중균 제조업계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제한하던 것을 이상 종사한 자로 자격 완화

연번	과 제 명	개 선 내 용
15	보전산지 내 산림복지단지 조성 허용	보전산지 내에 휴양·문화·치유 등의 복합시설인 산림복지단지 설치 허용
16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기간 전면 확대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
17	국유림 교환 절차 개선	국유림의 교환 절차 개시 시점부터 교환 대상지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던 것을 교환 대상지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소유권 확보 이전에도 교환 절차 개시 가능
18	임업후계자 교육	현장체험과 이론 교육의 병행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이수 지원을 위해 임업후계자 선발을 위한 총 교육이수 요건 40시간 중 20시간까지 사이버 교육이수 실적을 인정
19	목재 관련 인증·인정 기준	목재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으로 통합하고 전통목재제품의 인증제도는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와 통합하여 운영
20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중 원목생산업 등록기준에 유통범위를 별채한 자가 별채한 목재를 유통하는 경우만 인정되는 것을 원목을 순수 유통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규제개선
21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요건	목구조기술자 양성 및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목구조기술자 자격요건 중 독학사 및 학점인정 제도를 도입
22	사방협회의 조직·운영 등	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방협회의 임원 범위를 협회 정관에 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규제개선
23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수목장림 조성 면적을 3만㎡미만에서 10만㎡미만으로 확대하는 규제개선
24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연결개발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개선
25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확대
26	산촌지역 지정관련 권한위임(시·도 조례로의 위임)	산촌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일부 내용, 경비한 사항의 변경 등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개정
27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유효기간 연장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유효기간(3년)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8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도 폐지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도 폐지
29	국유림 매수 및 교환 시 제출서류 다양화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30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 중복 제출 조항 삭제	산지전용허가시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조항 삭제
31	송전시설에 대한 복구비 예치 의무 면제	복구비 예치 의무 면제 사항에 진입로를 포함한 송전시설을 추가

자료 : 산림청 기획조정관실, 2017년

2)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한 규제비용 적극 감축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2016.7.19)의 제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규제비용관리제가 2016년 하반기부터 규제심사에 도입 추진되었다.

그림 2-1 규제비용관리제 개념도



자료 : 산림청 기획조정관실

이에 산림청은 36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내실화 및 폐지·완화 규제의 비용분석을 통한 규제비용 절감을 추진하였다. 부수적인 토석의 경우 불필요한 장비기준 완화 등 4건의 규제비용분석을 통해 29.6억원의 규제순비용을 감축하고, 규제심사를 강화하여 비용 발생을 zero화하는 등 규제비용관리제 시행 이후 477억원의 감축비용을 적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계획

산림자원의 보전·육성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규제개선과 더불어 산림산업을 저해하는 규제 및 국민불편·부담을 유발하는 산림이용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점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첫째,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한정적으로 나열된 기준에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등 유연한 분류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기준과 절차 등의 규제를 혁신하여 산림분야 일차리창출을 위한 산림산업 육성 저해 규제를 개선한다.


셋째, 산림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임업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산림분야 생활밀착형 규제 혁신을 통해 산림이용 활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 밖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해양수산 부문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김정희

 시행배경

2018년도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 등에 따라 세계경장 성장률은 3% 중반대, 우리나라는 3% 내외 성장이 전망되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경제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해양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나, 조선·해운 등 전통산업은 침체로 국내 해양산업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국은 경쟁적으로 규제혁파를 내세워 산업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기업혁신과 신기술 융합 등을 위한 신산업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추진이 필요하다.

 시행내용 및 성과

그간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 부문 각종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였으나, 근본적 체질개선·스마트화 측면의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점으로 2018년 우리 부는 27개 규제혁신 대표과제 개선, 국민생활 불편규제 정비, 지방규제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쟁국 대비 뒤쳐진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 수산자원 감소·어업인 고령화 대응 수산혁신, 침체된 연안·어촌 활성화를 뒷받침할 규제 재설계를 추진하였다.

적극적인 규제혁신 추진

- 미래신산업,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등 현 정부 정책방향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각종 규제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현장조사, 지자체·산하 기관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였다.
- 또한,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보도자료 배포, 웹툰·인포그래픽 등 홍보자료의 온라인 게시 등을 통한 전통적인 대국민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홍보와 향만·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의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홍보를 추진하였다.


규제개선을 통한 수산업·어업 환경 개선

2018년 해양수산 부문 규제개선의 핵심인 수산업·어업 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추진하였다.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 어촌계원 가입자격을 기존 지구별수협 조합원에서 일반 어업인으로 완화하여 어촌계 진입장벽 해소
- 어항내 민간투자 요건 완화
 - 어항 지정권자가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공공단체 우선 매각규정을 폐지하여 민자유치 활성화 도모
- 어선원부의 등본·초본 발급방법 개선
 - 관외 지역 어선의 어선원부도 정보통신망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어선원부 열람·발급이 가능토록 개선
- 어업인확인서 발급 대상지역 확대
 - 내수면어업, 관상어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종사어업인을 포함하여 전지역으로 확대
- 어선부품 허용재질 확대
 - 발전기 회전축 허용재질을 탄소강단단강품(SF440A) 규격(1개 제품)에서 일정 최소인장강도 이상 충족 시 다양한 재질의 회전축을 사용하도록 개정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확대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을 도서지역과 육지와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하던 것에서 거리기준을 삭제하여 모든 도서지역 어가를 지원

 향후 계획

2019년도에는 기존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 어촌연안지역 활력 제고와 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의 ‘先허용-後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행정규칙 내 규제를 규제입증 전환으로 재검토하고 및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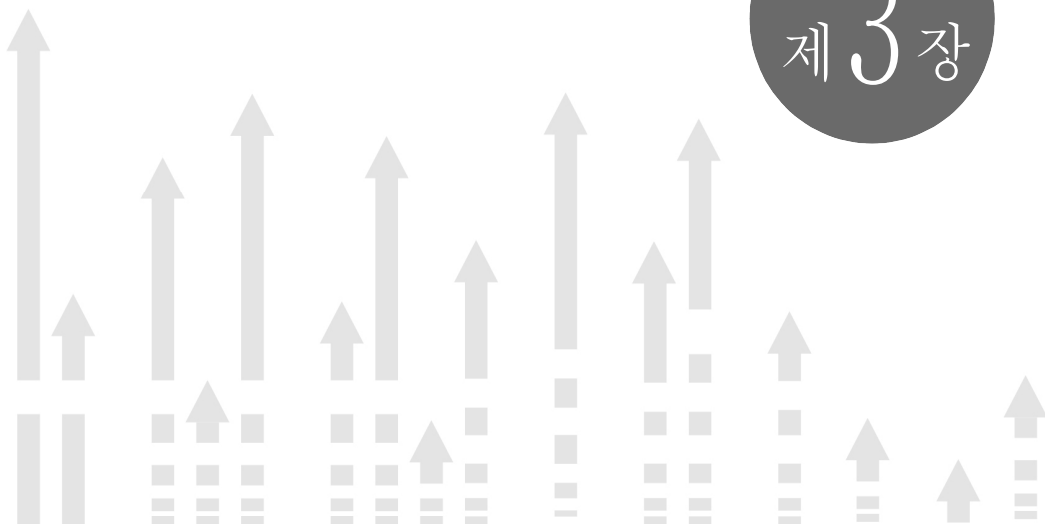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 관심 업체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 상담, 절차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신규 도입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발굴을 위해 우리 부 및 소속기관 등에 제도 설명자료, 업무처리 지침 등을 배포하고,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기존규제 정비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우리 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 해양수산부 행정규칙 내 규제를 규제입증 전환방식으로 일괄 정비하고, 해양수산 업계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 제1절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
- 제2절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 제3절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 제4절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 제5절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및 효율적 수입관리
- 제6절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업환경 보전
- 제7절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화

제 3 장



1 농지은행제도

 농지과 서기관 최수아(맞춤형농지지원, 임대수탁)·최문환(경영희생, 농지연금)

시행배경

농지은행사업은 세계의 무역자유화를 위해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상인 UR가 타결(1993.12월) 될 것에 대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농가 육성 및 국내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0년 영농규모화 사업을 도입한 것이 시초가 되었으며, 이후 고령화, 시장개방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농지이용, 농업구조개선 촉진 등을 위해 「농지법」 개정('05.7.21.)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05.12.29.)을 통해 2005년에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었다.

시행내용 및 성과

2005년 임차자 또는 매입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이 위탁받아 임차자와 매입자를 연결해 주는 임대수탁사업을 도입하였고, 2006년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희생지원을 위한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도입하였다.

2005년 영농규모화사업과 기존 농지은행사업을 “농지은행사업”으로 통합하였고, 이듬해인 2010년 농지매입비축사업을 도입하여 농지은행의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의 기능전환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이후 2011년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사업을 도입하였다. 2018년 농지규모화사업과 농지매입비축사업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3-1 농지은행 주요사업 연혁

연도	1990년	2005년	2006년	2010년	2011년	2018년
사업명						농지연금
					농지매입·비축	맞춤형 농지지원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임대·매도 수탁					
	농지(영농) 규모화					맞춤형 농지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1) 前 농지규모화사업

농지규모화사업은 경영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비농업인, 이농·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영농복귀자, 농업법인 등에 매도 또는 임대하고, 농업인(농업법인)간 농지의 교환·분합을 장기 저리로 용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 농지규모화 사업의 농업인 매도(임대) 시 용자조건

- 농지매매 : 금리 1%, 11~30년간 분할상환
- 장기임대차 : 무이자, 5~10년 임대기간 동안 분할상환
- 교환분합 : 금리 1%, 10년 분할상환

2018년에는 총 1,477ha 860억원을 1,693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지원내역은 농지매매 518ha 563억원, 장기임대차 958ha, 295억원, 농지교환·분합 1ha 1.7억원이다. 이로써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총 7조 5,026억원을 지원하여 178,688ha의 농지를 규모화시켰다.

표 3-2 前 농지규모화사업 추진 실적

구분	합계	(단위 : ha, 억원)									
		1990~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면적	178,688	154,587	4,282	2,787	2,711	2,609	2,543	2,913	2,477	2,302	1,477
금액	75,026	61,295	2,117	1,611	1,621	1,585	1,372	1,791	1,508	1,226	86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이를 통해, 쌀전업농의 호당 평균 경영규모는 1995년 2.5ha에서 '18년 6.4ha 수준으로 확대되어 2.6배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전체 벼 재배면적 대비 쌀전업농의 경영면적 비중을 2004년 28%에서 2018년 57%까지 확대하였다.

※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규모 : ('95) 2.5ha → ('05) 4.2 → ('10) 5.2 → ('13) 5.9 → ('17) 6.3 → ('18) 6.4

※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면적 비중 : ('04) 28% → ('10) 41 → ('13) 51 → ('17) 55 → ('18) 57

또한 쌀 생산조정을 위해 '17년부터 농지매매의 경우 논에 벼 외 타작물 재배희망자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여 '18년까지 농지매매 지원 농지 1,055ha가 타작물 재배에 이용되었다.

2) 前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급속한 고령화 및 FTA확산 등 농업개방 확대에 따른 농지수급 불안 증가 및 농지가격 하락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령·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업진흥지역안 우량농지를 감정가격으로 매입하여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 확보, 원활한 은퇴 지원 및 농지유동화 촉진하고 있다.

또한 매입비축한 농지는 2030세대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함으로써 농업경영주의 연령 하향('18년, 매도자 69세 → 임대자 39세 「30세↓」)에 따른 농업구조개선, 농촌활력 증진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16년부터 쌀 생산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논외의 경우 벼 이외 타작물 재배(휴경 포함)를 조건으로 임대를 실시하고 벼 이외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의 80%, 휴경시 100%를 감면하였다. 그 결과 비축농지의 타작물 재배 면적은 '16년 1,259ha에서 '17년 1,491ha '18년 1,421ha 등 '18년까지 총 4,171ha의 비축농지가 타작물 재배(휴경)에 이용됨으로써 쌀 생산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2,606억원을 투입하여 1,617농가의 농지 917ha를 매입함에 따라, 2010년부터 2018년말까지 6,016ha를 매입하여 수용, 경지정리 등 20ha를 제외한 5,996ha를 비축한 후 이중 5,744ha를 임대(95.8%) 하였다.

표 3-3 前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호, 억원)

구 분	매 입											임 대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면 적	6,016	495	711	715	730	541	624	580	703	917	5,634	21	725	844	784	592	804	523	675	666	
농 가	9,952	829	1,175	1,236	1,204	888	993	900	1,110	1,617	6,373	25	804	995	839	691	937	597	685	800	
금 액	14,281	750	1,573	1,599	1,665	1,277	1,525	1,486	1,799	2,606	-	-	-	-	-	-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하고, 매입농지는 해당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고, 임대기간 중에는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회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2,8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27ha의 농지를 매입, 849농가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304농가에 2조 7,672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18년에 경매로 처분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957억원(농가당 113백만원) 수준의 자산손실을 방지하고, 고율의 연체이자 대신 저렴한 임대료를 통한 이자비용 338억원을 절감(농가당 40백만원 수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어 해당농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자산손실 방지 9,408억원(농가당 91백만원), 이자비용 절감은 3,320억원(농가당 32백만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표 3-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실적

(단위 : 호, ha, 억원)

구분	합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농가수	9,455	185	444	493	639	1,148	978	1,009	1,021	928	898	816	896	849
면적	12,488	312	629	705	880	1,369	1,312	1,302	1,249	1,227	1,202	1,140	1,161	1,027
금액	24,853	422	953	1,195	1,700	2,400	2,400	2,600	2,564	2,600	2,596	2,584	2,838	2,82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18년까지 총 지원 농가(10,304) 중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06년 지원 농가(185) 중 139농가(75%), '07년 지원 농가(444) 중 369농가(83%), '08년 지원 농가(493) 중 402농가(81.5%)가 환매하였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임대수탁사업은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 형태의 다양화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의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농업구조 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996년에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질병·징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를 금지함에 따라, 탈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인간 임대차 등을 공식적인 법적 제도 내로 유인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도에는 22,980농가에 11,953ha를 임대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8년까지 219,401농가에 122,650ha를 임대하여 농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표 3-5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임대 추진실적

(단위: 호, ha)

구 분	합계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농가수	219,401	24,566	27,237	14,948	15,923	16,638	16,487	17,899	20,272	22,019	20,432	22,980
면 적	122,650	12,921	15,956	8,118	10,837	10,059	9,706	9,928	9,721	11,357	12,093	11,95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 농지연금사업

 농지과 서기관 최문환

농지연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으로 '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월 지급금은 농지 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수급자가 사망하는 등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환 또는 농지의 저당권 실행으로 농지연금의 채무(월 지급금 등)를 회수한다.

표 3-6 농지연금 월 지급금 예시(종신형 기준, 감정평가)

(단위: 천원)

가입 연령	65세	70세	75세	80세
농지가격 2억원	572	647	741	869

2018년에는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 등의 기초변수를 조정하여 2019년도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최대 20.6% 상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18년까지 총 가입건수는 11,283건이며, 총 3,342억원의 연금을 지급하였다. 가입한 농가가 받는 평균 월 연금액은 농가당 90만원이고, 평균 연령은 74세로 나타났다.

표 3-7 농지연금 사업 추진 실적

구분	가입(건)	평균 연금액(만원)	담보농지(㎡, 백만원)	
			평균면적	평균평가액
계	11,283	90	3,916	167
종신형	4,657	84	3,979	212
종신정액형	3,855	83	3,976	207
전후후박형	449	91	4,138	217
일시인출형	353	75	3,809	260
기간형	6,626	95	3,872	136
기간정액형	6,607	95	3,871	136
경영이양형	19	76	4,323	101

평가 및 향후 계획


경자유전 원칙의 실천적 구현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농지의 규모화·집단지화 성과를 유지하는 한편, 고령화 및 후계인력 부족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농가 및 귀농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을 위해 농지규모화사업과 매입비축사업을 통합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으로 사업을 개편('18)하였고, 향후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년창업농, 2030세대 젊은 인력, 귀농인 등 예비 농업인들의 영농 진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2016년부터 본격적인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가의 환매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분환매제도 도입, 분할납부 기간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환매대금 선납제 등을 제도개선하여 환매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고령 농업인의 원활한 은퇴지원 및 젊은 농업인에 대한 농지 지원 확대 등으로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비축농지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 유도를 통한 쌀 수급 안정기여 등 비축농지의 정책적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현장밀착형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서기관 조민경

시행배경

2018년 전체 농가인구 2,315천명 중 65세 이상이 약 44.7%(1,035천명)로 전년 대비 2.2%p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농가 1,021천호 가운데 69.9%(714천호)는경지 규모가 1.0ha 미만으로 영세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령농의 소득안정과 농지를 규모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WTO/DDA 협상이나 FTA 협정으로 인한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여건 하에서 고령농업인들이 전업 농업인 등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도록 하는 대신 일정 금액의 직접 지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를 통해 농업구조개선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에 따라 1997년부터 경영이양직불제도를 추진해오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경영이양직불사업은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한 농업인으로서 연령이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농업인이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매도·임대하는 경우 75세가 될 때까지 연령에 따라 최장 10년간 ha당 매도는 연 330만원, 임대는 250만원(17년까지는 매도·임대 동일하게 ha당 300만원 지급)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상한은 매도 및 임대 합산 4ha까지로 되어 있다. 사업의 효과적 홍보, 약정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 초기부터 한국농어촌 공사를 위탁사업자로 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1)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1월부터 경영이양직불제도를 확대 개편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진흥지역 논에 한정하던 것을 진흥 지역 내 논·밭·과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 연령을 63~69세에서 65~70세로 조정하였다. 또한 지급기간을

75세까지 최장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75세까지 분할 지급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하였다. 2011년, 2012년에는 고령 농업인의 비중이 높아 적정 양수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지의 양수 대상자 범위를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공사에서 농업경영 3년 이상인 45세 이하의 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까지 확대하였다. 2015년에는 농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양수 대상자(전업농업인 60세이하→64세이하, 일반 농업인 45세이하→50세이하) 및 이양대상자(65~70세 이하→65~74세 이하) 연령을 확대하여 향후 농업구조개선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에는 매도 이양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매도이양은 연간 ha당 330만원, 임대이양은 ha당 250만원으로 단가를 차등화하였다

2) 예산의 합리적 집행 및 사업 홍보 추진

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경영이양직불사업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당초의 예상과 달리 한·미 FTA 비준 지연, 농기계 사용 등으로 인한 영농 편리성 증대, 고령 농업인의 강한 농지 소유욕 등으로 목표물량을 달성하지 못하여 일부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2010년 이후 경영이양 신규 사업물량을 재조정하여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업 활성화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1,209회)하였으며, 홍보포스터 1만매, 안내문 6만매, 리플릿 6만매, 현수막 설치 128개, 지역신문(시·군단위) 20회, 좌담회 개최 392회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3) 고령농의 소득안정 및 전업농 영농규모 확대

1997년부터 2018년까지 경영이양 농업인 106.5천명에게 직불금 6,619억원(1인당 연간 6,21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영이양 농지 79.5천ha를 전업농 75.2천명에게 이양하여 전업농 1인당 1.06ha로 영농규모를 확대하였다.

표 3-8 경영이양 사업추진 실적('97년 ~ '18년)

(단위 : ha, 백만원, 명)

예 산		경영이양실적			전업농 등 지원현황	
면 적	금 액	인 원	면 적	금 액	인 원	1인당 양수면적
108,100	827,872	106,481	79,484	712,761	75,210	1.06

※ 매매·임대차 중복지원자 제외(고령농업인 3,225명, 전업농 12,926명)


향후계획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에게는 고정적인 보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귀농인, 후계농업인 등의 젊은 농업인들에게 농촌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사업신청 가능 농업인에 대한 경영이양 의향조사, 고령 경영주 농가 증감률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에 참여했던 고령 농업인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여 정책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 등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다각적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3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유통정책과 사무관 하미숙

시행배경

대형유통업체의 성장 및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가 구매자 중심(buyer's market)으로 변화하고 소비지 유통이 규모화되는 한편, FTA, DD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수입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의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농산물 산지유통은 농협조직(지역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개별농업인 등 다양한 주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의 생산구조는 영세하고 산지유통 조직 또한 상당수가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품질경쟁력 확보, 소비지 유통주체와의 동등한 거래교섭력 유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산지의 경쟁력은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소득 창출과 직결되며 이는 지속가능한 건전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산구조의 영세성에서 비롯되는 거래교섭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주체의 역량강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산지의 조직화, 규모화, 전문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산지를 규모화,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조직화하고 산지유통의 거점이 되는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다.

1992년부터 산지유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저장 및 상품화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산지유통시설(APC) 설치를 지원하였다. 2018년까지 전국에 총 395개를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산지조직이 농산물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원물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산지조직이 유통을 위한 농산물을 농가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확기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농산물이 판매된 이후에야 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자금이 부족하면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확보할 수 없어 산지조직이 일차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산지조직이 농산물을 처리하지 못하면 농업인의 입장에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산지에서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소비지에서 가격이 오르는 비효율이 빚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융자사업을 통하여 산지조직의 일시적 자금수요를 해소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원활화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조직의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해 왔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조건을 차등하는 등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사업들을 기반으로 2003년부터 산지조직을 소형(일반조직), 중형(전문조직), 대형(공동마케팅조직)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발전을 유도하여 왔으며, 2010년까지 일반조직 110개소, 전문조직 282개소, 공동마케팅조직 31개소를 육성하였다. 일반조직은 취급액 10억원 이상의 기초조직, 전문조직은 취급액 30억원 이상의 중견조직, 공동마케팅조직은 취급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적 경영체를 의미한다.

2011년부터는 시장개방 확대 및 소비자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개별 경영체 위주의 정책에서 통합 경영체 위주의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통합 경영체는 기본적으로 통합마케팅조직과 이에 참여하는 참여조직으로 구성된다. 통합마케팅조직은 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 등이며, 참여조직은 지역조합, 농업법인 등이다.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조직에 일정수준 이상(농협조직 5억원, 농업법인 2억원 이상)을

출하하여야 하며, 사업실적 평가결과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 정부지원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에서 출하한 물량을 모아서 소비지에 마케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원물확보 자금 등 정책자금은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마케팅 조직은 참여조직의 자금소요를 파악하여 배분하고 있다.

통합마케팅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공동선별을 통하여 품질을 균일화하고, 산지유통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하여 소비자와의 거래교섭력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통합마케팅조직 114개소, 참여조직 421개소를 육성하였다.

통합마케팅 체계에서는 통합마케팅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차별화된 상품화, 전략적 마케팅 등을 통하여 좋은 거래조건에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진하는 한편, 참여조직 및 농업인이 통합마케팅에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직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통합마케팅조직이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농산물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의 공동선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선별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지유통 인재양성을 위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에 산지유통 현장전문가 과정(14기 898명)을 편성·운영하는 등 전문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계획

그간의 지원과 노력을 바탕으로 산지의 규모화 및 조직체계 정비 등 산지유통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취급액 100억원 이상의 대형조직은 2005년 6개소에서 2018년 71개소로 늘었으며, 공동(통합) 마케팅조직 평균 취급액도 같은 기간 120억원에서 365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산지유통의 규모화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또한, 공동(통합) 마케팅조직 수는 2005년 9개소에서 2018년 114개소로 증가하는 등 통합마케팅 확산 및 산지유통 계열화를 위한 조직체계 정비의 진척을 이루었다.

앞으로도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산지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조직화·규모화가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확충 및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에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4 농업종합자금 제도 개선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허정은

시행배경

농업종합자금은 지역별·품목별·용도별로 구분하여 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기존의 26개 개별사업을 통합하여 농업인 등 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해당분야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개보수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시행내용 및 성과

농업종합자금은 농업인 등 경영체가 스스로 필요로 하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산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소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대출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 스스로도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추진 경과

1999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00년에는 전업농육성사업 및 품목별경쟁력강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13개 시설사업 자금을 통합하였고, 2002년에는 농기업경영자금 및 전업축산경영자금 등 전업농에게 지원하는 2개 운전자금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3년도에는 농기계구입자금(대당 3천만 원 이상), 자기배합사료제조시설지원, 관광농원개발, 농촌민박마을조성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2004년도에는 농기계구입자금(대당 2천만 원 이상),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농기계생산지원자금,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객토자금, 전통식품개발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을, 2005년도에는 농기계구입자금(대당 1천만 원 이상),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농기계보관창고지원사업, 2009년도에는 꿀·농육가공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경우 인력육성을 위한 집중관리 필요성에 따라 '07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설립기간이 짧은 신생 영농조합법인 등도 담보 제공시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ICT기술이 농업분야에 적용 확대 될수 있도록 2017년에 스마트팜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40세 미만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스마트팜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건 변화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이 필요한 사업은 능동적으로 조정을 하고 필요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현황

지원조건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3%로 지원하던 것을 '15년 시설자금 2%, 운전자금 2.5%로 금리를 인하하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하여 지원,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3~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3년 거치 3~7년 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상환, 농기계구입 자금은 1년 거치 4~7년 상환토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평균 지원규모도 22,515억원 규모로 농업경영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3-9 농업종합자금 지원 실적

(단위: 억원)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용자규모	129,285	13,744	15,250	13,831	16,109	18,457	24,999	26,895	26,115
이차보전액	4,947	794	659	570	621	573	821	909	1,491*

* '17년 예산 부족분(413억) 포함 집행 내역

지원성과

농업종합자금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농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조되고, 대출기관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 결과 무리한 과잉투자 해소와 자금에 대한 가수요가 불식된 것은 큰 성과 중 하나이다. 아울러, 농가의 사업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일괄하여 지원하는 점도 농업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표 3-10 기존 정책자금과 종합자금 지원방식 비교

구 분	기존지원체계	종합지원 제도
○ 지원방식	개별사업별 분산지원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종합지원
○ 대상자 선정	시장·군수(농발심의회)	대출취급기관(농협)
○ 자금지원	연1회 일괄 선정·지원	수시선정·지원, 사업평가 후 추가지원
○ 사후관리	채권관리 중심	경영·기술컨설팅 중심


향후계획

지금까지 불요불급한 평가항목 삭제 등을 통해 대출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였으나, 앞으로도 대출절차를 표준화하고 제출서류 등을 더욱 간소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취약한 사업계획 수립능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능력 있는 경영체를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심사인력을 육성하고 대출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경영실태조사 결과의 자료화와 경영분석능력 제고를 통해 농가 부실화정후 사전감지 및 농가에 경영진단자료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업종전망 및 동향분석 자료를 대출심사자와 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5 농업핵심인력 육성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경영인력과 서기관 유제형

시행배경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집약적 생산방식에서 기술·자본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다양한 농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자본을 갖추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된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981년도부터 영농종사를 희망하는 청장년을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농업 창업자금(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경영·기술교육 등을 통해 영농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규모화할 수 있도록 추가 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창업과 조기 경영안정화를 통한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농지·기술교육 등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후계농업경영인은 연령, 영농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시·군·구 및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 심사와 전문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선정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인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2018년도에는 965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였다. 이 중 남성이 752명(77.9%), 여성이 213명(22.1%)이며,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17명(32.8%), 30대가 206명(21.3%), 40대가 442명(45.8%)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210명, 경북 192명, 전남 128명, 경남 112명 등의 순이다.

표 3-11 2018년 지역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단위 : 명, %)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시
965명	95	37	43	74	210	128	192	112	36	38
100%	9.8	3.8	4.5	7.7	21.8	13.3	19.9	11.6	3.7	3.9

또한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비율이 1.1%(‘17. 농림어업조사 결과) 밖에 되지 않아 올해부터는 정부차원에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제도를 개편하여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 1,600명을 선발하여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제도 개편 >

현행	개편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후계농업경영인 (연령)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연령)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div> 후계농업경영인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육성자금 지원 ◆ 후계농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농: 농지, 자금(후계농자금 등), 교육 패키지 지원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정착지원금 + 농지 + 자금 + 교육 ◆ 후계농은 기존 대로 후계농 육성자금 등 지원


이들에게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창업 활성화 및 조기 경영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농지·기술 교육 등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표 3-12 2018년 지역별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시
1,600명	207	83	83	152	247	239	255	161	67	106
100%	12.9	5.2	5.2	9.5	15.4	14.9	15.9	10.1	4.2	6.7

2)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이후 5년 이상 된 사람 중 영농경력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까지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여 영농기반 확대를 통한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 2018년에는 경영성과, 발전가능성, 생산기술 등을 평가하여 250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금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사업비가 지원된다.


 향후계획

1981년부터 2018년까지 14만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이 확보되었으며 이들은 우리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제도를 신설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영농의지를 갖춘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농지·기술교육 등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농업·농촌에 청년층의 유입을 제고하였다.

앞으로도 후계농업경영인이 영농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문경영체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업법인 활성화

 경영인력과 서기관 노승환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WTO·DDA 출범 등 대외개방의 확대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자 '90년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농업법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농업법인 활성화에 주력해왔다.

자금 및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종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있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관련 규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제정, '09.4.1)하였고,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유치 및 경영효율화를 추구하는 한편,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특히, 건설한 영농조합법인이 기업적 경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조합법인의 책임범위를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으로 전환하였으며, 합명·합자회사 형태 뿐 아니라 유한·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농업분야의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90%까지 확대하였고, 2012년에는 총 출자액이 8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억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부터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까지 확대함으로써 6차산업 활성화 주체로서 농업법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한편, 농업법인이 설립·변경 등기 후 해당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 설립요건이 미비하거나 사업범위를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리 측면도 강화 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법인 설립·운영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경영규모화 및 경영효율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설립 요건 미비, 사업범위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업법인 대상으로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농업농촌의 주체로 육성을 지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업법인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 등 정책 기초자료를 위해 통계청에서 매년 생산하였던 농업법인 통계조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관 받아 금년도 2017년 기준 농업법인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은 2000년 5,208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21,659개이며 그 중 영농조합법인은 13,363개, 농업회사법인은 8,296개로 조사되었다. 농업법인 종사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41천명으로 나타나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3 농업법인 연차별 운영 추이

(단위 : 개)

구분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업법인 수	5,208	6,537	9,740	10,867	12,981	14,552	16,482	18,757	19,413	21,659
영농조합법인	3,852	5,597	8,107	8,724	10,023	10,792	11,599	12,979	12,768	13,363
농업회사법인	1,356	940	1,633	2,143	2,958	3,760	4,883	5,778	6,645	8,296

자료 : 통계청('00-'14년 기준 농업법인 조사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15-'17년 기준 농업법인 조사 보고서)

농업법인의 법인당 종사자 수는 7명, 상시종사자 4인 이하 법인은 전체의 60.8% 수준이며, 주된 사업유형으로는 농업생산을 하는 농업법인이 37.8%, 유통업 25.9%, 가공업 18.1%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당 판매액은 평균 14.6억원이고, 전체 판매액 중 유통판매업은 45.3%, 가공업 23.3%, 농업생산수입 24.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법인 당 자산은 15.4억 원, 부채는 9.3억 원이고,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56.4%로 전년(152.8%)보다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농업법인당 주요 경영지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유형	2016년	2017년	증감	증감률
전체	결산 법인수	14,361	15,954	1,593	11.1
	자산	1,450	1,539	89	6.1
	부채	877	939	62	7.0
	매출액	1,742	1,792	50	2.9
	영업이익	49	64	15	29.8
영농조합법인	결산 법인수	8,727	8,969	242	2.8
	자산	994	990	-4	-0.4
	부채	565	556	-9	-1.7
	매출액	1,148	1,122	-26	-2.2
	영업이익	30	35	5	15.8
농업회사법인	결산 법인수	5,634	6,985	1,351	24.0
	자산	2,156	2,244	88	4.1
	부채	1,360	1,431	71	5.2
	매출액	2,662	2,652	-10	-0.4
	영업이익	79	101	22	27.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년 기준 농업법인조사보고서)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및 법인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농업법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법인의 양적확대 뿐 아니라 농업·농촌 중소기업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 및 6차산업화를 이끌 핵심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창업·투자유치 활성화, 전문화된 경영 컨설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경영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인의 경영컨설팅 및 법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농업법인 경영혁신 역량 강화 교육(경영·조직, 인사·회계) 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2019년에는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된 법인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법률 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내실있는 농업법인 제도의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다. 농업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경영인력과 사무관 김화태

시행배경

FTA, 고령화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선진국 수준의 농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 농업을 선도할 창조적인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농업인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농업·농촌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미래 후계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계 학생, 후계농 등을 대상으로 농산업현장과 연계한 실용중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장실습교육(WPL), 농업마이스터대학, 품목특화교육과정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시행내용 및 성과

신규 미래인력 확보를 위한 농고, 농대의 전문 교육을 지원 중으로, 지원학교는 우수 교육과정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였다. 농고는 15개교를 선정하였는데, 농업에 흥미를 유발하고 농산업과 연계하여 취·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습/현장실습, 전공별 창업동아리, 교사 직무연수, 농산업분야 자격증 취득, 승계농/후계농 양성 교육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농고생이 농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직업을 구체화하고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취·창업 캠프 운영, 선도농업인과의 소통, FFK 진진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농업계 대학은 10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농업경영체 현장실습교육, 전공별 창업동아리, 선도농업인과의 교류, 영농승계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및 실습 중심의 국외연수 과정을 운영하였다.

'18년도에는 농업인·농대생·농고생 및 귀농인 등이 영농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선진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교육(WPL)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실습 교육장을 총 6개소 추가 지정하였으며, ICT 등 선진기술 실습교육기반 마련을 위하여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은 현장중심의 실습형 기술·경영 장기교육과정(2년)으로 '17년도부터 제5기가 운영되었다. 제5기('17 ~ '18년)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전국 9개 대학, 33개 캠퍼스에서 100개 품목전공이 개설되었으며, 교육생들이 고급기술, 지식 및 경영능력을 갖춘 지역 농업의 핵심리더로 육성할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농정목표에 부합하고 현장의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모교육을 진행하였다. 공모교육은 3차에 걸친 선정심사로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지원하였는데, 창업·경영·유통·마케팅, 농촌개발·거버넌스, 6차산업, 친환경농축산업, 현장실습분야 등으로 분야를 구분하여 지원하였다. 공모과정과 더불어 13개 과정의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FTA 등 국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였다.

'18년에는 농업인들이 선진국 기술 수준의 첨단농업시설 운영능력 배양을 할 수 있도록 ICT 첨단 기술을 적용한 품목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15년 토마토를 시작으로, '16년에는 딸기, 양돈, 버섯 등 3개 품목, '17년은 장미, 파프리카, 낙농을 추가하여 '18년에 총 7개 품목으로 선진국 수준의 농업 기술을 갖춘 우수 농업 인력들을 양성하였다.

'18년도 농업교육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 역량진단 및 교육 만족도 조사 및 현업적용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의 교육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농업마이스터대학, 농고, 농대, 국외훈련, 공모과정, 현장실습교육 등 8개 교육과정의 '18년도 교육운영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유형별 평가위원을 통해 교육유형별 특징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수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평가결과는 익년도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 시 환류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최고의 생산기술과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농업·농촌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을 발굴하고자 '12년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13년 제1회 농업마이스터 102명, '15년 제2회 45명, '17년 제3회 33명의 농업마이스터를 신규로 지정되었다. 지정된 마이스터들에게는 맞춤형 보수교육을 통해 지정된 농업마이스터들이 현장실습교수, 후계농업인력에 대한 멘토, 컨설턴트 등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함께 이루어졌다.

향후계획

농업계 학교지원, 현장실습교육(WPL), 농업마이스터대학, 품목특화교육과정 등의 농업교육은 농업·농촌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전문생산기술 및 경영관리 등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대에 영농실습 및 기술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및 농고교사의 교육역량과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직무학점 연계과정을 개발하고 현장실습교육 내실화를 위해 장기 교육과정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스마트 팜 확산 및 농산물생산 첨단화·전문화 유도를 위해 '19년에는 첨단기술공동실습장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농정현안 및 농정수요에 대응하여 현장 중심의 농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라. 농업경영체 컨설팅 활성화

 경영인력과 서기관 노승환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시장 확대개방으로 인한 다양한 농축산물의 유입, 친환경농산물 선호 등 소비성향의 변화, 농업의 6차 산업화 등과 같은 국내외 농업환경의 다변화로 농업경영체는 단순한 생산기술력 외 경영역량의 향상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생산 중심의 기술지도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농업 환경과 농업경영체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경영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1999년부터 민간컨설팅 업체와 컨설턴트를 활용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인증 받은 농업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기술 또는 경영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획일적이고 일방향적인 관주도의 기술지도와는 달리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력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업경영컨설팅 평가점검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업경영컨설팅 평가점검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지정하고 컨설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절차 및 성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즉, 컨설팅 성과에 대한 저해 요소와 부실컨설팅 방지를 위해 컨설팅업체 및 컨설턴트에 대한 인증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컨설턴트 1인당 사업량의 제한, 컨설팅 수행 단계(계획, 중간, 완료)별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점검하고 있다.

컨설팅업체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심사를 통한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인증기준 준수 및 부합을 확인하여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경영체 수요에 맞는 양질의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 인증업체 Pool을 구축하고 있다.

2017년에는 법인 선정 시 서면평가에서 현장평가로 대폭 강화하여 우수경영체 확보에 주력하였고, 개별경영체의 사전·사후혁신역량진단을 컨설팅업체를 통해 실시하여 컨설팅 품질을 제고하였다. 또한, 자부담을 2회까지 분할납부 하도록 하여 경영체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2018년에는 농업경영체의 컨설팅 전·후 혁신역량진단 및 수행계획평가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경영컨설팅의 체계적인 관리와 컨설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 컨설팅 수행단계별 평가점검

컨설팅 추진성과 및 핵심성과지표(KPI) 설정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평가점검단을 통해 '18년도 지원대상 152개 경영체별(개인 91, 법인 61) 사업 수행계획서를 심사·승인하였으며, '13년 종료사업을 포함하여 총 1,646건('13년 578, '14년 267, '15년 261, '16년 204, '17년 184, '18년 152)의 사업완료 실적을 점검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전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사업수행 여부 및 사업성과를 사전 관리함으로써 사업성과 및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표 3-15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단위: 천 명)

연도	1999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량(개소)	156	1,500	994	934	649	578	267	261	204	184	152
사업비(백만원)	1,197	12,080	10,080	9,720	5,200	5,200	4,800	4,800	3,840	3,840	3,840
국고	357	6,080	4,888	2,916	1,560	1,560	1,560	1,440	1,152	1,152	1,15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농업경영컨설팅 인프라 구축·강화

다양하고 우수한 컨설팅업체의 발굴 및 사업참여를 유도하여 양질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농업경영컨설팅 참여업체 인증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8년 총 15개의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를 추가 확보하여 총 30개의 인증업체로 지정 및 운영하였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를 발굴하여 농산업분야의 컨설턴트 Pool을 확대하고자 컨설턴트 등록 심사를 실시하고 컨설턴트별 역량검증을 통해 수임단가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17~'18년 기준 총 401명(2년간 활동)의 컨설턴트가 농업경영컨설턴트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평균 수임단가는 64.1만원이었다.

3) 컨설팅 성과관리 및 확산

컨설팅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및 검증의 일환으로 '17년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181개 중 샘플링(50% 이상)하여 컨설팅 전후 매출액, 소득증가율, 부채 등 재무적 관점과 고객관계방법 변화, 상품개발 여부, 생산성 변화, 마케팅 추진, 업무추진 변화 등 학습 및 성장관점에서 컨설팅 성과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컨설팅 전후의 농업소득 증가율이 23.1%라는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경영컨설팅은 경영체 역량진단에 기반한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였다. 2018년 평가점검단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컨설팅 전후 매출액이 평균 28.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은 23.1%, 농업경영비는 2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컨설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개선 노력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컨설팅 전후 혁신역량변화율 결과에 따르면 혁신인프라 변화율이 8.3%, 혁신활동 10.6%, 혁신성과 3.2%, 경영자자질 6.5%로 조사되어 경영수준 및 역량진단에 기반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 시 계량 및 비계량(적·부) 심사를 병행하고 컨설팅 본격 개시 전 개발된 표준경영진단 틀을 적용하여 경영현황을 분석하고 컨설팅에 반영하는 등 농업경영컨설팅의 체계적인 관리와 컨설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6 독립가 등 임업인력 육성

가. 전문임업인 육성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정준수

시행배경

우리나라는 전체 산림면적의 67%가 사유림으로 사유림의 경영 및 관리는 국가 임업경영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산주의 56%가 부재산주이며 1인당 산림 소유 규모의 영세성(3ha이하가 85%), 생산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으로 사유림에 대한 경영 및 투자는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 들어 귀농·귀산촌 인구가 늘어나고 미미한 수준이지만 젊은 층이 유입되고 있는 점은 임업경영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농·산촌에 정착하여 사유림경영의 핵심주체로 임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립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으로 육성하고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하는 것은 임업경영 뿐만 아니라 산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전문임업인 선발 및 교육기관 확대

2017년말 기준 11,507명이었던 전문임업인(독립가, 임업후계자, 신시식농업인[(임업분야])은 2018년에 독립가 75명, 임업후계자 2,238명이 추가 선발되어, 2018년말 기준 총 13,821명(독립가 832명, 임업후계자 12,915명, 신지식임업인 74명)으로 1년 사이 21%가 증가하였다.

독립가 등 전문임업인을 사유림경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2018년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등 3개 기관을 산림경영 및 임업소득 증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하였고, 이로써 2018년말 기준으로 총 20개의 전문교육기관 및 산림교육원에서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임업기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참여자들은 현장중심의 교육과 교육생간의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산림경영 및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였다.

2) 전문임업인의 산림경영 지원

독립가, 임업후계자 및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으로 임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임업기술교육, 해외사례 견학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병행해 오고 있다. 임업경영·창업을 위해 전문임업인 및 귀산촌인에게 장기·저리로 용자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은 553억원, 2018년은 680억원으로 점차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표 3-16 전문임업인육성자금 지원조건

(단위: %, 년)

사업명	구분	금리	용자기간			용자한도	용자비율	
			계	거치	상환			
독립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장기수 사업	1.0	35	2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가 사업자당 3억원 이내 ○ 그 외 전문임업인 사업자당 2억원 이내 	사업비의 100%	
	임도시설							
	사립휴양시설							
	단기산림소득사업	2.0	15	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인 1천만원 이내
	임업인경영자금	2.5	2	1	1			
	귀산촌인 창업자금	2.0	15	5	10			

자료 : 산림청, 2018년


또한, 독립가로 구성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후계자로 구성된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에 임업인의 경영역량 강화와 상호정보교류를 위하여 임업기술 교육, 성공사례 공유, 현장견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경영모델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업경영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유공자를 매년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으며, 전문임업인이 임업기술 국제동향 및 경영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경영실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계획

경영의욕이 있는 전문임업인이 장기 임업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지원과 임야 매입을 위한 융자금을 확대 편성하여 지속가능한 임업경영 규모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소규모 법인형태로 임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법인독립가’ 유형의 추가 신설 및 자영독립가의 산림소유 규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산림경영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나. 기능인 영입단 육성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사무관 송명수

시행배경

우리나라의 산림은 산림면적 비율로 수령 30년 이상의 나무가 전체의 69%를 차지하는 장령림 위주의 숲으로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산업경제의 발전과 인구의 고령화로 농·산촌 인력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산림사업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임업기능인의 안정적 확보 문제는 산림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산림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능인영입단은 1984년에 국유림 산림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족되었으며, 이후 1990년에 민유림 산림사업 실행을 위한 산림조합 소속 기능인영입단이 구성되었고, 2000년에는 산림사업법인에서 기능인영입단을 조직하여 활발하게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인영입단은 2018년까지 1,115단 6,948명을 조직(국유림관리소 142단 1,476명, 산림조합 276단 2,683명, 산림사업법인 697단 2,789명)하여 운영함으로써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였고, 농산촌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등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표 3-17 최근 3년간 임업기능인 영립단 조직 현황

구 분	2016년 말		2017년 말		2018년 말	
	단수	인원(명)	단수	인원(명)	단수	인원(명)
계	1,194	7,487	1,175	7,260	1,115	6,948
국유림 영립단	144	1,540	146	1,533	142	1,476
산림조합 영립단	308	2,979	289	2,767	276	2,683
산림사업법인 영립단	742	2,968	740	2,960	697	2,789

자료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임업노동력은 주로 농산촌 주민을 중심으로 임업기능인을 선발·육성하여 기존 영립단에 편입시키거나 신규로 영립단을 조직하게 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18년에 영립단수는 전년에 비해 60단이 감소하고 영립단원은 312명이 감소한 6,948명이었는데 이는 2018년 숲 가꾸기 등 기능인영립단이 시행하는 사업량의 축소와 영립단에 소속되지 않고 필요에 의해 산림작업에 참여하는 기능인력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로 양성된 임업기능인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숲을 보는 기술, 기계 활용 및 수리·정비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중심 및 현장위주의 체험식 적응 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임업기능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시 현장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국유림영립단에게 조림·숲가꾸기·벌채 사업 등을 위탁·대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향후계획


앞으로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임금의 현실화 및 체계화 등 복지후생 관련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산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산림경영기

반시설인 임대시설의 확충과 지역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자 하며, 또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사업의 확대에 따른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이들에 대한 현장위주의 체험식 교육 훈련, 기술수준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7

수산업 인력 육성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사무관 이정미

 시행배경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FTA협상 등에 따라 국내외 수산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업인 복지 증진, FTA 피해대책 마련, 6차산업화 및 각종 기술개발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의 어업 경영을 위한 사업기반 조성 자금을 용자로 지원하여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어업인후계자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고령화 추세에 따라 2013년 3월 후계어업 경영인 신청연령을 만 45세 미만에서 만 50세 미만으로 확대함) 중에서 어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전업경영인의 경우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이 지난 사람, 선도우수경영인의 경우에는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이 지난 어업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은 시·도(수산사무소 등)로부터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수산업경영인이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사업성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를 통해 기술지도, 자문, 경영기술 교육 및 각종 수산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순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2% 장기저리(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 상환)로 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사업 계획과 신용도 등에 따라 각 단계별(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어업 및 양식업의 규모화에 대응하여 지원한도도 상향 조정하여 어업인후계자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업경영인은 2억에서 2.5억원으로 조정하였다(선도우수경영인 3억 유지). 1981년부터 2018년까지 28,301명에게 총 13조 81억원이 지원되었다.

수산업경영인의 경우 매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1,358명에게 2,30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혜자 확대를 위하여 2016년부터는 융자금 지원방식을 선입선출(다수의 신청자에게 융자기회를 부여하여 선착순으로 융자를 받도록 함)로 전환하였다. 어업인후계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은 융자금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업경영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3-18 수산업경영인 육성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7년까지		2018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28,301	1,308,175	26,943	1,077,457	1,358	230,718
어업인후계자 (1981년부터)	23,312	915,595	22,317	759,524	995	156,071
전업경영인 (1992년부터)	4,598	345,160	4,272	279,748	326	65,412
선도우수경영인 (1995년부터)	391	47,420	354	38,185	37	9,235

자료 : 해양수산부

이와 더불어 어업 인구감소와 어촌의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창업 및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2% 장기 융자(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로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지원 금리를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여 귀어·귀촌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자금 지원 총액 규모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세대당 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마련 자금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귀어·귀촌 자금을 지원받을 대상자는 매년 초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받아 서류,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총 1,722명에게 2,935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 기초 지자체 단위로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설치·운영(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하여 귀어귀촌 관련 정보제공에서 상담, 교육, 컨설팅까지의 서비스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귀어귀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귀어귀촌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주말 등을 활용하여 귀어·귀촌가구 또는 선도어가에서 어업 및 어촌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귀어·귀촌 홈스테이사업’을 실시하였다.

표 3-19 귀어·귀촌 지원실적

(단위: 가구, 백만원)

구분	합계		2010~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1,722	293,515	410	54,857	266	35,569	268	50,700	375	73,418	403	78,971
창업자금	1,372	277,209	354	52,659	217	33,622	209	47,770	291	69,287	301	73,871
주택마련자금	350	16,306	56	2,198	49	1,947	59	2,930	84	4,131	102	5,100

자료 : 해양수산부

향후계획

어선어업, 양식업, 소금제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수산업경영인의 경영 기반 확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귀어귀촌 관련 홍보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귀어학교 등 어업창업 기술교육을 확대하여 어촌 체험기회 및 실습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여 어촌에 신규인력을 유입시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8 자율관리공동체 운영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 송병훈

📁 시행배경

한때 어업인의 경쟁적 조업과 함께,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자되어도 자원 회복에 한계가 있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이 곤란한 시기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장 및 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장과 자원을 자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자율관리어업 제도를 2001년부터 도입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자율관리공동체는 수산관련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구축, 지역별 어업별 분쟁해소,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어장관리·자원관리·경영개선·질서유지 등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한다.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시범사업 당시 63개소였으며, 2002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시행 18년차인 2018년 참여공동체수가 1,108개소까지 확대되어 기반 조성 단계에서 본격적인 심화 단계로 도약하였다.

표 3-20 자율관리 참여공동체수

(단위: 개소,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공동체(개소)	863	932	989	1,039	1,086	1,129	1,160	1,170	1,108
마을어업	438	465	490	502	518	537	551	554	519
양식어업	85	89	96	98	98	102	102	105	101
어선어업	156	175	183	200	207	219	224	227	223
복합어업	143	153	165	176	189	193	199	201	189
내수면어업	41	50	55	63	74	78	83	83	83
참여어업인(명)	60,902	63,860	66,410	67,687	69,098	70,539	71,762	72,626	66,135

자료 : 해양수산부, 2018년

1) 육성사업비 지원

2017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우수 공동체 선정결과 114개소에 61억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육성사업비를 등급별로 차등 지원, 공동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율관리어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자율관리어업 분쟁 조정

자율관리어업 확산의 장애요인인 공동체 또는 업종·지역 간의 분쟁 및 갈등에 대하여 민간 주도의 자율조정협의회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자체 해결토록 유도하여 2018년까지 약73건의 분쟁을 해결, 자율조정예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참여 공동체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3) 전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추진

자율관리어업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새롭게 참여한 신규 공동체에 대하여는 전담공무원의 지도·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컨설팅센터를 운영하여 539개소(1,174회)공동체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공동체 벤치마킹 21개소(701명)를 실시하여 공동체별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화를 유도하였다.

4) 다각적 교육·홍보활동 전개

지방수산사무소(수산기술센터) 중심의 지역단위 현장집합 교육 및 미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27회/1,411명)하였고 우수 공동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수산 선진국(일본, 뉴질랜드, 중국)의 어촌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매달 자율관리어업 소식지 발행과 전문지 홍보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5) 수산자원 및 어촌경영 개선

2011년부터 2015년간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통한 효과 연구를 진행하여 자율관리어업의 경제적 효과를 조사한 결과 어장관리, 자원조성, 경영개선 등의 활동으로 매년 약 1,00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2011년~2015년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통한 효과(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단위: 억원)

구 분	최소	최대	중간값
합계	862	1,142	1,002
어장관리	55	102	79
자원관리	269	495	382
경영개선	528	528	528
질서유지	10	17	14

자료 : 해양수산부, 2016년

향후계획


현재 마을어업공동체 중심으로 어업인의 약 50%가 참여하고 있는데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지 않고 어업인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질적 개선을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을 확대하여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하고 불법 어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어촌사회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특히 자율관리공동체 정체성 회복 및 건전한 운영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율 관리 어업 활동이 부진한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 하여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공동체들의 체질 개선을 통해 수산 정책 전 분야에 다양한 형태의 자율관리 방식을 접목시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어촌사회 선도 중심체로 육성해 나가겠다.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1 농업생산기반 확충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농업기반과 사무관 정정현

시행배경

과거의 경지정리는 당시의 영농 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필지는 600~1,200평 규모로 작고, 농로가 협소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 대형 농기계 작업이 어렵다. 또한 수로는 용수로 및 배수로를 겸하고 있어 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 중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하고 필지 규모가 작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는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인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회계 명칭을 변경하였다.

시행내용 및 성과

사업의 내용은 기존에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를 주 대상으로 필지 규모를 3천 평 수준

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 신설 및 구조물화를 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를 3~7m폭으로 확장·포장하는 것으로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국고 2조 7,961억원을 투입하여 135.9천ha를 완료하였다.

지방재정 부담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했던 50ha 미만 지구를 대상지에 포함시켜 목표면적을 150.8천ha에서 169.6천ha로 조정('09.7월)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원단가를 적용토록 하였다.

표 3-22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 표	2018년 까지		2019년 계획		2020년 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169.6	135.9	80.1	1.8	81.2	31.9
사업비(억 원, 국고)	37,632	27,961	74.3	437	75.5	9,23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향후계획

그 동안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영농기계의 대형화에 맞는 영농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영농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지자체가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밭 기반 정비사업

 농업기반과 사무관 정경현

시행배경

1970년대 일부 지역에서 밭 용수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 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 영향으로 우량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 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 기반 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전국 단위의 밭 기반 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인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회계 명칭을 변경하였다.

시행내용 및 성과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개발, 농로개설, 밭경지정리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국고 2조 2,268억원을 투입하여 118.5천ha를 추진하였다.

한·중 FTA 등에 대비하여 2015년부터 밭 기반 정비 대상지역을 집단화 규모 30ha에서 10ha이상으로 완하하여 목표면적을 110천ha에서 180천ha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원단가를 적용토록 하였다.

표 3-23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표	2018년 까지		2019년 계획		2020년 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180	118.5	65.9	3.2	67.6	58.3
사업비(억 원, 국고)	38,774	22,268	57.4	569	58.9	15,93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향후계획

그동안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고소득 작물에 대한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향상과 영농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밭 기반 정비사업은 지자체가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

 농업기반과 사무관 정경현

시행배경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농식품부가 농어촌 소득원도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 1991년 12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 소득원도로사업이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위주로 추진되어 농로 및 경작로 확·포장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농식품부 주관으로 기계화영농에 의한 영농편의 제공과 농산물 품질제고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시·군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회계 명칭을 변경하였다.

시행내용 및 성과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산단지과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8년까지 국고 2조 3,495억원을 투입하여 목표연장 35천km 중 28.3천km를 완료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원단가를 적용토록 하였다.

표 3-24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표	2018년 까지		2019년 계획		2020년 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km)	35	28.3	80.9	0.5	82.3	6.2
사업비(억 원, 국고)	29,689	23,495	79.1	454	80.7	5,74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향후계획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주산단지과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개선에도 기여하였다.

향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업경쟁력 향상 뿐 아니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미치는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기반과 사무관 이재천

시행배경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의 수리시설은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이 많아 최근의 기상변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 등 강우패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재해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노후화된 용·배수로는 용수누수가 많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후 된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 절실한 실정으로, 노후·파손 또는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수리시설의 상태 및 재해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25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집수암거	관정
계	71,982	17,289	8,384	18,002	2,647	25,660
30년 이상	43,598	16,658	3,771	16,073	2,477	4,619
30년 미만	28,384	631	4,613	1,929	170	21,041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2018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시행내용 및 성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와 시설관리자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4,3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수지, 양·배수장 등 155지구를 준공하였고, 누수과다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122km를 구조물화 또는 친환경 수로 등으로 정비하였다.

표 3-26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총계획	2018년 까지	2019년 계획	2020년 이후
사업비		149,323	92,127	5,580	51,616
사업량	수 원 공	5,842개소	3,639개소	119개소	2,084개소
	수로정비	21,600km	9,020km	198km	12,382천km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향후계획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대비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간척지농업과 서기관 유재중,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수현

시행배경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노후한 시설물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지성 호우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해 침수, 시설물 붕괴 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이러한 피해는 농경지 침수 뿐 아니라 인근 주택가는 물론 인명 사고와도 관련이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이에 따라,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배수개선사업과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수개선은 2010년부터는 국가재난방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까지 국고 5조 7,247억 원을 투입하여 185.8천ha를 완료하였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증가된 강수량 등이 반영된 배수개선 설계기준을 개정 및 시행('12.4월)하여 선제적 방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강우패턴 변화, 농의 재배작물 다양화 등을 감안하여 배수개선 대상면적을 확대(232천ha→303천ha, '13.2월) 하였다.

표 3-27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표	2018년 까지		2018년 계획		2020년 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302.7	185.8	61.4	3.7	62.6	113.2
사업비(억 원, 국고)	118,491	57,247	48.3	2,568	50.5	58,67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방조제개보수사업은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단면 보강, 배수갑문 교체 및 부속시설의 사전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방조제·배수갑문 등 2,869지구(국가관리 241, 지방관리 2,628)를 대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총 1,815지구(국가관리 199, 지방관리 1,616)를 완료하였다.

표 3-28 방조제 개보수 추진현황

구분	목 표	2018년 까지		2019년 계획		2020년 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개소)	2,869	1,815	63.3	21	64.0	1,033
사업비(억 원)	32,069	18,204	56.8	522	58.4	13,34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향후계획

최근 기후 변화와 논에서의 재배작물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강우 패턴 분석과 농업 기반시설의 재해대비 능력을 조사하여 배수개선 설계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하였다. 또한 배수개선 및 방조제개보수사업이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효과가 조기에 발생할 수 있도록 준공위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배수개선사업에 2,789억원을 지원하여 156개(신규 39개 지구 포함) 지구의 사업을 시행하고, 방조제개보수사업에 522억원(국비 435억원, 지방비 87억원)을 지원하여 71개(신규 26개 지구 포함)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바. 농촌용수개발사업

 농업기반과 서기관 강경만 사무관 정경현

시행 배경

농촌용수개발은 영농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 물이 부족해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 양수장, 보,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가뭄에 안전한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래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국가로 지목되면서 이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농촌의 다양한 용수 수요에 맞추어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행 내용 및 성과

그동안 꾸준한 용수개발 사업을 통해 일시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영농 기반은 구축되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발생빈도 및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기반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연간 예산지원 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부족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시행중인 지구는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신규착수 지구수는 최소화 하는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논 면적은 865천ha로 수리시설 설치를 통해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답 면적은 707천ha(81.7%)이고, 수리시설 없이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수리불안전답(천수답) 면적은 158천ha이다. 또한 10년 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534천ha(61.8%)에 불과하므로 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수리안전답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3-29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연 도	단위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7
논 면 적(A)	천ha	1,149	1,127	1,084	1,010	966	908	865
수 리 답(B)	천ha	880	878	859	806	778	734	707
	(B/A)%	76.6	77.9	79.2	79.8	80.5	80.8	81.7
수리안전답(C)	천ha	421	440	478	504	573	549	534
	(C/A)%	36.6	39.0	44.1	49.9	59.3	60.4	61.7
수리불안전답(D)	천ha	269	249	225	204	188	174	158
	(D/A)%	23.4	22.1	20.8	20.2	19.5	19.2	18.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8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동 사업은 수혜면적 50ha 이상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 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71개 지구(23.4천ha)에 2,957억원을 투입하여 13개 지구 2.7천ha를 준공하였고, 2019년도에는 2,469억원을 투입하여 65개 지구(22.9천ha)중 10개 지구 2.5천ha를 준공하므로써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표 3-30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7까지	2018계획	2019이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90~’30)	사업량(천ha)	136.4	99.5	2.7	34.2
	추진율(%)	100	72.9	74.9	100.0

2) 소규모 용수개발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혜면적 50ha 미만 가물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국고 2,045억원을 투입하여 4.3천ha를 준공하였다.

한편, 소규모 용수개발은 2010년부터 시·군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31 소규모 용수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8까지	2019계획	2020이후
소규모용수개발 (’03~계속)	사업량(천ha)	11.0	4.3	0.2	6.5
	추진율(%)	100	39.1	40.9	100

3) 지표수 보강개발

농업용수가 부족한 기존 수리시설을 확장·개발하여 저수용량 및 용수공급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물 부족지역 해소 및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국고 1조 1,611억원을 투입하여 35.7천ha를 준공하였다.

한편, 지표수보강개발은 2010년부터 시·군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32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8까지	2019계획	2020이후
지표수 보강개발 (’95~계속)	사업량(천ha)	48.6	35.7	0.6	12.3
	추진율(%)	100	73.5	74.7	100


평가 및 향후계획

그간 다양한 농촌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용수공급을 위한 수리시설이 전체 논 면적의 82%수준 설치되어 안정영농 기반구축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10년 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담은 62%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연강수에 의존하는 천수답이 18%정도임을 감안할 때 수리안전담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과거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논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논 뿐만 아니라 밭작물과 생활·환경용수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농업용 저수지는 국민들의 관광·레저, 지역주민의 쉼터로써 농촌경관 조성 및 공익적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의 발생빈도가 증가추세에 있어 가뭄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을 지원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사. 대단위 농업개발 및 간척사업

 간척지농업과 서기관 이형주, 사무관 신동원, 류광현, 김성률


시행배경

1960년대까지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은 대부분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개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1970년대부터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금강, 영산강 등 대규모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권역화하여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및 간척 등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며, 그 개발유형에 따라 육지부와 해안부로 구분한다.

표 3-33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중 지구 개발유형

구분	지구명	개발유형	재원
육지부 (4)	금강Ⅱ, 홍보, 영산강Ⅳ, 서산A	기존농지개발(육지부) -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시설제정비 등	농특회계
해안 + 육지부 (5)	영산강Ⅲ-1 영산강Ⅲ-2 화옹, 시화, 새만금	간척농지 및 기존농지개발 - 간척농지조성,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 간척농지조성 : 시화·화옹, 새만금 * 간척 및 육지부개발 : 영산강Ⅲ-1, 영산강Ⅲ-2	농지관리기금

 시행내용 및 성과

1970년대부터 25개 지구 310천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17개 지구 166천ha를 완료하였고, 금강Ⅱ지구 등 9개 지구 144천ha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까지 5조 5,808억원을 투자하여 급수면적 17,697ha, 경지정리 13,531ha, 배수개선 1,547ha, 간척농지 9,137ha를 조성함으로써 가뭄 및 수해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

최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농업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간척지의 다원적 활용차원에서 2014년부터 화옹지구 4공구 768ha에 유리온실, 친환경축산단지, 말조련단지 및 종자연구단지 등 복합단지(에코팜랜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표 3-34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

지구별	위치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시도	시군			
계(17지구)			166,097		4,649,761
금강	전북	부여, 익산	12,148	'70 ~ '76	16,823
평택	경기	평택, 화성	18,419	'70 ~ '77	37,657
영산강(Ⅰ)	전남	나주, 담양	34,500	'72 ~ '79	81,238
경주	경북	경주	1,140	'74 ~ '77	4,916
계화도	전북	부안	2,467	'74 ~ '79	12,521
창녕	경남	창녕	2,269	'75 ~ '81	17,358
임진	경기	파주, 고양	7,185	'75 ~ '83	45,807
남강	경남	진주, 함안	5,754	'77 ~ '85	61,903
낙동강	경북	안동, 예천	3,600	'78 ~ '84	23,029
미호천(Ⅰ)	충북	음성, 진천	11,554	'77 ~ '89	104,871
논산	충남	논산, 공주	9,938	'78 ~ '90	94,035
금강(Ⅰ)	전북	서천, 군산	하구둑	'83 ~ '90	101,000
삽교천	충남	아산, 당진	24,574	'75 ~ '94	235,546
대호	충남	서산, 당진	7,419	'80 ~ '96	185,630
영산강(Ⅱ)	전남	목포, 나주	20,700	'76 ~ '98	354,472
미호천(Ⅱ)	충북	청원, 청주	4,430	'89 ~ '12	323,947
새만금(외곽시설)	전북	군산, 김제, 부안	방조제	'91 ~ '11	2,949,008

새만금사업은 2010년 외곽시설인 방조제 축조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구상의 개발방향과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변화된 개발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문가 간담회,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2011년 3월)하였으며, 이후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여건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새만금 기본계획」으로 공간구상계획을 변경(2014년 9월)하였다.

새만금 전체 내부개발토지(29,100ha)의 30%에 해당하는 9,430ha를 2022년까지 농생명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선행 공종으로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 축조공사를 추진하였고, 2018년까지 54.2km를 완성하여 공정률 87%를 달성하였다.

2013년 6월에는 새만금방조제 내측 농생명용지 조성 대상지 9,430ha 중 5공구 1,513ha 간척농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5년 4개 공구 3,522ha, 2017년 3개 공구 2,359ha 및 2018년 1개 공구 746ha를 착수하여 2018년까지 1,513ha를 준공하였고, 6,627ha를 추진 중에 있다.

 향후계획

2019년에는 금강Ⅱ지구 등 9개 지구에 국고 2,995억원(농특회계 995억원, 농지관리기금 2,000억원)을 투자하여 금강Ⅱ지구 용수로 51.4km 및 경지재정리 888ha 준공, 영산강Ⅳ지구 2개 공구 준공 및 급수면적 1,439ha 확대, 영산강Ⅲ-2지구 간척농지 1,082ha 준공, 새만금 지구 방수제 7.9km 및 농생명용지 6,627ha를 계속 추진하는 등 영농기반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7년 준공된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5공구(1,513ha)는 농학계 대학시험포(170ha) 및 농업특화단지(700ha)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나머지 농생명용지(10개 공구 7,917ha)는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표 3-35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현황

지구별	위 치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시도	시군			
계(9지구)	5개 시도	20개 시·군	144,294	'89 ~ '25	7,503,231
금 강Ⅱ	충남·전북	서천·완주·부여·군산·익산·김제	43,000	'89 ~ '22	941,653
홍 보	충 남	홍성·보령	8,100	'91 ~ '25	504,751
영산강Ⅳ	전 남	무안·신안·함평·영광	16,730	'01 ~ '27	887,005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재정비	충 남	서산	6,446	'08 ~ '21	297,931
영산강Ⅲ-1	전 남	영암·해남·강진	13,160	'95 ~ '23	598,391
영산강Ⅲ-2	전 남	해남	7,840	'97 ~ '21	438,674
화 용	경 기	화성	4,482	'91 ~ '22	972,003
시 화	경 기	안산·화성	3,636	'98 ~ '24	437,156
새만금(내부개발)	전 북	부안·김제·군산	40,900	'09 ~ '22	2,425,667


2

농업의 기계화

 농기자재정책팀 서기관 최승묵

 시행배경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등 농업의 구조개선 촉진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시행내용 및 성과

농업기계화는 농기계의 개발, 보급 촉진,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매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기계 구입비용의 80%를 저금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총 5,109억원을 지원하였다.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가 유통됨으로써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여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농기계의 이용 효율을 높여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역농협을 통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469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지원하였고, 지역농협 721개소에 농기계은행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콩, 마늘, 양파 등 주요 밭작물 주산지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임대농기계를 지원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증가에 따른 파종·이식, 수확작업 등 여성이 주로 하는 농작업에서 여성농업인이 편리하게 운전 및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농기계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급하였다.

농기계의 보급 촉진과 이용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논농업은 건조를 제외하면 거의 완전한 기계화를 달성하였으나 밭농업은 품목, 농작업이 다양함에 따라 파종, 수확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농기계 개발이 미흡하여 기계화율은 60.2% 수준으로 밭농업 기계 개발·

보급 확대를 통하여 기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 확대를 통해 721개소의 농기계사업단을 운영하여 벼 재배 면적의 약 38%인 279천ha에 농작업 대행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벼 직파재배 사업도 확대하여 131개 지역농협에서 5.9천ha에 직파재배를 하였다.

향후계획

오래된 농기계를 교체하거나 신규 농기계 구입시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속적으로 융자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역 농업인에 대한 수요 및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과 고령·영세농의 농작업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신형 밭작물 농기계로 대체를 지원하여 임대농기계 사용을 활성화 하고 임대사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외부전문기관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 효율적 임대사업소 운영방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임대사업소 운영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신규 임대용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령·영세농과 조건 불리지역의 농작업 대행을 위해 지역농협이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직영농협을 확대할 것이며, 농작업 범위도 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까지 확대하고, 재배에서 방제, 수확 및 그 이후의 영농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농업시설의 현대화

가.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식량산업과 사무관 정순일

 시행배경


정부는 1991년부터 쌀 주산지에서 벼를 일관처리(수집·건조·저장·가공·판매 과정)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 쌀 품위향상 및 산지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쌀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991년 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추진된 RPC사업은 꾸준히 확대되어 2001년까지 328개소(농협200, 민간128)가 설치된 후 2002년부터 쌀 가공시설 과잉문제가 대두되어 신규설치 지원은 중단되었다.

한편, RPC의 수확기 농가벼 산물처리능력이 큰 폭으로 증가해 건조·저장시설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벼 건조·저장시설(DSC : Drying Storage Center) 설치 지원을 실시하여 전국에 1,481개소를 설치하였다.

RPC에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로 과거 농가가 직접 벼를 건조하여 과건(過乾)·급건(急乾)으로 벼의 품질이 저하되던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농가는 수확한 벼를 RPC에 입고하는 것으로 모든 작업이 완료됨으로써 벼를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농가의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농가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영농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RPC는 농가가 생산한 벼를 건조·저장시설에 보관함으로써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향후계획

2019년에도 건조·저장시설 24개소를 설치 지원할 계획으로, 국고 1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규모화된 통합 RPC 시설지원(1개소, 18억원) 및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증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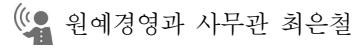
지원(24개소, 117억원), 고품질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저온저장시설을 지원(2개소, 4억원)할 계획이다.

표 3-36 연도별 건조·저장시설 지원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사업량	22	25	64	81	90	85	76	81	44	71	50	110	110	110	104	83	29	29	37	33	29	48	42	28	1,481
국고보조	38	36	87	118	164	190	145	157	79	126	93	249	258	253	239	207	89	89	103	83	87	93	89	125	3,197

나.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시행배경

채소·화훼·버섯류 등 원예·특용작물은 기상여건 등 외부변수에 따라 생산량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수급불안 요인이 늘 존재하여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가 절실하다. 또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국내산 원예·특용 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화 된 재배시설의 현대화 및 ICT 융복합 기술 적용 등 시설원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2·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인건비도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등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의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해마다 기상재해로 인한 시설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원예·특작 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규격을 보급·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농산물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화 된 온실 및 육묘장의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의 신선채소·화훼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원예시설(2012년) 및 특용작물시설(2013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온실 온습도 관리 등 작물의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도입하였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제공

2007년 4월부터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의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예·특작시설 관계 전문기관에서 조사·개발한 ‘내재해 설계기준’, ‘내재해형 시설규격’에 맞는 설계도·시방서를 개발하고 농업기술 지도기관인 농촌진흥청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보급하여 재해대응 기반을 조성하였다.

시설원예현대화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노후 재배시설을 대상으로 측고인상, 양액재배 시스템, 자동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차광·보광시설,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설치 등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여 2018년까지 10,487ha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2018년까지 1,085ha를 지원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버섯·인삼 등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추가하여, 2018년까지 12개 시도 3,728농가(법인)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지원함으로써 전체 원예·특작분야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환경·생장관리 및 정보분석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14년 신규로 도입하여 채소·화훼류 등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팜 보급을 확대하였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시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및 원활한 시설·장비 활용을 위해 사업 도입부터 사업 신청자 대상으로 단계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17년 하반기부터 일반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스마트팜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계획

원예·특용작물 시설 현대화를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ICT 융복합 기술과 연계 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품목별·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강도 변화기준에 부합하며 소비자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을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시설 재배기술, 환경 친화적 시설·장치 등 또한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다. 축산시설 현대화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성구

시행배경

축사경쟁력강화사업으로 '94~'99년까지 축사의 신개축, 개보수 및 자동화시설 등 지원을 통해 전업 규모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지원되었던 시설 노후, 사육환경 변화 및 FTA 확대에 따라 2009년부터 노후한 축사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 축사시설(가축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축산시설(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방역시설(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 시설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경관개선시설(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16년부터는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의 융자금 상환기간을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3-37 축종별 시설현대화 지원 전·후 생산성 비교

축종	생산성 항목	지원농가 생산성				비고 (조사농가)
		지원 전 평균 (A)	지원 후 평균 (B)	차이 (B-A)	향상률 (%)	
한우	1등급출현율(%)	58.4	71.0	12.6	21.6	90
낙농	산유량(L/년)	8,724	9,376	652	7.5	40
양돈	MSY(두/년)	18.4	18.8	0.4	2.2	66
육계	일당증체량(g)	45.5	51.8	6.3	13.8	55
산란계	산란율(%)	81.7	85.7	4.0	4.9	50

향후계획

FTA 등 개방에 대비하여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축사시설에 대해 2024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부터 규모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축종별 준전업농~전업농 및 기업업농으로 하고,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용자)과 이차보전방식(용자) 적용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3-38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 산	114,728	163,255	276,000	220,000	169,200	154,381	140,100	154,899	207,223

아울러, 질병발생 경감을 위한 가금 사육농장에 CCTV 설치 지원,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및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축사시설을 이전하여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사무관 한정수

시행배경

최근 ‘삼시세끼’, ‘도시어부’, ‘섬 총사’ 등 어촌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어촌이 국민들의 여가생활 및 휴식의 공간이자 삶의 안식처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나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인구가 적어, 개발우선 순위에 밀려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정주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으며,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공동화 및 활력저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잘사는 어촌 건설을 위해 1994년부터 낙후어촌의 생산·소득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생활환경 개선, 어업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013년까지 총 230개 권역으로, 1단계(160개 권역)와 2단계(70개 권역)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표 3-39 어촌종합개발사업 개요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지자체	1994~2013년	8,754억 원	230개 권역	국고보조 50~80%	생산기반 및 소득 기반시설 등

낙후지역개발사업 지원체계 개편('10년)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타 부처의 14개 지역개발과 함께 농어촌(읍·면)지역은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도시(洞)지역은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도서 및 접경지역은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어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투자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부 어촌지역(31개 시·군 124개 읍·면) 사업을 농식품부로부터 분리·이관(연간 국비 850억 원 규모) 받아 해수부 주도로 시행 중에 있다.

표 3-40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 지역현황(31개 시·군 124개 읍·면)

시·도	전담 시·군(초 읍·면 관할) (10개 시·군 93개 읍·면)	전담 읍·면(시·군 내 해당 읍·면만 관할) (21개 시·군 31개 읍·면)
강원	-	강릉시(주문진읍), 삼척시(원덕읍)
충남	태안군	당진시(석문면), 보령시(오천면, 주교면), 서천군(서면)
전북	-	부안군(변산면, 진서면, 위도면), 고창군(심원면)
전남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여수시	영광군(낙월면), 해남군(송지면), 강진군(마량면, 신전면), 장흥군(안양면, 회진면), 보성군(회천면)
경북	울릉군	포항시(구룡포읍, 호미곶면), 경주시(감포읍), 영덕군(강구면, 축산면), 울진군(죽변면, 후포면)
경남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하동군(금성면), 사천시(서포면), 창원시(구산면, 진동면)
제주	-	제주시(구좌읍, 한림읍), 서귀포시(성산읍)

*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다른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된 도시는 제외

시행내용 및 성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어항법」 제9조에 따라 수산업 생산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어촌관광기반 시설 등의 확충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및 살기 좋은 어촌 건설을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94~'13년)은 낙후도가 높고, 개발 잠재력과 개발 후 과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전국의 어촌계 및 어업계가 소재하는 연안 및 내수면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계와 2단계로 나누어 총 230개 권역을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사업의 지원규모는, 1단계 사업 160개 권역은 1994~2007년까지 권역당 평균 35억 원, 2단계 사업 70개 권역은 2007~2013년까지 대·중·소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당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하였다. 그 결과 낙후된 어촌지역의 기초생활 및 소득기반 시설 확충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

2017년부터 농식품부로부터 이관 받아 추진하고 있는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전국 연안 읍·면 중 어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31개 시·군 124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종합 개발사업이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주로 어민을 위한 기능적 측면의 개발사업임에 반해, 동 사업은 소관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공간적 측면의 종합개발사업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사업비는 국비 기준으로 연간 850억 원 규모(지방비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1,200억 원 규모)이다.

표 3-41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요

사업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대상지역	지원형태	사업내용
지자체	2017~(계속)	연간 850억원 (국비기준)	31개 시·군 124개 읍·면	국고보조 70%	기초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

동 사업의 유형으로는 어촌지역 중심지(읍·면 소재지, 어항 등)와 주변지역의 통합·개발을 통해 생활권·경제권 확대 및 상생발전을 위한 권역단위 거점개발(5년 이내, 100억 원 이내),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단위 특화개발(5년 이내, 20억 원 이내), 지역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군 역량강화(단년도, 2.5억 원 이내), 지역 자원의 기초생활기반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기반정비(5년 이내, 당해연도 계속사업 시·군별 예산 한도의 20% 내외 자율 편성) 등이 있다.

향후계획

그간 어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낙후된 어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과 생산기반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이면에는 사업의 경제성이나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의 숙원사업들을 지원하여 지속가능성이나 재정사업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있어왔다.

이에, 어촌개발사업의 재정사업 효과제고와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지구 계획수립 시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목적에 적합하고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 선정 평가 시 평가기준으로 필요성(중요성, 적시성), 타당성(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유지관리, 발전가능성) 등을 설정하여 어촌개발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조직인 어촌개발지원단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명품어촌테마마을(스토리가 있는 지역명소 마을)과 같이 특색 있는 마을개발 사업, 사업 지구별 관리카드 작성을 통한 사업지 공정 및 이력 관리, 사업지구별 사후 성과평가, 어촌특화역량강화 프로그램 개편(정부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지원에서 어촌주민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 위주로 전환),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어촌개발사업 효과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부터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해수부 주도로 본격 추진되고, 과거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어촌개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위주의 사업보다는 주민의식 제고 및 역량강화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 어촌이 주민들에게는 쾌적하고 활기찬 삶의 공간,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꿈의 공간, 일반국민들에게는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진정으로 살고 싶고, 가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5

양식시설 현대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사무관 고경호

 시행배경

한·미 FTA 체결로 영향을 받은 양식어장 시설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사업으로 '12년부터 양식어장 신설, 증설 또는 개보수, 자동화시설 등 지원을 통해 양식장의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양식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12년부터 매년 600억원의 융자(금리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하여 양식시설 개선을 통한 양식수산물 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양식소득 증대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

- 융자지원액(억원) : ('13) 427 → ('14) 584 → ('15) 457 → ('16) 266 → ('17) 376 → ('18) 600
- 이차보전액(억원) : ('13) 72 → ('14) 46 → ('15) 48 → ('16) 48 → ('17) 63 → ('18) 71


 향후계획

FTA 등 개방에 대비하여 양식업자가 조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양식

시설에 대해 이차보전방식(융자)으로 매년 60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1 식품산업의 육성

 식품산업정책과 사무관 박나영

시행배경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17년 약 6.2조 달러에서 2018년 6.5조 달러, 2022년은 7.5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2018~2022 연평균 3.6% 증가)되고 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연평균(2015~2017) 2.5% 성장하였으며, 2015년을 기점으로 세계 최대의 식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2017년 유럽 식품시장 규모는 1.9조 달러로 세계 식품시장에서 31.4%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큰 편이나 2013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어 2022년에는 30.3% 수준으로 그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종사자 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식품·외식 시장은 192조원 규모이다.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2010년 경제총조사에 따른 131조원 규모와 비교해 볼 때 46.2% 성장한 것이다. 또한,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외식분야(음식점 및 주점업) 규모는 2017년 128.3조원으로, 2013년 79.6조원과 비교할 때 연평균 12.7% 증가하였으며,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업제조업조사’에 따른 식품제조업(음료제조업 포함) 규모도 2013년 77.9조원에서 2017년 89.7조원으로 연평균 3.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식품·외식 산업은 농산물 수요를 증대시키고 농산물의 가공 및 외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을

2007년 12월 27일 제정·공포하였고, 2008년 11월 13일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 9월 28일에는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과 ‘농림수산물·농산어촌 비전 2020’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식품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등 4대 분야 23개 정책과제를 집대성한 것이다. 이어서 ‘17.12월에는 지난 10년간 식품산업진흥정책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18~’22)을 수립하였다.(발표는 ‘18.3월)

농식품부가 육성·진흥의 관점에서 식품산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10년간 국내 식품산업의 규모는 크게 성장해왔으나, 아직까지는 영세한 사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 전반의 혁신역량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산업계 전반의 혁신성을 높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식품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2017년 12월 수립한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식품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여 농산업을의 부가가치 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비전을 가지고,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어 5대 정책과제와 2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산업으로 도약”, “국산농산물 사용 인센티브 확충으로 농업과의 동반성장”, “유망분야 육성, 취·창업 지원 등으로 식품분야 고용 확대”를 목표로 제시하여, 민간의 혁신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산업기반 조성 및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산업 기술 및 인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분야의 R&D를 지원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육성하며, 청년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동북아 식품산업의 허브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2012)하였으며, 2017.12월에 산업단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기업 투자 유치를 가속화 하여 2018년까지 총 69개사(국내 68, 해외1) 및 연구소 4개소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대학생·청년 창업 희망자에게 ‘청년식품창업지원 Lab’사업을 지원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설·장비(R&D 및 파일럿 플랜트)를 활용하여 창업 구상 단계에 있는 가공식품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경영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식분야에서는 ‘청년키움식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외식업 설비가 갖춰진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실정 경영체험 기회를 제공(4주~3개월)하여, 메뉴개발부터 매장운영까지 경험해 보고, 컨설팅과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준비된 창업을 이끌고 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2명을 지원하였다. 이밖에도 국내·외 식품기업에 청년 인턴을 파견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80명), 열정과 역량을 갖춘 청년을 선발하여 농식품 수출 선도기업과 1:1 매칭을 통해 해외 신흥 수출시장에 파견(100명)하는 등, 미래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를 위해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소 식품제조·식자재 업체가 국산 농축산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산 농축산물 구매 보증보험’ 제도를 신규 도입(2018.5월)하여 식품업체와 산지조직 간 직거래를 유도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중소 식품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농업과 중소기업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도 추진하여 운영 및 시설자금, 컨설팅, R&D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을 위해 우수외식업지구 선정 등 외식산업 육성 및 품목별 가공산업 육성 등도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기능성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기능성 농식품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농식품 DB’를 구축(2018.11월)하여, 국산 기능성소재의 연구동향 및 주요기능, 성분별 이용현황, 국내외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 농식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여 2018년에 농식품 수출은 69.3억 달러를 달성(전년 대비 1.5% 증가)하여 3년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농가경제와 밀접한 과일,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 수출이 12.8억불에 달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이 전년대비 8.0% 증가한 13억불에 이르렀다. 이는 베트남 축구대표팀 박항서 감독을 ‘농식품 수출 홍보대사’로 위촉(2018.2월)하고, 하노이에서 K-Food Fair를 개최(2018.6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기존 주요 시장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장다변화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K-Food Plaza를 운영(2018.2~3월, 총 10만명 방문)하여 한식 및 전통식품을 홍보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행사와 연계한 한국 농식품 및 한식문화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향후계획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기본적인 산업 인프라를 튼튼하게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성장이 유망한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 R&D 특히 기술을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적 활용을 활성화하며, 전통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치산업육성방안’ 및 ‘장류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의 신규품목을 육성하고 품질·안전성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확대를 가속화할 예정이며, 국내외 한식 진흥을 꾸준히 추진하고 식품외식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우리 농업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사무관 김양일

시행배경

FTA/DD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 내생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과거 생산 위주의 농정을 1·2·3차 산업이 융·복합화된 「농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유기적 농정시스템을 가동하며, 창조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05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행내용 및 성과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클러스터사업의 자립도를 완성시키는 패키지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농수산업 주체

(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특산물을 R&D를 통해 식품을 제조하는 등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농어촌 활성화 및 농어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사업단 컨설팅, 인력양성, 클러스터 주체간 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등을 지원하는 『산·학·연·관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분야』와 사업단 자체 공동 브랜드 개발, 상품개발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05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⁴⁾은 3년동안 20개 사업단에 총 549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고 시행주체의 교육활동 및 네트워킹을 통한 산업협력 문화기반 조성, 농산업화 및 복합화 단계 진입, 수요자 중심의 농림사업 패키지화, 지방농정과 농산업체간의 대화채널 구축 및 정보공유 등의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

'08년부터는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인 클러스터 개념 이해 부족과 추진체계 구축 미흡, 책임성·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 부족 등을 보완하는 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22개 본 사업단⁵⁾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09년도에는 지역단위의 분산·중복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역경제권단위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 클러스터는 향토산업육성사업에서 추진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만 사업명을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역할을 정립하여 12개 사업단⁶⁾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11년도에는 신규사업단 선정 시부터 식품산업과 연계강화를 위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으로 개편하고 13개 사업단⁷⁾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즉, 기존 품목별 클러스터 사업에서 지역 특화품목을 광역화하고, 식품가공업과 연계하여 산업화할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어업을 2·3차 식품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4) 시범사업단(20개) : 안성맞춤, 포천 전통한과마을, 하이록한우, 백두대간농업포럼, 영동포도, 괴산 친환경청정 고추, 아산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한산모시, 장수사과, 정읍환원순환농업, 임실 낙농(치즈), 보성녹차, 함평 과학농업, 전남 친환경쌀, 경북한우, 풍기인삼, 경남친환경쌀, 하동녹차, 경남양돈, 제주 감귤
- 5) 본 사업단(22개) : 화성 웰빙떡, 강원 영동 한우령, 홍천 늘푸름 한우, 충북 친환경 축산, 서산 생강, 논산 에스민 딸기, 홍성 백년대계 한우, 진안 친환경한방, 무주 반딧불 산머루, 남원 친환경 흑돈, 완주 감, 영암 무화과, 곡성 멜론, 신안 시금치, 구례 산수유, 무안 황토고구마, 경산 종묘, 상주 고랭지포도, 영천 와인, 남해 보물섬 시금치, 경남 서북부 한우, 제주 마(馬)산업
- 6) 광역사업단(12개) : 팔당클린 농식품, 산우리 채래돼지, 육품정 육우,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 청보리를 활용한 참예우, 청보리 녹색산업, 녹색한우 명품화, 전남 딸기신산업, 감 고부가가치, 청정 약용작물, 제주 넉치, 우리밀 산업화
- 7)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13개) : 미역다시마, 한국명품김치, 경기막걸리세계화, 경기북부양돈산업, 유기 쌀가공식품, 친환경농식품, 명품김세계화, 비빔밥산업, 복분자, 유자, 약선가공식품, 명계부가가치, 제주콩

'12년도에는 별도의 신규사업단을 선정하지 않고,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앞으로는 본 사업 개시 전전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전년도에는 사업계획 진단 및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충실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업추진의 내실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13년에는 '12년에 이미 선정한 '14년 예비사업단 10개소에 대하여 1년 동안 사업계획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단 스스로 사업계획을 보완토록 하였다.

'14년에는 '12년 예비사업단으로 선정되어 '13년 1년간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10개 사업단⁸⁾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15년도 예비사업단을 선정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내실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15년에는 '14년도 선정 10개 사업단중 9개사업단(중도포기 1개사업단 제외)과 '15년도 선정 2개 사업단⁹⁾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특히 '14년까지는 광특회계 부처 직접 편성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15년부터는 지특회계 시도 포괄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추진됨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선정도 시도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토록 사업지침을 변경하였다.

'16년에는 별도의 신규사업단을 선정하지 않고, '14년도 선정 9개 사업단과 '15년도 선정 2개 사업단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17년 신규사업단 3개소¹⁰⁾에 대한 사전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17년에는 '14년, '15년도 선정 11개사업단과 '17년도 신규사업단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18년 신규사업단 1개소¹¹⁾에 대한 사전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18년에는 '14년, '15년, '17년도 선정 14개사업단과 '18년도 신규사업단 1개소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19년 신규사업단 2개소¹²⁾에 대한 사전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까지 총 83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10개소) : 부산어묵전략식품, 기능성약선두유, 충북친환경채소, 발효과채, 완전식품소이푸드, 울금식품, 빛그린매실, 토종명품화, 제주갈치 블루어리, 제주 청정돈육클러스터사업단

9)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2개소) : 사슴산업클러스터사업단, 한국매실사업단

1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3개소) : 고등어전략식품사업단,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 윗발효식품가치창조사업단

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1개소) : 자연그대로채소류건조가공사업단


1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2개소) : 미션나무식품화사업단, 발효식초육성사업단

향후계획

'14년 1개소, '15년 2개소, '17년 3개소, '18년 1개소의 기존 사업단과 '19년 신규 2개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또한 사업단,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방향, 우수사업단 사례 전파 등 컨설팅을 통한 사업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함께 고민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여 성공사례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3

종자산업의 육성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박영완

시행배경

정부는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인식하여 2009년 10월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2013년부터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육종 인프라 확충,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 우수종자 생산 유통, 민간역량강화 및 사업화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글로벌 종자강국 도약과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적 R&D인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2년 3월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내에 “GSP 운영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 상세계획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 현황조사·분석 및 품목별 세부 연구추진계획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같은 해 2월에 5개 분야 사업 단장을 선정하였으며, 7월에는 사업단 품목별 프로젝트 연구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종자개발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민간업체의 종자 육종에 필요한 첨단시설·장비 및 육종포장 등 연구 인프라 지원을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2011년 전북 김제시를 사업지로 선정하였으며, 정상 추진에 따라 2016년 10월 완공되었다.

한편, ‘묘’도 농산물의 품질과 수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대상으로 육묘시장규모는 2010년 1,870억원에서 2013년 2,420억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묘도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육묘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제1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13~'17)에 따른 종자산업 기반구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종자산업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종자산업의 정책방향으로서 제2차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하여 종자 수출 등 산업화, 해외진출 및 수출 확대 기반 조성 등 국내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 및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 등에 따라 골든시드프로젝트, 종자산업 기초인프라 확충, 해외 종자시장 개척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2009년 22백만 달러에서 2018년 52백만 달러로 종자수출액이 확대되었다. 다만, 수출종자 품목이 채소작물 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 품목 다변화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지난 6년간('13~'18) 545개 품종을 개발하여 94백만 달러를 수출하고 536억원의 국내판매(수입대체)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밖에 품종개발 기초 마련을 위한 유전자원등록, 분자마커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해외 육종기지 및 시범·전시포 32개국 144개소 등 수출 기반 구축을 통해 주요 핵심 성과목표를 달성하며 정상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민간육종연구단지는 단지내 입주할 20개 기업을 선정('13.9월),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4.12월 착공하였고, '16.10월 완공 이후 기업 입주를 완료하였다.

또한, 종자수출협의회('10년 설립, 24개 회원사)를 통해 국제 종자관련 총회 참석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해외 잡지 광고 게재 등 종자업체의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등 5개국에 품종 전시포를 설치·운영하여 국내 육성품종의 현지적응성 및 시장성을 조사하고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소개·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신품종 육성 의욕을 고취하고자 1998년부터 시행된 품종보호제도는 '12~'17년 품종보호출원 건수가 세계 7위(①유럽연합 ②미국 ③일본 ④네덜란드 ⑤중국 ⑥러시아 ⑦한국 ⑧캐나다 ⑨호주 ⑩우크라이나) 수준일 만큼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 말 현재 품종보호등록은 7,644건으로 작물별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42 작물별 품종보호등록 현황

(2018. 12. 31. 현재)

구분 작물	국 내						외 국				총 계					
	계	개인	중자 업체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중자 업체	국가	계	개인	중자 업체	지자 체	국가	기타
화훼류	2,561	636	206	968	702	49	1,489	79	1,410	0	4,050	715	1,616	968	702	49
채소류	1,451	33	1,063	114	177	64	37	1	36	0	1,488	34	1,099	114	177	64
식량작물	1,085	31	56	127	798	73	5	1	4	0	1,090	32	60	127	798	73
과수류	414	150	31	63	166	4	31	2	29	0	445	152	60	63	166	4
특용작물	295	16	52	40	176	11	1		1	0	296	16	53	40	176	11
버섯류	180	23	37	69	50	1	4	3	1	0	184	26	38	69	50	1
사료작물	49	9	2	1	36	1	1		1	0	50	9	3	1	36	1
산림조경수	24	23	0	1	0	0	0	0	0	0	24	23	0	1	0	0
수산식물	15	0	2	4	9	0	0	0	0	0	15	0	2	4	9	0
산림기타	2	0	0	0	2	0	0	0	0	0	2	0	0	0	2	0
계	6,076	921	1,449	1,387	2,116	203	1,568	86	1,482	0	7,644	1,007	2,931	1,387	2,116	203

또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18~'22)」을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은 「종자산업의 글로벌 성장산업화」라는 비전 하에 「종자산업 체질개선 및 수출산업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성과중심 연구개발 체계 구축, 선진적 생산·유통 체제구축 및 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체 역량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이에 대한 13대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2018년도에는 2차 5개년 계획의 연차별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자산업육성 대책을 통해, 2018년 기준 국내의 종자업 등록업체 수는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08년, 871개→'18, 2,466)하였으며, 기타 품목을 제외하고 과수가 27%로 가장 많고, 채소(15), 화훼(12), 버섯(9), 식량(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3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2018. 12. 31.현재)

연도	계	식량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뿌	기타
'08	871	33	189	257	139	126	28	99
'09	819	37	173	250	121	110	30	98
'10	924	32	181	283	149	121	29	129
'11	932	39	185	300	139	112	30	127
'12	1,073	39	202	328	160	118	33	193
'13	1,279	49	224	393	195	108	46	264
'14	1,491	58	255	445	214	125	47	347
'15	1,699	69	277	494	231	130	35	463
'16	2,019	78	341	587	253	161	43	556
'17	2,217	99	368	615	251	176	36	672
'18	2,466 (100%)	104 (4)	381 (15)	665 (27)	294 (12)	220 (9)	39 (2)	763 (31)

한편, 종자와 달리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있는 육묘산업을 종자산업처럼 농업부문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불량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육묘업등록제, 묘 품질표시제, 육묘 분쟁해결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종자산업법('16. 12. 27.)과 그 하위법령을 개정('17. 6. 28.)하여 시행('17. 12. 27.)하였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 이후, '18년도까지 총 3,289명이 육묘업 등록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총 1,506개 업체가 육묘업을 등록하였다. 작물별로는 채소가 48%로 가장 많고, 식량(41), 화훼(1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4 연도별 육묘업 등록현황

(2018. 12. 31.현재)

연도	계	채소	식량작물	화훼
'18	1,506 (100%)	716 (48)	622 (41)	168 (11)

* 육묘업 등록 교육 이수 현황 : 3,289명('17년 4회 1,517명, '18년 1,772명)


향후계획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Golden Seed 프로젝트 2단계('17~'21)는 기업·시장 중심의 과제 개편을 통해 수출성고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주축으로 한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정읍 방사선육종센터, 전주 농진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종자기업의 육종 및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18~'22)」의 4대 추진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및 기관별 핵심 추진목표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종자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4

곤충산업 육성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이미영

시행배경

곤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동물의 70% 이상(약 130만종)을 차지하는 미개발 생물 자원으로 평가되면서, 이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곤충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예전에는 곤충이 친환경 농업 및 시설원예의 확산으로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 곤충과 꽃의 수정을 돕는 화분매개 곤충으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학습·애완·축제용 및 식품, 사료, 환경정화, 기능성 바이오 소재 등에 곤충산업화가 확산되는 추세로 새로운 농업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곤충생산·유통·소비 단계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대량수요가 견인하는 미래 소득농업으로 도약할 기반 마련을 위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제2차 곤충산업 육성 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2016. 3월)하였다. 중점 추진할 과제는 소비·유통체계 고도화, 新시장 개척, 생산기반조성, 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요확대·유통·생산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 본격 산업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곤충 생산·가공·유통업으로 신고된 농가 또는 법인은 총 2,318개소(생산업 2,180, 가공업 499, 유통업 1,209, 일부 중복)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곤충산업 종사자는 3,341명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표 3-45 국내 곤충산업 현황

구 분	2017(A)	2018(B)	증감(B-A)	증감률(%)
곤충 사육·가공·유통업 신고 수(개소)	2,136	2,318	182	8.5
- 생산업	2,008	2,180	172	8.6
- 가공업	422	499	77	18.2
- 유통업	1,088	1,209	121	11.1
곤충 사육·가공·유통업 종사자 수(명)	3,194	3,341	147	4.6
곤충 판매액(* 풀벌, 누에 제외)(억원)	345	375	30	8.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1) 곤충산업 新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갈색거저리 애벌레(2016. 3월)와 쌍별귀뚜라미(2016. 3월)에 이어,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2016. 12월), 장수풍뎅이 애벌레(2016. 12월)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과 협업하여 일반식품 원료(동물성 원료 중 곤충 관련 총 7종)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용곤충의 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32호)을 제정(2016. 10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2018년 주요 규제 개선 성과로는 곤충 사육농가도 농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 범위를 확대(농수산업자신용보증법 개정, 2018. 12. 31.)과 곤충 생산·가공·유통업 신고처리와 관련하여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가공업 등록 시 곤충 가공업도 신고한 것으로 보는 등 신고 간주제 도입(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8. 12. 31)이 있으며, 2019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곤충자원의 R&D 강화

곤충자원을 활용하여 식품·사료 외에도 기능성의약품 소재개발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R&D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2018년에는 오리·반려견의 생산성 및 면역력 개선을 위한 곤충기반 맞춤형 사료개발 및 산업화(2015~2018), 학습 애완 곤충사육 유통시스템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 보급(2015~2018), 식용곤충 저변 확대를 위한 조리법 연구 및 가공제품 개발(2015~2018)과 곤충자원의 다각적 활용을 위한 전략적 식품 소재 개발 및 상품화(2016~2018), 식·사료용 곤충 가공 표준화를 위한 고온 복합형 열풍 건조기술 개발 및 표준공정 확립(2016~2018), 신기능 곤충 생장 조절 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살충제 개발 및 산업화(2016~2018) 연구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식용곤충을 활용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간식 연구·개발 및 수출(2018~2023) R&D를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농촌진흥청에서도 익힌숙잠·참당귀 복합제 이용 고연령 유발 징후(치매/기억력 감퇴)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실용화 연구(2018~2020), 수벌번데기, 아메리카왕거저리, 풀무치의 식품원료 등록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3) 곤충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대외협력 강화

현장포럼, 곤충식품 페스티벌 및 정책토론회(2018. 4월), 민관합동 곤충산업워크숍(9월), 제5회 곤충요리경연대회(9월) 및 곤충식품 수출활성화 심포지엄(12월) 개최, 곤충 관련 행사 후원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안전 사육관리 교육 및 성공사례 확산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곤충 및 곤충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곤충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곤충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을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예천곤충연구소 등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총 19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4)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화 기반 조성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의 곤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경기(2016년)는 천적, 대전(2016년)은 학습·애완, 경북(2015년)은 화분매개, 경남(2015년)은 식·약·사료용 소재 및 제품화 개발을 특화하기 위하여 총 4개소의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였으며, 각 센터는 곤충 농가 교육 및 품질관리, 제품화 및 산업화 연구 개발 및 기술보급 등 지역 곤충산업의 종합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곤충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용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무병·우량 곤충종자를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충청북도농업기술원(청주)에 곤충종자보급센터를 건립(총 사업비 50억원, 2017년부터 3개년) 중이다.

또한, 곤충자원 유통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2017년과 2018년 경북 예천 곤충유통사업단을 통해 농가조직화·품질관리·마케팅을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제품개발 및 통합마케팅을 통해 유통망 구축에 성과를 보였다.

5) 곤충자원 조사 및 유용곤충 발굴

산림곤충의 표본 확보와 동정체계 구축을 통한 곤충산업화 기반 마련 및 산림분야 특성에 맞는 해충방제를 위해 2018년 산림서식 곤충상 조사를 통한 분포조사와 곤충자원의 동정체계 구축 및 천적곤충 조사를 추진한 결과, 18,188점의 산림곤충 표본 확보 및 데이터 입력, 곤충표본 이미지 3,795점 및 산림곤충 분류군별 DNA 바코드 및 관련 정보 1,176건을 확보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 매개충 하늘소 2종의 기생천적을 발굴하여 총 14종의 기생벌을 확인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향후계획


곤충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제2차 곤충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매년초 전년도 곤충산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을 보완하여 ‘곤충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료용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2019년부터 생산자단체(농가) 2개소를 선정하여 시설 및 장비 등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곤충을 축산법 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고, 곤충사육농가도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과 지원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또한 농진청과 HACCP인증원 협력을 통해 HACCP 수준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2019년 완공되는 곤충종자보급센터를 통해 우량한 곤충종자를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곤충종자 보급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질병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곤충 안전성을 확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는 높여 가고자 한다. 아울러 식용곤충 먹이원 개발 및 곤충 활용 소재 개발 R&D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5

종축산업의 육성

 축산경영과 사무관 정준구

 시행배경

가축개량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정액 등 유전자원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가축개량의 방법은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반복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행내용 및 성과

축산법에 따라 중장기(5년, 10년) 가축개량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량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 10년간 가축개량 추세를 살펴보면 가축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가축을 대상으로 2018년에 추진한 가축개량 시책을 살펴보면, 한우개량 부분에서는 첫째, 한우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제도의 시행을 들 수 있다. 한우 육종농가는 혈통등록(혈통·고등등록우, 12개월령 이상)된 암소 50두 이상(목표 1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번식농가 중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0호 내외로 선정하였으며, 2016년(3호)과 2018년(3호)에는 한우후대검정전문농가를 대상으로 6호를 선발하여 103호 농가를 운용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발육성적과 육질 등 유전능력이 뛰어난 암소 14,335두를 선정, 보증씨수소와 교배시켜 우량 씨수송아지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량 씨수송아지는 당·후대검정을 통해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선발된 가장 우수한 한우 보증씨수소로 연간 30두 내외로 선발된다. 이는 한우육종농가사업이 인공수정용 한우 정액을 생산하여 한우 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한우개량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둘째,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우암소검정사업을 통해 암소개량에 의지가 있는 한우농가, 지역조합 등을 중심으로 암소에 대한 혈통관리, 발육·육질조사 및 유전능력평가를 농가에 제공하여 자발적인 선발·도태를 통한 우량한 암소집단을 조성하여 고능력 송아지를 생산하는 번식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2018년 사업에 참여한 지역축협은 62개소, 농가는 8,649호이며, 이들 농가들이 사육하는 267천두에 대해 암소검정(번식정보, 발육조사, 초음파, 친자감정)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사업참여 농가 확대를 통하여 한우암소능력검정 및 유전능력평가로 한우 농가의 고능력암소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및 계획교배에 의한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8년에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9개도)이 고능력 수정란을 생산하여 지역축협과 농협에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우량암소수정란이식지원 사업을 지원하였다. 각 도 축산관련 연구기관은 '18년 이후 고능력 수정란을 연간 600개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표 3-46 주요 가축개량 추세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한 우											
- 1등급이상 출현율 (%)	54.0	56.7	63.1	62.4	58.1	61.3	65.0	67.9	69.3	72.0	72.7
○ 젖 소											
- 산유량 (kg/305일)	9,598	9,563	9,638	9,672	9,771	9,737	10,057	10,289	10,334	10,395	10,303
- 검정농가 산유량 (초산우)	(8,553)	(8,527)	(8,584)	(8,652)	(8,800)	(8,723)	(8,959)	(9,103)	(9,142)	(9,298)	9,267
○ 돼 지(두록, ♂)											
- 일당증체량(g)	647	657	678	673	674	669	682	685	697	696	703
○ 닭											
- 산란계 산란지수 (개/년)	319	319	321	-	-	-	-	-	-	-	-
- 육용계 체중 (6주, g)	2,012 (5주)	2,042 (5주)	1,991 (5주)	-	-	-	-	-	-	-	-

셋째, 2012년 한우수정란센터가 농협 가축개량원에 신설되었는데, 동 센터에서는 초우량 한우 암소의 수정란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수정란을 한우 사육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육량과 육질에 대한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암소를 선발하기 위해 한우개량사업소 및 한우 육종농가 보유 개체들 중 유전능력평가 상위 5% 이내에 해당되는 암소나 전국 암소 중 자손의 도축 성적이 상위 0.01% 이내인 암소를 엄선하여 수정란 생산에 이용한다. 2017년도에는 총 1,357개의 수정란을 생산한 데 이어, 2018년도에는 1,639개의 수정란을 생산하였다. 이 중 1,117개는 판매, 268개는 씨수소 생산을 위한 기초축군 조성을 위해 한우개량사업소 자체 이식에 이용하였다.

2018년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공급을 위한 한우 보증씨수소는 당대 및 후대 검정을 통해 유전능력평가를 거쳐 27두를 새로 선발하였으며, 이렇게 선발된 보증씨수소 총 82두에서 생산한 우량 한우 정액 2,054천개를 번식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한우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젖소개량 부분에서는 검정을 받는 낙농가 3,039호에서 사육하는 암소 150천두를 대상으로 유우군능력검정사업을 추진하였다.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에 필요한 젖소 보증씨수소는 국내에서 선발된 5두에 도입된 4두를 포함, 보증씨수소 총 28두를 확보하여 국내산 젖소 정액 350천개(str)를 낙농가에 공급하였다. 젖소개량은 검정농가의 경우 검정 참여기간이 길수록, 검정 참여율이 높을수록 평균 산유량이 높다.

젖소개량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가 2011년 12월부터 우리나라가 국제유전능력평가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국제유전능력평가는 국제가축기록위원회(ICAR) 산하기구인 국제유전능력평가기구(Interbull)에서 참여국 전체 씨수소 유전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2018년 현재 35개국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2018년도에 유생산부분에서 상위 10% 이내에 든 한국형 보증씨수소가 다수 포함되었고, 선발된 씨수소는 “모하비”와 “그란테”, “크라운”, “럭키” 유생산량, 유지방량, 유단백량, 그리고 체형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나라 젖소개량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매년 외국에서 도입하는 고능력 젖소 수정란을 자체 생산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젖소수정란 공급장을 2017년에 완공하였고, 2020년까지 연간 100개, 2023년까지 200개 국산 고능력 수정란을 생산할 계획이다.

돼지개량 부분의 성과를 보면, 두록 수태지의 경우 농장검정성적을 기준으로 일당 증체량이 2008년 647g에서 2018년 703g으로 8.7% 증가하였다. 이는 2008년부터 추진 중인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우수종축 선발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참여 종돈장 교배모돈의 10%에서 공동선발한 종돈의 정액으로 유전적 연결을 하여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량효과를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 17개소 모돈 5,060두(두록 8개소 680두, 랜드레이스 8개소 920두, 요크셔 15개소 3,460두)가 참여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한 두록의 90kg도달일령은 2008년 144.8일에서 2018년 135.7일로 9.1일정도 단축되었다.

닭의 경우는 원종계를 수입하는 종계장이 닭경제능력검정소에 검정을 의뢰하여 생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이전 검정소 부지가 노후화되고 주변여건이 열악하여 매각처분하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닭 개량 부분에서 산란계의 경우 산란지수가 2000년도 279개에서 2010년 321개로

15.0% 향상되었으며, 2002년 이후 산란지수는 317개 수준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2011년 닭경제능력검정소 매각 이후 닭 개량 부분에서의 성적은 집계가 중단되었다.

돼지와 닭 개량은 민간업체(종돈장, 종계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돼지개량은 규모있는 종돈장의 경우 자체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규모 종돈장은 종돈을 수입한 뒤 확대 생산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돈의 능력검정을 위해 종돈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고, 검정을 통해 종돈장에 우량 종돈의 선발·계획교배의 자료를 제공하고 양돈농가에는 종돈 선택지표를 제공하여 양돈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종축장(종돈·종계장)의 청정화·규모화를 유도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종축장(종돈·종계장) 종합평가에 따른 우수종축장 인증을 시작하였다. 2018년 현재 종돈장 17개소, 종계장 5개소가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되어 있다.

종축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종축장전문화지원을 2014년부터 지원내용이 유사하고 지원조건이 유리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계획

저비용·고효율의 가축개량을 지향하기 위해 중장기 가축개량 목표를 보완하고 혈통등록과 능력검정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가축의 유전 평가 신뢰도를 높여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 계획 교배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축종별 가축개량 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우개량 부분은 현재까지 육질위주로 집중되어 있던 개량방향에서 높은 근내지방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고려, 육량·육질을 동시에 개량하는 방향으로 선발방법을 수정할 계획이다. 우량한 인공수정용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 당대검정용 수송아지의 능력을 조기에 판정할 수 있는 유전체선발(GS) 기술 적용과 농장 단위에서 후대검정사업 수행을 활성화시켜 씨수소의 유전능력 정확도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개량형질을 양축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폭 넓은 개량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료효율, 부분육 수율을 조사·분석하여 개량방향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한다.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 8.6천호(267천두)에 대하여 수소 중심의 개량에서 암·수 동시개량으로 개량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우개량에 있어 가장 핵심인 혈통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축인공수정사를 교육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우수한 한우 씨수소 선발에 필요한 고능력씨암소축군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당대검정만으로 선발된 씨수소의 유전능력을 암소집단에 전달하는 과정을 3세대간 반복 실시하여 고능력 암소 600두(농협 200두, 도 축산연구소 400두)를 조기 육성하여 보증씨수소의 개량효과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젖소개량 부분에서는 산유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수명연장, 사료효율, 번식능력 등 효율성을 고려하여 낙농가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개량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유우군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검정농가의 혈통비율을 2019년까지 85%로 높이고, 검정비용의 지원은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후대검정사업 등에 참여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까지 청정육종농가 17호를 선정하고 고능력수정란(400개/년)을 이식하여 2019년에 보증씨수소를 5두 선발할 예정이고, 국제적으로 실시하는 종자소 유전평가(Interbull)에 참여하여 국내환경에서의 한국보증씨수소의 객관적 우수성을 입증함으로써, 고효율 개량, 유전자원 자립화 및 국산정액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개량의 경우 청정화된 종돈장을 대상으로 종돈장별 최우수 종돈을 선발하고, 그 종돈의 정액을 여러 농장과 공유, 유전적 연결을 도모하여 국가단위평가를 통해 우량종돈 생산을 위한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2020년까지 종돈의 50% 이상이 참여하는 국가단위 유전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표현형 기반의 종돈 유통을 육종기반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수 종돈장 및 우수정액등 처리업체 인증을 통해 청정·우량종돈(정액)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장검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 종돈장 확대를 유도하고,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정책사업을 검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닭 개량은 종계 대부분을 외국의 대규모 종계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생산하는 실정으로 국산 종계 개발과 능력검정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신축을 추진중인 닭경제능력검정소는 관련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양계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며, 국내생산 토종닭 순계(PL)에 대해서는 수입종축 수준으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6 수산식품산업 육성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사무관 서밀가

시행배경

소득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곡물 등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이 육류수산물 등 단백질과 지방 중심 식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산물이 건강한 단백질원, DHA, EPA 등을 함유한 기능성 식품으로 주목받으면서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가정간편식(HMR) 선호와 생의 주기에 맞는 가공식품 수요 선호 등 사회적 트렌드변화에 따라 수산식품의 다양화와 고급화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우리나라 수산가공식품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종사자 50명 미만 업체가 96.0%, 매출액 50억 이하 업체가 85.2%를 차지하고 있어 자금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품질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산물 가공시설의 현대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먹거리 안전확보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행내용 및 성과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산업의 인프라 조성을 위해 1987년부터 산지에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58개소, 163억 원)과 수산물처리 저장시설(5개소, 17억 원) 등 총 63개소에 대해 국고 180억 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식품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 개발 및 브랜드화를 통하여 고부가가치의 수산식품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2018년도에 총 5개소에 133억 원을 지원하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표 3-47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국고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사업개요	'09 까지	'10 예산	'11 예산	'12 예산	'13 예산	'14 예산	'15 예산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합계	18개소	11,256	8,759	14,360	16,750	15,400	13,860	14,496	12,548	7,625	13,339
1) 전남	목포 고기능수산물지원센터 (’08~’11)	4,772	1,000	5,350	-	-	-	-	-	-	-
2) 부산	수산식품가공산업학연구센터 (’09~’10)	500	1,150	-	-	-	-	-	-	-	-
3) 전북	부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 (’09~’12)	500	1,000	1,000	2,450	-	-	-	-	-	-
4) 전남	여수 수산물종합센터 (’09~’13)	1,984	2,000	2,000	5,000	3,516	-	-	-	-	-
5) 전남	영광 염산항화도바다매체타워 (’09~’13)	500	1,000	1,000	1,500	1,000	-	-	-	-	-
6) 경북	포항 과메기산업화기공단지 (’09~’15)	3,000	2,359	3,000	2,000	2,100	2,144	4,300	-	-	-
7) 전북	고창 풍천장어웰빙센터 (’10~’15)	-	250	1,760	1,000	1,100	100	3,290	-	-	-
8) 경북	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 (’11~’14)	-	-	250	4,500	2,500	5,250	-	-	-	-
9) 전북	군산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 (’12~’14)	-	-	-	300	4,484	4,966	-	-	-	-
10) 경북	울진 붉은대게식품산업단지 (’13~’16)	-	-	-	-	300	700	3,406	3,273	-	-
11) 충북	괴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13~’16)	-	-	-	-	400	700	3,050	4,060	-	-
12) 충남	보령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15~’18)	-	-	-	-	-	-	450	3,965	-	4,381
13) 경북	포항 식품개발및상품화 (’15~’17)	-	-	-	-	-	-	-	500	500	-
14) 경남	남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16~’18)	-	-	-	-	-	-	-	375	3,375	3,583
15) 전남	화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16~’20)	-	-	-	-	-	-	-	375	3,000	-
16) 경기	화성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17~’19)	-	-	-	-	-	-	-	-	375	3,000
17) 충남	태안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17~’19)	-	-	-	-	-	-	-	-	375	2,000
18) 전남	해남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18~’20)	-	-	-	-	-	-	-	-	-	375


자료 : 해양수산부

향후계획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산업을 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소득 창출과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체계 구축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품질개발, 우수 브랜드 육성·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우리나라 수산업을 수출형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생산 여건을 감안한 수산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가공, 연구·개발, 물류 및 수출지원 기능 등이 집적·연계된 거점형(광역별) 수출단지 인프라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7

관상어 산업의 육성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사무관 박명래

시행배경

국내외적으로 관상생물에 대한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최근 관상어의 산업적, 사회적 가치가 재인식되고, 사회 경제적인 발전과 변화 속에 ‘수산 애원동물’인 관상어시장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관상어 산업은 양식·용품제조·유통·판매·수출입 등이 연관되어 있는 복합 산업으로 대표적인 6차산업이며, 현재 세계 관상어시장 규모는 46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관상어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수산의 미래 전략산업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물의 경우 80~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수출되고 있던 비단잉어, 금붕어 생산도 영세성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상어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상어 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관상어 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우리나라 관상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미 세계적인 식용어 양식기술 인력과 시설 등의 양식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를 활용한 생산품종 다양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형형색색 다른 패턴의 생물을 생산함으로써 더욱 부가가치 창출을 이루는 관상어는 패션시장과 같아 세계적인 관상어 시장에 새로운 코리아브랜드가 선점되도록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산업화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관상어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과제로 담수관상생물 양식연구와 해수관상생물 산업화 생산 기반 구축 연구를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담수관상생물 양식연구 중 우리나라 토속담수어류를 관상어로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한국 토속어 종인 금강모치에 대한 생태, 종자생산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토속어류의 관상어화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담수토속관상어 연구결과로는 국내 비단잉어 홍백품종 중 우량형질이 발현되는 어미개 체군을 확보하고, 질병에 대한 내성을 가지면서 체형과 체색이 우수한 핵집단을 생산 확보하였고, 품종개량을 위한 교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형과 색택이 우수한 홍백 어미로부터 일반집단보다 속성장을 보이는 우수한 개체 20만마리 자어를 생산하였다. 소형관상어인 고급품종 구피 개발에서는 시장 점유율 증대와 수입대체 및 향후 국제 경쟁력이 높은 품종개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결과, 소비자 수요도가 높은 블루/레드 계열 등 총 2종의 구피를 개량하였다. 블루 계열의 ‘플래티넘 블루 텍시도’ 구피 1,081마리, 레드 계열 ‘골든 플래티넘 레드 텍시도’ 구피 796마리를 생산하여 업계에 분양하였고, 황금안시 494마리도 분양하여 수입대체 및 업계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해수관상생물 산업화 생산 기반 구축 연구에서는 파랑점자돔, 노랑꼬리파랑돔, 저고리파랑돔, 클리너슈림프를 세계 최초로 인공번식 하는데 성공하였고, 빅벨리해마와 연산호(3종)의 인공번식 기술도 개발하였다. 해수관상생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법으로서 해수관상어류를 인공번식 하는데 필요한 친환경 물만들기 기법(EcS기법)과 연산호를 인공번식 하는데 필요한 절단법에 의한 부착돌기 생성 기법을 개발, 보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수관상어류 중에서 양식기술이 가장 먼저 개발된 흰동가리(클라운피쉬)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체표 무늬별 우수형질 13가계군을 확보하였고 그 중 2가계군은 산란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백작흰동가리라고 부르는 새로운 품종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양식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관람형 대형 아쿠아리움의 전시생물을 연구 및 산업용 어미를 해수관상생물 양식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관상생물 용품개발로는 다단시스템수조와 냉온겸용장치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재산권(국내 특허등록 7건, 국내 디자인등록 2건, 국제 특허 PCT 2건, 일본 특허등록 2건, 미국 특허등록 2건, 유럽 특허출원 2건)을 확보하고 그 중 일부 기술은 민간기업에 유상기술이전(9건, 17,700천원)하였다.

향후계획

해양수산부는 관상어육성지원 대책마련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15.12)하고 관상어 연구개발 및 산업화 기술개발 예산을 지원하며, 산업화 양산기술개발을 위해 양식과 용품 관련 산업화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상어에 대한 홍보를 위해 국제박람회지원, 국내 관상어 품평회개최, 수족관보급 등을 추진하여 관상어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아쿠아팻랜드” 조성을 통해 수입의존 국내 관상어 시장의 수입대체 및 수출기반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8 유어산업 활성화 추진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 황현태

시행배경

국민소득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인한 여가 선용 기회 확대로 국민들의 레저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표적 레저산업인 낚시 역시 그 향유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1990년 325만명에서 2020년까지 약 800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경향성과 해양레저 수요 증가로 인해 바다낚시 인구는 일정기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낚시 인구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어업인들의 어업 외 소득 증대를 위한 대표적 산업으로서 낚시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표 3-48 국내 낚시 인구 현황

(단위: 만명)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20
낚시인구	325 (한국갤럽)	400 (환경부)	500 (해수부)	573 (한국갤럽)	652 (세종대)	677 (KMI)	767 (한국수산회)	800 (한국수산회)

* 2020년 : 기존의 낚시인구 추정치에 따른 예측

특히, 최근 개인에서 가족단위로 여가시간 활용경향이 바뀜에 따라 가족이 함께 유어를 즐길 수 있는 유어장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낚시터와 낚시어선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유어장, 낚시터, 낚시어선이 어촌의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며, 유어인들의 어촌방문 활성화로 지역의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3-49 낚시터, 낚시어선, 유어장 현황

(단위: 개, 척)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유어장	168	176	185	198	185	177	214	200	181
낚시터	737	783	729	772	755	730	774	877	935
낚시어선	4,060	4,359	4,708	4,390	4,381	4,289	4,500	4,487	4,543

자료 : 지자체

그러나,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낚시로 인한 어획량 역시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여 수산자원의 고갈 우려와 함께 지역어업인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실납추, 투기된 쓰레기 등으로 낚시터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낚시인의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낚시제한기준 설정, 유해낚시도구 사용금지, 낚시인과 낚시업경영인의 안전의무 부과 등의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행내용 및 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낚시 및 낚시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여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낚시를 건전한 국민 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이를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연계하고자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시행(12.9.10)되었다.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낙시제한기준의 설정

낙시 인구가 늘어나고 낙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잡을 수 없는 시기나 크기 등을 제한하였다.

2) 유해 낙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등 유해한 낙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판매·보관 장소의 낙시도구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3) 낙시인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이나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낙시터업의 허가·등록제도의 도입

무분별한 낙시터의 개발은 수산자원의 남획, 수산환경의 오염, 농경지의 훼손 및 농어업 인과의 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면에서 낙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5) 낙시어선업의 신고제도의 도입

낙시인의 안전을 위하여 낙시인을 승선시켜 낙시터로 안내하거나 낙시어선에서 낙시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낙시어선업을 할 경우에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6)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

낙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낙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낙시인 및 낙시 관련 단체나 법인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지도 및 계몽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제도 도입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 및 수산자원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함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향후계획

유어산업 분야에 있어 낚시어선 이용 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집중 단속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속건수, 행정처분 등 양적인 불법행위는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경각심 고취에 따른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낚시산업 육성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1 농림축산식품기술개발사업 추진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관 안형근

시행배경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현재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현장에 적용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농업의 현안 문제 해결과 더 나아가 바람직한 미래농업을 위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농업현장에서 농업인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은 H/W(자율주행, 농기계, 드론, 로봇 등)와 S/W(환경, 시설, 생육, 출하, 입출고, 수발주, 물류, 소비트랜드)이다. 이를 이용하여 농업의 현안문제인 노동력 부족, 식량자급률 저하, 기후변화에 의한 농작물 재배여건 악화, 농가소득 정체, 도·농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위기 도래 및 농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농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렴하고 효율적인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산업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업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연구개발을 통해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1994년부터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사업체계를 기술수요자 중심형 기술개발, 연구기획 강화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공모 유형에 따라 기획과제(지정공모형)와 일반과제(자유응모형)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표 3-50 농림축산식품 기술개발사업 유형

구분	지정공모과제(구, 기획과제)	자유응모과제(구, 일반과제)
내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기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등을 장관이 지정하여 공모하는 과제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첨단기술, 부가가치 제고 기술 및 산업화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가 자유로이 발굴하여 제안토록 공모하는 과제

2008년에 농림축산식품분야의 개발된 기술의 상장을 방지하고, 사업화·제품화를 위한 사업화연구(R&BD)를 지원하는 ‘기술사업화지원사업(구, 농림바이오산업화지원)’을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식품 기술개발사업’을 별도사업으로 분리하였고, 농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 집단 육성을 위한 장기 R&D 프로그램인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구, 농업연구센터)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중추 사업으로의 확대,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및 투자영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농림기술개발사업(1994~2010)을 4개 사업(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함에 따라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개발 결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청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R&D 공동기획단’을 구성(2011.3월)하여 부·청 공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2013년에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개편을 위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2013~2022)’을 마련하였고, 기존 산업 육성 중심의 R&D투자 체계에서 정부 주요 정책과 R&D목표가 연계된 ‘4대 중점분야’(글로벌 경쟁력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안정적 식량공급, 국민행복 제고)와 ‘50대 핵심기술’을 설정하여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2014년에는 농식품 유용 미생물 유전체 정보를 자원화하고, 산업화·실용화하기 위해 다부처사업으로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변화된 농정환경에 맞는 R&D 정책 방향과 투자 계획 마련을 위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2015~2019)”을 수립하였다. 2016년에는 기술영역이 유사한 내역 사업은 유사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하고,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내역사업은 사업 목적에 맞게 해당사업으로 이관하는 등 농식품 R&D 사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구조개편을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분야

중심인 전문위원회를 산업분야 중심으로 확대하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농업인·농산업체 의무참여비율 설정, 패널수요조사 도입, 부·청 공동기획단, R&D 배심원단 및 R&D 코디네이터 운영 등을 담은 농식품 R&D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AI·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의 실효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AI·구제역 대응 범부처 R&D 추진 전략(17.9월)’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부처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2018년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R&D 펀드를 조성하여 현장애로 신속 해결을 위한 역매칭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술력이 부족한 농업인·농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R&D 바우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 및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를 위해 기 추진되던 SNS컨설팅사업,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사업의 품목을 다양화하였다. 아울러 스마트팜의 융합·원천기술 개발·확산을 통한 현장 적용 확대 위해 첨단생산기술개발 등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연구과제 관리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활동조직 및 인프라 선진화, 성과지향적 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활용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는 등 전주기적인 성과관리 체계에 따라 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식품 연구개발사업’으로 ’94년부터 2018년까지 총 6,564개 과제 16,0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기 추진되던 농생명산업기술개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등 8개 사업 외 농축산물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사업,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사업 등 3개 신규사업을 기획·추진하였다. 2018년 기준 계속과제 358개 1,093억원, 신규과제 289개 416억원 등 총 647개 과제에 1,510억원을 지원중에 있다.

표 3-51 농식품 기술개발 과제관리 현황(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관리)

(단위: 개, 억원)

구분	연도	1994~2017		2018			
		과제수	금액	계속과제	금액	신규과제	금액
합계		6,877	17,000	358	1,093	289	416
기획과제(지정공모)		1,104	6,925	156	619	122	246
일반과제(자유응모)		5,773	10,075	202	474	167	170

* 해당사업 : 농림기술개발사업('94~'10),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10~),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11~),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11~),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11~),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11~), 기술사업화지원사업('08~),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12~), 포스트게놈다부처융전체지원사업('14~), 농축산물 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사업('18~),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18~),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사업('18~)
자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8년

2) 완료과제의 성과활용현황

2018년까지 농식품기술개발을 통해 연구개발이 완료된 과제는 5,525과제이며, 이 중 1,243과제(22%)가 산업체 및 농가에 기술 이전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정책활용에 525(9%), 기술교육 및 컨설팅에 1,522(27%), 지식기반조성(특히, 논문, 인력양성, 타 연구 활용)에 1,721(31%) 과제가 활용되고 있다.

표 3-52 1994~2018년 농식품기술개발 완료과제 성과활용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활용				성과활용 추진증	성과 미활용	합계
	농산업 기술이전	정책 활용	기술교육/ 컨설팅	지식기반 조성			
과제수	1,243	525	1,522	1,721	109	405	5,525
(%)	(22)	(9)	(27)	(31)	(2)	(7)	(100)


자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8년

향후계획

2019년에는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5~2019)’의 성과분석, 투자동향 분석을 실시하고 발전방향 및 목표 도출을 통해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향후 5년의 농식품분야 R&D 정책 추진방향과 중점 전략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R&D 평가시스템 보완, 부정행위 관리 강화, 평가결과 신뢰성 제고, 코디네이터 제도 확대 등 사업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농림식품 R&D 혁신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정목표-R&D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투자 체제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농림식품 R&D 투자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사무관 이종균

추진배경 및 개요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가축질병 및 자유무역확대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부는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ICT를 농식품 분야에 적용하는 등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드론, AI트랙터 등이 농업인을 대신하거나, 작물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등 최첨단 농업기술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해상도 위성·항공영상을 이용한 농경지 전자지도를 구축하였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팜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 첨단 기술을 산업화하고,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빅데이터 기반의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1) 스마트 팜 보급 확대를 통한 첨단 미래 농업 기반 구축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안전하고 균일한 품질 등 시장요구에 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유능한 청년을 농업에 유입시키고,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정부는 2014년 이후 시설

원에 및 축산분야 스마트팜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시설원예(누계) : '14년 405ha → '18년 4,900/ 축산(누계) '14년 23호 → '18년 1,425)

2018년에는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량 31.1%, 고 품질 생산 39.13%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한국개발·농산업조사연구소)

또한, 스마트팜은 국정과제이자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17.11)되어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수립·발표('18.4, 경제관계장관회의)하여 청년인력 육성, 기술혁신, 전후방산업 성장 등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에 4개소(전북, 경북, 전남, 경남)를 선정하여 '22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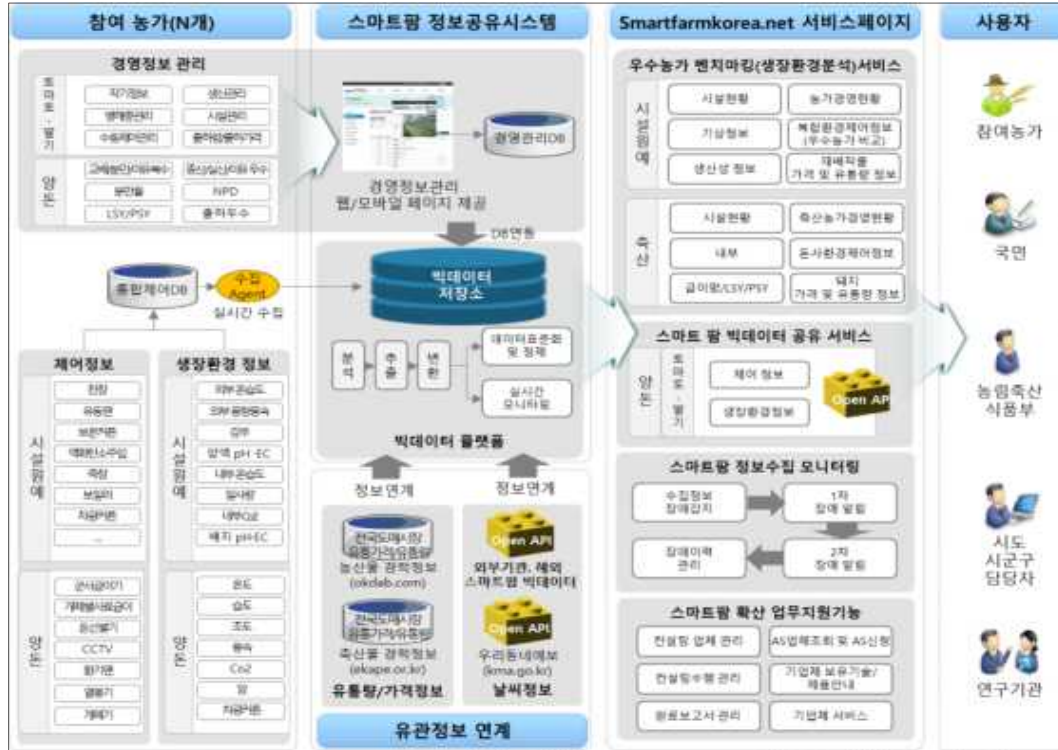
스마트팜의 현장 확산을 보면, 스마트팜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농가에 대해 설치 단계별로 3단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도입 전 단계에서는 농가시설에 적합한 ICT 융복합 시설을 추천하고, 도입 단계에서는 농장에 최적화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도입 후에는 장비 고장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장실습형 교육장(30개소)의 지정을 통한, 스마트팜 농가 대상 현장 중심의 실습이론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스마트팜 현장 활용성과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팜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119(통합콜센터, 1522-2911)와 현장지원센터(12개소, 지자체 농업기술원 연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밴드(스마트팜 불만제로) 등 A/S 지원체계를 다양화하여 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팜 우수사례 발굴, 사업설명회 개최, 농업관련 박람회 참가를 통해 스마트팜 정책 및 성과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스마트팜 수요를 촉진하고 첨단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팜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팜 도입 우수농가와 환경제어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생육환경을 찾도록 하는 분석서비스와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스마트팜 제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농가의 생육환경정보를 오픈API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정보공유기관은 농진청, 서울대, KT, SKT, 경기/충남/전북 농업기술원 등 총 78개, 제공정보는 243개 농가에 66개 항목, 8억 1천만 건에 이른다.

그림 3-1 스마트 팜 2.0 서비스 개념도



* 출처: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팜 2.0 추진계획, 2018

2) 팜 맵 기반 통계·행정자료 연계를 통한 스마트농정 통계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고해상도 위성·항공영상, GIS(지리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국 농경지의 면적 및 속성정보(논, 밭, 과수 등)를 제공하는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을 구축하고 있다. 필지별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직불제, 친환경인증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현장을 반영한 스마트농정 추진기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2 농경지 전자지도 팜맵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스마트농정 통계체계 구축 기본계획,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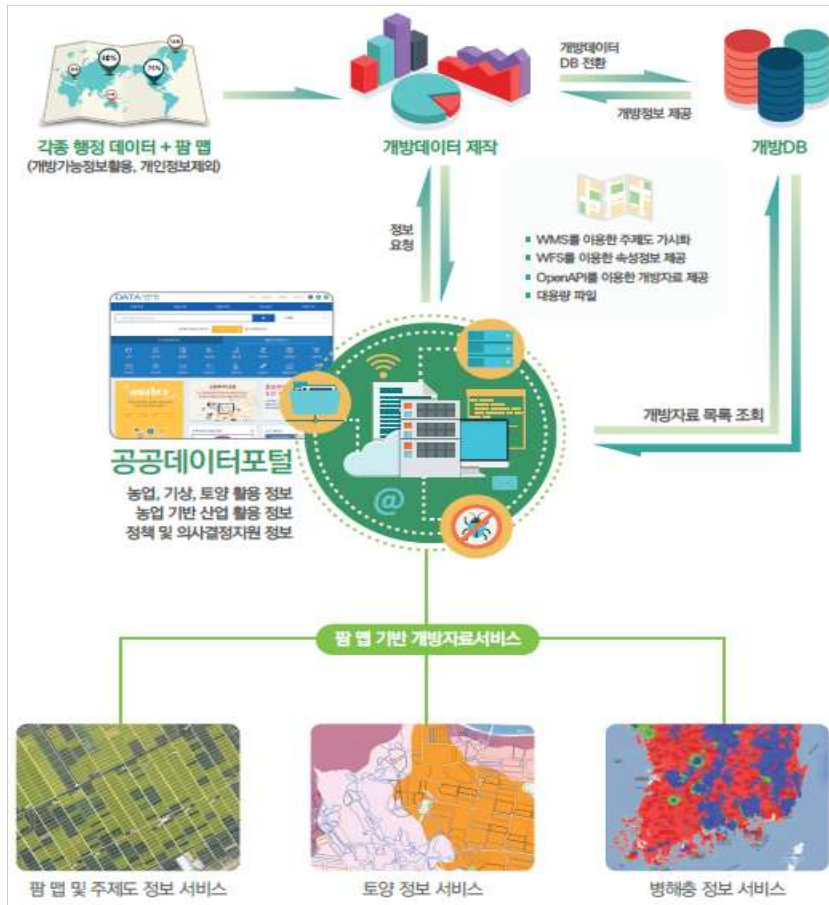
팜맵은 현장검증, 공공측량, 감리뿐만 아니라 상시 자체검증 등 6단계 검수 체계를 운영하여 팜맵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환경부, 통계청,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팜맵을 제공·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팜맵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 스마트 국토엑스포(국토교통부 주최)에 참가하여 전시부스를 운영하면서 팜맵 활용모델 홍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친환경 인증 정보 등 수요에 맞춰 활용모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관별 각종 행정·통계 자료와 팜맵을 연계하고 다양한 주제별 전자지도를 제공하여 농업인과 농정업무 담당자의 정책적 의사결정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팜맵은 2013년에 각 도별 한 면에 시범구축을 추진하고 2014년부터 3년간 3개도 권역으로 전국 구축을 완료하고, 2017년부터 당해 입수 가능한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2년 주기로 전국 팜맵을 현행화하고 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정보, 통계청 경지면적조사, 국토부 국토변화정보를 분석하여 변화율이 높은 일부 시군을 선정하여 위성영상 및 지자체영상을 참고하여 팜맵을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한 팜맵을 활용하여 직불금 등 보조금 현장점검 대상농가의 선정방식을 과학화(행정정보만을 활용한 추출에서 공간분석기반 표본 추출체계로 전환)하고, 농업정책의 기반인 연속지적도의 장점을 융합한 팜맵 2.0을 구축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보조금이 집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그림 3-3 2018~2019년 팜맵 기반농업활동 지원정보 개방



출처 :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농정 통계체계 구축사업 완료보고서, 2018

2018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농사에 필요한 농업활동 지원정보(팜맵, 팜맵 기반의 토양·농업기상·병해충 정보) 개방을 행정안전부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2019년에 5월부터 전면 개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로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농정 구현

농림축산식품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농식품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DB(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양질의 농업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을 통합하고 재배품목, 농지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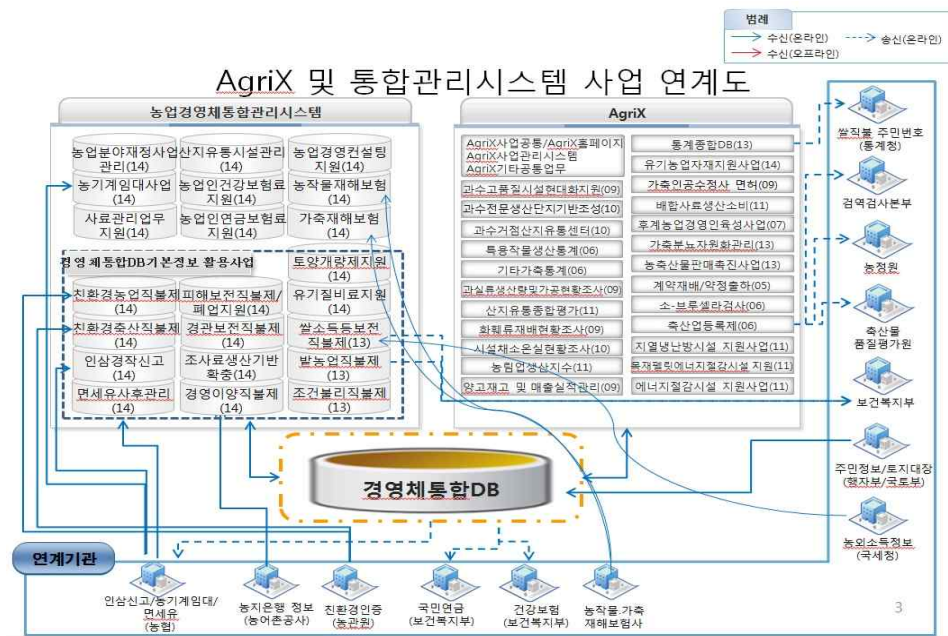
사육규모, 보조사업 신청 현황 등 56개 항목을 관리하는 등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농업보조금 지급 및 관리를 효율화 하는 등 지속적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초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농지별, 재배품목별 등 다양한 농업경영정보와 읍면동 단위의 농업 현황을 바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를 구축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시군 또는 읍면동 단위의 세부적 농업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지역중심의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체별 보조금 수혜이력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유기질비료 지원 등 개별 농가의 보조금 수급 내역 등의 정보가 담긴 115개 농식품 사업도 경영체 DB와 연계하였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보조금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의 중복, 편중지원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업경영체 통합DB(데이터베이스)를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차에서 추진하는 농업보조사업 관리 및 지역 중심 농업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농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3-4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연계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은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이행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체 농림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농식품 분야 보조·융자사업을 통합·연계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획득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업경영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과거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당수령, 직불사업간 중복 수령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던 일부 직불금의 수급 현황을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고 중복수급 등 부당 보조금 수령을 원천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다. 또한 쌀, 밭, 조건불리 등 각종 직불금 신청도 통합됨에 따라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성도 제고되고 있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조금의 정상화 및 효율적인 정책자금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경영체DB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보조사업 관리지원, 지역 농업정보 확인 등 지방농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ICT를 통해 자동 취득된 생육·환경정보를 기계가 스스로 학습·분석하여 최적화하는 인공지능(AI)형 제어 스마트 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확산을 유도해 나가는 등 농업인의 스마트 팜 활용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결정지원 및 농업인에게 시의성 있는 영농정보 제공을 위해 스마트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농경지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 발굴, 정보의 융·복합 개방 및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공공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연속지적도, 항공영상,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정보를 연계·구축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정보 기반의 농지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기관별 정보화 계획과 정보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객관적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4차 산업을 기반으로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고,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3 산림지능정보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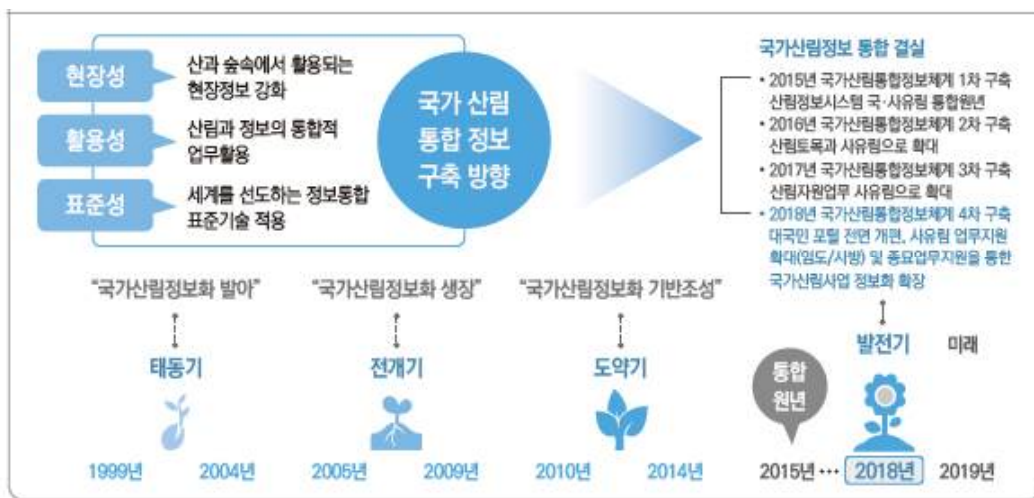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조경금

시행배경

산림청은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를 대응하기 위한 국가온실가스통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가산림통합정보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국유림 정보화체계를 기반으로 공·사유림에 대한 종자·묘목,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연차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 복구를 위해 최신 ICT를 활용한 산림재해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산림재해의 대국민 현장 대응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활성화 및 창업 지원을 위해서 등산로 및 산 정보 뿐만 아니라 숲길정보(둘레길), 식물이미지DB, 산악기상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5 국가산림정보화 추진 현황



자료 : 산림청, 2018년

시행내용 및 성과

1) 국가산림통합정보체계 구축

산림청은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 주체인 국가산림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국가산림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GIS를 기반으로 한 경영계획, 종자·묘목, 조림, 숲가꾸기, 벌채, 매각, 소득 등의 국유림 경영업무체계(2010~2017)와 임도, 사방의 산림토목 업무체계(2015~2017)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다. 2018년부터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모든 업무를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유림의 정보화 체계를 기반으로 공·사유림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종자·묘목, 조림, 숲가꾸기 업무를 지원하는 사유림업무지원포털 서비스(2017~2018)를 구축하였다. 잦은 인사이동과 수기방식의 업무처리로 인해 관리가 되지 않던 사업이력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영구적으로 관리하고 업무 부담이 많던 산주동의 및 사업실적 보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유림 업무지원포털 서비스는 2022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현장업무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를 줄이기 위해 모바일 기반의 전자야장을 구축해 왔으며 기존 종이야장에 특수마킹을 입혀 수기로 작성된 내용을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스마트 펜을 도입하여 보다 쉽고 신속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 밖에 산림사업용역관리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산림사업의 실시설계, 시공 및 감리 용역 관련 정보와 성과품을 축적하고 기존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전환하여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방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 발생 비용을 절감했다.

표 3-53 국가산림통합정보체계 구성도



자료 : 산림청, 2018년

2)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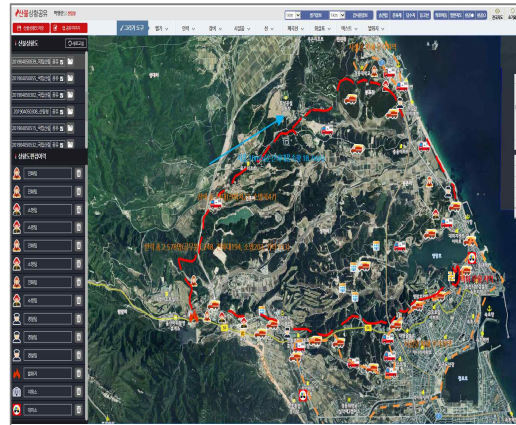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여 2017년까지 4년 동안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주요 기능으로 산불상황관계, 산사태정보, 산림병해충정보시스템 등 주요 산림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구축 후 매년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주요 추진 내용으로 산불 부문의 경우 산불상황관계 시간대별 조치사항 및 진화 장비관리 등의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개편된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전국 산불발생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특히 산불상황도 그리기 기능으로 강원도 고성·속초·인제, 강릉·동해 산불(2019. 4.) 등 대형 산불 발생 시 유관기관과 진화자원의 배치 등을 공유하는 정보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 간 산불 진화 시 신속한 협업지원체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3-6 산림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산림청 홈페이지 산불발생 정보 >



< 산불상황도 >

자료 : 산림청, 2018년

또한 최신 항공사진 및 최신 임상도 등 산림공간 DB 20종을 최신화 하였으며, 현장업무 활성화 및 산림재해 응용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산사태조심기간 동안 운영인력의 분청, 상황실 상주를 통해 운영지원 및 즉각적인 장애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산사태 업무의 경우 산사태 모의훈련기간(4월)동안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안전성 있는 시스템으로 훈련을 지원 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업무의 경우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및 훈증더미 좌표정보를 일괄 등록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등 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자정부 지원 사업 중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점검 결과 S등급을 받는 등 운영성과를 내고 있다.

3) 산림공공데이터 이용 확대 및 공간정보서비스(FGIS) 강화

산림청은 산림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에 따라 2018년 말까지 총 60종의 산림공공 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국가안전보장·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에 대해서 전면 개방계획을 2019년도에 수립할 예정이다.

표 3-54 산림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누적	31종	39종	44종	52종	60종
연도별	21종	8종	5종	8종	8종
공공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 - 산림교육프로그램 - 임상도(1:25,000) - 맞춤형조림지도(1:25,000) - 임도양도 - 경제림육성단지구역도(1:25,000) - 백두대간보호지역도(1:25000) - 명산등산로(1:25,000) - 전통마을순위지도(1:25,000) - 산불발생위지도(1:25,000) - 유양림고사구역도(1:25000) - 산림사업법안정보 - 산림과학연구정보 - 임산물DB백과 - 목재제품DB백과 - 숲 서비스/동레길정보 및 산정보 - 산림공간정보 - 균류자원 서비스 - 곤충자원 서비스 - 국가표준식물목록 서비스 - 식물자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곤충목록 서비스 - 산악기상정보 - 약용식물정보 - 생산수입판매 신고 - 품종보호출원 - 산림사업용모목가격 - 기증자료서비스 - 해외조림수종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발생동계 - 단기임산물재배적지도 - 산촌생태마을 - 산림삼생산산고통계 - 산림치유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임산물도매시장 가격 - 자연휴양림회원 및 약자DB(12월개방예정) - 산림생태플렉스정보 - 버섯유전자분석정보 - 목조주택정보 - 생명자원분양자료 - 산림청장도 - 산림탄소등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나무지원정보 - 산림병해충도감 - 주요 수종 목재도감 - 한국임목종사도감 - 고정수확지 임목생장 자료 - 연구 사진 - 수종별 채종원 면적 - 목재제품 품질인증 현황

자료 : 산림청,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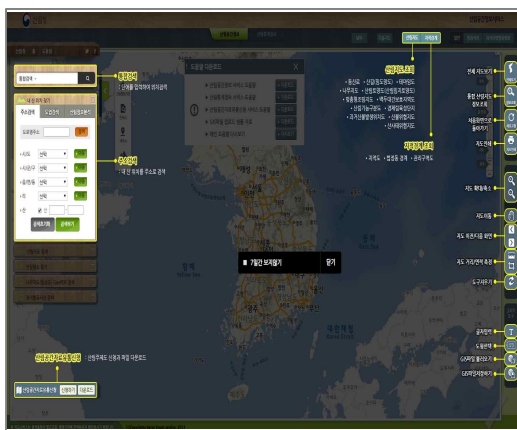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활성화 및 창업 지원을 위해서 매년 ‘산림공공데이터 활용 경진 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등산로 및 산 정보 뿐만 아니라 숲길정보(둘레길), 식물이미지 DB, 산악기상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산림과학 연구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과 「국가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 개방·품질 사업을 통해 DB 구축 및 데이터 품질관리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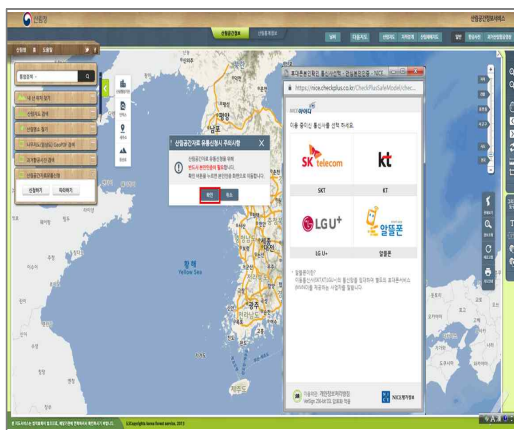
산림청은 산림분야 대표 주제도인 임상도 및 산림입지도양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였다. 임상도는 전국 산림의 인위적 변화지역과 대구·경북·충북 일부 등 자연적 변화지 1,276천 ha를 현행화하였다. 산림입지도양도는 경북(북서1/4) 및 충북(북쪽) 일부지역 산림 528천 ha에 대한 산림입지도양 조사 및 1:5,000 축척 수치지도 1,215도엽 구축하였다.

산림공간정보 이용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서 산림공간서비스(FGIS)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였다. 사용자가 접근한 첫 화면에서 각 화면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는 안내창을 표출하고, 사용자 인증 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원패스 기능을 연계 적용함으로써 동일 세션에서 재인증 없이 임상도 등 공간정보 무료신청서비스를 이용할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8년 임상도 등 산림공간정보 무료 다운로드 건수는 2,461,018건으로 전년 1,972,194건 대비 24.8% 확대되었다.

그림 3-7 산림공간정보 관리자서비스 운영체계



< 사용자 안내 정보서비스 강화 >



< 디지털 원패스 기능 적용 >

자료 : 산림청, 2018년

향후계획


산림청은 기존 국유림의 산림통합정보시스템을 사유림으로 확대하여 국·공·사유림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 정보화를 완성함으로써, 2020년 신기후체제를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산림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재해분야는 향후 기상빅데이터, AI 등을 산불부문에 적용해 대형 산불의 예측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무인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한 땅 밀림 등 변위특성 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산사태 예보 정보를 고도화 할 예정이다. 그리고, 드론, 위성영상 등을 활용한 병해충 감염목 자동 탐지 시스템, 산림병해충 생태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림병해충 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을 산림재해분야에 적용 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등 관련 활동을 통해 데이터 개방의 양적 확충 위주에서 벗어나 품질 고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제공 중인 등산로 및 산 정보, 숲길정보 (둘레길), 식물이미지 DB, 산악기상정보, 산림과학지식정보 뿐만아니라 산림휴양·복지, 산림 일자리 등 국가산림 전 분야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 해 누구나 손쉽게 산림 데이터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림공간정보 분야는 구축 활용체계 강화를 통해 맞춤형 조립지도, 산불·산사태 위험지도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하여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부터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사업(제4호 농림위성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 산림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착실히 준비할 예정이다.

4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서기관 송준석

시행계획

정부는 1994년부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4818호)을 통해 수산과학기술에 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어업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부터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과 수산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산 실용화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수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을 위한 전주기 R&D 지원사업인 수산연구센터지원사업을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였다.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은 2018년도에 6개의 분야로 나누어 192억원 규모의 연구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였다. 첫째, 신수산비즈니스 동력창출 분야로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고부가 가치 중심의 신제품 및 양식기술 개발을 위하여 8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둘째, 수산생물 실용화기술개발 분야로 수산생물 유래 기능성 신소재개발을 위해 14억원을 지원하였다. 셋째, 수산기자재 고도화 분야로 에너지 절약형 어선 설비 및 어구어법 개발 등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26억원을 지원하였다. 넷째, 수산질병 제어기술 분야로 수산물 질병 진단, 질병제어기술 개발에 18억원을 지원하였다. 다섯째,

수산기술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수산연구센터지원 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하였다. 여섯째, FTA피해 최소화분야에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내수면 및 연안어업 경쟁력 강화기술 개발 지원에 24억을 지원하였다.

또한,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2014~2020)’에 따라 실행전략을 이행하여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체감할 수 있는 R&D 성과창출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 및 관리기술과 친환경 고부가 양식을 위한 첨단양식 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수산물 안전 확보 및 수산물 가공 및 유통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표 3-55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유형

구분	기획과제(지정공모형)	일반과제(자유응모형)
내용	수산분야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기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등을 장관이 지정하여 공모하는 과제	수산업 관련 원천기술, 부가가치 향상 기술, 성과 이어달리기형 후속사업화 기술 및 산업화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가 자유로이 발굴하여 제안하도록 공모하는 과제

시행내용 및 성과

1) 연구과제 관리현황

해양수산부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관리 효율성 및 R&D 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 R&D사업 성과분석 추진 계획’을 시행 하였다.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은 ’9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638개 과제 2,001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계속추진과제 48개, 신규선정과제 7개에 총 231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3-56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과제관리 현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관리, '13.12. 이관)

(단위: 개, 억원)

구분	연도	1994~2017		2018		
		과제수	금액	계속과제	신규과제	금액
합계		1,693	2,232	28	9	192
수산특정 ('94~)		1,534	2,068	28	9	192
중소벤처 ('00~'10)		159	164	-	-	-

2) 완료과제의 성과현황

2018년까지 수산실용화기술개발을 통해 연구개발이 완료된 과제는 1,693개 과제이며, 국내특허출원이 634건, 국내특허등록 423건, 국외특허출원이 44건, 국외특허등록이 11건이다. 일반논문 게재실적은 1,516편이며, SCI급 논문실적은 664편이다. 또한, 기술이전 성과는 2018년까지 총 157건의 실적을 창출하였다.

표 3-57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성과현황 (2018년까지)


(단위 : 건/편)

국내특허출원	국외특허출원	국내특허등록	국외특허등록	일반논문	SCI 논문	기술이전
634	44	423	11	1,516	664	157

향후계획

수산실용화 사업이 2018년에 일몰 결정됨에 따라 후속 사업 발굴을 추진하였다. 후속 사업은 과학적인 수산자원 조성·관리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어업체계 구축, 미래유망 품목의 양식산업 첨단화, 스마트 유통·물류체계 구축 및 수산식품 산업화 등의 세부 분야를 대상으로 ‘목적형 중장기 프로젝트’ 형태로 발굴하여 사업화하고 특히, 4차산업혁명기술과 수산전문지식을 융합한 수산전문인력양성사업 착수를 위한 경제기획사업을 추진하여 3개 분야 연구기관을 확정하였고, 현장의 애로사항은 자유공모형 기술개발 사업을 반영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5 수산 정보화 촉진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사무관 손낙중

시행배경

해양수산부는 “바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바다를 국민의 행복 공간으로 만든다” 라는 비전 하에 해양수산부 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수산정책 지원체계 확립, 통합공동활용 기반 마련, 현장 접목의 ICT 발굴 등 효율적·체계적인 수산행정과 수산업

현장 지원을 위하여 수산분야 정보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해온 수산 업무별 정보시스템의 비표준, 통합관리·활용, 데이터 관리·운영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수산업 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와의 융합기술 개발 보급 등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13개 개별시스템 통합 활용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3개년 「맞춤형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장 등 수산업 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ICT와의 융합기술의 개발 보급을 추진 하는 등 정보화를 통한 수산분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맞춤형 수산정보 통합서비스 구축

그간 구축 후 최대 13년 이상 운영 해온 수산업무 개별시스템을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통합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015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하고 「맞춤형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3개년('16년~'18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차로 구축한 통합시스템은 '17년부터 정상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선정보, 어업권정보, EEZ, TAC, 어업경영체 등록 등 개별 분산 운영 하던 13개 개별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함으로써 신속한 최신 ICT환경 변화 반영, 운영유지 개선, 통합 활용서비스 등 내부 수산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해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수산업무 관련 공동활용을 통해 업무처리 개선 및 대국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어업인 등 어업경영체 7만 여건의 등록 관리를 통해 수산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정책자금 중복예방 등 지원 사업 관련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맞춤형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개념도]



2) 개방수산정보의 연계·활용 및 ICT융복합 모델 발굴·보급

국가보유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을 위해 국가 중점개방데이터 우선개방 대상인 수산정보 데이터에 대한 개방사업을 추진하여 매일 수협 산지조합에서 위판 되는 수산물 위판 가격, 위판량 등 수협의 위판정보, 수산물가공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개방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를 통해 오픈API 및 다운로드 서비스로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산업 관련 종사자와 수산물을 애용하는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수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양식장 등 수산업 현장에 수질센서 등과 ICT를 접목한 융합기술 표준모델(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어업인 등에게 보급하기 위한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을 ‘1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해 ‘18년까지 지자체 수산업 현장에 19개 사업(과제)을 통해 u-IT융합 표준모델을 114개소에 개발 보급하였다. 특히, ‘14년부터 추진한 통영시 “ICT기반 스마트 어장관리시스템 구축(보급)” 사업은 양식장의 수온, 용존산소량, CCTV영상 등을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보급형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여 총 82개소와 주변 지자체에 보급하여 양식장 경영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구축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하고 있다.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 개념도]



향후계획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분산 운영하던 수산분야 개별 정보시스템을 분석 재정립하고 통합 연계활용 강화를 위해 3개년 구축계획에 따라 2016년(1차)부터 맞춤형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을 추진하여 2017년 12월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2차 구축사업에 이어 2019년 3차 구축사업까지 완료하여 개방형 통합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019년 3차 구축에서는 양식장(해상)면허정보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어장정보 관리체계 구축, 수산분야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 확산 구축, 수산물품질관리사 관리체계 구축 등 수산정보통합서비스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추진한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 분석(사업관리방식, 참여율, 활용성과 등)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측정,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등, 동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다양한 수산업 현장에 표준모델(기술)을 확산 보급하여 수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및 효율적 수입관리

1

농식품 수출 확대

 수출진흥과 사무관 노승호

시행배경

농식품 수출은 FTA 확대 등 개방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있어서 HACCP, ISO, GAP 등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농식품 수출은 국내 농식품의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즉, 수출은 고품질 안전 농식품 생산을 유도하고, 수입 농식품과의 경쟁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내로 유통될 물량을 해외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수출로 인해 국내 유통 물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수출로 인한 농가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농식품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산출해 본 결과, 신선농산물 분야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건설 분야에 비해 2.4배, 정밀기기 분야에 비해 2.7배 높으며, 신선농산물과 식재료 분야는 취업유발효과는 정밀기기 분야에 비해 각각 3.6배,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4). 이에 따라 농식품 수출은 국가전체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증대시켜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며, 농가 소득증대 및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 밖에도 식문화 전파를 통한 국가위상 및 품격 제고, 농어업의 자신감 회복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추진내용 및 성과

중국 수출 회복, 베트남 닭고기 수출 재개 및 인삼류, 과채류(파프리카, 딸기, 포도) 등 신선 농산물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6,925.7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부류별 수출동향을 보면, 신선식품은 2017년 대비 16.5% 증가한 12.8억불, 가공식품은 1.4% 감소한 56.5 11억불을 기록하였다. 연간 1억불 이상 수출 품목은 8개이며, 특히 라면(4.1억불)·음료(4.2억불) 수출액은 첫 4억불 초과를 기록하였다.

그림 3-8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 농식품 수출액 : ('80) 11.7억달러 ...> ('00) 15.1 → ('05) 22.2 → ('10) 40.8 → ('18) 69.3

표 3-58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농림축산)

(단위: 백만\$,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A)	2018(B)	증감률 (B/A)
농식품 합계	5,383.5	5,644.8	5,724.6	6,182.7	6,104.0	6,465.0	6,826.5	6,925.7	1.5
○ 신선농식품	1,049.1	1,111.5	1,210.3	1,153.7	1,035.9	1,109.4	1,095.3	1,276.0	16.5
○ 가공식품	4,334.4	4,533.3	4,514.3	5,029.0	5,068.1	5,355.6	5,731.2	5,649.7	△1.4

1) 해외시장 수출확대 추진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전년에 이어 ASEAN(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 일본(0.8%), 미국(7.6%)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 수출 회복 및 아세안 신선식품 수출 강세로 전년 대비 큰폭 상승(중국 12.6%, 베트남 19.4%) 하며 전체 농식품 수출을 주도하였다. 한편, EU(△8.3%) 수출은 주요 수출품목인 식품첨가물 수출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전년 대비 국가별 시장 점유율은 중국(16.1%) 및 미국(11.5%) 각각 (중국 1.6%p, 미국 0.6%p) 증가하였으며, 특히 아세안 주요 시장인 베트남(6.3%) 점유율은 전년대비 0.8%p 상승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최대 수출국인 일본(19.1%)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0.15%p) 하였으며, OIC(9.5%)는 중동 담뱃세 인상 등 이슈에 따라 켈런 수출 대폭 감소로 전년 대비 5.2%p 하락하였다.

표 3-59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백만\$,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대만	ASEAN	EU	OIC
'18년 수출액(백만달러)	1,323.8	1,110.9	802.0	371.4	312.1	1,306.7	414.1	813.3
국가별 비중(%)	(19.1)	(16.0)	(11.5)	(5.3)	(4.5)	(18.9)	(6.3)	(9.5)
전년대비 증가율(%)	0.8	12.6	7.6	9.2	△4.2	8.0	△12.6	△15.4

* 1억달러 이상 수출국(14개국) : 일본, 중국, 미국, UAE, 베트남, 홍콩,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 러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 해외 신시장 개척 추진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시장 개척이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현지 소비자 선호에 맞는 제품 개발부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한 신규 바이어 발굴, 식품 박람회 참가, 해외 마켓 테스트 등 수출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도 일·중·미 3개국에 편중된 수출현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시장다변화 선도기업 100개사를 선정·육성하고 다변화 전략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으며 적합제품 개발부터 현지 유통매장 입점까지 시장개척 전반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의 동남아 및 신흥시장에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할랄·코셔 등 특수 시장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한류를 활용한 한국농식품 홍보마케팅 추진을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 및 한국농식품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아세안 시장의 전체 수출규모 대비 차지 비중은 18.9%, 러시아는 2.7%로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신흥시장으로의 한국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였다.

향후계획

현재 한국 농식품 수출은 일본, 중국, 미국 등 기존시장에서 신규시장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수출 주력시장은 한국과 식문화가 유사하고 근거리에 있는 일본, 중국(동부연안), 미국(교포중심 시장) 등 3개국으로, 전체 수출액의 44.5%(’18)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품목의 경우 3개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동 등의 위기에 취약하고, 이들 시장에서 우리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발생, 저가 수출로 인한 품질저하, 현지 업체와의 가격경쟁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2019년에는 지속적인 신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다변화와 일자리 창출, 민·관 협력을 통한 수출 유통망 확대, 한류스타 및 현지 축제 등을 활용한 수출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시장다변화 선도업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농식품 청년해외 개척단 100명을 운영하여 업체의 신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식품업계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신규시장 개척과 변화하는 유통생태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협회, 도매법인 등 다양한 민간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남방·신북방지역 등 신흥시장에 대한 시장개척을 적극 추진하고 Kmall24, 알리바바몰 등 역직구, 모바일 플랫폼과 연계하여 중소 식품기업 제품의 입점·홍보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드사태가 對중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형 유통망 위주의 유통 경로를 온라인·모바일·식자재 시장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비중국 수출업체에게 중국 시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정책융자금 금리도 인하하여 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기대응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수출시장내 비관세관련 전문자문기관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수출기업들의 위생·검역, 라벨링, 상표권 등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 해소에 힘쓰고 One-Stop 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수출초보기업에 대해서 수출준비부터 시험수출까지 수출 전과정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한국 농식품 전반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 수출과 국내 농업연계를 강화하고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으로 농식품 수출의 질적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과채류 등 신선농산물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품에서 국산원료 사용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등 수출과 농가 소득 및 국내 농업발전과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품목별 수출통합조직을 지속 확대하여 수출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출통합조직을 통해 수출업체간 과당경쟁이나 저가수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출 농산물에 대한 품질 및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하는 등 민간의 수출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수출업체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정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바이어 알선 및 상담매칭 통합서비스(BMS) 기능을 강화하여 바이어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수출지원 사업이 보다 효율화·체계화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2

농림부문 수입관리 대책

가.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농업통상과 사무관 정명희

 시행배경

UR 농업협상 결과, 그동안 수입을 제한해왔던 품목을 관세화방식으로 개방하면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인 TRQ(Tariff Rate Quota) 방식을 통해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TRQ제도는 수출국에게는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하고 수입국에게는 관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 혼란, 농업인 소득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쌀, 보리, 고추 등 주요 농축산물 67개 품목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였고, 현재는 63개 품목에 대해 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수입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 수입관리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었다.

표 3-60 관세율할당(TRQ) 운용 품목(63개)

구분	최소시장접근(MMA)	현행시장접근(CMA)
해당 품목	종유(5), 종돈(1), 전지분유(3), 연유(4), 조란(1), 천연꿀(1), 골분(1), 잠종(1), 사과나무등종묘(4), 뽕나무(1), 종자용감자(1), 감자(종자용 이외)(1), 양파(2), 마늘(4), 고추(5), 고구마(3), 밤(2), 잣(2), 오렌지(1), 감귤류(4), 대추(2), 녹차(2), 생강(6), 보리(11), 미곡(16), 조(1), 인삼(22), 사료용근채류(3), 참기름과그분획물(1), 에틸알콜(1), 참깨유박(1), 기타배합사료(1), 보조사료(4)	종계(2), 탈지분유(4), 유장(14), 버터(2), 녹두·팥(4), 매니옥(4), 매니옥펠리트(1), 기타서류(4), 호밀(1), 맥주맥(2), 귀리(1), 종자용옥수수(2), 옥수수(8), 수수(1), 메밀(5), 기타가공곡물(11), 감자분(2), 맥아(2), 밀전분등(3), 변성전분등(11), 매니옥전분(2), 고구마전분(1), 대두(6), 낙화생(5), 참깨(1), 유당(2), 인조꿀(1), 옥분(1), 누에고치(1), 생사(4)
개수	33개(세번 118개)	30개(세번 108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시행내용 및 성과

우리나라는 63개 TRQ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외 가격 차로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의 농업분야 재투자,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유통질서의 문란 방지, 농가소득 안정, 품목별 특성 및 WTO 협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관배정(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혼합방식으로 수입관리를 하고 있다.

지정기관배정방식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국영무역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대상품목은 쌀, 참깨 등이며, 수입권 공매방식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대상품목은 국내외 가격차가 커 수입차익 발생이 예상되는 인삼, 밤 등이며, 실수요자 배정방식은 수입추천 대행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착순으로 배정하거나 과거 수입실적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업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상품목은 최소비용으로 수입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료용 식물, 옥수수 등이다. 또한, 혼합방식은 위에 열거한 방식들을 혼합하여 배정하는 방식으로 주요품목으로는 고추, 마늘, 양파, 대두 등이며 대부분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영무역에서 발생하는 판매이익금과 수입권 공매에서 발생하는 공매납입금은 농안기금 등에 적립하여 농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농업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61 2018년 수입관리방식별 품목내역

수입관리방식		MMA	CMA
국영무역(1)		쌀(1)	
수입권공매(2)		인삼, 밤(2)	
실수요자 배정 (51)	실적기준 등 (16)	종돈, 보리, 녹차, 에틸알콜, 보조사료 (5)	종계, 매니옥, 맥주맥, 옥수수, 기타가공곡물, 맥아, 감자분, 밀전분, 감자변성전분, 매니옥전분, 고구마전분(11)
	선착순(32)	종우, 전지분유, 연유, 조란, 골분, 잡종, 묘목류, 뽕나무, 감자(종자용), 고구마, 잣, 오렌지, 감귤류, 대추, 조(종자용), 사료용근채류, 참깨유박, 기타배합사료,(18)	탈지분유, 유장, 매니옥펠릿, 기타서류, 호밀(종자용), 귀리(종자용), 옥수수(종자용), 수수(종자용), 유당, 인조꿀, 옥·골분, 누에고치, 생사, 버터(14)
혼합 방식 (12)	국영무역+수입권공매 (2)	-	메밀·기타곡물, 참깨(2)
	국영무역+실수요자배정 (1)		대두(1)
	국영무역+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5)	양파, 마늘, 고추, 감자(종자용이외),(4)	녹두·팥(1)
	수입권공매+실수요자배정 (4)	천연꿀, 참기름과그분획물, 생강(3)	낙화생(1),
계		33	30

향후계획

우리나라의 수입관리 제도는 시장접근물량 수입으로 인한 생산자피해 최소화 및 수입이익금의 농업투자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냉동고추, 냉동마늘 등 일부 품목의 유사대체 품목이 이미 낮은 세율로 개방되어 수입관리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DDA협상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한 시장접근물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특별긴급관세 제도 등을 통해 농축산물의 개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한 수입관리

시행배경

우리나라는 원활한 물자수급과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하여 부과하는 할당관세,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부터 국내 관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여 부과하는 조정관세,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TE)로 양허한 농축산물의 수입증가 및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방지를 위해 WTO에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 등 무역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증감 조정하는 탄력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는 사료가격 안정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료품목,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용 원자재, 물가안정을 위한 가공용 원료에 대해 운용해오고 있다.

2018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총 23개 품목으로 사료용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 19개 품목, 요소, 농약원제 등 농업용 원자재 등 2개 품목, 매니옥칩(가공용), 설탕 등 가공용 원료 2개 품목이다.

2018년 할당관세는 사료용 원료는 사료가격 안정 및 원활한 공급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을 유지하였고, 농업 원자재는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유지 및 세율을 인하하였고, 가공용 원료는 국내 생산이 부족한 가공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유지하여 국내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표 3-62 2018년 할당관세 운용 현황

(단위: 품목수)

구 분	계	사료원료	농업원자재	가공원료 등
2017년	23	19	2	2
2018년	23	19	2	2
증감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아울러,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여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상,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2018년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고추장, 당면, 찹쌀, 혼합조미료로 4개 품목이며, 관세율은 고추장 32%, 당면 26%, 찹쌀 50%, 혼합조미료 45%를 적용하였다.

또한, UR 협정에서 관세상당치(TE : Tariff Equivalent)로 개방된 품목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WTO에서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긴급관세 부과가 가능한 품목은 총 162개(2014 HSK 10단위 기준)이며, 매년말 기획재정부령을 개정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 가능 품목 중 다음연도 부과대상품목, 세율, 기준발동 물량 및 가격 등을 결정하며,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녹두, 팥, 메밀, 인삼 등 품목에 대해 특별 긴급관세가 발동되었다.

표 3-63 특별긴급관세(SSG) 품목 및 발동현황

구분	개수	해당 품목
SSG 품목 (2017 HSK 10단위 세번기준)	162개	종우, 종돈, 종계, 종란, 골분, 정맥, 수정란, 과실나무, 감자, 옥수수, 녹두, 팥, 매니옥, 고구마, 보리, 귀리, 수수, 메밀, 조, 밀, 울무, 낙화생, 대두, 종자, 인삼, 사료, 변성전분 등
발동대상 품목 ('18년, 기재부령)	38개	인삼(22), 쌀(16)
실제 발동된 품목('95~'18) ('18년 세번기준)	34개	녹두, 팥, 메밀, 대두, 기타곡물, 기타곡분, 곡분(밀, 귀리), 압착플레이크(귀리, 기타), 가공곡물(울무, 기타), 전분(밀, 고구마, 기타), 대두(2), 낙화생(4), 인삼(10), 육·설육분, 변성전분(2)

향후계획

향후에도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안정과 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를 지속 운용하여 농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농가 보호 및 관련 산업 피해 방지를 위한 관세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할 예정이다.

3 수산물 수출 확대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사무관 배준오

📄 시행배경

한류의 긍정 이미지와 연계하여 한국 수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식문화가 유사한 아시아국가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확대되면서 對 세계 수산물 교역량이 1996년부터 큰 폭으로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수산물 수출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정체 상태에 있는 국내 수산업에 새로운 희망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수출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비관세장벽 강화, 중국 사드 이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브렉시트 이행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수산물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극복하여 전략적으로 주력·유망 수출시장에 대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펼침으로서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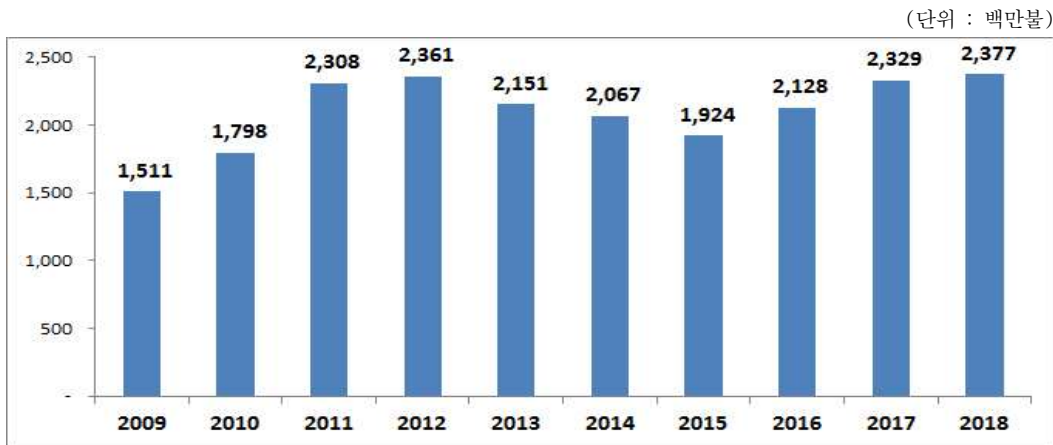
📄 시행내용 및 성과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주요 사업에는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우수수산물 지원이 있으며, 총 1,638억원을 직접 및 용자 형태로 지원하여 수출 확대 방안을 수립·추진하였다.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원료구매 자금 등 운영자금 1,322억원을 120개 업체에 융자하는 한편, 환율변동 등 대외경제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수출 마케팅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정책적 초점을 맞춰 추진하였다. 또한, 어묵 산업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어묵을 수출 주도형 식품산업으로 육성하여 식품시장의 대표적인 한류스타로 만들어가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인 ‘김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이행하는 등 수산업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23.3억 불) 대비 약 2.0% 증가한 역대 최고인 23.8억 불을 달성하였다.

표 3-64 수산물 수출 현황



자료 : 관세청(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무역통계

특히, 수산가공품 수출이 전년대비 4.6%증가한 9.4억불을 기록하여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였고, 수출 효자 품목인 김은 조미김 수출의 급증에 힘입어 전년 대비 2.8% 증가한 5억 3천만 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이와 같은 수출실적 증가는 우리 수산물의 해외 인지도 확대를 위해 국가통합브랜드 ‘K·FISH’를 개발하여 적극 홍보하고, 수출상품의 개발과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수출업체 주도의 전략시장(중국, 할랄 등) 개척을 지원하였으며, 중국·미국 등 29개소에 수산물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지정·운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수출지원센터를 확대(‘17년 7개소→’18년 10개소)하여 수출 초보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지 정보제공 등 시장개척을 지원하였으며, 중국 등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상해·청도·보스톤 등 해외 수산박람회 참가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 결과로 평가된다.

향후계획

수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출지원센터 확대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지속하여 신규 시장 교두보를 마련하고, 활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 수준의 위생시설을 갖춘 수출물류센터 건립 및 생산·가공·수출·물류·R&D 기능이 집적된 수출가공 클러스터의 조성을 추진검토하며, 참치·김을 이은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유망품목별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지원하는 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4 수산부문 수입관리 대책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사무관 김일엽

시행배경

우리나라가 1986년부터 3년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함에 따라 1989년 10월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ATT 국제수지(BOP)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허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정부는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개방을 실시하여 1997년 7월 수산물 수입을 자유화하였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수입자유화로 우리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가 수산물 수입으로 초래되는 시장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체결을 계기로 이중관세제도인 TRQ(Tariff Rate Quota) 방식을 통해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TRQ 제도는 수출국에게는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하고, 수입국에게는 관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 혼란, 어업인 소득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새우류, 갑오징어, 낙지, 바지락 등을 설정하였다.

시행내용 및 성과

조정관세는 1992년부터 3개 품목에 대해 부과를 시작한 이래 연도별로 대상품목 및 관세율을 조정·시행해 왔으며, 2018년 현재 조정관세 부과품목으로 활뱀장어, 활돔, 활농어, 냉동명태, 냉동꽂치, 냉동오징어, 새우젓 등 7개 품목을 지정하여 합리적인 수산물 수입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3-65 최근 5년간 조정관세 현황

품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활뱀장어 0301-92-9090	27% 또는 1,879원/kg	22% 또는 1,531원/kg	22% 또는 1,531원/kg	20%	20%
활 돔 0301-99-4090	28% 또는 2,052원/kg	28% 또는 2,052원/kg	28% 또는 2,052원/kg	28% 또는 2,052원/kg	28% 또는 2,052원/kg
활 농 어 0301-99-9059	28	28	28	28%	28%
활 민 어 0301-99-9095	26 (참조기 부세 제외)	-	-	-	-
냉동명태 0303-67-0000 0303-69-9000	25	22	22	22%	22%
냉동꽂치 0303-59-2000 (학꽂치 포함)	28 (학꽂치 제외)	28 (학꽂치 제외 22cm 초과)	28 (학꽂치 제외 22cm 초과)	28% (학꽂치 제외 22cm 초과)	26% (학꽂치 제외 22cm 초과)
냉동민어 0303-89-9091	40 (참조기 부세 제외)	28 (참조기 부세 제외)	-	-	-
새 우 젓 0306-95-1030 0306-95-9030	35% 또는 236원/kg	35% 또는 236원/kg	35% 또는 236원/kg	32%	32%
냉동오징어 0307-43-2010 0307-43-2090	22 (연육 제외)	22 (연육 제외)	22 (연육 제외)	22% (연육 제외)	22% (연육 제외)

자료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2018.12.31 현재 한-EFTA, 한-EU, 한-미, 한-아세안,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등 7개 FTA 체결에 따라 새우, 낙지, 바지락 등 25개 품목 86,515톤에 대해 관세율할당(TRQ : Tariff Rate Quota)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물량 중 아세안,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으로부터 수입되는 70,951톤은 수입권 공매 절차를 통하여 공매납입금 543억원('18년)을 징수 후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납입하여 수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수산무역협회와 협력하여 TRQ 품목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관리·운영함으로써 교역당사국간 안정적인 수산물 통상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표 3-66 자유무역협정(FTA)별 관세율할당(TRQ) 운영현황

FTA	품목	TRQ 운영방식	관세	수입 쿼타 물량(톤)	
				최초 발효년도	2018년도
총 계					86,515
한-EFTA (*06.9.1일 발효)	냉동고등어	지정기관배정	10%	500	500
한-아세안 FTA (*07.6.1일 발효)	소 계				9,300
	새우, 보리새우(냉동 새우살)	공매방식	20%	5,000	5,000
	새우, 보리새우(활, 신선, 냉장)		20%	300	300
	갑오징어(냉동)		10%	2,000	2,000
새우, 보리새우 (가공)	20%		2,000	2,000	
한-EU FTA (*11.7.1일 발효)	냉동넙치	선착순방식	10%	800 → 1,727(12년차)	1,269
한-미 FTA (*12.3.15일 발효)	소 계				10,476
	냉동넙치	선착순방식	10%	1,530 → 3,303(11년차)	2,428
	냉동명태		30%	4,000 → 12,263(14년차)	6,708
	냉동민어		53%	1,000 → 1,629(11년차)	1,340
한-중 합계					49,738
한-중 FTA (*15.12.20일 발효)	공매 소계				47,380
	낙지(냉동)	공매방식	20%	19,400	19,400
	낙지(산 것, 신선냉장)		20%	6,100	6,100
	미꾸라지(활어)		10%	3,200	3,200
	바지락(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15,800	15,800
	아귀(냉동)	10%	1,900	1,900	
	조미오징어(조제 또는 저장처리)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980	980	
	배분 소계				2,077
	바지락(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배분방식	20%	290	290
	바지락(냉동)		20%	330	330
	복어(활어)		10%	140	140
	아귀(신선 또는 냉장)		20%	17	17
	오징어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		20%	1,300	1,300

FTA	품목	TRQ 운영방식	관세	수입 쿼타 물량(톤)	
				최초 발효년도	2018년도
	선착순 소계				281
	소라(조제 또는 저장처리)(기타)	선착순방식	20%	7	7
	눈다랑어(터너스오베시스/냉동)		10%	270	270
	해파리(조제 또는 저장처리), (기타)		20%	4	4
한-뉴 FTA (15.12.20일 발효)	홍합(자숙)	선착순50%, 공매50%	20%	1,600 → 3,999(16년차)	1,922
한-베 FTA (15.12.20일 발효)	새우(7개코드)	공매방식	20%	10,000 → 15,000(5년차)	13,310

자료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되는 수산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K)를 정비하였고, 수입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조정관세 품목의 운영으로 국제교역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였다. 또한,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및 유관단체 관계자에게 수출입통계를 월별로 제공하는 등 수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수산통계행정 구현을 통한 수산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향후계획


2018년 수산물 수입은 6,125백만달러로 전년 5,268백만달러 대비16.3%(857백만달러)가 증가되었다. 특히, 한·중, 한·뉴, 한·베트남, 한·중미 FTA 체결 등으로 국제 수산물 교역 시장 확대에 따라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수산물 생산자의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국내 소비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체계적인 수입관리 제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조정관세 등 수산물 탄력관세의 지속적인 유지를 통한 국내 생산자 보호수단을 확보해 나가고, FTA 협정별 TRQ 물량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TRQ 수입에 따른 부담금을 국내 어업인 등에 환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입수산물의 국내 유통가격 및 해외 현지 가격조사를 위한 인력 보강 및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고 저가신고 방지를 통한 투명한 과세 정착, 실효성 있는 가격심사로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업환경 보전

1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가.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추진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장래현

시행배경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그간 증산 위주의 농업정책 추진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발생증가 등으로 인해 농경지와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보전과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DDA·FTA 등 개방 확대의 국제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육성법(1997.12)」을 제정하여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제1차('01~'05)·제2차('06~'10)·제3차('11~'15)제4차('16~'20)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유통활성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친환경유기 가공식품산업 육성 및 농업환경자원관리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시행내용 및 성과

제 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라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비전으로 인증제도, 유통·소비, 생산기반, 자재, 환경 5대 분야 21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7년 6월 친환경 인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증업무의 민간 완전 이양 및 민간인증기관 평가·등급제를 도입하여 민간인증체계를 정립하였고,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2017년 12월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비자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사료, 벌꿀의 유기인증제를 도입하여 친환경가공산업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둘째로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종자 공급 등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및 토양유기물 함량을 증대함으로써 토양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2018년도에는 유기질비료 2,756천톤(1,490억원)을 공급하여 토양비옥도를 증진하였으며, 토양개량제 568천톤(554억원)을 공급하여 토양의 산성도 등을 완화하였다.

셋째로,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을 통해 저탄소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소규모의 분산된 생산구조를 집단화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8년에는 친환경농업지구 14개소(누계 1,200)를 신규로 조성 지원(국고 63억원)하였고, '17년부터 '22년까지 생산과 유통·가공을 연계한 친환경농업 지구 100개소를 조성·확충할 계획이다.

넷째로,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8년부터 직불제의 품목을 세분화하고, 품목군에 따라 지급단가를 차등인상하여 친환경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기존에 3년간 지원했던 유기지속직불금은 영구지급하도록 개선되어 무농약인증을 유기인증으로 유도하고 있다. 2018년에는 친환경인증 32,323농가의 29천ha에 대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210억원과 친환경축산물 인증 1,244농가에 대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139억원을 지원하였다.

다섯째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학교급식 확산 등 대량 소비처 확보 및 소비촉진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7년부터는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을 육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안정적 물량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농산물 전용 종합물류센터 조성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소비지인 경기와 생산지인 전남에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개장·운영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 체험, 교육, 홍보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2018년 1개소 신규 조성하였다. 생산자·소비자 단체에 직거래 매취자금 294억원을 지원하고, 공중파 보도·교양 프로그램 방송, 일간지·전문지 기획기사 보도, 핵심소비자 대상 체험행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및 이벤트를 추진하였다.

여섯째로, 친환경농업의 정책 범위를 농업환경 개선까지 확대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해 2018년 실증 연구를 통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다.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토양 양분관리와 침식 방지, 농업용수 수질개선, 농촌경관 개선, 농업유산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한 개인·공동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에는 3개 지역(충남 보령, 전남 함평, 경북 문경)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 3-67 2018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예산 현황

사업명	친환경비료지원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광역단위 친환경산지 유통조직 육성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
	유기질 비료	토양 개량제						
예산액 (억원)	1,490	554	20	9	435	63	20	250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육성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18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 대비 4.9%, 화학비료 사용량 268kg/ha('99~'03 평균 375kg/ha 보다 28% 절감)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3-68 주요 항목별 추진 성과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친환경 면적(ha)	174,107	201,688	194,006	172,672	164,289	141,651	100,046	82,768	79,479	80,114	78,544
유 기	12,033	13,343	15,518	19,311	25,467	21,206	18,306	18,143	19,862	20,673	24,666
무농약	42,938	70,139	94,533	95,253	101,657	98,237	65,061	56,996	59,617	59,441	53,878
저농약	119,136	117,306	83,955	58,108	37,165	22,208	16,679	7,629	-	-	-
친환경 농가(호)	172,553	198,891	183,918	160,628	143,083	126,746	85,165	67,617	61,946	59,423	57,261
유 기	8,460	9,403	10,790	13,376	16,733	13,957	11,633	11,611	12,896	13,379	15,528
무농약	45,089	63,653	83,136	89,765	101,657	89,992	56,756	48,407	49,050	46,044	41,733
저농약	119,004	125,835	89,992	57,487	36,025	22,797	16,766	7,599	-	-	-
친환경 생산량(천톤)	2,188	2,358	2,216	1,852	1,498	1,181	825	577	571	496	451
유 기	115	109	122	123	168	117	96	94	110	113	105
무농약	554	880	1,040	980	842	693	479	366	461	383	346
저농약	1,519	1,369	1,054	749	488	371	250	117	-	-	-
화학비료 사용량(kg/ha)	311	267	233	249	267	262	258	261	268	270	268
농약 사용량(kg/ha)	13.8	12.2	11.2	10.6	9.9	10.9	11.3	9.5	9.3	10.3	11.2

※ 저농약은 2010년부터 신규인증 중단, 2016년 폐지

향후계획

인증제도 개선 및 생산·가공·유통·소비 단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식품 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16~'20)의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친환경인증제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안전성 기준 위반 농가와 부실 인증기관 퇴출 등 인증 관리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 육성을 지원하고, 친환경물류센터를 활성화하여 유통체계를 규모화·조직화하고, 학교·공공 급식 등 대량 수요처를 지속 발굴하면서 온라인(홈쇼핑)·직거래·로컬푸드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소비채널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소비촉진 홍보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여 친환경 가공식품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외식·수출 등 국내외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수요도 창출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22년까지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친환경농업지구를 100개소 조성·확충하여 생산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2017년 실증연구를 토대로 2018년부터 본사업으로 도입·확산할 예정이다.

나.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확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김정수

시행배경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농업환경 개선·보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의 목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중·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유통·가공 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1995년에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 도입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1998년부터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대규모지구조성사업과 소규모지구조성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2004년부터는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농업 대·소규모지구사업을 개편하여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사업방식도 지역 영농기반과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추진을 허용하고 사업비 또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2006년부터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정책추진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는 별도로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광역단지 사업의 효율적 내실화를 위해 광역단지사업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통합하고, 우수 단지·지구에 시설·장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보완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생산·인증·유통과 소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는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 중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는 생산부문에 해당한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목적은 친환경농업의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통해 농약·화학비료의 사용량을 감축하여 농업환경을 개선·보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지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생산자단체(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5호 이상)이며,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장비 및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국고 30%, 지방비 40~50%, 자부담 20~30%)하고 있다.

2017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 539개소를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13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대 및 농업환경 개선·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업성결과 우수한 지구·단지에 시설·장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보완사업을 도입하여 2017년까지 6개소를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지속·확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계획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및 보완사업을 통해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등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농업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보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에는 국비 39억원을 투입하여 17개소의 신규지구 및 보완지구를 추가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김진수

시행배경

친환경농업직불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1999년부터 도입하였다. 인증제도가 정립된 2002년부터는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그간 몇 차례의 제도개선 및 지급단가 인상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를 대상으로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로 무농약인증은 3년간, 유기인증은 5년간 지급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유기지속직불을 도입하여 유기직불금을 5년간 지급받은 이후에도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지급받도록 했으며 2018년부터는 지급기한을 폐지하고 영구히 지급받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소득보전 기능 강화를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도 꾸준히 인상하였다. '99년부터 '02년까지는 524천원/ha로 동일단가였으나 '03년부터 인증단계별로 지급단가를 차등하여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며 '12년 지급단가 추가 인상, '15년 유기지속직불금 신설, 저농약직불금 폐지 등을 거쳐 '18년에는 품목군별 재배난이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급단가를 차등 인상하였다.


직불금 지급규모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0천ha에 대해 매년 57억원,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137천ha에 대해 63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76천ha에 대해 287억원, 2009년에는 90천ha에 대해 345억원, 2010년에는 93천ha에 대해 376억원, 2011년에는 72천ha에 대해 305억원, 2012년에는 49천ha에 대해 294억원, 2013년에는 38천ha에 대해 247억원, 2014년에는 26천ha에 대해 167억원, 2015년에는 26천ha에 대해 212억원, 2016년에는 26천ha에 대해 185억원, 2017년에는 27천ha에 대해 179억원, 2018년에는 29천ha에 대해 227억원을 지원하였다.

향후계획

친환경농업직불은 친환경농업 기술 부족, 생산량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간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유지 및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또한 최근 들어 유기인증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유기지속직불금 지급 등의 정책적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친환경농업직불은 공익형직불의 큰 틀에서 가장 높은 준수 의무를 이행하는 선택형직불의 하나로 유지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라.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이윤식

시행배경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을 위해서 소비촉진 홍보,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 강화,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등 유통 효율화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유통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에 직거래 매취자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급식의 필요성,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미래 소비자 육성 등을 위한 사업 등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친환경 농산물 신뢰도 제고 추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원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인증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2)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사업 추진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여 2006년 8.1억원 신규 조성을 시작으로, 2007년 16.2억원, 2008년 14.1억원, 2009년 20.6억원, 2010년 15억원, 2011년 13.6억원, 2012년 13.7억원, 2013년 14.6억원, 2014년 13.4억원, 2015년 15.7억원, 2016년 10억원, 2017년 22.9억원, 2018년 35.3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 7월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여 각종 대중매체 홍보, 판촉행사,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시장개척, 친환경농산물 관련 축제지원 및 대량소비처 신규 발굴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이외에 국가인증농식품지원 사업을 통하여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및 뉴스 제작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대상 친환경농장 현장체험 및 이론교육, 친환경 가치 홍보를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 기획기사기고 보도, 친환경농업 관련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하였다.

3)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 수매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집중출하 방지로 농가소득 제고와 친환경농업 저변 확대 유도 및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융자)을 1999년을 시작으로 2014년 252억원, 2015년 174억원, 2016년 219억원, 2017년에는 196억원, 2018년에 240억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2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건립된 경기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직거래매취자금(융자)을 지원함으로써, 물류센터에 입주한 친환경법인의 자금운용 부담을 경감하여 물류센터 운영활성화에 기여하였다.

4) 친환경 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추진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은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06~'10년)을 수립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한 소비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친환경 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총사업비 480억원(국비 229, 지방비 251)을 투자하여 경기도 광주시에 부지 69천㎡, 건축연면적 26천㎡(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경기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를 '12년 10월에 건립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산지중심의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수도권 등 대량소비처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호남권(나주시)에 총사업비 278억원(국비 139, 지방비 139)을 투입하여 부지 30천㎡, 건축면적 14천㎡ 규모로 추가 건립을 추진하여 2017년 하반기에 건립 완공하였다.


향후계획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지원, 친환경자조금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급조절·가격안정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지자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대량 수요처 발굴,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 홍보, 가공·외식·수출 등 새로운 수요 창출, 온라인·모바일 등 신유통 채널 확충,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 등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업환경오염 경감

가.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사무관 김남진

시행배경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는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소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와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토양과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 미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소비기반을 구축하고 국민들의 농식품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이다.

시행내용 및 성과

2006년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시행 이후 안전농산물에 대한 생산자·소비자의 관심 증대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매년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표1>.

'16년부터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주산지 GAP 토양·용수 분석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GAP 시설보완사업을 통해 GAP 인증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GAP 인증에 대한 농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4년에 GAP 인증 절차를 간소화(구비서류: 12종→3, 인증기간단축: 최대126일→42)하였으며, '15년~'18년에는 대형마트·급식업체와 협업을 통해 GAP 농산물 판촉전 및 홍보캠페인 등 추진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마트 자체 품질관리 기준(QC)에 GAP 기준을 반영하는 등 생산·유통 부분 전반에 걸친 정책 지원과 민관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GAP 홍보와 교육 목적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전문강사 육성, 유통·급식업체MD·학교 영양사·도매시장 관계자 교육 실시, TV·라디오·KTX 방송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생산·유통·소비 전 분야에서 GAP 제도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표 3-69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추진 실적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증기관(개소)	45	49	51	48	44	44	46	52	55
GAP관리시설(개소)	565	606	718	756	681	717	802	799	805
인증 농가수(호)	34,421	37,146	40,200	46,000	46,323	53,583	74,973	86,091	86,789
인증 면적(m ²)	46,701	46,701	55,000	58,703	58,763	65,410	88,859	103,270	101,815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향후계획

유통의 국제화와 무역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농가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존 정책사업과의 연계하여 GAP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마트, 급식업체 등 소비접점에서 GAP 농산물 취급 확대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GAP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GAP 인증 농가의 안정적인 수요처도 발굴·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GAP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 관계기관, 농협, 유통·급식업체 MD 등 대상별 맞춤형 GAP 훈련·교육을 강화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내 GAP 농산물 전용 매대 설치, 온라인 광고 등을 활용한 GAP 캠페인 및 판촉전 개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나. 친환경 비료 지원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 이창호

시행배경

1999년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기준 약 84만톤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정된 적정시비량 62만톤보다 약 30%가 더 사용되고 있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고 있었다. 화학비료를 과다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은 잉여 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작물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면서 농업에 투입하는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 대안 마련과 인센티브를 통한 시비량 절감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다행히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됨과 동시에 친환경 재배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화학비료 가격이 지속 인하됨에 따라 농가에서 친환경농업 확대에도 화학비료 사용량은 110만톤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적정량의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시행내용 및 성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1년부터 추진해온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사후 정부 보조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오다가 2005년 7월 1일부터 완전 폐지하였으며,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을 2008년 200만톤 1,160억원, 2009년 210만톤 1,218억원, 2010년 250만톤 1,450억원, 2011년 247만톤 1,250억원, 2012년 262만톤 1,434억원, 2013년 273만톤 1,613억원, 2014년 257만톤 1,603억원, 2015년 278만톤 1,600억원, 2016년 288만톤 1,600억원, 2017년 278만톤 1,600억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였으나, 2018년 276만톤 1,490억원으로 축소되었다.

표 3-70 연도별 유기질 비료 지원현황

(단위: 천톤,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물량	2,500	2,468	2,622	2,732	2,570	2,780	2,886	2,876	2,756
금액	1,450	1,250	1,434	1,613	1,603	1,600	1,600	1,600	1,490

유기질비료에 대한 국고지원 조건을 변경하여 2010년까지 포대(20kg)당 단가를 정액제로 책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2011년부터 지원단가를 등급별(특등급~2등급)로 조정하여 등급별 지원함으로써 품질향상과 작물에 적합한 유기질비료를 시비하도록 개선하였다.

2006년 화학비료에 대한 판매가격이 자율화되면서 화학비료 총사용량(실증량 기준)은 1,272천톤을 사용하여 전년에 비해 32.2%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2007년은 1,621천톤을 사용하여 일시 사용량이 증가되었으나, 2008년 1,471천톤으로 9.3%가 감소되었으며, 2009년 1,292천톤으로 12.2% 감소하였고, 2010년 1,105천톤으로 14.5%로 감소하여 오다가 2011년 1,110천톤, 2012년 1,182천톤, 2013년 1,143천톤, 2014년 1,132천톤, 2015년 1,096천톤, 2016년 1,114천톤, 2017년 1,103천톤, 2018년 1,128천톤을 사용하고 있다.

표 3-71 연도별 화학비료 소비 현황

(단위: 실증량, 천톤,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물량	1,105	1,110	1,182	1,143	1,132	1,097	1,114	1,103	1,128
증(△)감	△14.5	0.4	6.5	△3.3	△1.0	△3.1	1.5	△1.0	2.3

아울러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처방, 작물별 적정시비 기준설정, 맞춤형화학비료, 가축분퇴비 등 비료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비료사용량 감축 및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화학비료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맞춤형비료를 지원하여 2010년 465천톤 600억원, 2011년 541천톤 298억원, 2012년 496천톤 198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2013년부터는 맞춤형 화학비료 사용 등을 통한 적정량의 비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다.

향후계획

퇴비의 품질등급제를 지속 실시하여 품질이 높은 비료에 대해 지원단가를 높게 지원함으로써 부숙 유기질비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자체별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등 토양의 지력 증진, 농업환경보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양검정을 통한 맞춤형 시비처방의 필요성과 방법을 교육하고 효과를 홍보하여 농지와 작물에 적합한 비료가 적정량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농업환경(토양)의 유지·개량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 이창호

시행배경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석회질은 1957년부터 규산질은 1965년부터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토양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까지 보조 50%, 자담 50%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전액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 부터는 국고 비율을 규산질 60%, 석회질 80%로 지원하여 지방비 비율은 규산질 40%, 석회질 20%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999년부터는 규산 5년, 석회 6년 1주기, 2001년부터는 공급물량을 늘려 규산 4년, 석회 5년 1주기로 공급하였으며, 2004년부터 규산, 석회 모두 4년 1주기로 공급하여 토양 개량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농가단위 신청제로 전환하고 살포주기도 3년 1주기 공급으로 개선하였으며, 492천톤(규산 289, 석회 203)을 지원하였다.

살포작업 간편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알갱이형태의 입상제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2009년도부터는 전량 입상으로 599천톤(규산 366, 석회 233)에 이어 2010년에는 826천톤(규산 643, 석회 183), 2011년에는 822천톤(규산 535, 석회 287), 2012년에는 739천톤(규산 472, 석회 267), 2013년에는 671천톤(규산 452, 석회 219), 2014년에는 724천톤(규산 438, 석회 286), 2015년에는 681천톤(규산 434, 석회 247), 2016년에는 694천톤(규산 450, 석회 244), 2017년에는 627천톤(규산 372, 석회 255), 2018년에는 536(규산 313, 석회 223)을 공급하여 토양개량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표 3-72 연도별 토양개량제 지원현황

(단위: 천톤, 백만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88,113	77,823	70,071	65,561	65,927	64,200	65,917	58,010	50,568
물량*	826	822	739	688	701	681	694	627	536
- 규산	643	535	472	449	434	434	450	372	313
- 석회	183	287	267	239	267	247	244	255	223
(폐회석)	27	44	44	46	55	58	45	60	53

* 폐회석 물량은 석회 물량에 포함

향후계획

2019년에는 토양개량제를 454천톤(규산 282, 석회 173)으로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토양검정결과 등에 따른 시비처방서 발급, 맞춤형비료공급, 유기질비료지원 확대 등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토양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4 친환경어업 육성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사무관 한지용

시행배경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적 기반 및 양식기반시설 확충으로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2018년도에는 친환경 기술이전,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 친환경 사업관리, 양식어장 환경관리, 양식기술 기반구축,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 적조피해예방, 패류

등 혼합양식 기술개발 연구, 간척지 등을 활용한 첨단양식 산업화 전략 수립, 스마트 양식기반 조성 타당성 용역 등에 대한 내역 사업을 추진하였다.

1) 친환경 기술이전

FTA에 따른 새우양식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플라크를 이용한 첨단 새우양식기술의 보급 및 기술이전을 위한 양식어업인 현장,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2)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

양식창업을 구상에서 실현까지 양식장 인·허가, 기술교육 등 ONE-STOP으로 지원함으로써 신규 창업 인력의 양식업계 진입을 유도하였다.

3) 친환경 사업관리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정기적인 사업 성과 분석·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홍보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노력하였다.

4) 양식어장 환경관리

무분별한 면허기간 연장 및 장기간 이용으로 오염된 어장 환경의 관리를 위해 어장환경개선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어장이용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어장환경수용력 산정 연구, 어장환경기준 설정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안 양식어장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5) 양식기술기반구축

산업적 육성가치가 있으나 종묘생산 및 양식기술이 부족한 분야의 기반 구축을 위해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5개 지자체에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동,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새우양식 유용미생물배양시설, 낙동강 토속 관상어연구센터, 신품종 육성용 양식 시설 등 내역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량종묘 생산·기술보급을 통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양식생산기반을 마련하였다.

6) 민간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적이고 시범적인 민간 양식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해 강원·충남·전남·경남·제주 등 5개 지자체에 연어종묘 부화육성 및 순치 양식장시설, 바이오플락 실내사육, 바리류 우량종자 생산, 첨단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전기분해) 등의 내역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어종 양식 기술 개발 및 폐사량 저감 등에 따른 생산량 향상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하였다.

7) 적조피해 예방지원

적조발생에 대응하여 어업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하여 어장이동이 가능한 가두리시설 현대화 및 어장재배치 등의 비용을 지원하였다.

8) 패류 등 혼합양식 가능성 분석 연구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굴·멍게·해삼 혼합양식에 대한 기술개발 및 경제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9) 간척지 등을 활용한 첨단양식 산업화 전략 수립

간척지의 어업적 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산·양식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간척지 등을 활용한 첨단양식 산업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였다.

10) 스마트 양식기반 조성 타당성 용역

스마트 양식기반 조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 이행방안 마련, 스마트 양식 모델 도입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스마트 양식기반 조성 타당성 용역을 지원하였다.

표 3-73 연도별 사업추진경과 및 실적

연 도	내 용
2012	지자체 양식관련 인공종묘생산 및 연구시설 9개 사업 지원 외해가두리, 전북외해중층가두리 등 민간 양식시설 5개 사업 지원
2013	지자체 양식관련 인공종묘생산 및 연구시설 10개 사업 지원 폐사어처리시설, 갯지렁이 양식시설 등 민간시설 3개 사업 지원 충남, 전북의 유류피해지역 바지락종패발생장 및 동사에 따른 바지락어장생태복원 2개 사업 지원
2014	지자체 양식관련 인공종묘생산 및 연구시설 9개 사업 지원 Biofloc, 순환여과식 등을 접목한 민간 양식단지 및 시설 11개 사업 지원 경남도 적조피해예방을 위한 가두리시설 현대화 및 적조 등에 강한 품종변경 지원
2015	지자체 양식관련 인공종묘생산 및 연구시설 8개 사업 지원 Biofloc, 해수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연어외해특화양식 시설 등 민간 양식시설 15개 사업 지원 경남도 적조피해예방을 위한 가두리시설 현대화 및 적조 등에 강한 품종변경 지원
2016	지자체 양식관련 인공종자생산 및 연구시설 6개 사업 지원 Biofloc, 관상어 등 양식시설, 해조류 및 패류 종자생산시설 등 민간 양식장 18개 사업 지원 적조피해예방을 위한 가두리시설 현대화 및 적조 등에 강한 품종변경, 어장재배치 지원
2017	지자체 양식관련 인공종자생산 및 연구시설 6개 사업 지원 Biofloc, 관상어 등 양식시설, 해조류 및 패류 종자생산시설 등 민간 양식장 22개 사업 지원 적조피해예방을 위한 가두리시설 현대화 및 어장재배치 지원
2018	지자체 양식관련 인공종자생산 및 연구시설 8개 사업 지원 Biofloc, 관상어 등 양식시설, 해조류 및 패류 종자생산시설 등 민간 양식장 20개 사업 지원 적조피해예방을 위한 가두리시설 현대화 및 어장재배치 지원

향후계획

2019년도에는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의 객관적 관리 및 평가를 통한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량종묘 생산·기술 보급으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양식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어업인 소득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사업으로 1,090백만원, 양식어장환경관리사업으로 2,400백만원, 양식 기술·기반구축사업으로 5,000백만원, 민간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으로 10,224백만원, 적조피해예방지원으로 6,000백만원, 패류 등 혼합양식기술 개발로 200백만원,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으로 5,000백만원, 스마트양식 기반조성으로 7,000백만원, 고수온 대응 지원으로 3,00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화

1 농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가. 농촌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

 농촌산업과 사무관 이동민·정혜영

시행배경

여가, 휴양, 삶의 질 향상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국민의 체험·여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관광 형태도 유명 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 중심의 체험관광·휴양 등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및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내관광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 생활 중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여건변화를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도모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고, 농촌 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시행내용 및 성과

도시방문객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고 있다.

2015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운영 전 과정을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자체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였으며 2018년에는 총 1,10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마을리더 및 사무장 등이 마을운영에 필요한 농촌관광정책방향, 서비스마인드, 마케팅 등 기본교육과정과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과정을 편성하여 차별화된 농촌관광을 주도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마을들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방문객 관리, 도시민 유치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제도를 2006년부터 도입하여 2018년에는 522개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폭넓은 도시민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서 “도농교류의 날(7.7) 및 농촌여름휴가캠페인”과 관계기관 합동 “농산촌 여름휴가보내기 대국민 캠페인(7~8월)”을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매월 계절·테마별로 우수 농촌여행지 및 농촌여행코스를 선정(60선)하여 홍보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및 설·추석 연휴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여행주간과 연계한 “농촌 여행주간”을 3회 운영(3·5·10월) 운영하여 농촌관광지 할인행사 및 이벤트 등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웰촌포털(www.welchon.com), SNS 채널(네이버블로그, 카카오톡스토리, 페이스북 등)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농촌관광 등 다양한 도농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2018년에는 938개 마을에 체험안전보험, 964개 마을에 화재보험가입을 지원하고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2회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대상 서포터즈 2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외국인 대상 맞춤형 여행상품44종을 개발하고, 주한미군 대상 팸투어도 4회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농촌관광객 유치활성화와 농촌관광자원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18년 농촌관광자원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 등 수준을 차별화하고,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3년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등급제는 농촌관광 사업자의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4개 부문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여 부문별로 1~3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2018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민박 572개소에 대한 등급평가를 실시하였다.

1사1촌 자매결연운동은 도시와 농어촌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생(win-win)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단체와 농어촌마을이 자발적으로 자매결연을 하고 교류하는 국민적 운동으로서, 기업체와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2018년에는 10,844건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농어촌 일손돕기 등 388억원의 교류성과를 창출하였다. 사회공헌인증 내용 삭제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소득 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회복의 전기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도농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계획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1사1촌 운동 확산 등으로 농촌관광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농촌관광 등 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삭제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내·외국인 관심 제고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지원 및 농촌관광 시설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주도의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보급에 따른 획일적 관광콘텐츠 제공에서 탈피하기 위해 농촌 현장 주도로 지역의 음식·숙박·체험을 연계한 특색 있는 체류형 농촌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체험마을 등 농촌관광 사업자와 전문가·현장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농촌관광 협의체를 통한 상향식 농촌관광 콘텐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마을사무장 운영에 대한 계속 지원과 농촌 관광사업 등급제도를 개선하여 품질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민간단체의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확대하고중

학교 자유학년제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체험처 품질제고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1사1촌 운동,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 추진, 도농교류 정부포상, 외국인 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업의 6차산업화

 농촌산업과 사무관 유경숙·이창일·김동남 사무관

시행배경

6차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특산품 제조·가공 등의 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 등의 3차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넓지 않고, 농업소득이 불안정적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중 상당수가 고령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시장개방으로 농업소득의 정체와 농촌지역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제조·관광 등 가치사슬의 연계를 강화하는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6차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경영능력, 자본 등이 부족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하는 방법을 몰라서 추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동안, 농가소득원의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업무 중 하나로 6차 산업화를 선정하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밀착 지원을 강화하여 6차 산업화를 발전시키며 농촌관광 등 농촌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그 밖에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 및 매출액, 관련 일자리 증가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다수의 영세 경영체 역량이 미흡하고 창업자는 3~4년차 성장절벽에 직면함에 따라 외형적 성장에서 내실화를 통한 도약을 위해 6차산업 소비기반 강화, 경영체 맞춤형 지원 등 내실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촌 특화 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행내용 및 성과

2018년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 및 매출액, 관련 일자리 증가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갱신인증, 디딤돌 멘토링, 비온드팜(전용 매장) 개장 등을 통한 6차산업 경영체 내실화 및 판로 확대의 성과가 있었다. 우선 '17년 1,397개소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 수는 '18년 9.1% 상승한 1,524개소로 증가하였고, 평균 매출액은 '17년 16.4억에 비해 4.9% 상승한 17.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더불어 농촌융복합산업지구('18년 종료 4개 지구)의 매출액·일자리는 지구지정 전 대비 54.0%('15년 12,789백만원→'18년 19,695), 26.3%('15년 601명→'18년 759) 증가하였으며 '16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함양 산양삼'은 신상품 개발, 공동 인프라, 경영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받아 36개의 산양삼 신제품, 디자인 등 관련 특허 출원(17개 등록 완료) 등의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어 동종 업계로부터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인증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802개소 경영체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15~'17년)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성장률 등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갱신인증을 실시함으로써 6차산업 경영체의 내실화를 추구하였다.

다음으로 소규모이면서 청년·여성 경영체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유통업체 입점을 목표로 무상으로 '디딤돌 멘토링'을 추진하여 10개 경영체의 제품이 갤러리아백화점, 이마트, 지마켓 등 전국 23개 유통업체에 입점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잠실)에 6차산업 전용매장 '비온드팜 1호점'을 개장하여 47개 경영체의 306개 품목을 판매하여 135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인증경영체의 판로 확대를 위한 수도권 전용매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계획


2019년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에게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및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설치확대('18년 74개소→'19년 86개소) 등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고,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공한 경영체의 벤치마킹 기회 제공 및 6차산업 활성화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산업기반 현황, 매출액·일자리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6차산업 기초실태조사(격년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시도 및 시군 단위까지 6차산업 자원을 조사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계속되어 왔던 6차산업 제품 판로 확대 및 홍보 등은 상설체험관 상시 운영, 전문매장 비온드팜 확대, 11번가, 편의점, 리조트, 무인판매대 활용 홍보·판매 등 판로를 다변화할 계획이며,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에 6차산업 가공제품을 포함하는 등 기존 온오프라인 매출증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특화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사업 추진방식을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농업인 간 계약재배(수매), 협력방식 등 연계정도를 평가하여 지구를 지정하고, R&D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업방식을 개편하였고, 청년·고령농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이 농촌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다. 향토자원 산업화

 농촌산업과 사무관 김동남

시행배경

정부는 시장개방, 농가소득 정체,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 위축 → 일자리 축소 → 농촌 활력 저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단위에서는 부존자원의 효과적인 발굴과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다양한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산업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07년부터 추진하였다. 2007~2008년에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이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2009년에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2010년부터는 회계개편에 따라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추진하다 지역의 자율성 확대 기조에 따라 2015년부터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과 제주발전계정에서 2018년부터 균특회계 지역자율기반계정과 제주발전계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시작된 농촌자원융복합산업지원사업은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을 연계·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지역도 나타났으나, 일부 사업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이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간의 효율적인 연계 추진 등을 도모하고자 기존 균특회계가 광특회계로 개편되는 시기에 맞춰 2010년 이전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던 여러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인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통합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시행내용 및 성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07년 및 2008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9개소를 착수하여 개소 당 3년 이내에 총 1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09년에는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2015년부터는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및 제주계정에서 개소 당 3~4년간(14년 신규사업부터 4년)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향토산업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제한적 H/W분야와 함께 지적재산의 권리화, 연구용역·컨설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네트워킹 구축 등 S/W 분야에 걸쳐 포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산·학·관·연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사업추진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14년도부터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 마련, 사업추진주체의 역량 제고 등을 주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사업내용으로 R&D 추진 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R&D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사업이 실제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보완하였다.

표 3-74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량(개소)	249	18	28	28	28	29	26	24	19	14	15	12	8
예산(억원)	3,351	43	90	286	344	406	409	438	397	328	224	219	167

* 2007~2008년도 선정지구에 대한 마무리사업비까지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지원하고, 2009년도 신규선정분부터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2010년도부터는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2015년부터는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및 제주계정에서, 2018년부터는 균특회계 지역자율기반계정 및 제주계정에서 지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0년도에는 2,356억원, 2011년도 2,435억원, 2012년도 2,031억원, 2013년도 2,280억원(수산분야 174억원 포함), 2014년도 1,763억원, 2015년도 1,578억원, 2016년도 1,567억원, 2017년도 1,563억원, 2018년도 1,319억원의 국고예산을 사업비로 지원하였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 촉진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농촌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향토식품·특산물 가공 등 농촌형 제조업 육성, 농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등에 H/W분야와 S/W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부터는 생산 및 유통, 제조, 가공, 체험, 전시, 관광 등 1,2,3차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표 3-75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실적

구분	계	기획평가 구축지원	농산물생산 ·유통기반 구축	농산물제조 ·가공지원	체험·전시 지원	농촌체험· 관광지원	농공단지 조성 지원	6차산업화 지원	농촌공동 체회사 우수사업
2010	2,356억원	-	1,035	396	10	392	523	-	-
2011	2,435	-	848	501	13	547	526	-	-
2012	2,031	-	557	545	38	429	462	-	-
2013	2,106	4	561	572	50	416	503	-	-
2014	1,763	4	601	511	38	351	258	-	-
2015	1,578	6	553	417	10	241	271	80	-
2016	1,567	4	489	386	11	306	253	118	-
2017	1,563	5	464	360	64	358	133	163	16
2018	1,319	5	451	338	5	271	99	141	9

* 2013년의 2,106억원은 수산분야 174억원 미포함 금액. 2017년부터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이 농특회계에서 이관


향후계획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촌지역의 향토자원의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 핵심사업으로 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지구를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되, 사업계획 수립단계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반면,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과 연계하고, 부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액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부진지구의 경우는 익년도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특별 컨설팅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는 사업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기존에 투입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역특화산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에 따라 ①농촌산업화기획·평가체계 구축 지원, ②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③농산물제조가공지원, ④농산물 체험·전시지원, ⑤농촌 체험·관광지원, ⑥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개보수 지원, ⑦6차산업화지원, ⑧농촌 공동체회사 지원 등 8개의 사업 유형으로 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지침 준수여부 등 모니터링 강화하여 예산집행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우수사례·우수경영체를 발굴하여 타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사업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라. 농공단지 조성

 농촌산업과 사무관 김동남

시행배경

농공단지조성 지원제도는 탈농인구의 재촌 흡수,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1984년에 7개 시범단지 조성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하나로서 지정·개발·관리 등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지정 승인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의 지역별 구분 및 농공단지 조성 지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표 3-76 농공단지 부처별 지원 현황

부 처 명	지 원 내 용	관 련 법
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 시책 총괄, 관리 및 입주기업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의 지역별 구분,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농어촌정비법
해양수산부	특화농공단지 수산분야	농어촌정비법
국토교통부	농공단지 지정 및 입지기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원	환경정책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을 낙후도(재정자립도, 산업집적도, 산업단지 면적 등)를 감안하여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업종의 특화여부에 따라 농공단지 유형을 일반단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등 3개로 구분, '13년부터 일반 및 전문단지 신규조성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특화단지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입주기업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농공단지 기반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농공단지에는 2018년도에 5개소 조성, 53개소 개보수 등 58개소에 99억원을 지원하여 2018년 말 기준으로 472개소를 지정하고 440개소 조성을 완료하였다. 농공단지는 농촌 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2018년 말 7,321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6,549개 업체가 공장을 설립·가동 중에 있으며, 고용인원 149천명, 생산액 55조 762억원(업체평균 84.1억원), 연간 수출액 121억 57백만 달러(업체평균 186만 달러)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계획

그동안 추진되어 온 농공단지 관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 저렴한 산업입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제공 등 농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농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이나 대도시 집중 산업의 지방분산 유도 등 국가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당초 400개소 조성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유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단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에 따라 노후단지의 기반시설 개·보수를 중점 지원해 나가고, 지역특화단지의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 어촌관광 활성화 및 도어교류 확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사무관 백승록

시행배경

국민들의 소득증가, 여가시간 증대,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여 어촌과 도시민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보완을 통한 발전도모로 어업인에게는 어업 외 소득 증대, 도시민에게는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어촌관광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초기에는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치중되어 사업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200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체험·휴양·관광 등의 어촌관광 수요 증대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홍보 등 S/W 지원으로 어촌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바다와 어촌의 보편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아울러 도시와 어촌 간 활발한 교류 촉진 및 어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무장(전담인력) 채용 지원, 주민 역량강화, 체험마을 평가 및 도어교류 추진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바다와 어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홍보 및 정보 제공

도시민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알리기 위하여 지상파 TV, 신문,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촌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에도 다양한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민에게 어촌 관광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또한, 해양관광 누리집 바다여행(www.seantour.kr) 운영,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홍보, 어촌 소개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어촌관광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무장제도 운영 및 마을주민 역량강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해 어촌체험마을 업무(체험객 접객, 체험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관리, 마을홍보 등)를 전담하는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양성과정은 어촌체험, 관광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매년 2회, 80여명의 사무장을 대상으로 사무장으로서의 기본소양 함양 및 전문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홍보 마케팅 전략, 세무회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홈페이지 관리 등을 교육하고 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마을주민의 관광 마인드 제고 및 갈등관리,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전문가와 함께 마을 자원을 활용한 먹거리·공예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어촌관광 잠재 수요고객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민을 어촌에 유치하여 어촌관광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어촌체험마을의 행사 운영능력 배양을 위하여 어촌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실태평가 실시 및 등급평가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2010년부터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관광객들에게 품질 높은 시설·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마을, 발전가능마을, 미흡마을로 구분하여 마을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터 추진한 어촌마을 전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홍보함으로써 다른 어촌체험마을에 전파하여 체험마을의 운영·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마을에는 추가 사업비(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명품 어촌 체험마을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어촌관광사업을 대상으로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및 음식 4개 부문을 평가하여 부문별로 1~3등급을 부여하는 체험마을 등급제를 도입한 이래, 전국 20개소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등급을 부여하고 홍보해오고 있다.

도-어 교류 추진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어촌사랑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촌이 자연친화적 휴양·휴식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방송·온라인 등 홍보 매체를 다각화로 범국민적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단체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결연체간 교류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표 3-77 자매결연 체결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6	2017	2018	
건수	실적	214	114	110	150	127	173	158	133	115
	누계	214	553	772	1,117	1,327	1,853	2,011	2,144	2,259

어촌체험마을 성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의 경우 체험객 수에 있어 2010년 771천 명에서 2018년 1,454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체험소득도 2010년 179억 원에서 2018년 275억 원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3-78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태 현황

(단위: 백만원, 천명)

구 분	'10	'18	증(△)감('18-'10)	증가율(%)
체험운영 수	91	101	10	11.0
방문객(천명)	5,022	9,805	4,783	95.2
이용객(천명)	771	1,454	683	88.6
직접소득(백만원)	17,857	27,450	9,593	53.7
간접소득(백만원)	33,149	35,353	2,204	6.6


* 직접소득은 체험이용료, 민박, 식사, 수산물 판매에 한정

** 간접소득은 어촌체험프로그램 이외의 일반 관광객에 의한 소득

향후계획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로 국민들이 어촌에 대한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다양한 홍보 추진, ‘고품격의 어촌관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어촌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인 어촌관광 소프트웨어사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문제점 발굴을 통한 개선방안과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어촌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바. 어촌 6차산업화 추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사무관 한정수

시행배경

어가인구의 감소·고령화, 어촌 일자리 급감 등에 따른 어촌지역의 경쟁력 저하 및 높은 진입장벽으로 어촌사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귀어·귀촌인 등 외부와의 개방·협력을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등 어촌사회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 어가인구(천명) : ('10) 171.2 → ('15) 128.4 → ('16) 125.7 → ('17) 121.7 → ('18) 116.9

** 고령화율(%) : ('10) 23.1 → ('15) 30.5 → ('16) 32.5 → ('17) 35.2 → ('18) 36.8

시행내용 및 성과

어촌6차산업화란 1차 산업 중심의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유·무형의 어촌자원을 활용하여 2차산업(제조, 가공)과 3차산업(유통, 관광)을 융합·연계하여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14~'15년(2년간) 5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어촌 6차산업화 1차 시범사업을 완료하였고, '16~'18년(3년간) 5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촌6차산업화 개념 재정립,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어촌특화사업시행자 범위,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어촌 6차산업화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근거법령인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을 개정('15.9.28 시행) 하였고, 2016년부터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한 어업 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전담지원기구인 전남·경남·충남·강원·경기·전북·경북·제주·인천·부산 어촌특화센터(1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3-79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

차수 / 권역	마을명	위치	주요 사업내용
1차시범사업 (‘14~’15년 / 개소당 10억원 / 국비50%, 지방비50%)	동해	남애마을	강원 양양군 (1차) 마을어장 관리 (2차) 다이빙 교육시설 및 체험장비 보관시설 설치 (3차) 바닷속 체험마을 운영
	서해	대야도마을	충남 태안군 (1차) 우럭, 바지락, 낙지 등 생산 (2차) 반건조 우럭 가공시설 (3차) 우럭 요리개발, 로컬푸드 레스토랑 운영 등
	남해	안포마을	전남 여수시 (1차) 피조개, 바지락 등 생산 (2차) 피조개 가공시설 (3차) 피조개 활용 요리개발·판매, 로컬레스토랑 운영
		송호·중리마을	전남 해남군 (1차) 전복, 낙지, 파래생산 (2차) 전복빵 제조시설 (3차) 로컬푸드 레스토랑 운영(전복 요리 및 전복빵 판매)
		해금강마을	경남 거제시 (1차) 돌미역·툇·동백열매 생산 (2차) 동백화장품, 동백오일 생산 (3차) 동백 액세서리 만들기 체험장 및 판매장 운영, 해금강 마을브랜드 개발
2차시범사업 (‘16~’18년 / 개소당 15억원 / 국비50%, 지방비50%)	서해	중왕마을	충남 서산시 (1차) 감태, 낙지 등 생산 (2차) 감태 가공시설 건립 (3차) 조미감태 유통망 확보, 감태 분말 초콜릿 만들기 체험장 조성 등
		두어마을	전북 고창군 (1차) 가무락조개, 장어 등 생산 (2차) 장어엑기스 가공시설, 로컬 레스토랑 및 판매장 건립 (3차) 로컬 레스토랑 및 판매장 운영
	남해	신평마을	전남 고흥군 (1차) 미역 생산 (2차) 건미역 특화상품 개발, 가공시설 건립 (3차) 브랜드 개발, 특화상품 유통망 확보
		전도마을	경남 남해군 (1차) 파래, 죽방멸치, 썩 생산 (2차) 멸치액젓 가공시설, 어촌체험마을 시설·판매장 조성 (3차) 어촌체험장 운영(썩 잡기 등), 썩 특화상품 판매 등
		계도마을	경남 거제시 (1차) 대구 생산 (2차) 대구 스테이크, 젓갈 가공시설 건립 (3차) 특화상품 유통망 확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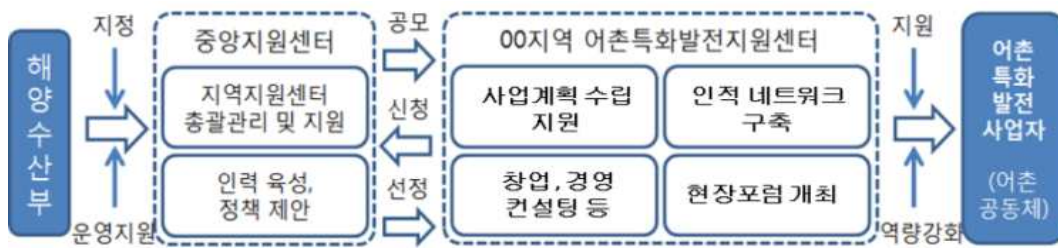
향후계획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10개 마을 추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적 범위로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어촌 6차산업화 관련 창업·경영컨설팅, 기술연구·개발지원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을 수행 할 현장 밀착형 전담지원지구인 어촌특화지원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성과 증대를 위해 전국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어촌마을이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6차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림 3-9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프로세스



사. 특화어항 개발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서기관 장진수

📄 시행배경

특화어항 개발은 수산업 기능 중심의 국가어항을 국민의 다양한 수요 충족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2014년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어항 기능의 융복합,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어항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등 어항 이용의 효용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지역 고유의 특성을 강조한 특화어항 개발은 5가지 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마다 개별적인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사업은 기존 어항 개발 사업 방식과는 차별화된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표 3-80 특화어항 개발 개요

사업명	다기능어항	이용고도화	아름다운어항	어촌 마리나역
기능	· 복합형 · 피서리나형 · 낚시관광형	어항기능 재배치 수산 기능강화	자연경관 + 문화·예술	레저선박 요트 대피, 휴식공간
대상항	10개항 *다대포, 서망, 저동, 남당, 욕지, 위도, 능포, 안도, 위미,물건항	4개항 *거진, 죽변, 방어진, 구시포항	4개항 *수산, 격포, 미조, 김녕항	16개항 *오산, 대진, 저동, 전장포, 초도, 연도, 서거차, 욕지, 물건, 매물도, 남당, 신양, 삼길포, 격포, 위미, 우이도
사업비 (항당)	390억	200억	125억	20억
기간	'14 ~ '25	'11 ~ '20	'14 ~ '20	'14 ~ '22
주체	국가+지자체+민간	국가+지자체+민간	국가+지자체	국가+민간
재원	국비+지방비+민자	국비+지방비+민자	국비+지방비	국비+민자

어항의 수산기능에 관광·레저·문화·상업 등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자 다기능어항 개발을 2014년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다대포항 등 10개항을 복합형, 피서리나형, 낚시관광형으로 특화하여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어항시설의 리모델링 및 시설확충, 기능시설의 재배치를 통한 이용고도화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여 거진항, 죽변항, 방어진항, 구시포항('18 완공)이 현재 개발과정에 있다. 아름다운 어항은 어항주변 자연 경관과 어촌마을의 문화·예술을 융합하고자 4개항을 선정하여 어항을 국민 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변 마리나시설들을 연계·지원하는 어촌 마리나 역조성사업은 16개항을 선정하였으며, 국민들이 해양레저 활동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화어항 개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전체 사업비 약 5,38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특화어항 개발을 통해 어항을 어업인의 생산 공간에서 국민 휴식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어촌 6차 산업의 핵심공간으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 된다.

향후계획

2014년에 수립한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추진 중인 특화어항 개발은 그 해에 기초적인 사업의 틀을 구상하고 2015년 각 항별로 기본 및 실시계획을 추진하였고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착수,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2 농업의 경영 안정화

가. 농업재해보험 확대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 조희윤, 김영애

시행배경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에게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운영하여 대상 품목·축종 및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2018년에는 73개(농작물 57작물, 가축 16개 축종)품목을 운영하여 30만 농가(378천ha, 278백만 마리)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적극적인 제도개선 및 홍보강화 등으로 가입농가수는 전년보다 39.9% 증가하였다. 태풍, 우박, 질병으로 인한 가축폐사 피해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9만 농가가 보험사업자로부터 8,23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1) 농작물재해보험

2001년 사과·배 품목을 시작으로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품목수를 늘려 2018년 57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전년도 무사고 농가 보험료 할인 등 현장수요에 맞게 보험 상품을 개선하였다.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규모는 27만 7천농가(경작면적 378천 ha)에 달하였다. 보험사업자는 태풍, 우박, 가뭄 등으로 80,201 농가에게 5,84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표 3-81 농작물재해보험 추진 실적

구 분	2001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2017	2018
대상품목(개)	2	25	30	35	40	43	46	50	53	57
예산액(백만원)	4,646	67,732	97,221	114,007	159,396	217,233	215,862	215,978	216,176	232,836
가입면적(ha)	4,096	53,452	86,604	108,373	160,203	134,264	185,239	297,494	321,331	378,714
가입금액(조원)	0.1	1.6	2.1	2.5	3.3	3.5	5.1	7.1	8.7	13.1
가입 농가수(호)	8,055	52,738	67,653	74,983	95,102	89,038	122,054	180,899	195,804	277,112
순보험료(백만원)	3,016	86,357	111,004	151,609	226,900	233,962	314,174	350,008	361,580	557,441
가입률(%)	17.5	13.6	15.0	13.6	19.1	16.1	21.7	27.5	30.1	33.1
지급 농가수(호)	407	14,343	19,611	46,337	8,600	10,769	6,386	19,749	28,435	80,201
보험금(백만원)	1,379	90,330	132,628	490,978	45,088	144,978	52,851	111,464	287,349	584,213
손해율(%)	45.7	104.6	119.5	357.1	21.9	66.9	18.0	34.0	84.9	111.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NH농협손해보험

2) 가축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사업은 1997년 “소” 1개 축종으로 시작하여 2012년에는 16개 축종(소, 돼지, 말, 가금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으로 대상 축종을 확대하여 운영 중이며, 매년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대상 재해 및 질병의 보상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2018년에는 폭발위험 담보 특약 및 기존 경주마 대비 50% 보험료 인하된 제주 경주마 요율을 신설하고 동물복지 인증농장 5% 보험료 할인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가입률은 전년 92.9% 대비 0.1% 증가한 93.0% 달성하였으며, 19천농가에서 278,139천두 보험에 가입하고, 전기·폭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10천농가가 보험금 2,393억원을 수령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3-82 가축재해보험 추진 실적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상축종(개)	12	12	14	15	16	16	16	16	16	16	16
국고지원(백만원)	26,413	29,723	31,675	39,417	52,296	48,126	52,877	54,580	57,556	62,818	63,425
가입두수(천두)	60,448	63,393	80,479	95,950	128,806	163,325	218,518	219,940	253,355	268,382	278,139
가입금액(조원)	1.8	2.0	2.2	2.6	3.6	4.1	3.7	3.2	8.9	10.2	11.9
가입 농가수(호)	9,852	19,866	9,547	12,156	11,250	12,605	11,375	12,282	14,349	16,432	19,706
순보험료(백만원)	44,323	48,842	53,259	64,648	81,931	105,486	98,257	112,036	104,599	124,752	159,298
가입률(%)	45.9	48.1	53.1	54.6	71.4	77.3	89.1	90.7	92.4	92.9	93.0
지급 농가수(호)	4,513	4,520	3,902	3,750	5,396	5,036	4,610	5,187	7,440	7,308	10,570
보험금(백만원)	50,379	44,333	48,116	48,082	69,309	65,743	69,330	88,473	125,394	129,235	239,275
손해율(%)	115.0	98.5	98.0	80.6	86.5	78.3	87.9	98.1	124.2	107.4	156.1


자료 : 농림수산물부,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향후계획

농작물재해보험은 2020년까지 대상품목을 67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를 상한선 설정품목 확대, 방재시설 설치 농가 보험료 할인 확대 등으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병충해보장 확대, 과수품목 일소피해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 현장의견에 맞는 보장성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확대 등 상품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허정은

시행배경

농가부채 규모는 영농 규모가 확대되는 등 상업농화가 진전되면서 시설투자 증가, 경영비 상승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다 2008년 이후 정체상태이며, 농가 자산의 상승에 힘입어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부채/자산비율)은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과의 FTA 진전,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경제는 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자력만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고리채 사금융을 이용하는 등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6차례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기상이변·시장개방 등에 따라 각종 재해나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인해 건실하게 영농을 위하다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법인 포함)의 경영회생을 돕기 위해 2004년부터 농어업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상시적인 경영회생지원프로그램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조건)을 지원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4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중장기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 등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부채 경감대책을 추진하였다. 2018년까지 부채대책(2001·2004 정책자금 상환연기, 2004·2006·2009 상호금융자금 저리대체지원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등) 추진으로 32,992억원의 재정이 지원(이차보전)되었고, 이는 농가당 평균 3,231천원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농가의 부채를 줄이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회생프로그램(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조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계획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4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5

조원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34조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였다. 이러한 부채경감대책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효과는 발생하였으나, 만기연장에 따른 상환지연과 저리지원에 따른 조기상환 유인부족 등으로 부채경감대책 실시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가들 간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보다는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재무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농업경영회생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유통체계 개편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 지원,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 임업재해보험 내실화

 산림청 사육림경영소득과 사무관 남해인

시행배경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임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 및 임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을 통해 임업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임산물재해보험’과 ‘임업인안전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등으로 이상기온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중대형 태풍의 잦은 피해 등으로 임산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임업인의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임산물·임업인 재해보험은 임업인의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부족과 보험료 지출에 대한 부담, 보장요구 수준의 높음 등으로 운영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폭염, 저온피해 등의 잦은 자연재해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보험 상품 개선, 보험료 부담 완화 등으로 가입률*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임산물재해보험(%) : ('15) 10.5 → ('16) 11.7 → ('17) 15.9 → ('18) 22.2

· '18년 가입률(%) 뚝은감 22.1, 밤 28.3, 대추 16.6, 표고버섯 2.9, 복분자 2.1, 오미자 0.5

* 임업인안전보험(%) : ('15) 0.7 → ('16) 8.0 → ('17) 9.5 → ('18) 12.8

임산물재해보험은 보험 상품 내실화를 위하여 뚝은감은 자기부담비율 10%형 상품을 도입하였고, 밤은 가뭄피해 보상을 추가하는 한편 대추는 표준수확량을 상향하고 열과 피해 보상을 도입하였으며, 오미자와 복분자 재해보험은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등 임산물 생산 임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 * 오미자 : 경북 문경·상주·예천, 충북 단양, 전북 장수 → + 강원 인제, 경남 거창
- * 복분자 :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 + 전남 장성

표 3-83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현황

(단위: ha, %)

구분	2015		2016		2017		2018	
	가입면적	가입률	가입면적	가입률	가입대상	가입률	가입대상	가입률
계	3,887	10.5	4,232	10.7	5,108	15.9	7,601	22.2
뚝은감('06)	2,179	23.7	2,169	23.6	2,138	16.2	2,913	22.1
밤('07)	1,383	6.7	1,679	8.1	2,680	19.8	4,189	28.3
대추('10)	262	8.5	247	7.9	242	9.5	433	16.6
복분자('11)	33	1.5	26	1.2	15	2.0	17	2.1
표고('13)	30	1.5	104	5.2	31	2.2	41	2.9
오미자('16)	-	-	7	0.3	2	0.2	8	0.5

임업인안전재해보험은 '16.1.7일 시행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농업인과 임업인을 통합한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농업인과 임업인 간 보험료 지원과 보험상품 보장수준의 형평성을 해소하게 되었다.

또한 '18년에는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강화 상품을 보급 * 하고, 보험료 산정주기를 단축 (3년 → 1년)하는 한편 보험료는 인하(약 10%)하는 등의 상품 개선으로 가입률을 크게 향상시켰다.

- * 간병급여 최대 5천만원, 휴업급여 최대 6만원/1일, 상해·질병치료 최대 5천만원지급 등

표 3-84 임업인 재해보험 가입률 현황

(단위: 명, 건, %)

구분	2016			2017			2018		
	가입대상	건수	가입률	가입대상	건수	가입률	가입대상	건수	가입률
가입실적	8,074	642	8.0	8,074	770	9.5	8,074	1,037	12.8

* 산출방법 : 전업임가(8,504) - (육림업 382 + 별목업 48) = 8,074가구
 자료 : 산림청, 2017년


아울러 재해보험에 관한 임업인의 인식제고와 담당자의 제고역량을 위하여 담당공무원과 임업인 1,487명을 대상으로 총 20회의 교육, 상품설명회를 시행하였다.

향후계획

임산물재해보험 내실화를 위해 현장의견을 반영한 상품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호두 등 중요 임산물을 보험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지원과 보험가입 필요성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임업인안전재해보험은 산림조합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확대와 영세농가에 대한 국고지원을 강화(50% → 70%)하여 임업인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작업근로자 보험가입 연령을 늘리고(20~87세 → 만 15~87세), 보장성이 강화된 특약상품을 개발(재해골절 진단비 보장, 교통재해로 사망 시 1천만원 보장 등)하는 등의 상품개선과, 온라인 보험상품을 판매 등 가입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라. 어업재해보험 확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김태환 서기관

추진배경 및 개요

WTO/DDA 출범에 따른 재해대책비 축소를 보완하고 거대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양식 어업인의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12월 제정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10년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통합)에 따라 2008년부터 양식어업재해보험(이하 “양식보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양식보험은 태풍(강풍)·해일·풍랑·적조·호우·홍수·대설·동해·이상조류 등의 자연재해 및 이로 인한 수산질병, 전기 장치 이상으로 보험가입 수산 양식물 또는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가입 제고를 위해 순보험료의 50%, 부가보험료의 10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대상품목 및 본 사업 품목 확대를 통한 대상어가 확대

2008년 7월 “넙치” 1개 품목을 양식보험 대상으로 도입된 양식어업재해보험은 매년 품목수를 늘려 2018년에 28개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향후 어업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상 품목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2014년 조피볼락, 굴, 참돔, 2015년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2016년 기타볼락, 송어, 강도다리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하는 본 사업으로 편입하였으며, 2017년 능성어, 가리비, 홍합, 2018년에는 다시마, 톳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하는 본 사업에 편입하였다.

표 3-85 양식보험 대상품목 현황

구분	'08~ '10년 (2개)	'11년 (5개)	'12년 (11개)	'13년 (15개)	'14년 (18개)	'15년 (21개)	'16년 (24개)	'17년 (27개)	'18년 (28개)
본사업	넙치	넙치	넙치	넙치, 전복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송어, 강도다리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송어, 강도다리, 능성어, 가리비, 홍합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송어, 강도다리, 능성어, 가리비, 홍합, 다시마, 톳
시범사업	전복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조피볼락, 굴, 김,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송어, 멍게, 뱀장어, 미역	김,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송어, 멍게, 뱀장어, 미역,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송어, 가리비, 톳	김, 기타볼락, 송어, 멍게, 뱀장어, 미역,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송어, 가리비, 톳	김, 멍게, 뱀장어, 미역, 홍합, 다시마, 송어, 가리비, 톳, 능성어, 오만둥이, 미더덕	김, 멍게, 뱀장어, 미역, 다시마, 송어, 톳, 오만둥이, 미더덕, 터봇, 메기, 향어	김, 멍게, 뱀장어, 미역, 송어, 오만둥이, 미더덕,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또한, 보다 많은 양식어업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2016년 57개에서 2017년에는 61개로 확대하였다.

2) 보장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가격하락이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양식어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어업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기 위하여 김, 넙치, 멧게 양식어가를 일부 선정하여 도상연습을 실시하였다. 또한,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상가두리어류 상품을 세분화하고, ‘김, 툇’ 품목에 대하여 조수 피해 보장이 추가된 개정 상품을 출시하는 등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험가입 선택의 폭을 넓혔다.

3) 가입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양식 어업인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 전문지, 월간지 등에 보험상품 광고를 게재함은 물론, 양식보험 가입 홍보계획(2~11월) 수립 및 캠페인(3~10월)을 실시하고, 양식보험 가입독려반 및 인수심사 대책반을 운영(5~7월)하여 집중재해기간(7~9월) 이전에 보험가입을 독려하였다. 또한 대어업인 현장 마케팅 강화와 어업인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추진 전 설문조사를 추진하는 등 보험가입 어가의 수용도를 높여왔다.

한편, 양식보험 추진관련 홍보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별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이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수산정책보험발전협의회” 구성(해수부, 지자체, 수협, 어업인단체, 전문기관)운영하여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을 확대하였다.

(단위: 어가, %)

구 분	2016			2017			2018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합계	9,443	3,570	37.8	9,586	4,037	42.1	9,586	4,250	44.3	
소계	4,885	2,977	60.9	4,885	2,991	61.2	4,885	2,809	57.5	
고수온관리품목	넙치	513	363	70.8	513	387	75.4	513	391	76.2
	전복	1,943	1,596	82.1	1,943	1,668	85.8	1,943	1,511	77.8
	조피볼락	820	316	38.5	820	313	38.2	820	288	35.1
	참돔	461	243	52.7	461	212	46.0	461	179	38.8
	돌돔	164	66	40.2	164	80	48.8	164	101	61.6
	감성돔	274	112	40.9	274	93	33.9	274	70	25.5
	농어	237	95	40.1	237	44	18.6	237	59	24.9
	귀치	77	34	44.2	77	37	48.1	77	33	42.9
	기타볼락	135	27	20.0	135	18	13.3	135	21	15.6
	송어	101	71	70.3	101	70	69.3	101	90	89.1
	능성어	82	27	32.9	82	20	24.4	82	10	12.2
	강도다리	78	27	34.6	78	49	62.8	78	56	71.8
소계	4,558	593	13.0	4,701	1,046	22.3	4,701	1,441	30.7	
기타품목	김	1,019	50	4.9	1,019	45	4.4	1,019	41	4.0
	굴	1,386	355	25.6	1,386	533	38.5	1,386	616	44.4
	멍게	241	9	3.7	241	26	10.8	241	31	12.9
	뱀장어	119	-	0.0	119	-	0.0	119	-	-
	미역	170	4	2.4	170	5	2.9	170	14	8.2
	홍합	376	63	16.8	376	148	39.4	376	176	46.8
	다시마	639	64	10.0	639	184	28.8	639	408	63.8
	송어	58	-	0.0	58	-	0.0	58	1	1.7
	가리비	82	18	22.0	82	27	32.9	82	16	19.5
	툰	268	30	11.2	268	74	27.6	268	126	47.0
	미더덕	100	-	0.0	100	-	0.0	100	-	-
	오만둥이	100	-	0.0	100	1	1.0	100	9	9.0
	터봇	-	-	-	20	2	10.0	20	-	-
	메기	-	-	-	95	1	1.1	95	3	3.2
향어	-	-	-	28	-	0.0	28	-	-	

자료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평가 및 향후 계획

2018년 대상품목 및 시범사업 확대, 제도개선 등으로 전년대비 5.3%(213어가) 증가한 4,250어가 양식보험에 가입하여 양식경영의 든든한 버팀목을 갖추게 되었고, 특히 8월 고수온 이후 연속적으로 발생한 적조, 태풍 등의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1,275어가에 757억원(지급준비금 제외)을 지급하여 재해어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 해상에 비해 낮은 재해발생으로 양식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내수면 및 가입이 저조한 해조류 품목에 대해서는 보장확대 및 양식어업인 인식전환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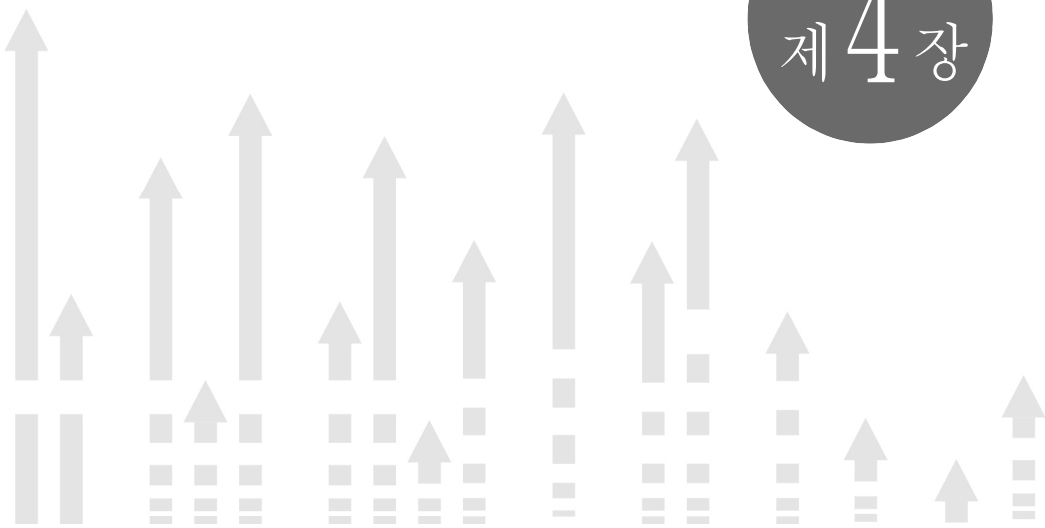
아울러, 양식보험은 종자보험 확대,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 어업인의 수요에 맞춰 신규 보험상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가입이 저조한 품목에 대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가입률 및 어업인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자연재해 발생 증가로 양식보험 수지가 악화('08~'18 누적손해율 288%)되어 지속적인 보험운영을 위하여 보험료 인상, 보험가입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개선결과를 보아가며 어업인의 수요에 맞춰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 제1절 쌀 산업
- 제2절 채소산업
- 제3절 과수·화훼산업
- 제4절 축산업
- 제5절 임업
- 제6절 수산업


제 4 장




1

효율적인 수급조절

 식량정책과 서기관 안유영

 시행배경

재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재고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공비축제와 함께 농업인 소득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시장에서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행내용 및 성과

2017년에 생산된 쌀 3,972천톤과 이월재고 1,888천톤, 수입 398천톤 등 총 6,258천톤이 시장에 공급되었다. 이 쌀이 2017년 11월에서 2018년 10월까지 기간에 4,816천톤이 소비되어 2018년 10월말 총 재고량은 1,442천톤 수준이 되었다.

2017년 벼 재배면적(755ha)은 정부의 쌀 적정생산유도 정책에 의한 타 작물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3.1% 감소하였으나, 모내기 시기의 가뭄과 낫알이 형성되는 시기의 잦은 강수 및 일조시간 감소 등 기상 영향으로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이 전년의 539kg보다 2.2%(12kg) 감소한 527kg이며, 전체 생산량(3,972천톤)은 전년도 4,197천톤 보다 5.3%가 감소하였다. 2017 수확기에 정부는 공공비축미 340천톤 매입을 매입하였다.

향후계획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수급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 한국은 식량으로 소비하는 쌀의 소비가 계속 줄고 있고, 쌀 생산량은 최근 3년간 과잉생산 기조(평균 536kg/10a)를 보이고 있으며, '15년 쌀 관세화 결정 이후에도 밥쌀용 쌀 수입은 매년 409천톤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 재고는 2018 양곡년도말 현재 1,435만톤으로 적정 재고수준보다 높다. 이에 따라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15.12월) 및 보완대책('17.2월)을 마련하여 논 타작물 재배확대 및 쌀 고품질화 유도 등 적정생산 추진, 쌀 중심 식습관 확산, 쌀쌀가공식품 판로 및 수출확대를 통한 소비확대,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확대 및 해외원조 등 신규수요 창출을 통해 수급안정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

민간유통기능 강화

식량산업과 사무관 정순일

시행배경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관처리 함으로써 처리비용 절감과 미질 향상 등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1991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 사업을 시작한 후 2001년까지 RPC 328개소(농협200, 민간 128)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이후 RPC통합 및 규모화 정책으로 2018년말 까지 총 10,114억원을 투자하여 쌀 주산지에 RPC 209개소(농협141, 민간 68), 건조·저장시설(DS C : Drying Storage Center) 1,481개소를 설치하였다.

시행내용 및 성과

미곡종합처리장사업은 관리비용·노동력 절감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쌀 브랜드화 촉진,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해 수확기 쌀시장 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RPC의 과다설치로 RPC간 과당경쟁·원료곡의 고가매입 및 경영효율화 노력 부족 등으로 적자 RPC가 증가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2002년부터 신규 RP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1995년부터 지원된 건조·저장시설(DSC)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DSC 지원조건을 2004년부터 용자지원에서 보조지원으로 전환하고 생산자단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2007년 이후에는 쌀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등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정부는 고품질 쌀 생산·유통정책에서 지역·들녘·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정책으로 전환하여 들녘경영체 및 쌀 전업농 중심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경영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품질쌀 생산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75개소 육성을 목표로 RPC를 지원해오고 있다.


2004년부터 RPC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부지원을 원하는 모든 RPC에 대한 RPC쌀산업기여도평가를 실시하고 경영부실 RPC는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여 규모화 및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통한 RPC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통합RPC에는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조기 경영안정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쌀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향후계획

2006~2007년 2년간 시범 추진 후 시행된 수탁판매사업을 통하여 수확기 쌀 농가의 판매방식 다양화를 통한 민간 시장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쌀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신규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18년부터는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명칭 변경 시행)을 추진하여 '18년까지 61개소를 육성한 바 있으며, 2022년까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대표브랜드 75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3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식량산업과 사무관 정순일

 시행배경

1990년대 후반부터 쌀 소비량 감소는 지속되는 반면, 소비자의 고품질·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쌀의 완전미 비율 향상, 단백질 함량 저하 등 품질 향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급종 공급비율이 35% 수준으로 낮은 점이나 수확후 건조·저장·도정 및 유통관리가 미흡한 점 등에 있어서는 정부와 농업인들의 더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시행내용 및 성과

2007년까지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대책의 기본방향은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와 소비자 신뢰 확립을 통한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하였다.

첫째로 화학비료 사용 억제 및 유기물 사용을 확대하고, 둘째로 외관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으며 가공특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병해충 및 재해저항성이 강하여 소비(小肥)재배에도 수량이 떨어지지 않는 친환경 재배적성 품종을 개발하고, 셋째로 고품질 정부보급종 공급 확대, 넷째로 적기이앙, 적정 포기수 확보, 적정 물 관리, 질소질 비료 사용량 감축, 병해충 최소 방제, 적기 수확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핵심 재배기술을 지도·홍보하고, 다섯째로 농가와 RPC(미곡종합처리장)간의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여섯째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였다.

2008년부터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단위 평균적 개념의 고품질 쌀 생산·유통정책에서 지역·들녘·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정책으로 전환하여 쌀 전업농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들녘·품종별 차별화·정예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구축으로 쌀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첫째, 녹비작물 재배 확대, 입상 규산질비료 공급 확대(100%) 등 생산기반 조성을 확대하고, 둘째, 수요자 중심의 최고 품질 품종(7개)을 육성하고, 셋째,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량을 50%까지 확대하고, 넷째, 적기이앙, 질소질 비료 시용량 감축, 병해충 최소 방제, 적기 수확 등 6대 고품질 쌀 생산·재배기술을 조기 정착하며, 다섯째, RPC 수확후 관리시스템을 개선 및 확충하고, 여섯째, 고품질 쌀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 단위 대표브랜드 육성 추진 및 쌀 품질 표시방법 개선, 시중 유통 브랜드쌀 평가로 소비자 신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09년도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쌀 전업농 중심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영 개선 기반조성을 위해 50ha이상의 면적으로 규모화·조직화하는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신규 사업(12개소)으로 추진하였고, 전문 컨설팅업체, 사업참여 경영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09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까지 324개소의 들녘경영체를 육성하였다.


아울러,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위해 고령화 및 영세농 위주의 인적구성, 품종의 반복, 다수 생산자, 수확기 집중 매입 등으로 매년 수확기 가격이 급등락하는 시장 불안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2012년에 ‘수탁형 계약재배’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가 육성하는 들녘경영체와 계약재배 약정한 RPC 2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7년에는 ‘수탁형 계약재배’ RPC 4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고품질쌀의 생산,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계약재배와 함께, 정부지원 RPC의 쌀산 업기여도 평가 “품질고급화” 항목에 ‘품종표시’ 지표를 도입, 반영하여 고품질의 품종종자가 별도의 재배관리와 구분보관, 가공되어 포장재에 품종표시,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 쌀의 품종표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향후계획

그 동안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을 추진하여 우리쌀의 품질경쟁력이 높아져 소비자의 신뢰확보는 물론 해외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경영측면에서는 쌀농가의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영농생산비 절감과 함께 들녘경영체를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쌀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우리 쌀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쌀 소비 촉진

 식량산업과 사무관 차은지

 시행배경

쌀 생산량은 벼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 증가로 정체 혹은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가구구조 변화(단독·맞벌이 가구 증가), 먹거리 다양화 등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쌀 재고량도 적정수준보다 많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적극적인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과 쌀가공산업 육성 정책 추진 등 쌀 수요 기반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쌀 시장의 안정을 꾀하여, 주식인 쌀에 대한 이해와 쌀 소비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쌀 소비 활성화 사업을 2003년부터 전개하게 되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초기에는 쌀 소비 잠재력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20~30대 젊은 주부를 주 대상으로 하여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와 캠페인을 중심으로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등과 함께하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 영양사 등 전문가를 통한 쌀 요리 레시피 개발·보급 등을 통해 쌀 중심의 식생활을 장려 하였다.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간편식 시장 확대에 따라 쌀=밥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식자재로서 쌀에 대한 홍보와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이를 위해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12.5월 시행)하여 쌀가공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14.10월)하여 추진 중에 있다.

'18년에는 ‘밥이답이다’를 주제로 광고와 다큐멘터리 등을 활용하여 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올바른 소비문화를 알리는 한편, 쌀 중심 식습관 학교 운영을 통해 쌀가공품 급간식 제공 및 쌀 중심의 바른 식습관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米(미)라클프로젝트를 통해 쌀 간편식을 개발하여 편의점 등 유통망에 입점·제품 출시 등 전과정을 방송으로 제작·송출하여 쌀가공품을 이슈화 시켰고, 쌀 관련 청년 창업인을 발굴하여 알리는 米(미)스코

리아를 통해 쌀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알렸다. 미래세대가 재미있고 쉽게 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놀이 콘텐츠를 제작하여 확산하였고,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 대상으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여 아침 먹는 문화를 확산하는 등 실질적인 쌀 소비 효과도 제고하였다.

쌀가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매년 400억원 규모의 시설·개보수·운영 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국산 가공용 쌀 가격을 인하하여 특별공급 하는 등 산업 육성을 지원하였다. 경쟁력 있는 쌀 가공식품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쌀가공품 품평회(TOP10)를 '18년에는 쌀가공식품산업대전과 연계 개최하여 홍보 효과를 높였으며, 중소 쌀 가공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공영홈쇼핑의 제품 판매 지원을 확대하여 쌀 제품 유통망 확대와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군 급식에 쌀국수뿐만 아니라 쌀 가공제품까지 제공하는 등 대량 소비처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소비 촉진 정책으로 가공용 쌀 소비량은 2008년 269천톤에서 2018년 568천톤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면류 등 간편 식사용 가공식품의 쌀 소비량이 크게 증가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루텐프리 국제 박람회, 프리프럼 푸드박람회 등 다양한 국제 박람회를 계기로 국산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19년에도 쌀 및 쌀가공품 수출이 진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계획


향후 미래세대, 청년세대에 맞는 쌀 중심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초등학생 아침간편식 지원·쌀중심 식습관 학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을 통해 아침결식률을 완화할 예정이며, 유아 쌀 간식데이 운영, 어린이 놀이콘텐츠 제작 등으로 쌀가공품을 직접 체험하며, 친근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쌀 및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별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박람회 참가 등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

노지채소

 원예산업과 서기관 김상돈


 시행배경

식생활 변화 등으로 채소류 생산소비는 감소 추세이나, 국민의 기본적인 부식으로 주로 소비되고 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약 22%를 차지하는 등 채소산업은 여전히 국민 식생활 및 농업 경제상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산 대비 비교적 값이 싼 중국산 등 수입산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류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는 냉동채소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베트남 등과의 FTA 체결로 향후 노지채소 산업의 직·간접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노지채소의 경우 전년도 시장가격에 따라 재배면적이 증감하고, 고온·가뭄·강우 등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의 변화도 커 생산연도 및 계절별로 생산량 변동이 크기 때문에 수급 및 농가소득 불안정성이 큰 품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지채소 농가 소득안정 및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노지채소 수급안정(계약재배), 채소가격안정제, 수매비축,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노지채소 수급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95년부터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대상 품목 및 사업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18년

에는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감자 8개 품목에 대해 평년 생산량의 19.5% 수준인 963천톤을 계약재배하여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농가의 수급안정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포전관리, 출하작업반 운영 및 기상악화 대비 예비묘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급안정사업 물량 확대에 관한 사업주체(농협 등)의 사업손실을 최소화하고 판매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 출하조직을 중심으로 공동선별·출하 확대, 마케팅 창구 일원화 등 연합판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속적인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 시 사후적 산지폐기 중심의 대책 추진 및 생산자 조직, 산지유통인, 지자체 등의 수급안정에 대한 제한적 참여로 인해 수급대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사업농협의 경우 판매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으로 사업 손실이 누적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 수급조절 기능(생육단계 면적조절 등)을 강화하고 지원 조직의 판매능력 확보 등 계약재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개편방안을 마련('15.4월)하였다. 계약농가에 사전 면적조절 등 수급안정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소득(목표금액)을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생산안정제)'와 고정 출하처 등 실질적인 판매 역량을 갖춘 조직에 한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출하안정제'를 도입하였다. '15년에는 농협에서 고랭지·겨울배추, 양파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16년에는 고랭지·겨울배추, 겨울무, 양파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17년부터 배추·무·마늘·양파를 대상으로 본사업을 실시하였고, '18년에는 고추와 대파(시범)를 사업대상 품목에 추가하였다.

또한 '16.6월에는 생산지역 집중도가 높은 고랭지배추, 겨울무에 대해 유통조절명령제를 도입하여 공급과잉시에 생산자단체 스스로 수급조절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양념채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12~'17년 996ha, '18년 89ha),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13~'18년 10개소), 고추·마늘·양파 농기계 임대사업('13~'18년 50개소)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농산물 가격수준에 따라 조치할 정책수단을 예시하여 수급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13년)'을 운용하고 있으며, '17년에는 주요 농산물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부정적 기상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수급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이상기상 대응 수급안정 매뉴얼'도 도입하였다.

향후계획

한·중 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한 노지채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안정 제도개선, 생산·유통기반 확충, 신규 수요개발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채소류는 주산지의 품목별 주산지협업체 중심으로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생산자·지자체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역할을 강화하고, 농가소득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 밖의 양배추, 당근 등 지역특화품목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수급안정 기금 조성 확대를 유도하는 등 생산자·지자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통한 산지 조직화, 밭기반 정비 및 맞춤형 농기계 개발 지원, 발작물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통한 기계화 촉진, 통합마케팅조직과 연계한 유통계열화 등을 통해 노지채소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나아가, 가공업체·대량수요업체와 연계한 국내산 원료 사용 확대 유도, 기능성 식품·가공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가공·수출시장 확대, GAP·친환경인증 확대를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채소산업 소비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

시설채소

 원예경영과 사무관 이문무

시행배경

시설채소는 건강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소비 증가에 대응 및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화 된 재배시설의 현대화 및 ICT 융복합 기술 적용 등 시설원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요구되어 1990년대 초반부터 유리온실 등 시설원예의 기반시설을 보급하였으며,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기반을 구축을 통한 대외 경쟁력 향상으로 시설채소를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시설 고도화 및 생산성 향상 등에 따른 품목별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 등 수급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수급조절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계약재배 활성화, 생산자 조직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2·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 심화, 인건비, 자재비 지속 상승 등 대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 위해 2009년부터 농산물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양액재배시스템, 자동개폐기, 차광·보광시설, 무인방제기, 관수·관비시설 설치 등 기존 시설의 현대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온실 온습도 관리 등 작물의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환경·생장관리 및 정보분석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도입하여 채소·화훼류 등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팜 조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시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및 원활한 시설·장비 활용을 위해 사업 도입부터 단계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시설원예 농가 경영비의 30~40%를 차지하는 난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도입하여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재배시설 등 에너지절감 시설을 지원하고, 기존의 경유 의존율을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지열·공기열 냉난방기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기상재해로 인한 시설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원예·특작 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규격을 2018년 기준 20,716ha(전체 비닐하우스 면적 대비 약 44%)보급·운영 중이며 다양한 지역별 기후 및 작물생육에 적합한 내재해형 원예특작시설, 버섯재배사 표준설계도를 개발·보급하고 산·학·관·연 합동으로 현장위주의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시설 지원 등을 통한 생산 기반 고도화 및 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수급안정 및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 후 중단 된 과채류 수급안정사업을 2016년 다시 도입하여 2018년 토마토, 호박, 풋고추, 오이 품목을 대상으로 계약재배 39천톤을 수행하였고, 향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대상 품목 및 계약재배 물량을 지속 확대하여 수급불안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생산자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및 품목 발전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파프

리카, 2018년 참외 의무자조금단체를 구성완료 하였으며, 풋고추, 딸기, 수박 등 품목별 주산지협의체를 도입 중이다.


향후계획


기존 시설의 현대화 및 ICT 융복합 기술 적용 확대 등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대외 경쟁력을 지속 향상시킬 계획이다.

동시에, 한정된 자원인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품목·지역·시설유형별 에너지절감모델 및 적설심, 풍속강도 변화기준에 부합하는 내재해형 규격을 개발하여 국내 시설원예 농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반복되는 기상재해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과채류 수급안정사업의 대상품목 및 계약재배 물량을 지속 확대하고, 품목별 의무 자조금단체, 주산지협의체 도입을 통해 생산자 조직화를 지속 추진하여 최근 생산성 증가 및 가격 하락에 따른 시설 채소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1 과수산업

 원예경영과 사무관 이강권


 시행배경

과수 재배면적은 WTO 협정에 따라 시장 개방이 확대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감소하였고 2010년 이후에 소폭 증가하여 최근에는 16만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일 생산량은 약 230만 톤으로 기상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되며, 2017년은 평년에 비해 2.2% 증가한 236만 톤이 생산 되었다.

2004년 칠레와 FTA 체결을 시작으로 시장 개방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 신선 과일 수입량은 2004년에 비해 83% 증가한 83만 톤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일 수입 증가 등에 따라 국산 과일의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소비자의 요구 수준도 높아지면서 생산성 제고, 유통 개선, 농가 소득안정 등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커졌다.

 시행내용 및 성과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

WTO 협정 발효 이후 국내 과일의 품질 향상과 수급안정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04년 이후 한·칠레 FTA 이행 등에 따른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과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산 과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투융자 지원을 해오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일의 품질 향상과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용수 확보, 배수 개선, 경작로 정비 등과 함께 과수 시설을 현대화하는 과수 생산기반 개선 지원, 바이러스 프리 묘목 공급 체계 마련, 산지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제고를 위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소비자 지향적 생산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에는 2,900ha의 과원 시설을 현대화하고 800ha의 과원에 용수 확보, 배수개선, 경작로 정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가에 과원 매입과 임대차에 필요한 자금 429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과실생산의 근간이 되는 과수묘목에 대해 병해충(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생산성 향상, 고품질과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과수 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생산자 단체가 과일 유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거점과일종합유통센터(APC) 23개소가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다.

과수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과일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 소득차를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시설포도와 참다래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격차의 80%를 재정으로 보전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전 실적은 없다.

2011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FTA 체결이 확대됨에 따른 대책으로 소득보전 직불은 'FTA 피해보전직불'로 명칭을 바꾸었고 대상 품목도 사전 지정 방식에서 매년 실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으며 이전 5개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 가격의 90%를 보전하도록 하였다.

과일분야에서는 피해보전직불금으로 2015년 포도, 체리, 멜론 농가에 167억 원, 2016년 포도, 블루베리 농가에 384억 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수입 개방에 의한 피해로 인해 더 이상 해당 품목을 재배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폐업하고자 하는 농가에 폐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칠레 FTA에 대응하여 '04년도 도입하여 '08년도 종료하였으나 2011년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재도입되었다. 한·칠레 FTA로 인한 폐업지원은 지원 품목을 사전에 지정

하여 폐업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논란이 있어, 2011년부터는 품목을 사업시행 전년에 수입량 증가로 인해 직접적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한하여 2015년에 체리, 포도 재배농가에 1,070억 원, 2016년에 포도, 블루베리 농가에 1,967억 원을 지원하였다.

향후계획

제3차 과수산업 발전계획('18~'22년)의 연차별 계획을 단계적으로 정상 추진한다. 특히, 최근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과종의 다양화, 포장단위 소형화, 중소과 품종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과일 소비량을 늘릴 수 있도록 소비 촉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2 화훼산업

 원예경영과 사무관 정현주

시행배경

2018년 화훼 재배면적은 4,353ha로 2005년 7,950ha에 비해 45.2% 감소한 수준이다. 분류별 재배면적을 보면 절화류·분화류·초화류·관상수류·화목류, 종자·종묘류, 구근류 모두 감소하였다.

시설면적은 과채류 등 타작목으로의 전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2005년에 비해 약 45.4% 감소하였다.

표 4-1 화훼생산현황

구분	2000	2005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재배농가(호)	13,080	12,859	10,347	9,450	9,147	8,688	8,328	7,837	7,421	6,918
재배면적(ha)	6,047	7,950	6,829	6,429	6,430	6,222	5,831	5,365	4,936	4,353
<시설면적>	<3,336>	<3,448>	<2,994>	<2,674>	<2,553>	<2,382>	<2,489>	<2,309>	<2,214>	<1,883>
생산액(억원)	6,650	10,105	8,510	7,567	7,368	7,407	6,332	5,602	5,658	5,38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구근류 포함하여 생산액 산정)

지난 10년 동안 농업에서 화훼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최근 재배면적, 농가수, 총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2 농업 중 화훼산업 비중

연도	재배면적(천ha)			농가수(천호)			총생산액(10억원)		
	전체(A)	화훼(B)	비중(B/A*100)	전체(A)	화훼(B)	비중(B/A*100)	농업*(A)	화훼(B)	비중(B/A*100)
1995	1,985	5.16	0.26	1,501	12.51	0.83	26,342	522	1.98
2000	1,889	5.89	0.31	1,384	13.08	0.95	31,968	663	2.08
2005	1,824	7.95	0.44	1,273	12.86	1.01	35,089	995	2.84
2006	1,800	7.69	0.43	1,245	12.44	1.00	35,232	941	2.67
2007	1,782	7.51	0.42	1,231	12.02	0.98	34,685	924	2.66
2008	1,759	7.07	0.40	1,212	11.59	0.96	42,781	904	2.11
2009	1,737	6.64	0.38	1,195	10.69	0.89	45,649	864	1.89
2010	1,715	6.83	0.40	1,177	10.35	0.88	46,134	851	1.84
2011	1,698	6.83	0.40	1,163	10.05	0.86	46,078	817	1.77
2012	1,730	6.53	0.37	1,151	9.45	0.82	49,560	751	1.52
2013	1,711	6.46	0.38	1,142	9.15	0.80	49,827	734	1.47
2014	1,691	6.22	0.37	1,121	8.69	0.78	49,238	702	1.43
2015	1,679	5.83	0.35	1,089	8.33	0.76	48,471	630	1.30
2016	1,644	5.37	0.33	1,068	7.84	0.73	47,276	558	1.18
2017	1,621	4.94	0.30	1,042	7.42	0.71	48,170	563	1.17
2018	1,596	4.35	0.27	1,021	6.92	0.68	50,051	539	1.08

* 자료 : 통계포털(KOSIS)

정부에서는 화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육성하기 위해 고품질 화훼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화훼 소비문화 확산과 화훼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중부권 음성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였고 수도권과 영남권에 단계적으로 1개소씩 화훼 전용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선물용 소비를 일상 생활용 소비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정부에서는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크게 생산, 유통, 소비, 수출로 구분하고 생산자단체, 학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왔다.

첫째, 선진 화훼유통체계를 구축하고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음성에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중이며, 경매 활성화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지역 화훼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화훼유통의 긍정적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소비자 접근성, 경매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양시(수도권), 김해시(영남권)에 추가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절화 품질향상과 관상기간연장을 위해 화훼류 습식유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쉽게 꽃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전문점(슈퍼마켓, 편의점, 생활용품점 등) 내 ‘화훼 판매코너’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선물용 소비에서 일상 생활용 소비로의 전환을 위해 공익광고 홍보, 청탁금지법 상 수수범위가 가능한 꽃 선물 소비촉진 캠페인 등 TV 광고, SNS, 웹툰 등 소비문화 전환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셋째, 미래 꽃 소비자인 어린이·청소년들이 꽃에 대해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위기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정서함양·치유 등을 위해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다.

향후계획


시장개방,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 국·내외 여건변화로 화훼산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화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산품종 개발·보급으로 농가의 로얄티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상속에 화훼 소비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꽃 생활화 홍보강화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판매 채널을 확대하여 일상 생활속 소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꽃 생활화 교육, 유통전문점 화훼 판매코너 확대 운영, 꽃 소비 생활화 캠페인 및 방송 홍보 등을 추진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화훼 신상품 개발 및 기업·기관 가정에서의 꽃 소비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1

한우산업

 축산경영과 사무관 조재성

 시행배경

한·미 FTA 등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생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소비촉진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와 연구사업 등 자율적 수급안정을 추진하였다.

 시행내용 및 성과

한우번식기반 유지·강화

2001년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소값 안정 및 한우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사육 마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2012년도에 송아지생산안정 보전금을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으로 지급조건을 개선하였고, 가격조사대상 송아지를 기존 4~5개월령에서 6~7개월령으로 기준가격도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 결과로 사육마리수는 '13. 1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고, 산지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농가경영안정을 기하였다.

한우산업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혈통등록, 도체정보수집 등 한우 개량자원 확대, 효율적인 개량정보의 수집·활동체계 구축, “초음파 단층촬영 기술”, “유전자 분석기술” 등 첨단기술의 현장 적용으로 한우 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규모화된 브랜드 육성도 중점 추진하여 2003년부터 40여 개 한우 브랜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소규모 사육농가는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가축개량과 통일된 사양관리로 품질이 높고 균일한 한우고기를 생산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유통업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3년에는 쇠고기생산성향상 지원사업과 한우농가 조직체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우농가조직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우산업 조직화로 시군 지역별로 한우사업단 162개를 인증하였으며 농가조직 중심으로 정책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3년에는 한우농가조직화사업을 통해 실적이 우수한 한우사업단 10개소에 대하여 10억원씩 지원하였다.

아울러, 유통개선 및 직거래 확대 대책은 대형패커 육성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 도축장 구조조정 및 도축세 폐지, 직거래 장터, 브랜드가맹점 등 직거래 확대, 소비자 판매가격 주기적 조사·공표 등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소비홍보 및 산지 소값 안정대책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소비촉진과 교육·홍보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TV광고 제작·방영, 통화연결음 활용 광고, 소비촉진 이벤트행사 실시, 한우농가 계도·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한편, 2009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08.7월) 및 쇠고기 이력제('09.6월)의 전면시행으로 쇠고기 소비가 늘어 산지 소값이 한·미 FTA 협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이에 따라 사육마리수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0년 11월 경북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의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2011년 5월부터 대대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였다. 2018년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237천톤)으로 1인당 소비량은 12.7kg으로 증가하였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해 한우의 가격 하락의 피해가 인정되어 '13년에 한우 및 한우 송아지, '14년에는 한우송아지를 출하한 농업인에 대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폐업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향후계획

출하월령 단축, 사료비 절감 및 송아지 생산성 향상 등 생산비 절감, 온라인 거래 활성화, 산지-소비자 가격연동제 등 유통비용 절감, 육량개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역량강화를 통해 자율적인 수급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

낙농산업

 축산경영과 사무관 임지현

시행 배경

FTA 확대로 수입 유제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 등에 따른 시유 소비량 감소로 원유수급안정 대책 추진과 우유 및 유제품 소비홍보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였다.

시행 내용 및 성과

'18년 수급상황은 '17년 대비 17천톤 감소한 2,041천톤의 원유가 생산되어 1,932천톤을 원유로 직접사용(백색시유 1,403, 가공시유 168, 유제품 361)하고 나머지 109천톤을 분유로 가공한 후 타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였다.

표 4-3 우유 수급상황

(단위: 만 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생 산	211	207	189	211	209	221	217	207	206	204
수 요	311	325	360	345	368	376	394	402	420	426
- 시 유	157	154	148	158	159	154	153	156	157	157
(백색시유)	(140)	(138)	(132)	(141)	(141)	(136)	(135)	(141)	(140)	(140)
- 유 제 품	154	171	212	187	209	222	241	246	263	269

자료 : 낙농진흥회, 2018년

원유수급상황 파악을 위해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낙농-유업 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원유수급 안정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유생산안정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정상가격 지불정지선 운영, 연간총량제 폐지, 초과원유가격 조정 등을 통해 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내 원유생산량과 잉여가 감소하였으며, 분유재고량 또한 적정수준(10천톤)까지 감소하며 안정세가 유지되었다.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육성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낙농가-유업계 관계자로 이루어진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 를 구성하여 전국단위쿼터제,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 등 낙농산업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였다.

국내 유업체의 유제품 해외공동마케팅, 판촉 지원 등을 통해 유제품 수출 확대를 추진하였다.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 지역으로 진출하여 국산 유제품의 우수성과 새로운 시장 개척, 판로 확대를 통해 정체된 국내시장의 대안으로 기대를 높였다.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우유자조금사업으로 일반소비자를 초청하여 ‘소비자 낙농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소비자들에게 낙농목장과 유가공장을 공개하여 우유가 어떤 환경에서 생산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농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우유와 유제품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밖에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을 통해 영양불균형이 심각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영양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소년기의 우유음용 습관 형성에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학교우유 급식 확대 시범사업(초등학교 1학년) 실시, 세계학교우유급식의 날 개최, 초·중·고등학생 및 교직원 참여 우유소비확대 경연대회, 우유급식 우수학교 선정 등을 추진하였다.

표 4-4 학교우유급식 우유소비량 현황

(단위: 천 명, 천 톤)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학교우유급식 학생수	3,538	3,456	3,359	3,208	2,915	2,938	2,806	
유상급식	2,547	2,477	2,437	2,239	1,829	1,831	1,734	
무상급식	991	979	922	969	1,086	1,107	1,072	
연간 원유 총생산량(A)	2,111	2,093	2,214	2,168	2,069	2,058	2,041	
연간 백색우유 소비량(B)	1,405	1,392	1,356	1,345	1,384	1,369	1,378	
우유급식 연간 소비량(C)	138	135	132	123	116	115	113	
대비율	백색우유 대비 (C/B)	9.8%	9.7%	9.7%	9.1%	8.4%	8.4%	8.2%
	생산량 대비 (C/A)	6.5%	6.5%	6.0%	5.7%	5.6%	5.6%	5.5%

표 4-5 최근 5년간 우유급식물 변화

(단위: 천 명,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급식 학생	급식률	급식 학생	급식률	급식 학생	급식률	급식 학생	급식률	급식 학생	급식률
초	2,232	81.8	2,166	79.8	1,960	74.2	2,037	76.2	1,953	72.0
중	645	37.6	584	36.8	521	37.1	501	36.2	469	35.2
고	458	24.9	432	24.1	409	25.4	375	22.5	360	23.4
특수	24	96.8	26	99.8	25	99.6	25	97.6	24	95.0
계	3,359	53.2	3,208	52.5	2,915	51.3	2,938	51.1	2,806	50.0

향후계획

원유수급안정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수급관리 강화를 중점으로 원유의 생산·소비까지 감안하여 생산자·유업계 관계자 등과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주기적인 원유수급 점검을 통해 시장상황과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탄력적으로 수급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원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국단위쿼터제, 원유의 용도별차등가격제, 원유 가격 결정체계 개선 등 낙농제도 개선 검토와 더불어 국산 유가공품 소비홍보 강화, 중국 및 동남아 수출국을 대상으로 유제품 현지 마케팅 지원을 통해 시장개방 여건 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3

양돈산업

축산경영과 서기관 김성구

시행배경

FTA 등 대외개방 확대, 악취 문제 발생 등에 따른 환경규제, 분뇨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돈의무자조금 정착, 농협 등 생산자 단체의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 강화, 돼지고기 수출 확대 등을 통한 양돈산업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돼지 사육두수는 돼지고기 가격 호조로 2018년 1,133만 마리로 전년 동기 1,127만 마리에 비해 0.5% 증가하였으며, 양돈농장수는 6.2천 농장으로 전년 동기보다 2.0%감소하였다.

가격 호조에 따른 입식 증가로 2018년 돼지고기 도축 마릿수는 2017년에 비해 3.8% 증가하였고,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총공급량도 2017년에 비해 10.8% 증가하였다.

돼지고기 가격 등락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한돈팜스를 통한 관측강화, 육가공업체와 생산자단체 간 상생을 위한 돼지 뒷다리살 장기공급 협약 체결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향후계획


정부에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축사시설 및 주위 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축산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육가공업체와 농가간 장기공급 계약 확대, 돼지가격 정산 기준 전환 유도, 수급조절협의회 등을 통한 업계자율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돈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영양학적 우수성 전달을 통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


양계산업

 축산경영과 사무관 이상훈

 시행배경

‘16/’17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장기화 및 ‘17년 8월 살충제 계란사태 등으로 양계산물의 수급불안이 지속되어 양계농가와 계열화사업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국민의 위생·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FT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국내 양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축사의 시설현대화, 축산계열화사업,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양계자조금 지원 등과 더불어 양계산물에 대한 품질향상 및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외국산과의 차별화 및 유통구조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국내 양계산업의 기반 강화 및 AI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가금농가의 열악한 사육시설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었으며, 이에 가금에 한해 축사시설현대화 보조비율을 상향(10% → 30)하고,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의 축사를 안전지역으로의 이전·개편을 지원하였다.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8년 12월 기준 계열화율은 닭(토종닭 포함) 92.1%, 오리 96.8%, 양돈 14.2% 수준이다.

축산계열화사업은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참여 주체간 갈등은 축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계열화사업의 공정거래 및 상호협력 관계 도모를 위해 ’13.2.23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농가의 권익보호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계열화사업 등록제, 등급·평가제, 판매가격공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위생·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한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의 원활한 시행과 합리적인 가격결정체계 구축을 위해 공판장 기능을 하는 계란유통센터의 신·증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09년 6월부터 닭고기 및 계란 의무자조금을 도입하여 2018년도

에도 소비홍보, 농가교육,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가격안정 도모 등에 기여하였다.

향후계획

2019년도에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계열화사업,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닭고기·계란 자조금 지원 등을 통해 양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계열화사업자와 계열 농가간 공정한 거래유도를 위해 축산계열화법 및 동법 하위법령, 고시 등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산환경자원과 서기관 권우순

시행배경

국제 사료가격 상승 및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국내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부존자원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조사료 수급을 위하여 겨울철 유희지, 간척지 등을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998년부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시작하여 조사료 생산·가공·유통·이용을 위한 사일리지제조비, 종자 구입비, 장거리 유통비, 기계·장비 구입비, 전문단지 조성, 가공·유통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 '17년도 1,042억 원에서 '18년도 971억 원으로 축소되었지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각 지자체, 협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를 '15년도에

99개 시·군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실시, '16년도에는 이를 전면 시행하는 동시에 품질검사 및 등급제를 반영한 사일리지 제조비·유통비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에 무계로만 산출되던 사일리지 제조비에 무계와 품질등급이 반영되어 연도별 동계작물 수분이 '14년도 45.9%에서 '15년도 37.3%, 그리고 '17년도 30.4%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동안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수분함량, 이물질 포함 등)을 이유로 국내산 조사료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품질검사 및 등급제 사업과 이를 연계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20년도까지 총 60개소의 조사료 전문생산단지에서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지원비, 기계장비, 퇴액비, 입모중과중비 등을 일반단지과 다르게 차등 지원하여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8년도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은 4,707천 톤으로 '17년도보다 361천 톤 정도 증가하였고, 품질검사 및 등급제 시행과 전문단지 지원 등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 이행으로 자급률 향상 및 원활한 국내산 조사료 수급을 도모하고자 한다.

향후계획

그동안, 조사료 생산 확대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경종농가가 낮은 수익과 이모작 기피 등을 이유로 사료작물 재배 참여가 저조하여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률 정체와 품질저하 등의 여러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조사료 생산·이용을 위한 전문생산단지와 가공·유통센터를 지원하여 원활한 국내산 조사료 수급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는 '15년도 99개 시·도 시범 운영으로 시작하여 '16년도에 전면 시행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사일리지 제조비, 유통비 등을 지원하였다. '18년도엔 이를 하계작물(논 타작물 조사료)로 확대 시행한 데에 이어 '19년도엔 전체 동·하계작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과 생산 농가의 재배 기술이 향상되어 수입조사료 대비 경쟁력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해 축산농가·TMR의 맞춤형 교육·홍보를 확대 추진하여,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자의 국내산 조사료의 인식 제고와 이용 기술 함양 등을 통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6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정창남

시행배경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부담을 줄이고 수질·토양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능가 및 농업법인, 농축협 등에 가축분뇨를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 등에 필요한 처리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991년부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시작하여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시설·기계·장비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이후,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 확대 및 퇴액비 유통기반을 구축이 필요하였다. 이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자금을 지속확보하여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926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경우 크게 생산기반 시설지원(축산악취개선, 공동자원화, 친환경퇴비시설현대화사업), 유통지원(평가를 통해 액비살포비지원), 품질관리(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지원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리시설, 유통활성화 지원, 품질관리 지원 등으로 2011년 이후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근절(260만톤 → 0)하였고, 양질의 퇴액비를 경종농가에 공급하는데 기여하였다.

축산악취개선의 경우 축산농가에 대한 분뇨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조를 지원하고 있고, 액비를 수집하여 토양에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 지원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공동자원화사업은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 신규 시설 지원과 기존 시설 개보수를 자원화조직체 219개소(공동자원화시설 85개소, 액비유통센터 134개소)에 지원하여 연간 발생하는 돼지 분뇨 22.2%(2,069만톤 중 459만톤)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퇴·액비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성분분석기('18년까지 198개소), 부숙도판정기를 ('18년까지 200개소)보급하였고, 퇴액비 품질향상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등 자원화조직

체의 비료생산업 '18년 100%(85/85개소)등록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17년 91.0%에서 '18년 91.2%로 끌어 올렸으며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분뇨를 원료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끝으로, '17년부터는 축산농가가 스스로 깨끗한 농장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추진('18년누계 1,815호 지정)중이다. 이 대책은 일정 기준 이상의 악취관리, 경관개선을 시행하는 농장을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하고, 정부지원 등을 집중하는 사업으로 지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농식품부,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축산악취 등 축산환경문제를 전담으로 해결하기 위해 '15년도 가축분뇨법의 근거로 설치된 재단법인),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축산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인 악취를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해 축산단지 중심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 등을 일관 지원하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16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이사업의 성과를 계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ICT활용 축산악취 모니터링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축산악취 모니터링 사업은 축산농장에 악취 감지 센서를 설치('18년 59개소)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시 농가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각하거나 구조적인 문제 발생시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냄새해결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계획

그동안,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기반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들어 귀농·귀촌 증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축산악취 민원 증가하고 있고 가축분뇨 처리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 현상 등의 여러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지원 및 축산환경관리원 등 전문기관을 활용한 농가 컨설팅·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농장 자가 점검표, 분뇨처리 및 악취관리 매뉴얼 제공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과 함께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등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분뇨·악취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환경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축산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하고자 관계부처가 참여해서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개별농가, 처리시설 등에서의

분노 발생·처리 및 농장 내 가축사육두수 등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도 포함하여 생산단계부터 축산업 사육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차단하고, 자원화를 촉진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7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축산물 위생관리팀

시행배경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축 사육 단계부터 최종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평가하여 그 위해요소를 사전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충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가축사육단계에서는 농가가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항생제 휴약기간 준수요령, 안전사용규칙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축사육농장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더욱 확대하여 식용란을 생산하는 부화장과 산양 농장에서도 HACCP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고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로써 주요 축종에 대하여는 농장부터 축산물의 최종 판매단계까지 전 단계 HACCP 시스템(Farm-to-Table HACCP system)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생산단계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육 및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는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잔류위반 농가나 긴급도축, 주사자국이 있는 경우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를 확대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총 149천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유해물질 잔류여부를 검사하였으며, 그 결과 522두에서 항생제 등 잔류물질이 검출(위반율 0.35%)되었다.

이는 2016년도의 잔류물질 검출률 0.25%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부적합률은 미국·EU 등 선진국에 견줄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도축장 위생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축장별로 매주 1회씩 시료를 채취하여 대장균 및 일반세균 등 미생물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식중독균 오염의 지표가 되는 살모넬라 균의 오염여부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축산농장에서 HACCP 적용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2012년 4,079개소에서 2017년 7,487개소로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기립불능소 도축금지 및 보상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에 따라 부산, 난산, 산육마비, 급성고창증을 제외한 원인으로 발생한 기립불능소에 대해서는 모두 도축을 금지하고, BSE 검사를 거친 후 폐기하고 폐기한 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향후계획

2018년도에도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사료첨가용 동물약품의 종류를 감축하여 2011년 7월부터 사료 제조시 항생제 첨가를 금지하고, 이와 함께 가축사육 농가들이 항생제를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항생제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2013.8)에 따른 세부 추진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2017년 12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관계기관과 협력 하에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8 가축질병 방역 강화

 구제역방역과 사무관 정승교, 사무관 신만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사무관 황성철

시행배경

국내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 및 관련 산업에 피해가 커짐에 따라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질병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 구제역 >

구제역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10차례 발생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발생기간과 살처분 가축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의 경우 3월 26일과 4월 1일 두 차례 경기 김포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연도별 구제역 발생현황]

구 분	발생 건수	발생기간	살처분 가축수
'10~'11년	153건	145일	3,480천마리
'14~'15년	188건	162일	170천마리
'16년	21건	45일	33천마리
'17년	9건	9일	1.4천마리
'18년	2건	7일	11.7천마리

김포에서 A형 구제역 발생과 동시에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3.27~3.29, 48시간)하고, 가축시장 폐쇄조치(3.27~4.23), 농장 간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 이동금지 조치(3.27~4.16)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였다. 돼지에서 A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2017년도에 추가경정 예산으로 비축하고 있던 백신을 활용하여 2018년 3~4월 구제역 발생 초기부터 전국 돼지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실시하였다

(1차 접종 3.17~4.23., 2차 접종 4.20~5.23). 또한 전국 우제류 도축장(75개소) 및 집유장(66개소)에 소독전담관(186명)을 배치하여 출입차량과 해당 시설 내외부에 대한 소독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추가 발생 없이 4월 30일자로 전국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되었고 위기단계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되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사전 대비와 강화된 방역조치에 힘입어 2018년 구제역이 적은 피해로 조기에 마무리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공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금번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18.10월)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으로 돼지 상시백신에 A형을 추가하여 O+A형으로 보강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초동 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감수성 가축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확대하고, 살처분 완료시한을 설정(발생농장은 24시간 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은 72시간 내)하기로 하였다. 또한, 구제역 의심 시 혈청형 확인이 가능한 간이 진단 키트를 보급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조류인플루엔자 >

고병원성 AI는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전국 10개 시·도(50개 시·군)에 걸쳐 총 383건의 AI가 발생하였고, 946호의 농가에서 3천 787만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등 사상 최대의 피해를 기록하였다. 당시 발생한 AI는 2가지 유형으로 그전까지 우리나라에 발생한 적이 없었던 H5N6형 AI가 343건, 2014~15년 국내 발생했던 H5N8형 AI가 40건이었다.

[연도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현황]

구 분	발생 건수	발생기간	살처분 가축수
‘14.01.16.~’15.11.15	391건	517일	2,477만마리
‘16.03.23.~’17.06.19	421건	170일	3,807만마리
‘17.11.17~’18.03.17.	22건	121일	654만마리

AI 확산과 대규모 피해의 원인으로 방역인력 부족 등에 따른 살처분 지연, 밀집사육으로 인한 축산업의 구조적 한계, 농장의 차단방역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2014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책이

마련된 지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7년 6월 전통시장과 거래하는 소규모 농장 등 방역이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총 36건의 고병원성 AI(H5N8형)가 다시 발생하였다.

AI 등 거듭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역업무를 전담하는 방역정책국이 2017년 8월 신설되었고, 언제든 AI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존의 대책을 보완하는 AI 방역종합대책이 2017년 9월 마련되었다. 또한, 2017년 겨울철에는 2018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AI 위험지역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휴업보상제), 거점소독시설 조기 설치, 도축장 검사강화, 전통시장 오리류 유통금지 등 AI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였다.

2017년 11월 17일,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H5N6형)가 다시 발생하였으나, 농식품부는 AI 방역매뉴얼(긴급행동지침) 보다 1~2일 빠른 초동 대처와 오리 사육제한, 신속하고 과감한 살처분 등 예전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통해 2018년 3월 17일 까지 총 22건의 발생으로 AI 확산을 차단하여 이전 발생시기('16.3.~'17.6.) 대비 발생 건수를 95%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8년 7월 AI 청정국 선언 이후 비발생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관 협업을 통한 상시 방역관리체계 구축으로 AI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

소 브루셀라병은 *Brucella abortus*가 원인체인 세균성질병으로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자 사람의 제3군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2004년부터 근절을 목표로 양성축 살처분과 거래 시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 도태 등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13년부터 브루셀라병 양성율은 0.1%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발생감소를 위해 집단 발생 농가와 반복 발생농가 등에 대해 관리농가로 지정하여 검사를 강화(중전: 연1회 이상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검사 → 강화: 3년간 연2회 이상, 한육우 거세우를 제외한 전두수 검사)하고, 신규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발생 후 1개월 내에 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며,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으로 브루셀라병 검사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17.10월)하여 추진하였다. 아울러, '18.6월 고시를 개정하여 브루셀라병 발생농가의 도태규정을 보완(균분리검사에서 균이 확인될 경우 동거축 도태 권고 가능)하고, 발생농가 가축 재입식 전에 소독상태를 점검토록 하며 감염소의 유사산이나 3회 이상 반복 발생 또는 사육두수의 1/3이상 감염 등 감염위험농가에 대해 환경내

균분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생을 감소를 위한 발생농장·지역 중심의 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소 브루셀라병 발생현황, KAHIS]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건수(마리수)	84(723)	54(385)	51(480)	92(686)	63(62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소 결핵병은 *Mycobacterium bovis*가 원인체인 세균성질병으로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자 사람의 제3군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결핵병은 만성 소모성질병으로 가축에게 있어 곁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이나 쇠약, 마른 기침 등이 나타나므로 농가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연도별 소 결핵병 발생현황, KAHIS]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건수(마리수)	430(4,109)	338(2,885)	354(3,239)	443(3,497)	427(2,78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이에 따라 우리부는 결핵병 발생 감소를 위해 '16년11월부터 한·육우에 대한 결핵검사를 강화하였다. 한·육우는 종전 연30만두 수준으로 모니터링 검사만 하였으나 1세 이상의 거래되는 한·육우에 대해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여 약 56만두 이상('18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과 마찬가지로 결핵병 신규 발생농가에 대해서도 발생 후 1개월내에 농장의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토록 하고, 민관 합동으로 농가를 교육·홍보하고 있다.

우리부는 앞으로도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발생 감소를 위해 발생지역과 농가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 전 소독 점검과 발생 농장에 대한 도태 권고 규정 개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 소 해면상뇌증(BSE) >

소 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BSE)는 프리온이 원인으로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국내는 비발생으로 '14년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위험무시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위험무시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7년간 30만점 이상의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우리나라는 '12~'18년까지 약 50만4백점을 획득), 2003년부터 농장과 도축장에 사육(계류) 중인 가축에 대해 가축방역관이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우리나라는 '16~'18년까지 농장 약 58천호, 농장·도축장내 가축 383만여두에 대해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없음), BSE 발생국산 수입소와 해당 소로부터 태어난 송아지(F1)에 대해 검사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OIE의 위험무시국 지위요건(예찰점수 산정기준): 7년간 30만점 이상 검사]

Age (year)	정상도축 소 (Routine slaughter)	폐사 소 (Fallen stock)	사고 소 (Casualty Slaughter)	유사증상 소 (Clinical suspect)
1 ≤ age < 2	0.01	0.2	0.4	N/A
2 ≤ age < 4	0.1	0.2	0.4	260
4 ≤ age < 7	0.2	0.9	1.6	750
7 ≤ age < 9	0.1	0.4	0.7	220
9 ≤ age	0.0	0.1	0.2	4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우리부는 앞으로도 소해면상뇌증(BSE) 위험무시국 지위 유지를 위해 검사와 예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향후계획

정부는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정부 주도로 방역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자율 방역을 강화하고, 농협·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민간 방역 기관과 정부간 그리고 정부 부처 간에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선진화된 방역체계가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9


축산물등급판정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축산정책과 서기관 서정호

 시행배경

1994년에 타결된 UR협상은 축산물의 수입개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DDA, FTA, 쇠고기협상 등의 진행에 따라 축산물 수입개방이 대폭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축산물 수입확대 추세와 국민 식생활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축산물유통의 표준화·규격화 및 가축개량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산 축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축산법에 근거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을 도입하였다.

사업도입 이후 현재까지 소와 돼지고기에 대해 등급화 거래지역을 전국으로 확대(2000년) 하여 도축되는 전량에 대해 등급판정을 시행하고, 계란(2003년), 닭고기(2007년) 및 오리고기(2012년)에 대해서는 업체의 희망에 따라 등급판정을 시행함으로써 주요 국내산 축산물의 고품질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유통거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편의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은 현재 주요 축산물(소, 돼지, 계란, 닭, 오리)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양축농가가 사육한 소와 돼지는 도축장에 출하되어 도축된 후 도체상태로 등급판정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위생검사에 합격된 도체만을 대상으로 등급판정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도체별로 시행된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도체에 등급을 표시하고 등급판정확인서가 첨부되어 유통되게 함으로써 도체의 품질가치가 유통단계 및 소매단계까지 증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산물의 도소매 가격이 품질에 따라 적절하게 차등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였다.

2018년 등급별 가격차이는 한우의 경우 최고등급인 1++등급과 최하등급인 3등급 간 8,933원/kg으로 2017년 대비 344원이 축소되었으며 돼지는 1+등급과 2등급 간 357원/kg으로 2017년 대비 90원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축산물의 품질 간 가격 차등화의 정착은 양축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욕을 고취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개선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표인 한우거세율은 2017년 95.5%에서 2018년 95.8%로 0.3%p 증가하였고, 돼지의 경우 거세율은 2017년 98.8%에서 2018년 98.8%로 변동이 없었으며 1등급(1+포함)이상 출현율 또한 2017년 63.8%에서 2018년 63.8%로 변화가 없었다.

계란, 닭고기 및 오리의 등급판정은 업체의 신청에 따라 엄격한 공정과정 심사결과에 의해 지정된 등급판정시행 작업장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학교급식에 납품 기준으로 축산물의 등급이 설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판정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계란은 2018년 47개 시행집하장에서 1,057백만 개를 등급판정 하였으며, 이는 2017년 판정물량인 756백만 개 대비 39.8% 증가된 것이다. 닭고기는 2018년 35개 시행 작업장에서 112백만 수를 등급판정 하였으며, 2017년 106백만 수 대비 5.9% 증가하였다. 오리는 2018년 11개 시행 작업장에서 28백만 수를 등급판정 하였으며, 이는 17년 판정물량인 31백만 수 대비 9.0% 감소하였다. 이러한 양계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사업은 학교급식에 이어 대형할인점 및 프랜차이즈업체 등에도 등급의 활용도가 확대되어 등급판정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은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 이후 그 판정결과 및 연계된 가격 정보 등을 신속하게 양축농가와 유통업체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축산물의 품질에 따른 적절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등급판정결과를 활용하고, 검증·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 중에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시스템은 축산물등급판정사업 시행주체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예산을 지원하여 구축된 IT인프라에 기반을 두고 운용되며 등급통계, 출하지원, 확인서 조회, 경락가격 조회, 돈육대표가격, 축산물검수시스템, 부위별 요리 방법, 축산물브랜드 등 다양한 축산물생산과 유통·소비 정보를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각 분야에서의 축산물등급판정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내산 축산물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물등급판정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축산분야 전문적 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축산현장의 애로사항 해결노력의 일환으로 축산물등급판정 대상 품목인 소, 돼지, 계란, 닭 및 오리 등에 대하여 등급판정과 관련된 연구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 조사는 축산여건 및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 등에 맞는 등급제도의 개선, 영농활용 등에 필요한 현장중심의 실용적 해결과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등급판정사업

현장과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 컨설팅 등에 교육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8년은 대내외 9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소·돼지 등 등급판정 기준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에 있으며, 그 외 학회 논문투고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향후계획

구제역,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질병문제와 국제적 경제 위기 등으로 국내 축산 생산여건은 급격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자의 소비성향이 가격과 품질 등을 효율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사양관리 개선에 노력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고급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소도체 등급기준 개정을 통해 사육개월령 단축을 통한 생산비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품목별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고품질의 축산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품질관리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생산자, 유통업자는 소비자에게 선택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축산물등급판정 정보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등급판정정보를 축산농가 및 유통업자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전산화를 통해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생산·유통·소비주체가 원하는 축산 전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고도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10

축산물이력제 추진

축산경영과 사무관 도재규

시행배경

유럽,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축산 관련 단체의 요구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에 대응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내산·수입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이력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쇠고기이력제는 소의 출생·수입에서부터 도축·포장·판매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둔갑 판매 등을 방지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를 확대하며, 가축개량 등을 위한 정보통합관리 등으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및 2011년 구제역 발생,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별화를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신속한 방역지원 및 한우 소비량 증가 등 소 이력관리 운영의 순기능이 부각되면서 2011년부터 축산업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돼지고기이력제 실시방안을 준비했다. 그 결과, 2013년 12월 27일자로 돼지 및 국내산 돼지고기에도 법적으로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으며, 2014년 12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돼지 및 국내산 돼지고기에도 이력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2015년 6월 28일부터 국내산 돼지고기를 포함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거래내역서 등에도 이력번호를 포함하여 기록·관리하되, 축산물이력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업소에서는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전산신고가 의무적용 되었다.

2016년 12월 27일 법 일부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유통·판매단계의 이력제 적용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포함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로 보완하였다.

2017년에는 AI 및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 확대에 따라 가금 및 가금산물 유통의 체계적인 수급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가금이력제 도입 타당성 및 적용방법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시행내용 및 성과

첫째, 쇠고기이력제는 2004년 10월부터 9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시작으로 시·군 및 전국으로 확대하여 농장경영자 등의 신고 접수와 귀표 부착, 이력정보의 전산입력 체계 등을 구축하였다. 이후, 2007년 12월 21일자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었으며, 2008년에는 동 법률 시행령('08.12.9.) 및 시행규칙('08.12.19.) 등을 제정하여 소의 출생·거래 등 신고절차와 도축·포장처리·판매 단계에서의 국내산 쇠고기에 이력번호 표시 및 판매실적 신고방법 등 세부사항 시행체계를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 귀표를 구매하여 전국 위탁기관에 공급하고 농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토록 하였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이력시스템 관리, 이력지원실 운영,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였다. 더불어 2009년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이력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하기 위해 지역 농(축)협 등 135개소를 소 출생 등 신고접수와 귀표 부착 지원을 시행하는 위탁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귀표 미부착 또는 이력시스템 미 등록소의 도축금지로 인한 농가의 혼란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2009년에는 쇠고기이력제가 유통 단계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유통 단계 시범실시를 통해 식육판매업소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실적의 기록·관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 등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고도화, 쇠고기이력제의 사후검증 수단인 DNA 동일성검사 방안 정립 및 단속 활용, 이력지원실 운영을 통한 실시간 민원상담 등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소 사육현황을 조사하는 소 사육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력시스템의 정확성을 제고하였고, 이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였으며, DNA 동일성검사 장비 및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한 이력정보 조회 방법 개발, 이력제 예산 및 마사회 적립금을 활용한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였다. 또한 12월부터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도 유통이력

제를 실시하여 축산물에 대한 안전 기반을 확대하였다.

2011년에는 소 질병 잠복기를 고려한 방역의 효율성 및 농가의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신고기한을 3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질병 등에 취약한 젖소에서 태어난 육우의 초유떼기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육우의 경우 귀표 부착 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으며,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의무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를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국내산 귀표 개발을 완료하여 귀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였으며, 묶음번호에 대한 이력조회 기능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조회 방법 등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각종 이력업무 처리 속도 및 저장용량 개선 등을 통해 현장업무 및 방역 효율성 향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7년 3분기에는 「소 이력자료」가 국가통계로 승인되어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를 대체하여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조사비용 절감 등 행정자료를 이용한 효율적인 통계 생산 및 통계수치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수입쇠고기 이력제는 2008년 5월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과정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되어 2008년 7월 식품안전종합대책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수입 쇠고기이력관리제가 시행되었다. 수입쇠고기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의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거래내역을 신고·기록 관리토록 하여 수입쇠고기의 유통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입쇠고기의 위해상황 발생 시 소비자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2014년 12월 2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 내 집단급식소 등에서 수입쇠고기 이력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제도 안정화를 위하여 매년 영업자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중매체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영업장 지도·단속을 통하여 정확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셋째, 돼지고기 이력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력제 대상 축종을 돼지 및 국내산 돼지고기까지 확대하기 위해, 돼지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단계별 사업 실시요령 및 시범사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돼지고기이력제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2012년 10월부터 558농가(1,200천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돼지 사육 두수 및 돼지고기의 연간 생산량 등을 고려해 기존 개체단위의 쇠고기이력제와 다르게 농장단위의 이력제를 도입하였다. 2013년도에는 돼지고기이력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기존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하여 2013년 12월 27일자로 개정·공포하였으며,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및 각 종 실무협의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애로 및 개선 사항 등을 수렴 후, 2013년 6월부터 777농가(2,000천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운영하였다. 아울러 쇠고기이력제의 이력정보 정확도 검증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등의 주관으로 “이력시스템 오류두수 검증조사 및 사육두수 검증” 연구과제를 통해 이력정보의 신뢰수준을 향상시켰다.

2014년도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4.12.26.) 및 시행규칙('14.12.30.)을 제정하여 돼지의 사육현황·이동 등 신고절차와 도축·포장처리·판매 단계에서의 국내산 돼지고기에 이력번호 표시 및 포장처리·거래실적 신고방법 등 세부사항 시행체계를 마련하였다. 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돼지사육시설을 대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했으며, 종돈의 개체별 이력관리 업무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위탁하여 종돈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모바일을 통한 사육현황 신고 서비스 제공, 도축장 이력번호 표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자동표시기 설치·보급, 유통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및 포장처리·거래 신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원하였다.

한편, 2015년도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14.12.28일 시행) 시행으로 2015년 6월 28일부터 이력번호 표시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일정규모 이상 유통업소의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전산신고가 의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영세 유통업소에 대한 교육·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제도 이행업무 향상을 위한 식육판매표지판 및 전산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력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육·도축·포장처리·판매 전 단계의 이력제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등을 추진하였으며, 축산물이력법률 관련 고시 3종(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 기준,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을 개정하여 이력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마련으로 이력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2016년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16.6.28일 개정)으로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정확한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여 수입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여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이행대상에 추가하여 이력정보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축산물이력관리 제도 정착으로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 기준을 폐지하였다. 또한 소 이력제 자료를 국가가축통계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 이력제 자료의 정책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2017년 3분기에는 「소 이력자료」가 국가통계로 승인되어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를 대체하여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조사비용 절감 등 행정자료를 이용한 효율적인 통계 생산 및 통계수치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넷째, 닭·오리·계란 이력제는 2017년 10월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관리 적용 모델 개발 연구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일본 가금농장 및 유통업체에 대한 선진 사례 조사를 거쳐 2018년 1월 가금(산물)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전국 가금농장 11,056곳을 조사하여 7,408개소에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닭 10개소, 계란 7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를 시범사업 참여업체로 선정하여 이력번호 표시기를 지원하며 11월부터 1차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닭·오리·계란 이력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이력관리대상가축에 닭과 오리를 추가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중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닭과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과 계란을 추가하여 2018년 12월 31일자로 개정·공포하였다.

한편, 사육단계의 이력제 적용대상에 가축거래상인을 포함시키고,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장이나 제품, 인터넷 등에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해야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표 4-6 축산물이력제 단계별 운영현황('18.12월 기준)

구 분	농장		도축장		전산신고 등록 유통업소		
	소	돼지	소	돼지	계	포장처리	판매
2016년	102,918	6,656	65	71	3,234	1,315	1,919
2017년	99,168	6,562	64	71	3,430	1,434	1,996
2018년	95,916	6,176	61	71	3,574	1,496	2,078

자료 : 이력관리시스템

향후계획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4.12.28일) 이후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이 돼지·돼지고기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 및 유통업체의 제도 이해 및 준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이행 업종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현장조치를 하였다. 이력제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지역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력관리를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이력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도 시행의 직접 수혜 대상인 소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스마트폰 앱 및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이력정보 조회시 가축질병 검사 결과를 추가 제공하였다.

2017년에는 소 이력자료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됨에 따라 자료품질향상을 위해 사육 단계 이력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수행하여 그 결과를 추후 이력제 개선에 활용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업무환경 구현을 위한 차세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및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이력정보 관리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AI' 발생 및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확대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가금사육농가 일제조사 등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문제점 보완 등 안정적 제도 이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림 4-1 축산물 이력정보 조회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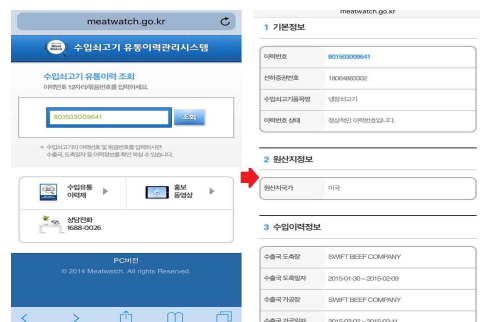
· 축산물이력제(국내산) 홈페이지 : www.mtrace.go.kr



· 스마트폰 앱 : “축산물이력제”



· 축산물이력제(수입쇠고기) 홈페이지 : www.meatwatch.go.kr



11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축산정책과 서기관 서정호

시행배경

축산물 생산·유통 구조를 품질경쟁력을 갖춘 우수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목표 하에 「축산물브랜드육성대책」이 2004년 2월에 수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축산물 브랜드의 개념, 육성 방향 등 기본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시행내용 및 성과

그동안 축산물브랜드 육성 정책을 통해 한우, 돼지 브랜드 중심 품종사료사양관리 통일로 고품질의 균일한 축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위생·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 「축산물브랜드육성대책」 발표 이후 FTA/DDA 등으로 대외 개방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브랜드 육성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 2017년까지 브랜드 경영체 사육 비중을 소 60%, 돼지 8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이 2007년 11월에 마련되었다.

2008년은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 시행 원년으로서 ①소규모 브랜드 통합으로 규모화·광역화를 추진하고, ②우수 브랜드를 고품격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③차별화된 컨설팅·교육·홍보로 성장을 뒷받침 한다는 기본전략 하에 대책을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8년도에는 브랜드 경영체 운영자금(31개소, 872억원)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우수 브랜드에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150억원 규모) 등 중점 지원하고 실적이 저조한 브랜드는 지원을 축소하는 등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수브랜드 육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수 축산물브랜드 중심 소비자단체 평가인증,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브랜드 경영체 시설·운영자금 지원 등 지속적인 육성으로 브랜드 경영체의 가축 사육비중 증가, 지역별 한우 광역브랜드의 증가, 대형유통마트 등 판매처 확보, 소비자 인지도 상승 등 브랜드 활성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축산물의 브랜드 사육비중은 2004년 한우 21.8%, 돼지 45.5%이던 것이 2010년 각각 50.1%, 59.4% 크게 향상되었으나, 2017년에는 한우는 55.5%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돼지는 최근 가격 호조로 인한 일반출하 비중이 증가하여 43.8%로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와 함께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신청, 서류심사, 현지실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이 추천하는 우수축산물 브랜드를 찾아 판매토록 하여 시장에서의 차별화와 함께 유통업체와의 교섭력이 확보되도록 하고,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축산물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표 4-7 우수 축산물브랜드 추진 성과

구분		브랜드 현황 조사(전국)	우수 인증 브랜드
한우 브랜드	평균 사육두수	15,432.9두	20,472.6두
	평균 출하두수	2,127.8두	2,642.0두
	브랜드 출하율	55.5%	96.5%
	암소생산기반구축	50.7%	54.0%
	1++등급 출현율 (1등급 이상 출현율)	15.4% (85.6%)	19.9% (89.5%)
	혈통등록	78.1%	88.4%
	사료통일	88.1%	100%
	출하체중 390kg 이상	83.7%	87.9%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5.4%	23.8%
	평균 모든 사육두수	3,794.8두	7,463.1두
돼지 브랜드	평균 출하두수	58,255.4두	84,152.5두
	브랜드 출하율	61.9%	72.5%
	1+등급 출현율 (1등급 이상 출현율)	28.6% (63.5%)	34.5% (72.7%)
	종돈통일	52.1%	72.7%
	사료통일	79.0%	92.6%
	비육후기 사료 급여율	20.1%	22.4%
	도체중 80~93kg 이상	69.8%	77.1%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19.5%	21.8%

자료 : 2017년 축산물브랜드 현황조사, 2017년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결과(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또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학적이고 제도적인 관리시스템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쇠고기 이력제 사업을 통한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 제도를 도입('09)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07.1월부터 구이용 쇠고기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중 영업장 면적 300㎡ 이상에서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였고, '08.7.7일부터는(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08.12.22부터) 쇠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에 대해 식육점 등 유통단계는 물론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까지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도 등을 통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단속으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계획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국내산 수요 증대를 위한 직거래 기반을 위해 브랜드별 직영 판매시설 지원을 통해 브랜드육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FTA/DDA 등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 소비자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 안정적인 공급능력확보, 마케팅시스템을 갖춘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생산단계(회원농가) HACCP 인증, 친환경 및 동물복지 인증 확대를 통한 차별화된 명품 브랜드 육성, 소규모 브랜드 통합, 컨설팅·교육 강화와 동시에 브랜드 간 협력 등을 통한 브랜드 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추진해 나가며, 이를 위해 브랜드 경영체 인증 평가기준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브랜드 경영체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 조성

가. 산림용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김종근

 시행배경

우수종자를 개발하고 이를 우량한 묘목으로 육성하여 생산·공급하는 것은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의 선결조건이다. 특히, 임목은 농작물과 달리 생장기간이 길어 유전적 우수성이 증명되지 않은 종자와 묘목이 사용될 경우 임목의 생장감소가 수확기까지 누적될 뿐 아니라, 불량한 형질의 임목이 생산되어 장기적으로 많은 손실을 초래하므로 산지가 확실하고 유전적 우수성이 검증된 우수종자의 사용, 우량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기반정비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산림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종자를 채종원·채종림·채종임분에서 생산·공급하고 종자의 산지 확인, 품질관리는 물론 나아가 양묘에서 조림 전까지 산림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조림용 불량종자의 유입을 차단하고 조림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량종자를 생산·공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행을 위하여 2002년 1월 7일 국제식물 신품종보호연맹(UPOV)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식물신품종보호제도(PVP, Plant Variety Protection)를 도입하였다. 산림분야의 경우 2008년부터 시행하여 산림분야 신품종 육성가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신품종 개발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부터 모든 산림식물이 품종보호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점차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에 따라 생물종 감소의 가속화로 생물종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체결되었다. 그 이후 2014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에 관한 국제규범을 의무화하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고 2017년 8월 17일 국내 발효되는 등 생물종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7.1.17.)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품종보호제도 도입 및 조기정착

국제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에 따른 지적재산권협정(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에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었다. 산림분야는 2008년 3월 1일부터 밤나무, 표고버섯, 쑥 등 15종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1일부터는 Rubus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산림식물을, 2012년 1월 7일 부터는 모든 식물이 품종보호 대상 종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품종보호제도 도입 및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근거하여 육종가(개발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외 지적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재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품종보호제도는 향후 산림분야 종자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품종보호제도의 도입과 조기정착을 위해 신품종 출원 유도 및 개인 육종가 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강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신품종 요건 심사수행 등과 같은 일련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2008년 8월 출범시켰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417건의 신품종 출원 및 179건의 신품종 등록을 처리하였고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2,938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신품종 심사를 위한 잣대라 할 수 있는 “종별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s)” 264종을 개발하였고, 신품종 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4-8 산림분야 품종보호 대상 종

구 분	산 립 분 야
2008. 3. 1(15종)	뽕은 감, 산수유, 천마, 표고버섯, 밤나무, 느티나무, 벗나무, 단풍나무, 대추나무, 백운풀, 별개미취, 돌단풍, 기린초, 대사초, 쑥
2009. 5. 1(약 7,462종)	모든 산림식물(Rubus屬 제외)
2012. 1. 7.	모든 식물

표 4-9 산림분야 신품종보호 출원현황

구 분	산 립 분 야
2008(18)	감나무(2), 기린초(2), 밤나무(5), 백운풀(1), 별개미취(2), 표고(3), 황해쑥(3)
2009(45)	감나무(5), 곰솔(4), 구절초(2), 금잔디(1), 대추나무(1), 등골나물(1), 띠(1), 먼나무(1), 밤나무(5), 부처꽃(1), 산양삼(1), 소나무(1), 억새(1), 우산잔디(1), 읍나무(3), 인동덩굴(1), 쯤개미취(1), 주름잎(1), 주목(1), 지리대사초(1), 털부처꽃(1), 표고(10)
2010(38)	감나무(2), 개미취(1), 곰솔(2), 구절초(2), 금평의다리(1), 대추나무(1), 돌나물류(1), 밤나무(2), 사스레피나무(1), 산사나무(1), 상수리나무(1), 소나무(2), 소사나무(1), 아까시나무(4), 우목사스레피(1), 장수버섯(1), 쯤개미취(1), 표고(7), 해국(1) 헛개나무(3), 현사시나무(2)
2011(29)	개미취(1), 곰취(1), 구절초(1), 꾸지뽕나무(2), 대추나무(1), 두릅나무(1), 마가목(3), 말오줌땀(1), 밤나무(1), 백화등(1), 산초나무(1), 상수리나무(1), 섬기린초(2), 소나무(2), 어리병풍(1), 표고(9)
2012(38)	감나무(5), 곰취(3), 구절초(1), 꾸지뽕나무(1), 다래(1), 동자꽃(2), 백리향(1), 복분자딸기(5), 비비추(1), 소나무(1), 원추리(4), 잔대(1), 쪽(1), 쫄레꽃(2), 털머위(1), 털목이(2), 표고(3), 호두나무(3)
2013(38)	감나무(1), 기린초(1), 꽃송이버섯(1), 꾸지뽕나무(2), 다래(2), 로스트라타 노각나무(1), 반송(1), 밤나무(1), 산초나무(1), 소나무(1), 왕대(2), 읍나무(3), 잔디(7), 잣버섯(1), 쪽(1), 털목이(1), 표고(5), 함박꽃나무(1), 헛개나무(1), 호두나무(4),
2014(36)	감나무(2), 곰솔(1), 곰취(2), 구절초(4), 금잔디(1), 기린초(2), 꾸지뽕나무(1), 돌배나무(1), 마삭줄(2), 명석딸기(1), 미선나무(1), 밀사초(1), 밤나무(1), 산돌배(2), 솔채꽃(1), 애기사초(1), 인동덩굴(1), 잔디(2), 조팝나무(1), 참바늘버섯(1), 참억새(2), 표고(3), 호두나무(2)
2015(39)	감나무(3), 곤봉뽕나무버섯(1), 곰취(1), 구절초(2), 꽃송이버섯(2), 대추나무(2), 땃뎡이나무(1), 두릅나무(1), 목이(2), 밤나무(2), 산초나무(2), 송악(1), 일월비비추(1), 잔디(12), 쯤비비추(1), 지리대사초(1), 참억새(1), 표고(3) ※ 송악, 일월비비추, 쯤비비추 : 국립종자원 이관
2016(41)	감나무(2), 곰취(1), 굴거리나무(1), 다래(3), 목이(1), 민감초×감초(3), 밤나무(1), 산국속(1), 산초나무(1), 삽주×큰꽃삽주(6), 소사나무(1), 솔채꽃(2), 울릉국화×구절초(3), 잔디(1), 조팝나무(1), 표고(10), 호두나무(3)
2017(48)	감나무(3), 곰솔(2), 곰취(1), 곰취 × 곤달비(1), 구절초(1), 금잔디(7), 꾸지뽕나무(1), 다래(2), 다래 × 호미다래(1), 대사초(1), 돌배나무(2), 두릅나무(1), 목이(1), 물억새 × 참억새(1), 산국속(2), 산돌배(1), 소사나무(1), 울릉국화 × 구절초(1), 잔디(7), 티오이데스편백(1), 표고(7), 호랑버들 × 갯버들(1), 황해쑥(1), 흰돌기망태버섯(1)
2018(47)	감나무(2), 감초(1), 구절초속(2), 글라우카가문비나무(1), 꽃댕강나무(1), 광황나무(1), 나무수국(1), 남천(2), 다래(4), 대추나무(4), 반송(1), 밤나무(1), 버드나무속(1), 별개미취(1), 복령(1), 산딸기(2), 산수유(1), 서양측백나무(1), 소나무(1), 솔채꽃(5), 오시멘시사초(4), 우산잔디(1), 읍나무(1), 털목이(1), 표고(5), 하수오(1)

자료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출원등록원부

2) 산림생명자원 관리체계 구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책임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각 책임기관은 보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36개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산림생명자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생명자원의 조사·수집·특성평가 및 보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말 기준으로 약 38,814종, 2,327천점의 산림생명자원을 보유·관리하고 있다. 자원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생명산업 육성 지원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관리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표 4-10 산림유전자원 보유현황

(단위: 종, 점, ha)

구 분	종 수	보 존 점 수
종자	5,536	54,524
영양체	8,187	926,192
미생물	923	6,742
DNA	740	136,852
집단(현지내보존, ha)	19개소	3,181ha
표본	23,428	1,203,023
합계	38,814(19개소)	2,327,333(3,181ha)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2018년 12월 기준)

3) 우량 산림종자 공급을 위한 채종원, 채종립 확충·관리

검증된 우량한 산림용 종자를 생산·공급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채종원 및 채종립(채종임분 포함)을 확대 지정하고 종자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2016년부터 종자 공급원 환경개선사업(수형조절, 작업로 개설, 비료주기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량 증가에 힘쓰는 한편, 품질표시와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등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4-11 종자 공급원 조성 실적

구 분	면적(ha)	대상 종	비고
채종원	875	60	갱신 · 조성
채종립	205	39	지정 · 변경('94~'17)
채종임분	1,037	58	"

※ 2018년 12월 기준

4) 종자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40여 년간 지속된 노지양묘 위주의 영세 묘목생산을 시설 자동화하는 양묘시설현대화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하여 노동력 의존형 묘목생산 구조를 재해에도 안전한 묘목생산체제로 개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ICT(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클론묘목 활성화를 위한 생산시설 조성 및 지력이 약화된 묘포토양 개량 등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12 묘목생산 기반조성 사업실적

구 분	계	2010까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양묘시설현대화 (개소)	29	-	-	-	-	-	5	7	7	10
토양개량 (ha)	494	406	4	12	12	12	12	12	12	12
클론생산시설 (동)	37	-	11	6	6	4	2	2	3	3

자료 : 산림청, 2018년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

향후계획

1) 품종보호제도 활성화 및 산림유전자원 관리체계 운영

민간 육종가의 신품종 출원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종별 특성조사요령 등 과학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산림 신품종 보호 조기 정착을 달성할 것이다. 아울러 신품종 개발·재배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산림분야 신품종 출원·등록 수 증가와 임업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종자 및 묘목시장에서 불법종자 근절과 품종생산·수입 판매 신고에 대한 계도 등 종자유통단속 또한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의무화하는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제정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2018년 8월 1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등과 유전자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 책임기관과 함께 산림생명자원 보존목록 작성과 조사·수집·보존·증식 및 Gene Bank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생명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림생명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유용물질을 탐사하는 연구를 강화하고 산업계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산업화 기반 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 우량 산림종자 공급원(채종원, 채종림) 확충·관리 및 종자산업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우량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그 공급원이라 할 수 있는 채종원 등 2,078ha를 조성·지정하고, 종자공급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산림용 종자생산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품질표시와 유통·관리를 강화하여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종자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모화·자동화시설 지원 사업인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ICT(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묘시스템 정착을 위해 표준모델개발 연구 및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종묘생산업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나.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립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김종근

시행배경

조립사업은 그동안 국토녹화와 목재자원 생산을 목적으로 실행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기후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산림자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보전과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이 가진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2018년 조림사업은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수종을 집중 조림하고 산림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조림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경영목적과 시장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수종을 규모화하여 지역특성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조림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387개, 234만ha)를 중심으로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목재생산 조림, 원료 공급용 바이오순환림 조성, 헛개나무, 음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등 산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용자원 조림, 산림 이외의 한계농지에 유희토지 조림 등을 통하여 2018년 16,628ha(42백만본)의 경제림을 조성하였다.

또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 및 예방으로 산림경관을 회복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에 강한 숲으로 조성하고, 주요 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등을 대상으로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등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경관수종을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4,521ha(6백만본)의 큰나무 조림을 실행하였다.

산림을 통한 지역발전과 산림투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 고유 향토수종인 강원·경북지역의 금강소나무 육성, 강한 해풍과 척박한 토양 등 열악한 자연 환경으로 훼손되고 있는 섬 지역 산림 녹화 및 식생복원을 위한 섬지역산림가꾸기, 숲의 다양한 기능을 살리고 지역별 특성을 최적화·단지화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림 조성사업 등을 2018년 1,363ha(1백만본)에 실행하여 지역 브랜드화하고 있다.

미래 목재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고유수종인 물푸레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 음나무를 다양한 식재방법으로 조림하고, 조림적지 및 목재생산 등을 위한 루브라참나무, 헝가리아까시나무를 시범조림 하는 등 다양한 조림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양봉농가 지원을 위한 국유림 중심의 밀원수림 조성 158ha 등 기타 조림사업도 577ha(1백만본) 추진하였다.

표 4-13 최근 5년간 조림사업 추진 실적


(단위: ha, 백만본)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면적	116,906	23,048	23,178	23,917	23,674	23,089
본수	255	49	51	52	52	51

향후계획

2019년도에는 21천ha(50백만본)의 산림에 지역·기후를 고려한 경제성 높은 수종 조림, 산림재해방지, 경관 조성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이 최적 발휘될 수 있도록 큰나무 조림, 지역의 특색있는 산림자원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지역특화림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경제림육성단지 운영활성화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안의섭

시행배경

우리나라는 과거 제1차 치산녹화계획(1973~1978), 제2차 치산녹화계획(1979~1987)을 통해 성공적인 조림정책을 수행하여 대단위 경제림단지를 조성하였다. 70~80년대 국토녹화 이후 산지 자원화를 위한 조림 수종 다양화 등 경제림 조성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녹화된 산림을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육성할 대상지가 구분되지 않는 등 집약적 관리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한정된 산림재원을 투자하여 효율적으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해 인공조림지 등을 대상으로 3년('99-'02)에 걸쳐 산림실태를 조사하여 '02. 7월 경제림 육성대책을 수립하였다.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우량목재 증식을 목적으로 2005년 9월 26일 국유림에 105개단지 58만ha, 민유림에 345개단지 234만ha, 전국에 450개단지 292만ha의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정된 경제림육성단지가 임지생산력 및 경영여건의 차별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지정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실질적인 산림경영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 2006년에 '경제림육성단지 수치지도화'(국립산림과학원), '경제림육성단지 임상특성에 따른 유형구분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국립산림과학원)가 수행되었고, 2007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수립 및 장기경영모델 개발' 연구를 추진하였다.

경제림육성단지의 현황분석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1년 국립산림과학원이 '경제림육성단지 통계 구축 및 관리 등급 구분'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2012년에 '경제림육성단지 구역 재조정 및 관리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고 단지 지정 후 10년이 도래됨에 따라 시업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척하고, 임도시설 등 실제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경제림육성단지 구획조정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시행내용 및 성과

2014년 경제림육성단지의 경영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산림경영이 우수한 곳을 선별하여 예산과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전국단위 산림기능구분도 제작 및 경제림육성단지 구획조정 연구(산림청)’를 통해 산림기능구분도 작성과정 중에 분석되는 목재생산기능의 잠재력 평가결과에 따라 단지를 I(우수)·II(보통)·III(공익)등급으로 구획하여 보다 생산성이 높은 경제림육성단지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5년 ‘경제림육성단지 구획조정 및 현행화 방안 연구용역(산림청)’을 추진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I, II등급지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2015년 마련된 경제림육성단지 개편(안)을 기준으로 2016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조사반을 구성, 현지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단지 최종면적을 확정하였다. 현장조사는 전국 12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제림육성단지 지정률이 60%이상인 지역에 대하여는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단위 산림기능도 작성 및 경제림육성단지 구획 조정시 목재생산기능의 잠재력 평가결과에 따라 개별 단지를 I등급(우수), II등급(보통), III등급(공익용산지)으로 구분함에 따라 III등급은 경제림육성단지에서 제외(I등급 208만ha, II등급 50만ha, III등급 27만ha) 하되, II등급(보통)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무임목지, 암석지, 체지, 묘지 등 현지어건상 경제림육성에 부적합한 임지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존 경제림육성단지에 편입되지 않은 임지 중 독립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대면적 경영임지는 가급적 경제림육성단지로 편입하도록 하였다.

2005년 경제림육성단지 지정이후 단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2016년 12월 경제림육성단지 개편을 완료하였다. 경제림육성단지는 당초 450개 단지에서 387단지로 감소하였으며, 단지면적은 당초 292만ha에서 공익림 등 시업제한지와 산림경영이 불가능한 개발지, 경관지역 등 58만ha를 제외한 234만ha로 조정되어, 토양 등 경영여건이 우수한 산림중심으로 집약경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확정된 경제림육성단지는 2018년 5월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현황도와 필지별 상세내역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산림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였다.

표 4-14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현황

(단위 : ha)

구분	소관별	산림면적 ('15년말기준)	단지수	단지면적	경제림 지정율(%)
합 계		6,334,615	387	2,335,199	36.9
국유림 (27개 관리소)	소계	1,471,527	112	659,600	44.8
	북부	442,025	23	248,318	56.2
	동부	384,891	29	219,539	57.0
	남부	281,829	16	118,199	41.9
	중부	123,589	18	16,032	13.0
	서부	214,059	26	57,512	26.9
민유림 (115개 시군)	소계	4,716,957	275	1,675,599	35.5
	경기	424,993	7	18,325	4.3
	강원	580,206	26	120,813	20.8
	충북	393,405	34	192,478	48.9
	충남	375,141	36	183,127	48.8
	전북	344,837	31	183,164	53.1
	전남	601,289	38	251,053	41.8
	경북	1,074,169	59	496,685	46.2
	경남	623,317	44	229,954	36.9

향후계획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2018년 말 현재 15.2%로 약 85%를 해외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을 경제적 자원으로 조기에 육성하고, 지속가능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234만ha의 경제림 육성단지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집중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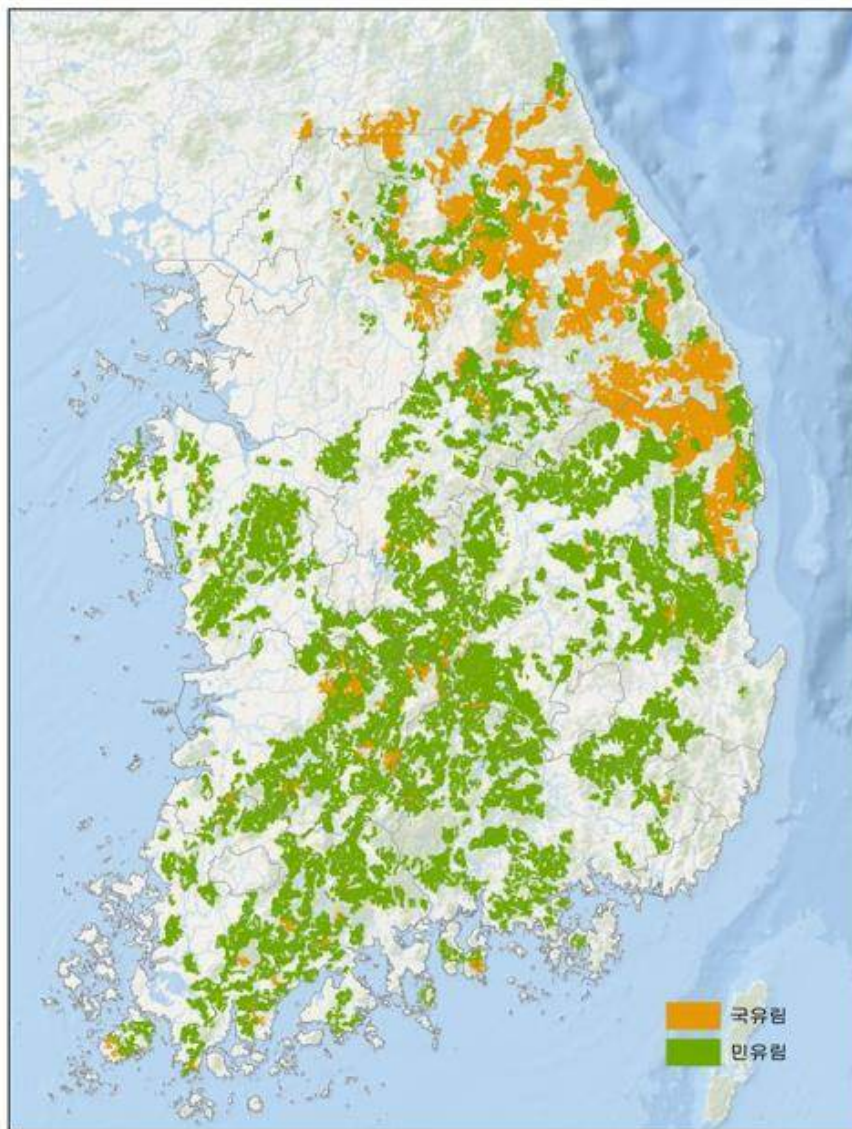
이를 위해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사업을 경제림육성단지 내에 집중하고 있으며, '16년 66.4%이던 경제림육성단지 내 사업집중률은 '18년 69.8%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단지의 경영방식에 있어서도 단지별 효율적 경영을 위해 산림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경영주체에 위탁경영하는 등 경영모델도 지속적으로 개발·확산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림육성단지 중 산림소유자의 동의율이 50% 이상이고, 단지경영 면적이 500ha 이상(당초 1,000ha이상이었으나, 2018년


선정단지부터 500ha로 변경)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입목축적 및 임도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10년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말 현재 20개 단지가 선정 운영되고 있다.

또, 경제림육성단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포털 등을 통해 단지세부정보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며,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단지별 경영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는 등 경영기반 마련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 4-2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현황



라. 숲 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이성호

시행배경

산림청에서는 1998년부터 산림정책의 기초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림을 경제·사회·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다양한 공익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원칙에 입각하여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산림이 갖는 경제·사회·환경적인 다양한 기능들이 조화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기술적·생태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전국(산림 637만ha)을 6대 기능¹³⁾으로 구분하여 GIS기반의 전국 산림기능구분도 제작을 완료하고(‘14.11월), 산림공간정보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여 산림경영에 대한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등 현장 활용성을 증진하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으로 구분한다. 숲가꾸기 사업은 임업 특성상 별채를 통한 투자자본 회수율이 낮아 산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고, 국토 자원 보전 및 수자원 함양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월등히 높아짐을 고려하여 산주에게 사업비의 100%(2013년 이전 90%)를 보조하고 있다.

녹화된 산림을 가꾸어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가꾸어 기후변화에 대비하며, 산림을 통해 농산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제4차 산림기본계획(‘98~’07), 제5차 산림기본계획(‘08~’17) 기간 동안 총 665만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였으며, 현재 제6차 산림기본계획(‘18~’37)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8년 21만3천ha를 실행하였다. 숲가꾸기 사업은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 숙련된 임업 기능인에 의한 기술적인 사업으로 실행되는 정책숲가꾸기와

13) 6대 기능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

IMF 경제위기에 따른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종료 이후 산림분야 기능인 양성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병행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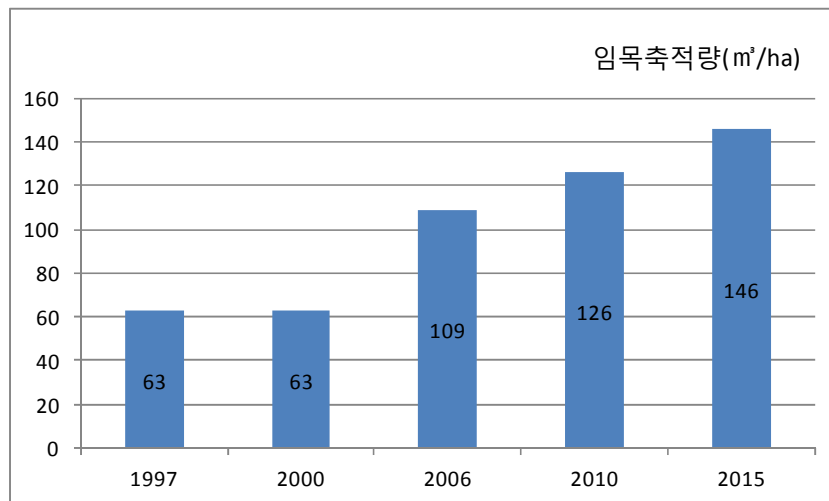
표 4-15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1998~2018)

(단위: 천ha)

연도	실적		
	계	정책사업	공공근로사업
계	6,656	5,881	775
1998~2007	3,010	2,574	436
2008~2017	3,646	3,307	339
2018	213	205	8

그 동안 추진된 숲가꾸기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산림정책의 기초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정착시켰다는 것이다. 1998년 이후 본격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임목축적이 1998년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숲가꾸기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숲이 더욱 건강하고 가치있는 숲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16 연도별 임목축적



자료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숲가꾸기의 주요 추진 성과로 첫째, 우리 숲의 외연적 성장과 더불어 숲의 내부구조도 다층화 되는 등 숲의 생태적 안전성이 증진되었다. '02년 조사된 시급히 가꾸어 주어야 할 산림 215만ha를 대상으로 '제1,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04~'13)에 따른 1차 숲가꾸기를 완료하여 숲이 보다 생태적·경관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산림 영급별 목재의 안정적 생산 구조를 마련하게 되었다. '14년부터 실행한 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에는 기능별 숲가꾸기 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현장과 기술 중심의 숲가꾸기를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으로 정책숲가꾸기를 내실화하고 숲가꾸기 작업 시 베어진 산물의 수집에 주력하여 펠릿 등 산림바이오에너지 자원과 산업용재로의 공급을 확대 하였으며, 인공조림지 위주의 숲가꾸기 비중을 확대하여 경제림 자원화를 도모하였다.

셋째,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을 향상하였다. 숲가꾸기 사업에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가그룹 등의 참여가 확대되어 숲가꾸기 모니터링, 시범림 조성사업, 현장 토론회 등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현장 컨설팅을 통한 임업기술의 습득으로 사업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 또한, 숲가꾸기 실행지에 대한 이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13.12월)'을 구축하고, 세부 실행내역 및 임지정보에 대한 이력을 DB로 구축하여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 및 경영계획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넷째, 산림 현장 중심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산물수집 품셈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선('12.1월)하였으며,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사업 시행 완료시 사업실행 도면 및 대장 관리를 의무화('13.1월)하였고, 산림의 고유기능이 최적 발휘될 수 있도록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매뉴얼'을 제작·보급('13.3월)하였다.

또한,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14~'18) 추진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기능별 산림관리의 정착을 통한 숲속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하여 제4단계 숲가꾸기 5개년('19~'23) 추진계획을 수립('18.12월)하였다.

아울러, '13년부터는 현장 산림재난 대응조직인 '숲가꾸기 패트롤'을 전국 27개단으로 확대·운영하여 생활권 주변 피해 위험목을 신속히 제거하는 등 국민의 현장민원을 해소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은 지난 15년간 제1~3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단순한 육림(育林)차원을 넘어 산림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을 최적발휘하기 위한 종합적 산림관리 정책으로 진화하였다. 이 시기에 목재생산 등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공익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별 산림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별 산림관리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향후계획

2019년은 제4단계 숲가꾸기 5개년('19~'23) 추진계획의 1차 연도로서 1,841억원(국고)의 예산으로 166천ha(5개년 계획 110만ha)의 숲을 가꾸어 산림의 가치를 제고하고 상시인원 1,37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표 4-17 제4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

구분	단위	연도별 추진계획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정책숲가꾸기	천ha	1,100	166	221	229	237	247
공공산림가꾸기	명	6,890	1,378	1,378	1,378	1,378	1,378

자료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표 4-18 2019년 숲가꾸기 추진계획

구분	계획	비고
숲가꾸기(ha)	166,000	
· 민유림	124,750	· 정책숲가꾸기
· 국유림	41,250	
사회적 일자리 창출(명)	1,378	· 상시고용사업

제4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에서는 “임업인이 만족하는 경제림 육성, 국민이 행복하는 공익림 관리”라는 목표아래 1) 돈이 되는 경제림 육성, 2) 모두가 누리는 공익림가꾸기 정착, 3)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지 관리 강화, 4)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 일자리 창출, 5) 숲가꾸기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의 5대 추진과제를 정하여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산림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경제림 육성단지 숲가꾸기를 집중하고, 소나무·활엽수 천연림에 대한 시업방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밀착형 숲가꾸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가꾸기 세부실행 기준을 시달('19.1월)하여 공익림가꾸기 확대 및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공익 기능별 표준모델 개발을 통한 관리기술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조림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림 성공률을 제고하고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이다. 특히 풀베기 이후 어린나무가꾸기까지 조림목 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종을 도입할 계획이고 덩굴제거 사업에 설계·감리제도를 도입('19.5월)하여 조림지사후관리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자 한다.

그 외에도 현장 위주의 점검체계 구축 및 외부 전문기관의 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일자리사업의 일환인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산림자원의 시장공급 확대를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을 중심으로 도시·농산촌 지역의 저소득계층 1,378명을 상시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현장 민원 대응조직인 ‘숲가꾸기 패트롤’을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160개 시·군·구까지 확대 운영하여 생활 속의 산림관련 민원 해소 및 국민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은 제4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19년~'23년)의 첫 번째 해로 임업인이 만족하는 경제림 육성 및 국민이 행복하는 공익림 관리를 위해 현장의 문제점 발굴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지침”을 보완·개선할 계획이며,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 주변 숲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생활환경보전림 등 생활권 주변 산림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미세먼지 여과 기능 증진을 위한 숲 관리 기술을 점차 고도화 나갈 계획이다.

2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가.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체계 구축

산림청 산불방지과 사무관 허남철

시행배경

산불은 기상, 임상, 지형, 사람의 활동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의 활동과 기상여건으로 최근 10년(1999~2018) 동안 총 4,316건의 산불로 6,699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다. 산불발생 시기는 대부분의 봄철(2~5월)의 사람의 활동(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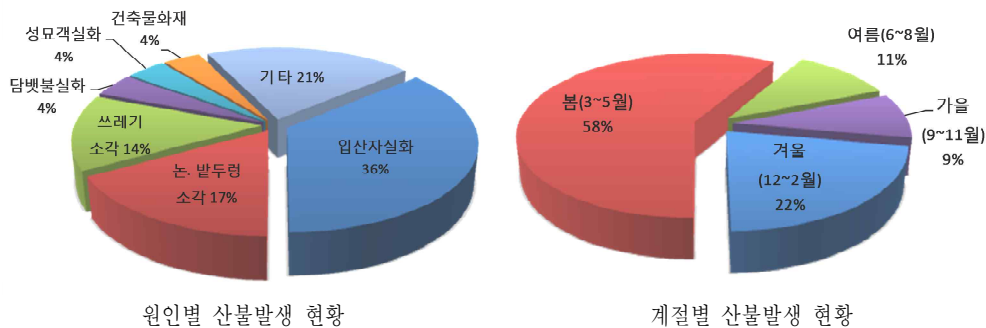
표 4-19 연도별 산불피해 현황

구분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건)	4,316	570	282	277	197	296	492	623	391	692	496
면적(ha)	6,699	1,381	297	1,090	72	552	137	418	378	1,480	894
피해액(억원)	2,393	39	45	291	25	250	93	205	157	802	486

자료 : 산림청 산불통계연보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전체 산불 건수의 36%,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은 31%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봄·가을철 산림인접지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20 최근 10년 원인별·계절별 산불발생 현황



자료 : 산림청 산불통계연보

최근 경제의 발전에 따라 도시의 확장으로 산림주변의 개발이 증가로 산림과 주거지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산림휴양과 캠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건축물 화재의 경우 전체 4%에 불과하지만, 주택화재가 산불로 비화되거나 산불이 주택화재로 이어져 2차 피해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겨울철 고온현상과 봄철 극심한 가뭄 및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해 산불발생이 연중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 국토의 63%의 산림에서 산림이 불에 잘 타는 소나무 등 침엽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41%로 수관화(樹冠火)로 쉽게 확산되며, 숲이 울창해지고 산림 내 낙엽 등 연소물질의 증가로 인해 지중화(地中火)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형은 산악형 구조로 지형의 변화가 심하고 동고서저의

급경사로 인해 산 하단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경사의 영향을 받아 빠른 속도로 산 정상으로 확산되는 형태를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의하면 산지에서는 평지보다 최고 8배 이상 산불이 빠르게 확산된다고 보고되었다.

이처럼 변화하는 국내·외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불방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을 위해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체계 구축 비롯하여 산불방지의 효율화·체계화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산불방지대책 및 시기별 특별대책 추진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겨울철 이상고온과 동계올림픽 사전대비를 위해 1월 25일부터 시작하였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2.9~3.18)에는 평창·강릉·정선 등 동계올림픽 권역에 대한 산불방지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였고, 3월초부터 건조한 기후로 산불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3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운영하였다. 또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설 명절(2.15~18), 정월대보름(3.2), 청명·한식(4.5~6), 어린이 날 연휴(5.5~7) 등 주요 시기 맞춤형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봄철 산불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을 5.22일까지 연장 운영하였으며, 이후에도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산불위기경보를 6.26일까지 ‘관심’ 단계로 유지하였으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이후에도 산불이 지속됨에 따라 12.31일까지 ‘관심’ 단계가 유지하고, 중앙 및 지역산불상황실을 연장 운영하였다.

2) 산불예방 홍보 및 관리 강화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들의 산불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TV·라디오·신문 등 주요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산불위험 시기별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다.

특히 봄철은 농민들이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로 영농폐기물, 폐비닐, 논·밭두렁 소각이 빈번해지는 점과 등산·휴양 인구 증가에 따라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산촌 주민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한 산불예방 교육과 산불방지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국민들의 산불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불예방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문화관광부와 협조 하에 옥외 광고시설 4,252개소를 통해 산불예방 홍보 영상을 방영하여 산불재난의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홍보하였다.

과학적인 산불대응을 위해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위험지수에 따른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발령함으로써 지역산불대책본부에서는 산불경보 단계별로 근무인원 증원과 위험지역 현장배치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였다.

또한 선제적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원 등 감시인력 2만 2천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위험시기에 따라 근무시간과 감시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범정부 차원의 산불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 등으로 구성된 산불재난대응정책협의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 등을 통해 산불방지 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전국 산불안전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산불 유관기관 및 지자체의 봄철 산불방지 대책과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특히, 6개 부처 공동으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참여를 호소하였다.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전국 산림의 35%에 해당하는 222만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등산로도 7,818km를 부분 폐쇄하여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338만ha를 지정하여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였다.

소각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취약 지역과 논·밭두렁에 대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위해 가을철부터 봄철까지 산불위험지 1등급지 22천ha에 대해 사전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농·산촌 마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하여 전국 2만여 마을에서 서약에 참여하였으며, 서약이행률이 98.3%에 달하는 등 봄철 소각산불 산불예방을 실천하였다.

3) 산불진화 대응 역량 강화

산불방지 인력은 예방과 감시, 계도와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산불진화 등 산불업무 전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비롯하여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이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산불예방진화대는 2003년 2,884명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10,110명을 선발하여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대응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진화인력의 고용기간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는 도시지역, 야간산불, 험준지 등 산불진화를 위해 2016년부터 2년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입증하였으며, 2018년에 정식으로 출범하여 현재 국유림관리소 등 30개 기관에 300명을 배치하여 광역단위 상시적인 진화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4-21 산불진화 인력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산불예방진화대	10,057	10,057	10,057	10,110	10,110
산불감시원	12,700	12,000	11,230	12,085	10,843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	-	100	200	300
공중진화대	49	49	49	49	73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불 장비는 산림헬기와 진화차량, 지휘차량, 무인감시카메라, 무선 통신망,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개인 진화장비 등이 있으며, 주로 산불의 조기발견과 진화과정에서 사용한다. 한국의 산악지형에 적합한 기계화시스템을 2007년 도입하여 산림청,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1,795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림헬기는 최근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초동진화에 매우 중요한 장비다. 산불발생시 헬기 출동 비율은 2018년 기준 82%정도로 높은 편이며, 산림청은 초대형헬기 4대, 대형헬기 30대, 중·소형헬기 13대 등 총 47대를 보유하고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산악 인명구조, 산림자재 운반 등에 활용하고 있다.

2018년에는 노후화된 산불진화차 56대와 지휘차 14대를 교체하고, 기계화시스템 50대를 확충하였으며, 특히 국산 수리온(KUH-1FS) 헬기 1대가 5월에 도입되어 야간산불과 서남해 도서지역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고, 10월에는 초대형 헬기(S-64) 1대를 추가로 도입되어 대형산불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산악지형 특성상 산불발생 시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활용하기 위한 기계화진화대 193팀을 편성·운영하였으며,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30팀을 광역단위로 배치하여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중·대형산불과 야간산불 현장에 투입하는 등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상진화 전문화를 추진하였다.

표 4-22 장비 확충 현황(누계)

(단위: 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진화헬기	45	45	45	45	47
진화차·지휘차	1,399	1,498	1,438	1,447	1,447
기계화진화시스템	1,598	1,653	1,746	1,795	1,795
산불감시카메라	1,063	1,281	1,370	1,448	1,448
무인기(드론)	2	13	32	47	81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4) 산불진화 헬기 운영 및 안전관리

산림헬기의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림헬기 47대와 지자체 임차헬기 65대가 산불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도록 헬기의 이동 및 전진배치하였다. 특히 봄철의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에 대비하여 소방청과 국방부 등 유관기관 헬기 6대를 동해안 지역에 전진배치하여 강력한 공중진화시스템으로 초기에 주불을 진화하여 산림피해 최소화를 추진하였다.

산불특별대책기간 중에는 헬기 이동정비팀을 운영하여 산불진화 주력기종 대형헬기(KA-32)와 초대형헬기(S-64)의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하였고, 대형산불 확산 위험이 높아질 경우 임차헬기(65대), 유관기관헬기(소방 28, 군 16대)를 동원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산불진화는 주로 헬기에 의한 공중진화가 82%를 차지하고, 지상인력에 의한 진화가 18%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진화에 있어 헬기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산불진화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산불진화중 헬기 사고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데, 2017년 5월 삼척산불 진화중 고압선과 충돌해 비상착륙한 대형헬기(KA-32)에 이어 금년 12월에도 서울 노원구 영축산 산불진화에 투입된 대형헬기(KA-32)가 담수과정에서 한강에 추락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한 정비사가 1명이 사망하고, 기체는 완전 침수되어 폐기된 실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헬기추락에 따른 사고원인을 조사 중에 있으며 최소 1년 이상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헬기사고를 계기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헬기에 대한 ‘경년헬기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특별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성능개선 추진할 예정이며, 헬기 정비인력도 현재 대당 1.7명 수준인 인력을 적정 인원인 대당 2.1명 까지 확대하여 헬기 안정점검 및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5) 주요 정책성과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산불발생은 전년에 비해 28%가 감소한 49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피해면적은 전년보다 40%나 감소한 894ha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여름철 산불발생이 최근 10년 평균 대비 12배나 증가한 62건에 달하고, 2월의 산불발생이 역대 최고인 130건에 달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이룬 성과로 의미가 크다.

또한, 산불유관기관 간 산불재난관리 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주요시기 산불대응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 4회에 걸쳐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및 지자체 간 산불재난대응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및 지자체 기관 간 산불재난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난성 산불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산불진화헬기 확충과 야간진화 가능 헬기의 도입 및 야간·도시·대형산불 연중 대응을 위한 지상진화 대응체계 보강하기 위한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확충으로 산불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계획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상진화 인력이 없어 고용기간 연장을 통해 산불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동절기 산불대응을 위해 산불예방진화대의 고용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발생시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자치단체장의 재난대응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산림부서장의 산불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현장지휘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며,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산불현장지휘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지원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상진화시 가장 중요한 진화장비인 산불진화차의 적기 교체를 통해 신속한 진화출동과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군 헬기의 산불진화 동원을 위한 밤비바켓도 노후되어 교체가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적기 교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나.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사무관 조연희

시행배경

산림병해충의 발생변화 추이는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높으며 환경적 유인이 병해충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산림해충에 미치는 영향은 현존하는 해충의 생활사 변화, 새로운 잠재근충의 해충화, 새로운 외래해충의 유입·정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강수량의 급격한 변화 등은 수목에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되며, 그 결과 수세가 약화된 나무들은 각종 병해충은 물론 평소 크게 피해를 주지 않았던 병원균에 취약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산림병해충은 3,800여 종으로 산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병해충은 300여 종이다. 1960~90년대에는 솔나방, 솔잎혹파리 등 해충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등 병·균류,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여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산림병해충 예방과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2018년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은 2017년보다 0.8% 증가한 84,417ha이며, 주요 4대 병해충은 9.3% 증가한 52,182ha로 전체 병해충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찰·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4-23 최근 5년간 산림병해충 발생현황

(단위: ha)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10,050	101,040	96,373	83,716	84,417
주요 4대 병해충	76,487	67,170	60,156	47,752	52,182
소나무재선충병	9,644	9,048	9,003	6,269	3,852
참나무시들음병	2,722	2,451	2,081	1,733	1,636
솔잎혹파리	56,685	49,960	44,166	35,707	38,976
솔껍질각지벌레	7,436	5,711	4,906	4,043	7,718
흰불나방	7,244	5,567	4,812	6,059	4,572
갯나무넓적잎벌	1,069	910	853	763	287
솔나방	755	728	412	667	415
밤나무해충	4,674	5,414	3,027	3,008	2,712
기타병해충	19,821	21,251	27,113	25,467	24,249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2018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 처음 발생한 이후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에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하고 방제예산, 전담인력·조직확대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2012년까지 피해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온상승으로 인한 고온, 가뭄 등 기후적 요인과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 등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13년 말부터 피해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국민적 불안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특별대책(13.10월)을 수립하고 피해극심지역에 방제예산과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매개충 우화기 전인 2015년 4월까지 발생한 174만본에 대하여 171만본을 방제하였다.

2015년부터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위주의 방제에서 풍해목, 자연고사목 등 기타 고사목을 함께 제거하여 매개충이 산란할 가능성을 없애고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차단하는 등 선제대응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기존의 훈증처리 방식에서 방제효과가 더 높은 수집·파쇄 방식의 비율을 확대(52%)하였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품질의 제고를 위해 전 지역에 현장점검단을 파견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15.6월)에 따라 방제역

량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에서 직접 방제를 수행하였다.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예찰·모니터링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발족('16.3월)하여 연간 400만ha의 산림을 조사하고 있으며, 방제지침을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예찰·방제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등 총력대응을 한 결과 2016년도 피해고사목은 2015년도 대비 21% 감소한 137만본이 발생하였고, 전량 방제하였다.

또한, 전국 5개 권역별 방제전략 수립을 통해 선단지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나무주사 확대, 수집·과쇄비율 확대(54→59%) 등 훈증을 최소화하여 재발생률 저감을 도모하였다.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피해목 원격조사를 실시하고, NFC전자예찰함을 확대 설치하는 등 과학적으로 고도화된 예찰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훈증더미 이력관리와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철저히 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선제적 예찰과 적극 방제를 통해 2018년도 피해고사목은 2017년 대비 29% 감소한 49만본이 발생하였고, 전량 방제하였다.

2) 솔잎혹파리 방제

솔잎혹파리는 1929년 서울과 전남 목포에서 처음 발생한 후 소나무를 가해하는 대표적인 해충이었다. 1980년 초반에는 일시 감소 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부터 감소로 전환하였다. 솔잎혹파리는 지속적인 방제작업 실행으로 발생 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집중 발생(전국의 98%, 2018년 기준)되고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 고속도로(영동·중앙) 및 국도 등 가시권역의 솔잎혹파리 집중방제를 추진하였으며, 나무주사에 전면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여 산림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앞으로도 피해목에 대한 나무주사 확대를 통해 소나무림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솔잎혹파리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3)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솔껍질깍지벌레는 1963년 전남 고흥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2007년까지 확산하였으나, 임업적 방제 확대,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도입 등의 정책 추진으로 2008년부터 감소되다가 2018년 폭염지속 등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였다. 이후 남방계 해충인 솔껍질깍지벌레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생육범위가 넓어져 동·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솔껍질깍지벌레가 서식하는 동·서해안 선단지에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찰활동 및 임업적 방제를 집중하고 생물적 방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확산이 우려되는 주요지역은 간벌 후 임목기준본수를 감안한 임업적 방제를 실행한 후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안가 곰솔림의 병해충 방제, 토양개량, 생육환경 개선, 수세회복 등 해안가 우량 소나무림 종합방제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하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4)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참나무시들음병은 2004년도 경기도 성남에서 최초 발생하여 피해가 확산되었으며, 2011년에는 잦은 강우와 높은 기온 등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피해목 발생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현재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본수는 감소 추세이나, 피해구역은 확대 되고 있어 매개충의 서식환경 조건이 맞으면 언제라도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확산방지를 위해 리·동단위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매개충 생활사에 맞는 맞춤형 복합 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부, 문화재청,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2018년도 피해목 16만본을 전량 방제하였다.

5) 외래병해충 등 일반병해충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확대로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의 외래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산림과 농경지에 피해를 입히고 있어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 부처와 방제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협력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인 미국선녀벌레는 원산지가 북미대륙인 외래해충으로, 2009년 서울, 밀양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2010년 이후 급격히 확산되었다. 과수원 등 농경지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농경지 주변 산림과 공원 등 녹지대, 주택가 등에도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6) 생활권 수목병해충 관리 강화

아파트 녹지, 도시숲, 가로수 등 생활권 녹지에는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수목 피해도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종전(2019년 6우러 28일 이전)까지 식물보호기사 또는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을 갖춘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이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의 법적 주체였으나, 나무병원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과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실내 소독업체 또는 조경업체 등에서 일부를 수행하고 있어 비전문가의 진단에 따른 부적절한 약제의 살포, 무분별한 고독성 농약의 사용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이 우려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하고자 2016년 12월 산림보호법을 개정된 후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시험응시자격, 시험과목, 양성기관의 지정, 양성교육과목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2018년 6월부터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국가자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목진료를 하려면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추어 나무병원을 등록해야 한다. 본 제도는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나무의사 양성교육(15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은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교육(19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양성기관 자체평가에 합격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 2018년 8월 양성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국에 10개의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같은 해 9월부터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나무의사 자격시험 위탁기관은 같은 해 11월 30일에 「2019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수목진료 분야의 저변확대와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사업을 통해 학교숲, 도시숲 등 다중이 이용하는 생활권 녹지를 대상으로 민간 수목진료 전문가를 활용하여 대국민 수목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년 3천여개소를 선정하여 수목의 각종 피해에 대한 진단·처방, 생활권에서의 적절한 농약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 등을 실시한다.

향후계획


산림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사업 중심에서 전국적인 예찰체계를 정비하여 산림병해충 발생 및 피해확대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중심의 산림병해충 방제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권역별 맞춤형 전략에 기반한 체계적인 방제를 추진하고, 드론, 전자예찰함 등을 활용한 예찰·모니터링을 강화하여 2022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10만분 이하로 저감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병해충 피해발생에 따른 적기방제와 타부처 소관 국유림 등의 방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동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1회 4월 27일, 2회 10월 19일)이며,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나무의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더불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수목진료 현장 지자체 합동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기존의 가로수, 학교 숲, 공원의 녹지를 관리하는 수요와 더불어 향후 정원이나 수목원, 아파트 등 새로운 산업분야와 연계할 경우 수목진료 분야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청년 중심의 신규 일자리가 4천여 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서기관 김종세

시행배경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는 강수량·지형·지질 등의 다양한 요소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다. 우리나라는 산지의 경사가 급하고 토양은 화강암·편마암이 풍화된 마사토로 이루어진 토양이 많아 토양응집력이 낮고, 산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연평균 1,300~1,500mm)의 대부분이 하절기에 집중되는 등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연간 강수량은 증가하는 반면 강우일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강우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¹⁴⁾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도 시기별·지역별로 편중되고 있다. 태풍은 매년 2~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쳐 산사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고, 산지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산지전용(인공사면) 면적의 지속적 증가도 산사태 발생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4-24 최근 10년 산사태 피해 현황

(단위: ha, 명, 억원)

구분	평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피해면적	236	250	206	824	491	312	70	-	54	94	56
인명피해	6	5	1	43	1	3	-	-	-	2	-
복구비	454	599	319	1,477	941	544	140	-	169	183	164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14) 일 강수량 100mm이상 일수 : ('80년대) 43회/년 → ('90년대) 49회/년 → ('00년대) 54회/년

최근 10년동안 연간 평균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6명, 재산피해 454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대응으로 '13년 이후 피해는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18년에는 산사태피해가 56ha가 발생하였음에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행내용 및 성과

산사태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이라는 인식 때문에 피해 발생 후 복구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선제적인 산사태의 예방·대응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부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미흡,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 미흡 등 전반적으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었다. 그러나 2011년 우면산 산사태 피해 이후 산사태 정책은 사후 복구위주에서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전 예방·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 산사태 예방·대응 역량강화 및 체계적 대응

전국 산사태예방 연도별 대책을 수립하여 산사태재해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이전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비롯한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에 연인원 2,099을 투입하여 산사태취약지역·임도·산지전용지 등 산사태위험 지역 9개 분야 2,227개소를 점검하고 보수·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한편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에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하여 기상상황에 따라 24시간 전국의 산사태 상황을 총괄관리 하면서 기상상황 모니터링, 산사태예측 정보 제공, 재해 우려지역 확인·점검 및 주요 이행사항 지시 등 시기별·지역별로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정부 20대 국정전략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달성을 위하여 정책역량에 집중하였다.

2)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선제적 예방·대응

산사태취약지역에는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연2회 이상 정기점검과 비상연락망 및 대피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산사태현장예방단(163개단, 652명)으로 하여금 수시로 현장을 점검·정비토록 하였다. 또한, 집중호우 또는 태풍 내습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간부공무원과 긴급기동반이 산사태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대처상황을 별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등 산사태발생 원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겨로가 비교적 적은 면적인 54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

3)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기능 고도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제공하였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산사태현장 상황관리시스템의 동영상 전송기능을 활용하여 현장과 상황실 간에 실시간으로 합동 대응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예측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R&D사업으로 추진하던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사업을 정책사업('18)으로 전환하여 50개소를 신규 설치('18년까지 263개소 운영)하고, 산림 내 산지개발인자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등 산사태위험 지도의 고도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4) 사망시설의 자연친화적 시설과 체계적 관리

사방사업 패러다임이 황폐지 복구에서 생활권지역 인명피해 예방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사방 사업도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업을 집중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다.

표 4-25 연도별 사망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국고)	272,178	295,018	297,765	286,407	232,872	179,547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기후변화로 상식을 뛰어넘는 기상이변과 엄청난 산사태피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망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사망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 부실시공 등을 언론과 환경단체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질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지 선정시 지역주민·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의무화와 개정된 사망사업 타당성평가(필요성·적합성·환경성 평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향후계획

사방시설은 먼저 생활권의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여 산사태 및 토석류피해를 방지하고 산사태재해예측,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산사태예방·대응 체계 또한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친환경사방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뿐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한 사업절차와 사방기술 적용을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해 나갈 것이다.

라.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산림환경보호과 사무관 최현수

시행배경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 지구환경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생물자원의 보전·확보·이용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에 대한 배타적 주권행사를 강화하고 자생식물자원의 보존과 상업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산림청에 수목원·식물원으로 등록된 곳이 60여개에 달하며 2020년에는 100여개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공·사립수목원 간의 상호공존에서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CBD, GSPC 등 국제협약에 따른 생물자원보호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자생식물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자생 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식물이 곧 자원이며, 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을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청은 21세기 생물자원확보 경쟁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수목원 조성 및 육성

우리나라 수목원·식물원은 1980년대에 사립수목원·식물원이 다수 조성되면서 식물원 문화를 선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9년 국립수목원이 설립되고 2001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관리체계와 법령체계가 정비되었으며, 이후 2000년대 들어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다수의 국립수목원들이 설립되고 활성화되었다.

「세계식물보전지구전략(CBD '10)」에서는 희귀 식물종의 75%이상을 '현지 외 보존'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 이행을 위하여 기후대·식생권역별로 국가수목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국가수목원 확충의 궁극적인 목표는 BT·IT·ET 등 기술발달에 따른 미래 고부가 유용식물자원의 보존·이용·촉진에 있고, 국가전략 수립 시 국내·외 유용식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생활 패턴전환에 따른 산림생태 교육·탐방·체험의 새로운 휴양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다.

2004년부터 기후식생 등을 고려하여 4대 권역별 국가수목원 확대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으며, '18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조성 완료 후 정식 개원하였고, 「국립세종수목원('12~'20)」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국립새만금수목원('18~'27)」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18년부터 본격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들 수목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은 '20년, 「국립새만금수목원」은 '27년에 각각 개원할 예정이다.

표 4-26 권역별 국립수목원 기능 및 역할

명 칭	구 분	기능 및 역할
1. 국립수목원	구 광릉수목원 개편(경기 포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생물관련 연구·교육중심 수목원 네트워크 관리·운영 광릉숲의 역사·생태적 보존
2. 국립백두대간수목원 ('18년 개원)	신설(경북 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방계 고산식물의 장기·영구보전 식물신가치 창출 및 seed vault 조성
3. 국립세종수목원 ('20년 개원예정)	신설(충남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형 국립수목원 한국정원의 연구 및 교육 온대수종의 장기보전 연구
4. 국립새만금수목원 ('27년 개원예정)	신설(전북 새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대식물 및 해안식물 보전 연구 간척지 녹화 및 방염·방풍 수종 연구 인공해안립 벨트 조성 연구

2)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전 및 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산림사료에 대한 학술연구의 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공립수목원내에 산림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박물관에는 산림사료 전시실과 식물·곤충·화석 등의 표본을 보존하는 표본실, 산림관련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영상자료실, 산림사료의 보전과 학술 연구를 위한 연구실 등이 있다.

1987년부터 건립하기 시작한 산림박물관은 2018년말 현재 국립산림박물관을 비롯하여 9개 시·도에 13개의 산림박물관이 개관되어 수목원 관람·전시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표 4-27 산림박물관 개관 현황

명 칭	조성연도	관리기관	규모(㎡)	주 소
국립산림박물관	1987	산림청	4,628	경기포천군 소흘면 직동리51-7
충남산림박물관	1997	충남도	3,173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산21-1
강원산림박물관	2002	강원도	4,306	강원 춘천시 사농동 128-5
전북산림박물관	2002	전북도	5,584	전북 순창군 북흥면 서마리 252
경북산림박물관	2003	경북도	5,284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69
경남산림박물관	2003	경남도	5,566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440
대구산림박물관	2003	대구시	1,650	대구 달서구 대곡동 284
충북산림박물관	2003	충북도	1,660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3
경기산림박물관	2004	경기도	1,654	경기 오산시 수청동 332-4
전남산림박물관	2005	전남도	1,600	전남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09
충남아산산림박물관	2012	충남도	6,020	충남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산34-5
경기여주산림박물관	2012	경기도	1,525	경기 여주군 매룡리 282
전남영광산림박물관	2014	전남도	5,767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401-1

자료 : 산림청, 2018년

3) 생태숲 조성

지구환경 변화에 따라 생태계 교란 및 서식환경 악화로 생물종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자국의 식물자원에 대한 유출방지 및 배타적 주권을 강화함에 따라 희귀·특산식물 등 자생식물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생태숲은 자생식물 위주의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조성하여 산림식물자원의 자생지 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인위·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계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는 등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태숲은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자원을 현지 내에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2018년말 현재 31시·군 지역에 40개소는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4개소는 조성 과정에 있거나 개원을 준비 중에 있다.

향후계획

1) 수목원 조성 및 육성

국내 수목원은 식물종 보유 수량 및 특성화 면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한 실정이며, 앞으로 기 조성된 수목원을 특성화, 내실화한 보완사업에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의 자생식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식물유전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증식·보존·관리되고, 자원화를 위한 연구가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국민의 자연체험 및 식물학습과 정서문화함양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목원이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수목원이 위치한 권역별 특성, 중점 수집 식물종 및 자연 문화 등을 고려하여 이미 조성된 각 수목원의 특성화,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온대 중부권역의 향토식물자원의 보존·증식·연구 및 도심 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국립세종수목원을 조성 중에 있다.

2)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박물관을 국·공립수목원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료의 연구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연학습과 산림역사에 관한 볼거리 제공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기 조성된 산림박물관을 특성화, 내실화할 계획이다.


3) 생태숲 조성

생태숲 조성사업은 수목원 조성사업과 같이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고 희귀·특산 및 멸종위기 식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멸종위기 식물을 환경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멸종방지 및 감소 속도를 완화하여 국내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과학적으로 보전 관리함

으로써 미래의 생물유전자원 확보경쟁에 대비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지역·기후·생태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용식물 및 희귀·특산 식물을 현지 내 보존·복원하는 특성화된 생태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마.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이성호

시행배경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가뭄의 발생빈도가 증가되는 등 수자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약 1.6배이나,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연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약 1/6에 수준이며 연평균 강수량에 국토 면적을 고려한 강수량과 북한지역 유입량을 포함한 수자원총량은 연간 1,297억^m³으로 이중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753억^m³이고 이 중 74%는 홍수기에 편중되어 있으며, 평상시 유출량은 193억^m³에 불과하다. 또한, 가뭄 시에는 강수량이 줄어들어 과거 최대 가뭄 상황에서는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평년의 45% 수준인 337억^m³으로 대폭 하락하여 홍수기와 갈수기 하천 유량 변동이 매우 크며, 산지 경사가 급하여 수자원의 이용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자원 총량의 65%가 최상류 수원인 산림지역에 내리지만 산림내 저장량은 15%에 불과하여 홍수, 가뭄,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림의 수자원 저장량 확대를 위한 녹색댐 기능제고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용수개발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원함양림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전국의 댐 유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원함양림 조림은 넓은 면적의 모두베기(개발)를 지양하고 소구역 조림과 나무 아래 심기 등으로 복층림 조성을 목표로 한다. 수자원 함양기능 및 수질 정화 기능을 높이도록 뿌리의 양이 많고 깊게 들어가는 참나무류, 소나무 등 심근성 수종을 중심으로 자작나무 등 천근성 수종이 혼합되도록 조림하고 초본류, 관목류 등 하층식생의 생육을 촉진함으로써 녹색댐 기능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적지적수 조림사업 추진과 담유역을 중심으로 수원함양 기능 제고를 위한 관리대상 산림을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수질오염과 수량부족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공급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다.

수자원 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이 양호한 활엽수 중 상수리,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 조림은 ha당 5,000본을 심는 등 다양한 조림사업을 매년 추진하였고, 녹색담 기능 제고를 위한 수원함양림의 숲가꾸기 사업은 임지여건에 따라 침엽수 인공림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숲아베기 등을 적기에 실행하여 복층림, 혼효림으로 유도하였고 불량한 천연림에 대해서는 천연림보육과 개량사업을 실행하여 건강하고 우량한 천연림으로 유도하는 등 수원함양기능과 산사태 방지 기능을 높였다.

또한, 산림청은 2002년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38개 담유역 산림을 대상으로 간벌 및 천연림보육사업 등을 통해 녹색담으로 조성하는 「녹색담 조성 시범사업」을 장흥담·대곡담 유역 3천ha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를 시작하고, 2018년 현재 30개 담유역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담유역 숲가꾸기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표 4-28 전국 녹색담 조성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숲가꾸기 대상담	합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착수
계	30			
안동, 임하, 소양강, 횡성, 달방, 광동, 부안, 보령	8	'05	'06	'06
영천, 안계, 사연, 대암, 선암, 대청, 용담, 섬진강	8	'06~'07	'07	'07
평림, 밀양, 수어, 연초, 구천	5	'07	'08	'08
주암, 합천, 남강, 운문	4	'08	'09	'09
충주(강원북부, 강원남부, 충북경북)	1	'09~'11	'10~'12	'10~'12
군위, 김천부향, 성덕, 보현산	4	'16	'18	'18

※ '18년 현재 전국 30개담의 숲가꾸기 기본계획 수립 완료.
자료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향후계획

2019년에는 댐유역 숲가꾸기 기본계획에 따라 충주댐 등 강원·충북·경북지역 4개 댐유역 9천ha의 숲을 가꾸어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댐 유역 가시권 산림의 경관 개선을 위한 덩굴류제거와 수원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표 4-29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증진

① 홍수조절기능		● 우량 활엽수림은 불량림보다 홍수기에 28.4톤/일·ha 더 머금음
② 갈수완화기능		● 우량 활엽수림은 불량림보다 갈수기에 2.5톤/일·ha 더 흘려보냄
③ 수질정화기능		● 질소 14.3ppm의 물을 1.7ppm으로 정화

바.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사무관 김영범

시행배경

국유림 대부(貸付)는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계획이 없는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을 빌려 쓰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빌려주는 것으로 사법상 계약행위이다. 반면 국유림 사용허가는 보전국유림(행정재산)을 국가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인(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정처분으로 국유림 대부와 구분된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대부·사용허가 실적

2018년 말 현재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및 분수림 설정지는 총 9,965건, 42,228ha이다. 전년 대비 대부등의 건수는 503건 증가한 반면 면적은 430ha 감소하였다. 이는 국가, 지자체 등의 공용, 공공용 대부지는 증가하였고, 산업시설용, 경작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면적으로 대부등이 되고 있는 목축용 대부지 반환, 분수림 입목매수 등으로 인하여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대부등을 통해 임업인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버섯, 산나물, 약초류 등 재배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사유입목을 매수함으로써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를 반환 받아 국유림 경영 임지를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 공공기능 증진을 위해 국유림 경영 임지는 국가에서 직접 숲가꾸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표 4-30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실적

(단위: 건, ha)

구분	합계		대부		사용허가		분수림(조림대부지 포함)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4년	8,654	49,629	2,635	5,769	5,830	24,264	189	19,596
'15년	8,670	47,378	2,448	5,221	6,065	23,805	157	18,352
'16년	8,963	43,501	2,497	5,160	6,340	21,262	126	17,079
'17년	9,462	42,658	2,644	4,802	6,709	21,226	109	16,630
'18년	9,965	42,228	2,917	4,917	6,958	21,285	90	16,026

자료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2)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부지 사후관리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매년 대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지 관리 상태를 ‘양호’, ‘경고’, ‘불량’으로 구분하고, 대부지 관리 상태에 따라 지적사항 보완, 대부 취소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대부지 2,064건 9,511ha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고’, ‘불량’ 대부지 457건을 적발하여 후속조치를 완료하였다.

표 4-31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적

(단위: 건, ha)

구분	합계		양호		경고		불량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4년	2,440	25,195	2,111	19,526	184	2,441	145	3,228
'15년	2,367	10,404	2,076	7,789	170	783	121	1,832
'16년	2,209	24,416	1,662	18,168	372	1,806	175	4,442
'17년	2,131	18,813	1,664	15,287	290	2,677	177	849
'18년	2,064	9,511	1,607	4,852	291	3,813	166	846


자료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향후계획

산지전용에 따라 산림으로 원상회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를 제한하는 한편 산림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입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유림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등은 적절한 수준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시 관련법령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대부로 미납, 다른 용도 사용 등의 사유로 지적되었을 경우 실태조사 점수와 상관없이 경고·불량 대부지로 분류하여 취소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대부지 육성을 위해 기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를 철저히 관리 할 예정이다.

사.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서기관 김성만

시행배경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근간을 이루는 산줄기로 남과 북을 이어주는 국토의 주축이자 우리 민족정기의 상징으로, 북한의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남한의 지리산까지 단절없이 이어지며 총 길이는 1,400km에 이른다.

인문지리적, 자연생태적, 산업적, 문화적 측면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백두대간

을 개발논리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03)하였다.

이 법에 따라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75,646ha('05년 263,427ha, '13년 11,650ha, '16년 569ha)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6개 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접근성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 볼 수 있으며,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개발이 억제되어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어 경제적 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활력저하로 이어져 항구적인 백두대간 보호기반 구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즉, 백두대간 지역주민은 백두대간의 주요 정책대상인 동시에 보호활동의 실질적 주체로서, 정책의 추진에 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국가의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4-32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면적

구분	계	핵심구역		완충구역	
		면적(ha)	%	면적(ha)	%
면적(ha)	275,646	179,245	65	96,401	35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시행내용 및 성과

1)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주요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에 대한 기존자료 분석 및 현장분석을 통해 DB로 구축하여 향후 국토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백두대간종합정보시스템 수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백두대간보호지역 275,646ha로서 남한지역 백두대간 마루금 701km를 5개 권역으로 나누고 5년을 주기로 물리적 환경, 동·식물상, 식생 등 자연환경, 산림자원,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있다.

2018년은 자원실태조사 3단계 3년차이자 2013년 조사지역인 속리산 권역 172km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일반인들에게 백두대간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관련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등 조사성과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 2019년에는 덕유산권역 154km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표 4-33 백두대간보호지역 3차기 자원실태조사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권역별	설악산권역 (고성~양양)	태백산권역 (강릉~태백)	속리산권역 (봉화~문경)	덕유산권역 (괴산~무주)	지리산권역 (장수~하동)
조사거리	117km	157km	172km	154km	101km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2) 정맥 자원실태조사

백두대간 중심의 보전·관리정책을 확대하여 백두대간의 핵심 생태축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생태적·지리적으로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남한지역 정맥에 대해 6년 간 연차적으로 생태적·인문적 가치분석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는 2단계 4년차이자 2012년 조사지역인 낙남정맥 236.63km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는 한남정맥과 금남정맥 324.62km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표 4-34 정맥 2차기 자원실태조사

년도	'15	'16	'17	'18	'19	'20
권역별	낙동정맥 매봉산(태백)~ 봉화산(부산)	호남정맥 주화산(진안)~ 장계산(광양) 금남호남정맥 영취산(장수)~ 주화산(진안)	금북정맥 칠장산(금광)~ 지령산(안흥) 한남금북정맥 속리산(보은)~ 칠장산(금광)	낙남정맥 옥산(하동)~ 봉화산(김해)	한남정맥 칠장산(안성)~ 문수산(김포) 금남정맥 조약봉(진안)~ 부소산(부여)	한북정맥 장명산(과주)~ 오두산(화천)
조사거리	418.4km	514.2km	413.82km	236.63km	324.62km	185km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3)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와 청소년의 정서순화를 위한 생태교육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백두대간 지역의 자연생태·인문지리·문화의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생태교육 관련시설로 구성되며, 국민 홍보·교육의 기능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6개도에 각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2006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충북 괴산(2009), 경북 상주(2011), 강원 양양(2013), 전북 남원(2015), 경남 거창(2016)이 개관하였으며, 전남 구례(2017)를 마지막으로 조성을 완료하였다.

매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추진 중이며, 백두대간 관련 홍보물 및 교구를 지원하고 있다.

4)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사유토지 매수

백두대간보호지역은 2005년 지정 당시 지역 특성과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유토지 매수를 통해 보호지역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보호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보호지역과 연결하거나 둘러싸인 사유지 등을 매수하고 있다.

표 4-35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유토지 매수현황

(단위 : ha)

연도별	합계	보호지역 내	보호지역 밖
합계	32,855	3,880	17,241
2005년	2,410	361	2,049
2006년	3,354	523	2,831
2007년	1,293	164	1,129
2008년	1,296	106	1,190
2009년	1,384	468	916
2010년	1,662	703	959
2011년	1,343	519	824
2012년	1,220	168	1,052
2013년	1,552	86	1,466
2014년	1,081	124	957
2015년	1,358	129	1,229
2016년	1,068	44	1,024
2017년	13,038	477	827
2018년	796	8	788

주 : 보호지역 밖은 보호지역 연결지+보호지역이 있는 읍·면·동 지역 매수실적임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5) 백두대간 마루금 훼손지 생태적 정비·복원 추진

최근 한반도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에 대한 가치가 알려지면서 국립공원탐방, 백두대간 마루금 종주 등 백두대간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세굴 등 마루금 등산로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으로 등산로의 훼손을 막고 백두대간 마루금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백두대간 마루금 훼손지 정비·복원사업 현장 기술 자문단’ 구성·운영 등 실천적 방안인 백두대간 마루금 보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백두대간 마루금 훼손지의 생태적 정비·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6)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백두대간 주민이 백두대간의 보호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경제적인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법률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백두대간의 임산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의 농림사업에 포함하여 실시해 온 결과 주민의 임산물 생산 기반이 조성되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013년에 실시한 백두대간 인식조사에서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3.91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민의 대부분이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2018년까지 1,04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은 5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4-36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합계	2005~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104,866	81,130	5,934	5,934	5,934	5,934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또한, 2007년부터는 백두대간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보호·육성을 위해 백두대간 보호 지역 내 벌기령이 지난 임목의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감소분은 임목 벌채 예상수익금의 1년 이자액을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2018년까지 85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은 6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4-37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총계	2007~2014	2015	2016	2017	2018
금 액	858	586	68	68	68	68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향후계획

1)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기반 강화

그 동안 제도운영의 미흡사항에 대해 정비하고, 제2차 기본계획 및 마루금 보전대책상의 주요 과제의 추진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

이며, 이러한 백두대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본청과 현장이행 조직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백두대간(정맥) 자원실태조사 강화

백두대간 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백두대간의 가치를 유지·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존 생물종 중심의 자원실태조사를 다양한 인자를 포함하는 생태계 및 지역자원 종합 조사로 개편하고,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계곡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자 한다.

3)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활성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와 청소년의 정서순화를 위한 생태교육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태교육장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부재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별 특화된 생태·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백두대간 지역의 문화·역사·생태자원을 홍보하고 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사유토지 매수 확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또는 연접지에 있는 사유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수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관리상 필요한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편입·확대하는 등 백두대간 보호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지속적 지원

백두대간 지역주민을 백두대간의 보호주체로 육성하여 백두대간의 실효성 있는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특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보호지역 내 벌채유보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백두대간의 자연환경·경관의 자원화를 위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3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가.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산림청 목재산업과 사무관 강석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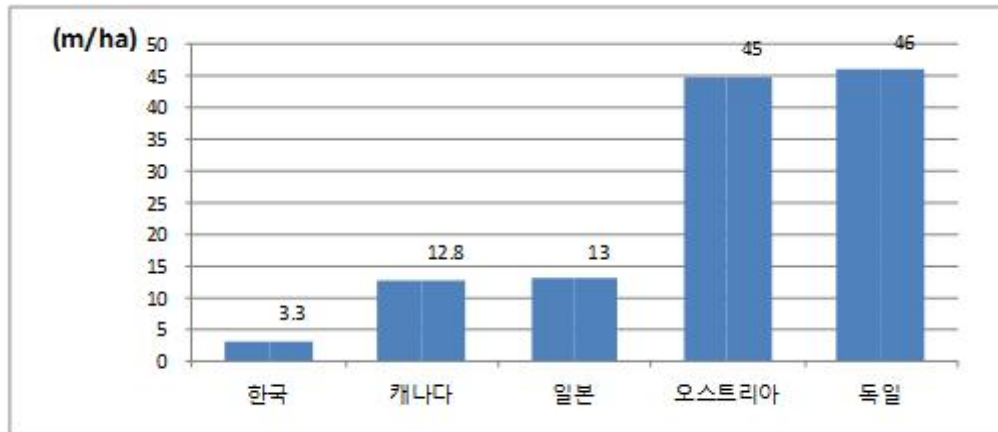
시행배경

임도(Forest Road)는 임산물 운반·조림·숲가꾸기·임목생산 등 산림경영·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임업의 기계화를 통한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또한, 산불·병해충방제 등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에는 산책·산악마라톤·산악자전거 등 국민보건 휴양과 산악스포츠를 위한 정소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농산촌의 교통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 활용되어 지역 산업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임도시설은 1964년 국유림 내 임목 매각지 3개소에 15km를 설치한 것이 임도사업의 효시이며, 1984년부터는 공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8년 말 현재까지 총 21,769km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기본산림관리에 필요한 ha당 임도밀도는 8.5m가 필요하나 2018년말 현재 전국 임도밀도는 ha당 3.4m로 40%에 불과하여 임업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임도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4-3 외국과의 임도밀도 비교



자료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청에서는 임도시설 확대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54,000km의 임도를 시설하여 ha당 임도밀도 8.5m달성을 위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임도시설 확충과 더불어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1,558억원을 투자하여 705km이 임도를 신설하였고, 그 중 민유임도는 411km를 시설하여 총거리는 14,940km로 ha당 임도밀도는 3.1m이며, 국유림은 294km를 시설하여 총거리 6,829km ha당 임도밀도는 4.2m로 국유임도가 민유임도보다 ha당 임도밀도가 1.1m가 더 높은 실정이다.

또한,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 안전성 강화와 산림사업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473km의 노후 임도에 대하여는 목재생산을 위한 대형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선형변경 등 구조안정화를 위한 구조개량 사업과 산불예방·진화 및 산림재해예방을 위해 기설임도 4,111km에 대하여 항시 임도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실행하였다. 2019년에도 1,558억원을 투입하여 임도신설 812km, 구조개량 사업 344km, 유지·보수 4,929km를 실행 할 계획이다.

표 4-38 2018년 임도시설 추진실적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임도시설 거 리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705 (473)	191,935	155,805	24,087	12,043	()내는 구조개량
국유임도	294 (122)	71,501	71,501	-	-	간선임도 187km 작업임도 143km
민유임도	411 (351)	120,434	84,304	24,087	12,043	간선임도 308km 작업임도 166km

자료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관리 및 임업기계화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적 효과성을 고려해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으로 임도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임도신설 705km 중 73.5%인 518km를 집중적으로 시설 하였으며, 산지에 적합하고 재해에 안전한 임도시설을 위해 학계·과학원·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임도시설 설계와 시공현장에 대하여 토론식 기술 지도를 통해 재해에 안전한 임도 시공을 유도하였다.

산림경영의 필수적이고 국민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임도시설에 대하여 국민의 임도 수요를 반영하여 테마임도를 158개소 1,624km를 운영하여 2018년 6,488백만명이 테마임도를 이용하였으며, 산주 및 지자체 장의 임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전환과 임도시설 확대를 위해 포스터,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는 등 임도시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계획

임도망 구축은 제4차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간선임도와 목재생산 등 산림사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임도로 구분하여 시설하고, 기존에 시설된 임도 중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구조적으로 이용이 불편한 노선은 구조개량을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친자연적인 임도로 전환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면서 풍수해에 의한 임도 피해도 예방할 계획이다.

표 4-39 2018년 임도시설 추진계획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획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810 (355)	191,935	155,805	24,087	12,043	()내는 구조개량
국유임도	330 (109)	71,501	71,501	-	-	간선임도 187km 작업임도 143km
민유임도	480 (246)	120,434	84,304	24,087	12,043	간선임도 321km 작업임도 158km

자료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또한, 효율적 산림경영기반구축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의 임도시설을 확충하여 목재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간선임도는 산림의 지형과 장기적 시업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산림경영상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유림 간, 또는 지자체간의 연계성 등 지역개발 효과가 높은 산림을 대상으로 간선 임도망을 구축하고, 작업임도는 산림사업이 집중되는 지역에 최소 규격의 저비용으로 인공조림지 등에 집중적으로 시설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임도시설이 산림경영·관리 뿐만 아니라 임도기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능과 수요충족을 위해 산림휴양·보건 및 레포츠 활동 장소로 제공할 계획이다.

나. 임업 기계화 촉진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정재수

시행배경

산업화로 인한 농·산촌 인력난 해소와 임업생산성 향상, 벌채작업 시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가 필수적이지만, 임업기계가 고가이고 험준한 지형조건, 영세한 경영규모, 낮은 임도밀도, 전문 기계운전원의 부족, 기계화 사업의 경험부족 및 기술수준의 낙후 등으로 임업기계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임업노동인력의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인력에 의한 작업 능력의 비능률성을 극복하고, 지속할 수 있는 산림경영과 점차 늘어나는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기계화는 중요한 산림정책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1995년에 임업기계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다 2015년에 변화하는 산림작업여건을 반영한 임업기계장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5차 산림기본계획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임업기계화의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를 개발하고 이미 개발된 장비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급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숲가꾸기 산물 수집량 증대에 대비하여 기계화 영림단 양성 및 기계장비를 확대 보급하는 등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계를 조작하는 기계수(Operator) 양성 등 임업기계화 관리·운영체계 및 생산시스템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2018년말 현재 임업기계 보유대수는 총 22,876대로서 지방산림청이 3,699대(16.2%), 지방자치단체가 14,548대(63.6%), 산림조합이 4,629대(20.2%)를 보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지속해서 임업기계를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표 4-40 임업기계장비 보유 현황

장비 구분	계(대)	지방청(대)	시·도(대)	산림조합(대)
계	22,876	3,699	14,548	4,629
산림토목	615	158	300	157
임목생산	8,928	1,227	6,261	1,440
조림·육림	4,126	780	2,450	896
목재가공	891	106	518	267
산림보호	5,168	789	3,513	866
양 묘	1,051	253	547	251
행 정	2,097	386	959	752

자료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또한,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 도입을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안전하고 품질높은 임업기계장비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부분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독립가, 협업체 등 산림경영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비를 대여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지원센터 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 4-41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 및 보유장비 현황

설치년도	기관명	소재지	보유장비
소계	7개소		122대
2001	임업기능인훈련원	전북 진안군 부귀면 전진로	타워야더 등 12대
2002	임업기술훈련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동로	타워야더 등 15대
2003	임업기계훈련원	강원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타워야더 등 16대
2003	순천시산림조합	전남 순천시 조정래길	HAM200 등 25대
2004	평창군산림조합	강원 평창군 평창읍 서동로	HAM300 등 19대
2005	청주시산림조합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단재로	HAM300 등 21대
2006	산청군산림조합	경남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HAM300 등 14대

자료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표 4-42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현황

(단위: 일, %)

센터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가동일	가동률	가동일	가동률	가동일	가동률	가동일	가동률	가동률	가동률
계	3,255	60.1	5,595	63.2	9,602	72.8	10,282	72.8	10,146	72.2
기능인	440	65.4	630	71.1	801	70.7	1,052	82.8	1,000	92.5
기술	405	66.9	705	81.7	817	74.5	1,387	92.2	1,221	60.4
기계	496	49.7	1,115	90.6	1,263	75.0	1,489	96.1	1,281	80.1
순천	494	76.5	698	53.0	2,061	70.1	1,442	56.3	1,235	62.1
평창	583	86.5	674	47.4	1,607	62.9	1,269	59.9	2,002	69.1
청주청원	330	35.4	830	38.9	1,895	76.3	2,348	69.8	2,140	67.3
산청	507	56.9	943	65.3	1,158	90.6	1,295	72.3	1,267	93.4

자료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임업기계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 운전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숙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2007.10월부터 임업기계 대여수수료를 평균 18% 인하하여 산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으며, 산주가 임업기계장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지, 임업신문 등의 전문지 및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다.

세제 지원에 있어서는 임업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종을 2001년도 6종에서 15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업용 기계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기종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표 4-4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계장비

- ① 임업용 동력천공기, ② 임업용 약제주입기, ③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를포함한다), ④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를 포함한다), ⑤ 임업용윈치, ⑥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⑦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⑧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⑨ 타워야더, ⑩ 포위더, ⑪ 목재파쇄기, ⑫ 톱밥제조기, ⑬ 동력임내차, ⑭ 밤수집기, ⑮ 자동지타기

자료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또한, 2003년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임업용기계장비 10종에 대한 면세석유류를 공급하고 있다.

표 4-44 임업용 면세석유류 공급현황

(단위: kl)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4,948	5,336	5,689	5,975	6,094
휘발유	4,696	5,103	5,460	5,731	5,849
경유	252	233	229	244	245
윤활유	-	-	-	-	-

자료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향후계획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기능인영림단 교육훈련과정에 기계장비 교육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으며, 강릉, 양산, 진안 등 3개 훈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림 경영사업을 통해 현장실습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관리소별로 기계화영림단을 육성하여 산림사업 물량을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각종 산림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이들 기계·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기계수(Operator)를 지속해서 양성하여 임업기계화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임업은 대표적인 3D업종으로써 노동 부담과 생산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임업기계화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노동의 안전성, 효율성, 수급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계화 산물수집의 도입여건이 성숙함에 따라 임업기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기능인영림단에서는 기계가 없으면 임목생산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장비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숲을 잘 가꾸고 자연친화적인 임목생산을 위해서 임업기계화의 가속도를 더욱 높이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서 펴나가고자 한다.

다.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사무관 송명수

시행배경

우리나라의 산림은 산림면적 비율로 약 68%가 II~IV 영급에 속해 있다. 또한, I 영급까지 포함하면 약 71% 정도가 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면적에 대해 숲가꾸기 작업을 해주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숲가꾸기 사업량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산림사업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임업기능인의 안정적 확보 문제는 산림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임업기능인 양성

산림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능인영립단은 1984년에 국유림의 산림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족되었고, 이후 1990년에 민유림 산림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산림조합 소속 기능인영립단이 구성되었으며, 2000년에는 산림사업법인에서 기능인영립단을 조직하여 활발하게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업기능인력은 2018년까지 1,115단 6,948명을 조직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업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

표 4-45 최근 3년간 임업기능인 영립단 조직 현황

(단위: 단, 명)

구 분	2016년 말		2017년 말		2018년 말	
	단수	인원	단수	인원	단수	인원
계	1,194	7,487	1,175	7,260	1,115	6,948
국유림 영립단	144	1,540	146	1,533	142	1,476
산림조합 영립단	308	2,979	289	2,767	276	2,683
산림사업법인 영립단	742	2,968	740	2,960	697	2,789

자료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2) 임업노동력 확보 및 후생복지

임업노동력은 주로 농·산촌 주민을 중심으로 임업기능인을 선발·육성하여 기존 영림단에 편입시키거나 신규로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신규로 양성된 임업기능인에 대하여는 숲을 보는 기술, 기계 활용과 수리·정비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중심 및 현장위주의 체험식 적응 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임업기능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 시 현장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2년에는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국유림 영림단에게 조림·숲가꾸기·벌채 사업 등을 위탁·대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임업기능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충분한 작업물량을 확보하여 시기별로 기능인영림단에게 적정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임업노동력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임업기능인교육에 참여하는 영림단원에게는 1인당 40만원씩 교육훈련 보조비를 지급하여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향후계획

산림작업은 아직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농촌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여 도시화율이 2050년에는 87.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농·산촌 인력 감소가 심화할 전망으로, 전문노동인력의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산림사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임금의 현실화 및 체계화 등 복지후생 관련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산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시설의 확충과 지역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자 하며, 또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사업의 확대에 따른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이들에 대한 현장위주의 체험식 교육 훈련, 기술수준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기능인영림단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라. 단기임산물 소득 증대 및 안정성 강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안찬국

시행배경

우리나라의 산림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자원의 보고이다. 하지만 전체 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은 영세한 실정이고, 산림에서 목재생산을 통해 소득을 얻기까지는 3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반해, 단기소득임산물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인이 단기간에 임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약초류 등 79개 품목에 대하여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업은 임가의 규모가 작고 대부분 겸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업소득 34.0%, 임업외 소득 39.6%, 이전소득 등 20.0%를 차지하여 임가소득 중 임업소득 비중이 낮은 편이다.

또한, 노령화 등 산촌의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귀산촌가구가 '17년 45,247명에서 '18년 43,15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건강을 위해 귀산촌한 가구의 비율이 '17년 9.2%에서 '18년 9.6%로 증가한 점을 미루어보아(귀농귀촌인통계, 2018) 건강·웰빙에 대한 국민의 관심으로 청정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단기소득임산물 육성방안 마련 추진

임산물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가공·유통망 형성도 미흡하며, 소규모·조방적 재배로 대량 생산 및 고품질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이 취약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임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7월에 '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2014년 11월에 주요 임산물 10개 품목에 대해 산업육성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의 규모화·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소득 전략품목의

육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실류·버섯류·산나물 등 임산물에 대한 맞춤형 생산시설도 지원하고 있다.

2)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정책 내용 및 성과

그간의 지속적인 산림소득 정책의 성과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2007년 1조 5,806 억원에서 2017년 2조 9,136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2018년 임가의 가구당 총소득은 연간 36,476천원으로 전년(34,590천원) 대비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임가경제조사, 2018). 더욱이 2018년 평균 경영주 연령은 64.6세이며 경영주 연령이 60대인 임가가 39.5%로 가장 많은 등 산림소득사업이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사회와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6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2012년까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산림작물 생산단지	365	107	32	40	52	50	45	39

자료 : 산림청, 2017년

목재생산 중심의 한계성 및 장기성을 보완하고 산림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 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산림복합 경영 사업을 2017년까지 14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도 34개소에 대한 산림복합경영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4-47 산림복합경영 지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2012년까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산림복합 경영단지	176	24	16	26	23	25	28	34

자료 : 산림청, 2017년

기능성이 높은 표고버섯은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표고툽밥배지 수요에 대처하고, 생산자들에게 우수한 국내 톽밥배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권역별 톽밥배지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며, 중국산 톽밥배지 수입 증가에 대응하고 국내

자급률 향상을 위해 재배·생산시설을 시범도입 하였다. 아울러 ‘골든 시드 프로젝트 (Golden Seed)’ 종자 사업으로 2021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하여 표고품종 보급, 수입대체용 신품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3) 임산물 품질관리 강화대책 추진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에 대해 농약사용, 중국산의 국내산 둔갑 등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재배단계에서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생산적합성조사, 생산신고, 생산과정 확인, 품질검사, 품질표시 등을 실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 후 유통·판매하여 산양삼에 대한 청정이미지를 강화하고, 산양삼 유통관리 범위를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부정유통 방지에 노력하였다.

향후계획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로 임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웰빙 붐과 함께 청정 임산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임산물 생산기술, 자금, 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요 증가 역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영양과 약성이 풍부한 청정임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밤 막걸리, 감 와인, 산양삼 화장품, 건강음료 등 가공 기술의 고도화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로운 제품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 바이오 경제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내실화 및 지원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밤·표고·뽕은감·산양삼 등 고소득 1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해 나가는 한편, 생산·가공·유통·체험·지역 관광 상품과 연계하는 소득사업의 융·복합 모델을 확대 개발하여 산림소득을 증대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갈 계획이다.

마. 국산 목재의 이용촉진

 산림청 목재산업과 사무관 이명규·유상아

시행배경

그 동안 지속적인 국산재 공급 확대 노력으로 국내 목재 생산량이 증가하여 2018년 목재 자급률은 15.2%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국내 목재 소요량의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재는 원목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원유 및 운임비 상승, 자국 원자재 보호 등으로 수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원목보다 목재 제품의 형태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벌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원목생산 한계, 대부분의 벌채가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시기적 집중화 문제, 목재 신수요 증대(목재펠릿, 에너지용, 한옥 등)로 목재 산업체는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생산목재는 대부분 간벌 소경재로서 섬유판, 펄프·칩 등 산업용재, 표고자목, 톱밥 등 농·임업용 자재, 루바·몰당재 등 건축 내장재로 활용되고 있으나 생산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수입산 목재보다 떨어짐에 따라, 국산 목재 고부가 가치 창출 및 임도 신설, 임업 기계화 등 산림 경영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산 목재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 목재산업 구조는 제재목 등 고급재 용도는 건축 경기 위축 등으로 감소하는 반면, 저급재 용도는 산림바이오에너지 소비 급증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목재 원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임목 부산물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응하고 웰빙, 국민건강 증진, 임분 구조 개선과 목재산업 육성, 목재문화 확산, 다변화하는 용도별 목재 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이용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행 내용 및 성과

2018년 말 현재 수입 목재를 포함한 총목재 공급량은 30,056천 m^3 으로서, 이 중 국내 목재는 2017년 대비 5.5% 감소한 4,577천 m^3 이 공급되었으며, 국산목재 자급률은 15.2%를 기록하였다.

국산재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해 사유림에서는 목재유통센터 2개소, 목재집하장 17

개소를 운영해왔으며, 경기도 여주와 강원도 동해에 설치된 목재유통센터에서는 낙엽송과 소나무를 주원료로 원주재, 내장재, 판재 및 각재, 집성재 등 건축자재를 생산·직거래하여 고부가가치 목조주택, 건조·방부목 등 목제품 개발·보급, 목재펠릿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유림에서는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을 위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산림청별 임지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복원용 목재생산구역’, ‘표고자목용 목재생산구역’, ‘합판용 목재생산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4-48 2018년 목재 수급 실적

(단위: 천m³)

수요	공급	합 계		국내재 (원목)	수입재			자급율(%)		
		합계	원목		제품	소계	원목	제품	원목	총목재
계		30,056	7,607	22,449	4,577	25,479	3,030	22,449	60.2	15.2
제 재 용		5,871	3,430	2,441	636	5,235	2,794	2,441		10.8
합·단판용		2,091	202	1,889	-	2,091	202	1,889		-
펠트·칩용		9,887	843	9,044	843	9,044	-	9,044		8.5
보 드 용		3,584	1,625	1,959	1,591	1,993	34	1,959		44.4
바이오매스용		5,348	314	5,034	314	5,034	-	5,034		5.9
기 타		3,275	1,193	2,082	1,193	2,082	-	2,082		36.4

또한, 목재 체험교실 운영 및 목재산업 박람회 등을 통해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목재의 친환경성·건강성을 홍보하여 목재이용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였고, 국산목재의 용도 개발을 위한 국산 목재의 활용 촉진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목재이용·가공시설 지원 13억원, 수출원재료 구입 6억원, 폐목재 및 국산목재 구입자금 31억원, 국산목조주택 신축 10억 등 총 6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한편, 2013년 5월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목재 생산업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원목생산업자도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을 갖춰 해당 시·군에 등록하도록 하여 국내 벌채사업의 현황 파악 및 벌채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2018년까지 2,122개 업체가 원목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였다.


향후계획

앞으로 국산 목재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산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국내 목재 산업 육성 및 목재 문화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2019년은 2018년 공급량 보다 30.0% 증가한 595만m³의 국산재를 공급할 계획이며, 산업용재 적기 공급을 위해 용도별 목재 생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에는 국산목재 용도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 5개소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25억, 국산재 활용촉진사업 5개소(5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산재 목재산업단지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목재관련 행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목재의 우수성과 목재의 활용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목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재이용캠페인, 목조건축 세미나, 목재산업 박람회, 목재체험 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바. 목재 재활용 촉진 기반 조성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정재수

시행배경

지속적인 국산목재 공급 증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따른 임목 벌채 감소, 자국 원재료 보호 등으로 인한 수입 여건이 악화하여 원목 및 제재 부산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목 부산물, 사업장 또는 건설 폐목재는 파티클 보드의 원료, 열병합발전소 등의 목질 에너지원으로 재활용되며 양질의 폐목재는 톱밥으로 가공하여 목재펠릿 등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시행 내용 및 성과

폐기물로 처리되던 개발사업지 부산물을 제재용, 원료재용 등으로 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 예산을 절약하고 산림을 자원화하여 산림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

부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목의 자원화 및 공개경쟁에 의한 업무처리를 위해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벌채 이후 임지에 남아 있는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 축사용 톱밥을 생산하여 축사악취저감 효과 및 유기질 퇴비 생산을 함으로써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농림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계획

2019년에도 폐목재 및 국산원자재 구입자금 44.4억원과, 임목·목재 부산물 및 폐목재를 이용하는 보드류 시설 현대화 자금을 14.4억원 지원할 계획이며, 산림부산물의 유용자원화를 위해 2019년부터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 조성·운영에 15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부산물의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국가예산 및 산림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및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 미이용바이오매스 생산 유통이력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미이용바이오매스 증명·활용 등 달라진 정책에 대해 지자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능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4 살기 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가.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사무관 조진호

시행배경

2010년부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통폐합된 이후 특별한 관리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으나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 활용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2014년 산촌기초조사를 시작으로 귀산촌 지원 및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다.

산촌의 우수한 자연경관은 정주공간으로서의 수요로 이어지고 있으며, 산촌에 분포하는 국·공유림과 유·무형의 지역자산으로 다양한 일자리와 소득창출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어 산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귀산촌 지원

2018년 귀산촌 교육은 크게 귀산촌 아카데미, 귀산촌 체험-Stay 과정, 귀산촌 장기체류 과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먼저 2017년 시작된 귀산촌 아카데미는 서울·경기권 직장인을 대상으로 ‘여의도 귀산촌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운영해 왔으나 산촌 저변 확대를 위하여 부산·대구·대전·광주로 확대하고 평일 야간 공개강좌와 주말 현장체험을 병행하였다. 체험-Stay 과정은 전국의 우수한 산촌마을 및 임가 현장을 중심으로 귀산촌 교육 수요자의 관심분야 및 준비단계에 따라 산촌체험(2박3일)→산촌·임업 창업(4박5일)→산촌 살아보기(1주일) 등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귀산촌 장기체류 과정은 도시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및 산촌 공동체 재생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산촌청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산촌 공동체의 멘토링, 청년하우스, 귀산촌 체험 및 임업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였다.

2) 산촌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전략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산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이 자원육성에서 ‘사람과 공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환경에서 산촌 활력을 위한 혁신방안으로 산촌거점권역 육성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괴산, 울진, 인제, 진안, 평창 5개 군을 선정하였다. 산촌거점권역 육성 심포지엄과 5개 군별 지역간담회를 개최하여 산촌 공간 중심의 산림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개발과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임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당초 마을단위 산촌개발사업을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관련된 산림사업의 예산 우선배정, 국유림법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산촌진흥특화사업 이외에도 산촌활성화를 위하여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제도 등을 함께 개정하였다.


산촌지역 활력 증진 및 소득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다. 산촌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25개 마을에 대하여 발전단계별로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밀착 컨설팅을 실시하고 6차산업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판로를 개척하였다. 그리고 2017년 인제 자작나무숲에 이어서 2018년에는 강릉 대관령소나무숲을 대상지로 하여 편의·체험 시설 등을 확충하고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임산물 판매 소득 창출과 연계하였다. 이외에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의 1일 임금을 52천원에서 60천으로 인상하고 운영매니저 교육 등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향후계획

최근 귀농귀촌 증가추세에 따라 산촌지역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산촌지역의 인구감소 등 공동화 현상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인구가 적고 경작지 면적이 작아 삶의 터전으로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산촌지역의 가치를 유지·증진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산촌지역의 특화된 숲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법령·예산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도시민의 산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거주민 삶의질을 개선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나. 휴양공간 확충·서비스 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사무관 이홍대

시행배경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 여가시간 증가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휴양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준 높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장애인 및 노인 등 일반인에 비해 산림휴양 활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림휴양서비스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대형재난 인명사고에 따른 경각심 고조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산림휴양분야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산림휴양 수요도 급증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숲속야영장 등 다양한 유형의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대·조성하고 있다.

특히 자연휴양림은 산림의 다목적 경영이란 취지 아래 공익적·문화적 기능 수행을 위해 1988년부터 조성·운영 이후 2018년까지 170개소를 조성·운영중에 있으며, 연간 이용객이 1천5백만명 이상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국민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표 4-49 자연휴양림 조성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70	152	8	5	1	4
국립	43	39	2	-	1	1
공립	104	93	3	5	-	3
사립	23	20	3	-	-	-

자료 : 산림청 산림복지국

표 4-50 자연휴양림 이용자 추이

(단위: 천명)

구 분	합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55,210	78,344	13,954	15,629	15,239	16,713	15,331
국립	44,543	24,014	3,523	3,842	4,240	4,353	4,571
공립	97,730	47,963	9,362	10,776	9,646	10,308	9,675
사립	12,937	6,367	1,069	1,011	1,353	2,052	1,085

자료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욕장은 생활권 가까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시 근교에 산림에 산책로, 자연관찰로, 탐방로, 체험·체육시설 등을 갖춘 시설로 2018년까지 199개소가 조성되었다.

표 4-51 산림욕장 조성현황

(단위: 천명)

구 분	합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99	176	7	10	-	2	4

주 : 산림욕장은 전개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운영하고 있음

자료 : 산림청 산림복지국

또한 단순 휴양 위주에서 모험·체험 등 가족 및 동호회 중심의 휴양수요 증가에 따라 수준 높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생태·휴양문화교육 등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200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2018년 현재 전국에 11개소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표 4-52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현황

(단위: 천명)

구 분	합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7	-	3	-	1	3	-

자료 : 산림청 산림복지국

최근 캠핑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2016년 1월 27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하여 숲속야영장의 조성근거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산림청에서는 산림 숲속야영장 조성의 올바른 모델을 제시하고자 '18년 국립 화천숲속야영장을 개장하여 산지 내 무분별한 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훼손 및 이용객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과 더불어 산림휴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산림레포츠, 문화예술, 반려동물 동반 등 자연휴양림 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음과 검마산 자연휴양림은 반려동물 동반 휴양림으로 최초 지정·운영하여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국립·공립·사립 자연휴양림 별로 예약시스템 123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종합적인 산림휴양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전국 자연휴양림에 대한 원스톱 예약·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휴양림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하였다.

다중이용시설인 자연휴양림이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과 국립자연휴양림 10개소에 대한 복합재해 모니터링, 사립자연휴양림 8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위주의 기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개량 및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하였다.

향후계획

산림휴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 SOC로서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를 반영하여 산림휴양시설의 위치·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별 특성화와 아름다운 배후 숲을 조성해 자연휴양림의 이미지를 재창조해 나가고자하며, 산촌마을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휴양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을 산림휴양 정책을 전달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장으로 활용하여 국립·공립·사립 자연휴양림의 동반성장과 지역의 관광·먹거리·특산물 등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정보제공 및 공공정보 개방으로 민간창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국민건강증진, 산림치유 활성화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사무관 김통일

시행배경

숲에는 경관이나 햇빛, 피톤치드, 음이온과 같이 쾌적함을 제공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요소들이 풍부하다. 산림치유는 숲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치유인자로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이다. 독일을 위시한 유럽에서는 산림치유 문화가 전통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관련 연구에 착수하고 2009년도에 산음 치유의 숲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한 다음 호응이 좋아 2011년도에 법제화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치유의 숲 확충과 장기체류형 산림치유 거점 구축

증가하는 산림치유 수요에 대응하여 산림치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본 시설로서 치유의 숲과 국립산림치유원을 확충하였다. 치유의 숲은 기존 16개소에서 추가 11개소를 신규 운영함으로써 2018년말 기준으로 치유의 숲 운영 개소 수는 총 27개소가 되었고, 26개소는 2022년까지 모두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국립 4개소(김천, 예산, 제천, 곡성)가 조성을 완료하고 사립 2개소가 신규 조성에 착수함에 따라, 치유의 숲 조성·운영 주체가 보다 다양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기체류형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치유 거점 시설인 국립산림치유원은 2016년에 “다스림(경북 영주·예천)” 1개소가 개원하여 현재 운영 중이고, 두 번째 국립산림치유원으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전북 진안)”의 조성 사업이 2018년부터 착수되었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은 산림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과 국토 균형 발전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림청과 전라북도 및 진안군이 조성 협의체 구성과('17.12.27) MOU 체결('18.8.28) 및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2018년 12월에는 산림복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대상지 토지 확보를 위해 부지 내 중심지 사유림 매수 절차를 이행하였다. 2022년까지 전북 진안군 백운면 일대에 617ha 규모로 서남권 산림치유 거점을 구축하고 선도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2) 산림치유 전문인력 양성

양질의 산림치유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을 1급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18년 말 현재 총 16개소(1급 10, 2급 13, 1급·2급 동시운영기관 7)의 양성기관이 산림치유지도사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8년 한해 동안 1급 49명, 2급 184명, 총 233명의 산림치유지도사가 추가 배출되어 앞으로 산림을 활용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매진하게 될 예정이다.

3) 산림치유 국내외 협력 강화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산림치유 협력 형태가 보다 다양화되었다. 앞서 언급된 두 건의 MOU에 더해, 산림청-대한신경과학회 “산림을 활용한 국민 뇌 건강 향상 업무협약

(‘18.7.2)”, 산림청-통일부-한국산림복지진흥원-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산림치유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MOU(‘18.8.29)”, 산림청-소방청 “소방공무원 산림치유 등을 위한 업무 협약(‘18.12.10)”이 체결되었다.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건강증진 효과성을 향상시키거나 산림치유의 필요성이 높은 계층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산림치유 협력이 증진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산림치유 정책의 위상도 함께 제고되었다. 우리나라 경북 영주시의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중국 산림협력위원회(‘18.5.30)과 제5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18.5.31)에서는 한국의 산림치유 정책추진 현황과 국립산림치유원의 조성·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치유 협력에 대한 요청에 대응하였다. 특히, 중국은 이 기간 동안 ‘산림치유 공동 연구·교육’, ‘치유의 숲 건설기준 표준 교류’, ‘각국 산림치유시설 간 자매결연’, ‘산림치유 전문가 커리큘럼 공동개발’ 등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 측에서는 각국 공공기관 간 MOU를 체결하고 이를 통해 인력교류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계획

2018년 말 기준으로 연간 치유의 숲 방문자 수는 169만 명이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27만 명 수준이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34.1%와 30.0%가 증가한 수치이다. 아울러 2017년 산림청 재정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산림치유 이용자 만족도는 91.7점, 숲태교 이용자 만족도는 90.8점으로 전체 15개 조사 부문 중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산림치유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된 이후, 제공 실적은 양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인 측면에서 서비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산림치유가 보다 절실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신부와 노인 및 아토피 아동 등을 위해 생활권 산림치유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산림치유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치유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산림치유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산되고,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 범위를 늘리며, 산림치유서비스의 상품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및 민간 부분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라. 등산·트레킹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사무관 이민규, 이학만

시행배경

최근 자연을 즐기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산행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단순한 정상 정복형 산행 활동에서 숲에서 생태와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주변 경관도 즐기고 건강을 증진하는 복합기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수평적 개념의 트레킹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산행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1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숲길의 종류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 ‘숲길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잘못된 산행습관, 등산관련 정보 부재 및 안전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산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숲길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샛길 생성과 등산로 주변의 산림훼손이 심각하여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도 저하되는 등 안전한 산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시행내용 및 성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행수요에 부응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둘레길 등 수평적 트레킹길을 조성·관리하고, 생활권 중심의 등산로를 우선 정비하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트레킹길인 지리산둘레길은 295km를 운영하여 '17년도에 66만명이 다녀가는 등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라산둘레길, 금강소나무숲길, DMZ편치불둘레길, 서울둘레길, 낙동정맥트레일, 남도오백리역사숲길 등을 조성·운영하여 양질의 산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8년도에는 국민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트레킹길 191km, 휴양·치유숲길 12km 등을 조성하여 편안하고 걷기 쉬운 숲길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정맥권역,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등산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고, 도로 및 산림훼손 등으로 단절된 등산로 연결을 통해 산림생태계 네트워크 구축과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훼손 등산로 12,320km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으며, '18년도에는 백두대간·정맥 훼손 등산로 37km, 생활권 훼손 등산로 1,305km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등산로 등 숲길에 이정표·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요 숲길에 CCTV 1,274대를 설치·운영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는 숲길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4-4 등산로 정비현황



자료 : 산림청 산림복지국

한편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해 이용자들의 의식 수준제고,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산행 정보 제공을 위하여 2018년도에 청소년·일반인·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등산·트레킹 체험프로그램을 36회(1,088명) 실시하였고,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리명산 클린경진대회 등 산행문화 개선 캠페인을 개최하였으며, 12개 산악구조대를 편성·운영하여 등산객의 조난·추락 등의 산악사고 발생 시 헬기를 이용하여 환자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후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산악박물관 운영(2014년 개관)으로 국가차원의 산악 역사문화와 사료 보전·전시·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산악 강국의 이미지를 확립하였으며, 국립등산학교 운영(2018년 개교)으로 등산·트레킹 교육 및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계획


2015년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산행인구는 32백만명으로 19세 이상 성인인구의 77%에 해당하고, 월 1회 이상 산행인구도 13백만명에 달한다.

이렇듯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산림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고령화 사회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합하고, 다양한 국민 산행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숲길 인프라

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백두대간 및 주요 명산 등산로를 국가 숲길로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숲길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길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악사고 예방구조활동을 위한 민·관 산악구조 협력체계 강화 및 “산행문화 개선 캠페인” 등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향후 국립등산 학교의 체계적 운영으로 맞춤형 등산·트레킹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 자연친화적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수목장립 활성화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사무관 심양수

시행배경

우리나라 화장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4.6%(2017년 기준)에 이르렀다. 이는 인구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묘지관리의 문제, 개인의 가치관 및 의식 변화뿐만 아니라 매장묘지와 무연고묘지의 증가에 따른 국토잡식과 자연훼손 등의 문제점 인식을 중요한 사유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목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수목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장사문화 정서에 기인한 혐오시설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오해와 함께, 공공수목장립의 조성 부진, 사설수목장립의 부정적 운영에 따른 피해발생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수목장립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07.5.25)으로 자연장지의 한 형태로서 수목장립이 정의되고, 산림청장이 수목장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이후 수목장립의 종류별 세부면적, 설치기준, 운영방법 등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수목장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2009년에는 제1 국립수목장립(하늘숲추모원)을 개원하여 운영(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위탁)하고 있다.

이후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수목장림 골분반환에 따른 환불규정을 신설하고, 추모목 중 가족목의 이용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수목장림 운영 체계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합동으로 TF를 구성·운영하였다.

이어 2017년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 안건으로 “장사서비스” 부분이 상정되어 수목장림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법인 등 조성주체의 범위 확대를 통한 민간의 조성 투자, 국유림 활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조성 허가 면적 확대(산림보호법시행령), 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이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법인의 조성주체 확대를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한편, 국유림에서의 사용허가 등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2018년 지자체 참여 공모를 통한 제2 국립수목장림(기억의 숲) 대상지를 충남 보령으로 확정하고 2022년 개원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를 추진 중이다.

2) 대국민 인식개선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수목장림 국민 인식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언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획보도, 캠페인을 통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사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한 사진, ucc 등 장사문화 인식개선 공모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립하늘숲추모원에 조성된 다목적 야영장을 활용하여 캠핑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마을의 수익증대를 통한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등 수목장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노력을 하였다.


향후계획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수목장림의 올바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안)’을 제정하고 공공법인이 국유림을 활용하여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인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문가 심포지엄, 기획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목장립 인식증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바. 도시숲 조성·관리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 예건희

시행배경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최근 미세먼지 증가 등 대기오염과 도시열섬현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 악화되는 추세이다.

미세먼지 저감¹⁵⁾, 기후조절기능과 가까운 휴식공간으로서의 도시숲의 효과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여가와 건강에 대한 요구가 도시숲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어 점차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도시숲을 꾸준히 조성한 결과 1인당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9㎡를 상회하는 10.07㎡를 달성하였으나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17년말 기준, 전국도시림현황 통계)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시 내 녹색공간을 더욱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숲의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4-5 미세먼지 저감 개념도



15) 도시숲 내부는 도시평균 미세먼지 농도보다 40.9% 적게 나타남(2017, 국립산림과학원)

시행내용 및 성과

도시지역의 숲은 생육환경악화, 대기오염, 무분별한 사용·관리 등으로 생태적 건강성이 크게 저하되고, 대다수가 각종 개발로 인해 콘크리트 건물들 속에서 고립·단절된 채 섬처럼 존재하여 다양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도시숲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외곽의 산림을 선적 요소인 가로수나 하천녹지와 연결하여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표 4-53 도시숲의 규모별 유형과 기능

규모	유형	기능
대규모 숲	산림, 공원 등	·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 · 시민들의 당일 체재형 휴식공간
중·소규모 숲	명상숲, 녹지, 비오톱	· 소형생물종의 서식처 또는 휴식처 · 시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
독립된 수목 또는 소규모 숲	정원수, 자투리 숲	· 직접적인 거주 환경 개선 · 시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
선형 녹지	가로수, 하천변녹지대 등	· 각 요소의 연결 요소 · 생물종의 이동통로, 생물 서식처

자료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청에서는 그동안 도심지 내 자투리땅, 공공기관 이전 부지, 도시연접 산림 등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4,516ha를 조성하였고 2018년에는 286ha를 조성하였다.

특히,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1,3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활권 주변 나대지, 발전소·산업단지·고속도로 등 미세먼지 주요 발생지, 주거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숲을 조성하였다.

도시숲의 조성 위치와 목적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폭염현상 완화, 경관·생태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소년 숲체험 및 교육·숲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계획

2018년부터 추진할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미세먼지 차단숲을 매년 90ha, 도시바람길숲은 전국 17개 도시에 조성할 예정으로,

도시 내외각의 산림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실내·옥상·건물외벽 등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을 확대하여 생활권내 녹색공간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4-6 도시숲 조성 사례



생활권주변 도시숲



공단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밀착형 숲

사. 가로수 조성·관리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 김동욱

시행배경

가로수는 인공구조물로 가득한 도심 내에서 아름다운 경관과 녹음을 제공하고,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을 저감하며, 도심의 중요한 거점 녹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선형녹지이다. 또한 가로수 조성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 흡착 및 열섬 완화 효과 등 가로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수의 기능 극대화 및 가로수 관리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시행내용 및 성과

가로수 관리업무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부속물로 관리하였으나 2001년 가로수에 대한 제반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림청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2002.1.2. 산림청 예규499호)’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여 왔다.

또한 도로관리청과 지자체 간의 업무 영역적 충돌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을 개정·고시(2013.12.31, 산림청 고시 제2013-87호)하였다.

이에 따라 가로수관리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었고,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도시의 선형녹지축으로써의 녹지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표 4-54 최근 5년간 가로수 조성실적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장거리(km)	1,001	1,521	1,522	981	1,480
본수(천본)	384	424	846	430	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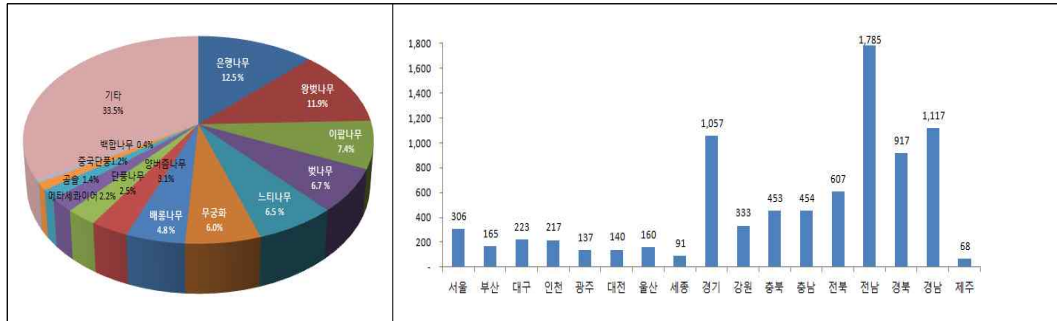
자료 : 산림청 산림복지국

1) 가로수 조성

전국의 가로수는 2018말 현재 8,230천본(43,223km)으로서 2017년 대비 488천본(671km)이 증가하였으며, 수종별로는 뽕나무류 18.6%, 은행나무 12.5%, 이팝나무 7.4%, 느티나무 6.5%, 무궁화 6.0% 등이다. 특히 2018년도에는 뽕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의 식재 비율은 낮아진 반면 왕뽕나무 0.8%, 느티나무 0.4%, 이팝나무 0.2%의 식재비율은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라남도가 전체의 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 13.6%, 경기 12.9%, 경북 11.1%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표 4-55 2018년말 가로수 수종별·시도별 조성 현황

(단위: 천본)



자료 : 산림청 산림복지국

최근 5년간 가로수 조성 평균거리는 1,301km로 2012년 이후 조성 거리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2017년도 981km를 조성하면서 다시 하향추세로 들어섰다. 2017년도에 식재된 가로수는 주요수종은 왕벚나무(125천본, 17.0%), 느티나무(63천본, 8.6%), 이팝나무(58천본, 7.8%), 중국단풍(23천본, 3.1%), 은행나무(12천본, 1.6%) 순이었다. 꽃을 볼 수 있는 화목류의 식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지역별 특성 및 경관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고 있다.

2) 생육환경 개선 및 명품 가로숲길 조성

가로수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조성된 가로수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협소한 생육공간 및 부적절한 토양으로 뿌리발달 및 생장이 극히 저조한 가로수에 대해 정상적인 수목생장을 도모하고 투수층의 확대 및 관목식재를 통한 녹색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뉴욕·파리 등 세계적 도시들의 성공사례를 통해 지역고유의 문화, 역사 및 전통을 아우르는 특색 있는 명품 가로숲길 조성으로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4-56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



자료 : 산림청 산림복지국

3) 가로수 수형관리 등 가로경관 창출

산림청에서는 가로수를 활용한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앞으로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한다.

표 4-57 특색있는 가로수 가지치기 사례



(국내 사례)

(국내 사례)

자료 : 산림청 산림복지국

그동안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은 가로경관을 고려하지 못한 채 도로표지판과 간판 가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강도의 가지치기를 시행해 몸통만 앙상한 가로수가 만들어지는 등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도심상가 간판가림 민원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09년 '가로경관 향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가로수 주요 10대 수종별 수형관리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이 지역 랜드마크화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생활공감 정책과제에 채택('09.7)되었고 가로수가 도시환경의 하나의 요소를 넘어 도시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서 도시미관과 경관을 살리는 관광자원으로 도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가로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에 조성된 총 143종의 수종별 특성과 식물학적 특성, 관리상의 유의점을 수록한 가로수도감 '한국의 가로수'를 '12년에 발간하여 가로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표 4-58 가로수 수형관리 유형




자료 : 산림청 산림복지국

향후계획

'도로 및 환경유형별 가로수 조성·관리 모델'(14.4) 및 가로수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로수의 체계적 조성·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도시 환경문제의 저감을 위해 가로수 조성·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 명상숲 조성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 김동욱

시행배경

급격한 도시화와 개인주의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로 인해 생활권 내 녹지가 사라지고, 학생들이 자연과 접하는 기회가 감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생태맹이 양산되고, 배려심 부족 및 자기중심적 사고의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학교 내에서의 폭력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이에 학생들이 가장 쉽게 자연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학교육의 학습 공간을 확대하고, 정서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학교와 학교주변에 명상숲을 조성하게 되었다. 명상숲 조성은 학생들에게 자연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마음과 정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명상숲 조성사업은 1999년 민간단체인 (사)생명의숲에서 시민운동으로 시작하여 2001년부터 산림청에서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의 효과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의 목적으로 지원을 시작하여 2017년까지 1,659개교를 조성하였다.

명상숲 조성사업은 2008년까지 (사)생명의숲, 2009년까지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사업을 대행하여 추진하였고, 201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5년부터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표 4-59 명상숲 조성 실적

(단위: 개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신규	159	75	109	120	84	111
누적	1,271	1,346	1,455	1,575	1,659	1,770

표 4-60 명상숲 조성 사례



경북 지산초등학교



제주 한마음초등학교



울산 울주 온산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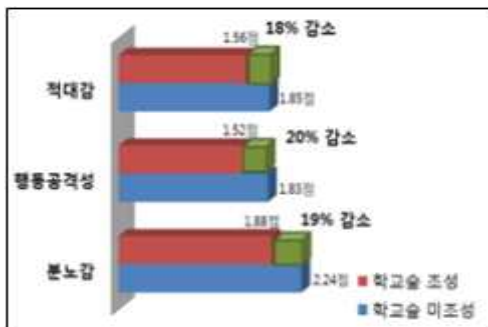
자료 : 산림청 산림복지국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함에 따라 「명상숲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학교-지방자치단체 간 명상숲 조성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고 있다.

2013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명상숲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아이들의 적대감, 행동 공격성, 분노를 18~20% 완화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국갤럽에서 ‘명상숲 조성 확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95%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명상숲은 도심 내 그린 네트워크 형성, 생물서식처 조성을 통한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이라는 환경 조절효과 뿐 아니라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기회 제공, 공격성 완화, 집중력 강화 등의 교육적 효과 또한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이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재충전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향후 명상숲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1 명상숲 효과 분석 및 국민의식 조사 결과



명상숲 효과 분석(국립산림과학원, '13)



명상숲 조성 확대 국민의견(한국갤럽, '13)


향후계획

명상숲은 도심 내 그린 네트워크 형성, 생물서식처 조성,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환경생태적 효과 뿐 아니라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기회 제공, 공격성 완화, 집중력 강화 등의 교육적 효과 또한 큰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명상숲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우수한 명상숲을 선정하여 지역주민, 어린이, 청소년 등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숲교육, 숲체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5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가. 국제기구 설립 및 산림협력 강화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이영지

시행배경

산림분야는 호혜적 동반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대표적 협력분야로서 우리나라의 녹화 성공 경험을 각국과 공유할 수 있으므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협력 요청도 많다. 우리나라는 산림협력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등 현안 이슈에 아시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09년 6월 1~2일에 제주도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 설립을 제안하였고 공동성명을 통해 공식 채택되었다.

기구 설립을 위해 우선 아세안 국가들과 ‘한-아세안산림협력협정’을 체결하고(2011년) 사무국을 설치(서울)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당초 기구 설립 제안 취지와 같이 회원국 자격을 범 아시아로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 9개국(말레이시아 제외), 카자흐스탄, 몽골, 부탄, 동티모르 등 13개국과 함께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확대설립 협정문을 채택(2015.9.22., 서울)하였다.

시행내용 및 성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국제기구로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2018년 4월에 공식 출범을 하고 설립협정 발효 기념식을 2018년 5월 3일 서울에서 가졌다. 이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외교부 1차관, 산림청장, 회원국 대사, 국제기구 등 9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국제기구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사무국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하며, 신임 사무총장 선임을 위해 2차례 인선위원회(2018.8.9.~10, 서울/ 2018.10.11.~12, 서울)를 개최하고 2018년 11월 제1차 창립총회에서 신임 사무총장(부탄 Chenchu Norbu)을 임명하였다.

창립총회에서는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하의 자산 등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로 이관토록 하였으며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다양한 산림협력 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아시아 산림의 보전과 복원에 힘쓰고 있다. Landmark 프로그램은 장기 협력사업으로 1,600만불 규모로 교육훈련센터 건립 및 운영, 역량구축 프로그램 개발, 황폐산림지역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참여 국가들의 수요에 기반한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3개 사업이 완료되고 4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교육훈련센터(RETC)는 2015년 시작하여 2017년 12월 완공하였으며, 2018년 7월 미얀마 양곤에서 미얀마 자연자원환경보전부 장관, 양곤주 지사, 산림청 차장 등이 100여 명이 참석한 개소식을 가졌다.


한편, 기구의 확대설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국회 제346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동 협정 비준 동의안이 통과(2016.11.3)됨에 따라 첫 번째 국가로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2016.11.4.), 베트남(2017.3.14.), 동티모르(2017.7.25.), 부탄(2017.12.8.), 미얀마(2018.3.28.), 캄보디아(2018.8.10.), 브루나이(2018.8.23.)가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인도네시아(2016.8.2), 몽골(2017.8.21.), 라오스(2018.3.13.)는 협정문에 서명하고 비준절차를 진행 중이며 여타 참여국 역시 서명과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계획

산림청은 국제기구 설립을 주도한 국가로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의 참여국(14개국) 모두 당사자 지위를 얻고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비준서 기탁 등 가입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읍서버 국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설립협정 발효 이후 기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과 정부 간 본부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운영규정 등 각종 규정의 제·개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나. 해외조림 확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사무관 신건섭

시행배경

국내 목재 수요증가 및 수급불안에 대비한 장기·안정적인 해외 공급원 확보를 위해 2050년까지 해외에 100만ha를 조림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조림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용재 수요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한 국내외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산재 활용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외조림을 통한 바이오매스 원료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우리나라의 목재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지원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해외산림자원개발의 경우 투자가 장기·대규모인 특성상 기업의 신규 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1993년부터 정책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2018년까지 조림, 육림, 가공 등 사업에 총 2,044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업들이 해외투자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2006년부터 해외산림자원개발 환경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조사사업은 매년 2개 이상의 투자 대상국에 대한 정책 환경을 조사하여 실무가이드를 발간하는 ‘정책환경조사’와 개별 기업의 투자대상지 자연환경, 토양, 조림수종 적정성 등의 조사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전환경조사’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8년까지 40개 기업, 66건의 사전환경조사를 지원하였다.

2018년까지 산림청에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는 24개국에 105개 기업으로 조림 60건, 가공 46건, 벌채 15 등 121건이다. 해외조림이 시작된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기업은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솔로몬 등 14개국에 37개 기업이 진출하여 제주도

면적의 약 2.6배에 달하는 48만 5천ha를 조림하였다. 2018년에는 8개국에 약 2만 9천ha를 조림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조림 투자는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조림사업 이외에도 목재 가공분야 투자도 활발히 추진하여 국내 목재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4-62 해외조림 추진 실적

(단위 : ha)							
년도별	합계	1993~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484,558	309,139	43,182	41,531	32,555	23,174	29,761

자료 :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은 해외조림 다변화 수요 대응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과 중남미 지역 조림투자 진출 거점 마련을 위해 파라과이에서 활엽수 용재수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조림사업은 주요 신재생 대체에너지 원료인 목재바이오매스(목재펠릿, 우드칩 등)를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신규 사업모델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지를 벌채·반입하여 국내 발전사에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해외 목재공급원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 등 외부여건 변화로 인해 해외투자에 따르는 어려움도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모델 개발을 위한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자금 융자 및 환경조사 등 실 수요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해외산림개발 진출 기업 기술지원 자문단 구성·운영, 해외산림센터의 진출기업 지원 등 해외산림자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가.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사무관 김병훈·사무관 강문표

 시행배경

1980년대 이후 과잉어획에 따른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 어업 자재비, 인건비, 유류비 등 출어경비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연근해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악화된 연근해어업의 경영수지 개선과 감소 추세에 있는 연근해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해 1994년부터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감척어선을 폐선하고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어업인에게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실직한 어선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 및 국내외 어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연근해 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4년부터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직권감척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추진

연근해어선의 감척은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다. 1994년부터 2018년까지 1조 7,152억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선을 20,265척을 감척하였으며, 그 결과 수산자원회복에 따른 잔존어업자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어선세력은 어업자원량에 비해 10% 정도 초과된 상태이다.

표 4-63 감척 필요 어선척수

(단위: 척)

구 분	어선척수 (2013)	적정어선척수	과다 어선척수	
			건수	비율(%)
합 계	45,598	41,185	4,413	10.7
연안어업	42,818	38,579	4,239	11.0
근해어업	2,780	2,606	174	6.7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4), 정치성 구획어업은 제외하였음

연근해어선의 감척은 크게 일반감척사업과 국제감척사업으로 나뉜다. 먼저 일반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6,651억 원을 투입하여 17,583척을 감척하였고, 근해어선은 1조 501억 원을 투입하여 2,682척을 감척하였다. 또한 국제감척사업의 경우,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제정된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6,443억원을 투입하여 1,308척의 근해어선을 감척하였다.

어업생산량은 '16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어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감척하여 어업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연근해어선척수 : ('00) 68,629척 → ('15) 45,335척 → ('17) 44,782척 → ('18) 42,812척

* 생산량(만 톤) : ('00) 119 → ('13) 105 → ('15) 106 → ('16) 91 → ('17) 93 → ('18) 101

2)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추진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현실을 반영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 현황, 어업의 종류별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는 향후 조사 자료가 매년 축적되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및 “감척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된 어업통계 기반이 마련 되어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친환경어구 보급

자망·통발어업은 바다에서 1주일 이상 투망하였다가 양망하는 수동적인 어구이기 때문에 타 어업에 비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어구 유실률이 매우 높으며, 이들 어구가 바다에 유실되면 해류에 의해 흘러 다니면서 그물코에 물고기가 얽혀 죽거나 해저 바닥에 쌓여서 수산생물의 서식장 및 산란장을 파괴할 뿐 아니라 유령어업(Ghost fishing)을 발생 시켜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기존 나일론어구 대신에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어구가격의 일부를 지원(국비 70%, 지방비 30%)한다. 주된 지원 내용은 어업인들에게 생분해성어구 표준단가와 나일론어구 표준단가의 차액에 나일론어구 표준단가의 10%를 합산 지원하여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07년에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게자망어선 150척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018년까지 393억 원을 지원하여 대게자망, 붉은대게자망, 장어통발, 조기자망, 꽃게자망 등 3,754척을 대상으로 생분해성어구를 보급하였다. 아울러 생분해성어구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수협중앙회를 사업대행기관으로 참여시켰으며, 어구의 성능검사 및 인증, 품질검사 등은 국립수산물시험원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의 확대와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국립수산물시험원에서는 2004년부터 생분해성어구 개발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자망 11종, 통발 7종, 문어단지 및 주꾸미 인공소라 등 총 22종의 어구를 개발하였다. 이들에 대해 어획성능 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존 어구와 어획성능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분해성 대게자망은 기존 나일론 어구보다 그물코 전개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업 시 대게치어 어획율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 수산자원 보호 및 조업시간 단축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4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투자계획

(단위: 억원, 척)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예산	14	30	27	28	30	30	30	30	30	46	52	52	347
생분해성어구 사용 척수	150	212	200	263	347	350	364	370	380	480	379	259	3,754

향후계획

앞으로 국내의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어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어선세력이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까지 연근해어선을 지속적으로 감척해가는 한편, 자원남획형 어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정감척을 통해 어업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어업구조개선을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관리형 어선감척, 저비용·고효율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친환경 어구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생분해성 어구의 성능과 품질 및 생산단가를 최소화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 서민혜, 사무관 김영민, 사무관 정효정

시행배경

우리나라의 대내외 수산업 여건은 동북아 EEZ 체제 개편에 의한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로 전통적인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자원남획으로 인한 어업경영 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연근해 수산물 생산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꾸준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자원회복사업 노력을 통하여 2002년을 저점으로 수산자원은 회복세로 전환 되었으나, 2012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과잉어획이 계속 될 경우 회복세가 둔화 되고 수산자원의 감소도 우려된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적정생산 가능량을 추정하고 회복 대상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자원 조성, 자원 회복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수산자원회복계획 단계별 이행

수산자원회복계획은 해역별·어종별로 과학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명확한 회복 목표를 설정한 후, 정부·지자체·어업인·학계 등 관계자가 공동 참여하여 회복 대상 자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자원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별 정책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복계획에 수정·반영하여 조치하는 체계적·종합적인 자원관리계획이다.

수산자원회복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수산자원 회복 세부실천계획을 2005년 12월에 마련하고 수산자원회복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공포(2009.4.22, 시행일 2010.4.23.)하였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0.4.23.)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2010.5.31.)을 제정하였다.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조기 정착과 자원회복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역별로 꽃게(서특), 도루묵(동해), 낙지(남해-무안), 오분자기(제주-성산)를 대상으로 자원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참홍어(서해), 참조기(서남해), 대구(동남해) 등 3개 어종을 추가, 2008년에는 말쥐치(남해), 기름가자미(동해), 개조개(남해) 등 3종, 2009년에는 갯장어(남해), 갈치(남해) 등 2종, 2012년에는 고등어, 대문어(동해), 옥돔(제주) 등 3종, 2014년도 명태(동해)를 추가하여 총 16종으로 자원회복 대상 어종을 확대하였으며 2017년도 참조기, 고등어 등을 포함한 16종의 자원회복 권고안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종합적·체계적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5년 단위의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2011년 제1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2011~2015)에 이어 제2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수산자원관리 체계 기반 확립을 위한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성패는 어업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므로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어종별 수산자원관리위원회로 구성·활용하는 한편,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과학위원회(수산과학원)에서 제시한 권고안(관리방안)을 기초로 해 어종별 자원회복계획을 발전·보완하여 나갈 계획이다.

2) 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로 표기)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어업자원관리제도로 어획량 제한을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TAC제도를 '9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고등어·전갱이·붉은대게·개조개·키조개·제주소라·대게·꽃게·오징어·도루묵·참홍어 등 11개 어종을 대상으로 289천 톤의 TAC를 정하여, 13개 업종에 대해 실시하였다. 어종별 TAC 산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평가 결과와 실어획량을 감안하여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하였으며, 배분량은 과거 조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도로 배분하고, 시·도에서는 배분량을 어선별로 할당하도록 하였다. 특히 TAC 확대를 위하여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오징어 TAC 시범도입을 추진하고, 인천지역 참홍어 자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상수역을 기존 서해특정해역에서 서해북위 37도 이북해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또한, TAC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수산자원조사원을 기존 70명에서 85명으로 확충하고 주요 거점 지정 판매장소 위주로 상시 현장 대응을 위한 TAC 현장사무소를 10개소로 확대하였다.

또한, TAC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포획·채취를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하여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 지원 자금을 확보하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표 4-65 2018년('18.7.1.~'19.6.30.)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단위: 톤)

대상어종	대상업종	TAC설정량	TAC어획량
	합 계	289,643	194,024
고등어	대형선망	110,078	107,471
전갱이		14,610	13,738
붉은대게	근해통발	30,971	15,371
대게	근해통발·근해자망	917	748
개조개	잠수기어업	1,570	1,170
키조개		7,777	6,398
제주소라	마을어업	1,720	1,432
꽃게	연근해자망, 연안통발	5,700	2,668
도루묵	동해구기저·동해구트롤	4,725	1,967
참홍어	근해연승 및 연안복합	321	319
오징어	근해채낚기·대형선망·대형트롤·동해구트롤	94,257	34,541
	쌍끌이대형저인망(시범도입)	16,997	8,181

3) 바다목장 조성

우리나라 연안어장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1998년부터 통영, 여수, 울진, 제주, 태안 등 5개 지역에 시범바다목장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6년부터는 연안지역별 특성에 맞게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해오고 있다. 연안바다목장은 인공어초 등을 설치하여 산란장·서식장 공간을 만들고 조성 지역에 적합한 종자를 방류하는 한편 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관리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연안바다목장은 5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성지역에 대해 5년동안 1개 소당 50억원(국비, 지방비)이 투입된다. 2018년에는 신규로 포항·남구, 고창, 안산·풍도, 완도, 제주추자도 5개소의 바다목장의 조성을 착수하는 한편 기장·장안, 인천·중구, 군산·옥도, 남해·평산, 제주·북촌, 제주·금능 6개소의 바다목장을 완공하여 총 36개소가 완공되었다.

표 4-66 연안바다목장 추진 현황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합계
사업비 (억 원)	40	70	90	120	170	170	190	210	240	190	190	190	200	2,070
준공 (개소)	-	-	-	-	4	4	2	2	5	4	5	4	6	36
완공					①강릉 ②군산 (고군산) ③거제 (학동) ④서귀포 (성산)	①보령 ②군산 (직도) ③사천 ④신안	①용진 (연평) ②속초	①기장 ②서귀포 (강정)	①태안 ②서천 ③영덕 ④울주 ⑤서산	①강진 ②여수 ③경주 ④거제 (다대)	①용진 (백령· 대청) ②양양 ③부안 ④포항 ⑤통영	①당진 ②보령 (옥도) ③고성 ④울릉	①기장 (장안) ②인천 (중구) ③군산 (옥도) ④남해 ⑤제주 (북촌) ⑥제주 (금능)	36
조성중 (준공예정 연도)	삼척·임원, 태안·북부, 태안·남부, 보령·삽시도('20), 삼척·초곡, 태안·중부, 용진·덕적자월, 신안·안좌, 보성('21), 포항·남구, 고창, 안산·풍도, 완도, 추자도('22)													14

4) 바다숲 조성

2009년도부터 갯녹음(백화) 현상이 심각한 동해 및 제주 연안을 중심으로 바다숲 조성 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안어장 생태환경 개선, 어업인 소득 증대, 새로운 탄소 저감원 확보 등 녹색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갯녹음은 기후변화, 성게 등 조식동물의 증가,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해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갯녹음이 확대될수록 해조(초)류의 생활사 차단으로 수산생물의 서식 기반 붕괴, 어업생산성 감소 등 어장의 황폐화가 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갯녹음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2013년부터 해조류·해조류가 서식 가능한 암반을 대상으로 초분광항공영상 촬영기법을 활용하여 갯녹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암반 35,371ha 중에서 약 12,874ha정도가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갯녹음 발생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회복과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자 2030년까지 54,000ha의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바다숲 조성을 위해 갯녹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중립초 설치, 해조(초)류 이식, 천연해조장 관리강화, 갯녹음 발생해역의 자연암반 개선 및 갯녹음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 3,108ha를 조성함으로써 바다숲 18,360ha 조성을 완료하였다.

표 4-67 바다숲 추진 현황 및 계획

(단위: ha, 억원)

구분	추진실적							2018	2030 까지
	계	~2012 까지	2013	2014	2015	2016	2017		
면적(ha)	18,360	1,086	1,388	2,574	3,236	3,064	3,043	3,107	54,000
사업비(억 원)	2,457	539	183	327	357	347	352	352	6,681

5) 인공어초 설치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안정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97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인공어초사업은 어초어장의 지속적인 확대와 견실시공의 정착, 해역별·어종별·기능별 특성에 적합한 어초와 설치방법 개발하고, 설치된 어초의 상태확인 및 기능성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사업비 34,020백만 원을 투입하여 966ha에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어초어장에 대한 위치·상태 확인 및 페그물 수거, 어초어장도 작성 등 사후관리와 인공어초 설치가능구역의 적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68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현황

(단위: ha)

구분 \ 연도	'71~2017	2018	누계
합 계	227,823	966	228,789
부 산	3,210	48	3,258
인 천	11,918	34	11,952
울 산	2,590	16	2,606
경 기	6,146	16	6,162
강 원	23,862	52	23,914
충 남	18,951	52	19,003
전 북	16,925	112	17,037
전 남	45,239	158	45,397
경 북	24,092	52	24,144
경 남	38,315	62	38,377
제 주	36,575	364	36,939

6) 종자방류

방류어류의 생존율 향상 등 종자방류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류어종 크기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수산종자를 방류토록 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였으며, 방류품종은 65종(해수면 50종, 내수면 15종)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수산종자방류 총사업비의 10%를 방류효과조사 사업비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효과 조사를 실시하고, 방류 대상 품종에 대한 질병 유무 확인 등을 실시토록 하여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종자가 방류되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산종자방류 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방류어종 검수 및 방류 시 종자생산자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표 4-69 수산종자 매입·방류 현황

(단위 : 천마리/백만원)

구분	합계		2015까지		2016		2017		201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2,595,369	269,109	2,076,081	211,087	161,498	17,971	165,489	20,112	192,301	19,939
조피볼락	107,593	21,376	88,009	17,246	8,738	1,493	5,320	1,231	5,526	1,406
대하	1,492,291	9,974	1,223,698	8,228	87,850	428	81,752	638	98,991	680
전복	66,907	51,455	53,005	42,235	4,678	3,003	5,723	3,525	3,501	2,692
넙치	84,828	23,853	79,938	22,666	-	-	3,759	810	1,131	377
감성돔	55,828	14,313	41,287	10,588	4,704	1,126	4,600	1,225	5,237	1,374
돌돔	30,932	11,089	24,546	9,059	2,198	555	2,172	656	2,016	819
보리새우	107,524	2,037	69,829	1,535	5,505	174	11,859	138	20,331	190
참돔	18,438	4,147	15,211	3,264	1,578	394	1,128	300	521	189
해삼	67,172	32,861	43,723	20,709	8,170	3,398	10,342	4,624	4,937	4,130
황점볼락	4,041	2,300	4,041	2,300	-	-	-	-	-	-
볼락	31,306	8,750	26,636	7,416	2,317	530	1,204	404	1,149	400
가자미류	9,711	3,225	7,743	2,060	787	513	851	427	330	225
꽃게	104,443	16,758	90,045	14,443	5,123	874	4,516	669	4,759	772
황복	1,255	606	1,255	606	-	-	-	-	-	-
농어류	14,930	7,618	12,003	5,912	810	481	838	525	1,279	700
기타	83,082	21,903	54,840	16,352	6,089	1,881	5,503	1,396	16,650	2,274
내수면	315,088	36,844	240,272	26,468	22,951	3,121	25,922	3,544	25,943	3,711

향후에도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업인의 주요 소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성패는 어업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므로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어종별 수산자원관리위원회로 구성·활용하는 한편,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수산과학위원회(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시된 권고안(관리방안)을 기초로 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어종별 자원회복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현행 수산자원관리 정책별 목표 설정 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차별 개선·발전 방안을 도출, 개별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각 정책별 심사·평가를 강화하여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복계획에 수정·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다.

또한 바다숲·바다목장, 수산종자 자원관리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전문기관인 ‘한국 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국내외 어업질서 확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사무관 이효구, 서기관 김용태, 사무관 조영복

시행배경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수산자원의 감소 등으로 조업경쟁이 심화되고 자원남획, 어구변형, 어업분쟁 유발 등 불법어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어업 단속시스템을 선택과 집중, 단속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강력한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불법어업 방지홍보 등으로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불법어업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어업인 및 업종 간 어장 확보와 이용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어구의 개조 및 변형조업으로 불법 어업 및 조업 갈등의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표 4-70 연도별 국내어선 불법 어업 단속 현황

(단위: 척)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 계	2,959	2,216	1,817	1,700	1,889	1,679
어업관리단	923	561	849	914	957	919
해양경찰청	1,340	871	-*	-*	-*	-*
지방자치단체	696	784	968	786	932	760

* '15,16,17,18년도 해양경찰청 국내 단속실적 미포함

그리고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근거한 EEZ 체제가 확립되었는데 한·일 간은 우리어선의 불법어업 문제 등으로 현재 2016년 어기부터 3년이상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한·중 간은 양국 어업공동위원회 및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중 불법어업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리 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71 연도별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현황

단위:
척)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 계	487	341	568	405	278	258
영해침범	34	24	11	23	9	7
무 허 가	153	85	109	85	39	25
특정금지	13	19	17	34	10	17
조업조건위반 등	287	213	431	263	220	209

시행내용 및 성과

정부는 불법 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어패류 산란기와 성육기인 5월과 10월에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봄철 실뱀장어 불법포획 및 동해안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남해안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자원남획형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상시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불법 어업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일선 지자체 및 수협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방송매체(라디오)와 다수의 어업인, 수산단체, 그리고 수산전문지·잡지 등을 통하여 불법 어업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 캠페인을 실시하여 불법 어업에 대한 어업인과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총 2,300여톤을 강제 철거하였으며, 특히 2017년도에는 정부 주도 하에 3개 권역(서해권, 동해권, 제주권)에서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닻자망, 근해안강망어구, 실뱀장어안강망 등 100여톤을 강제로 철거하는 등 불법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의 방지를 위하여 '16. 7월 정부 합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국어선 불법 범장망어구를 EEZ 인근 해역에서 24톤을 철거하였다.

그리고 무허가 조업어선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중전 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양무어선은 몰수·폐선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EEZ 어업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및 지도단속 실무회의 등 기존 수산 당국간 협의채널 외에 “외교 당국간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신설·정례화('12~연2회)하여 양국 정부차원의 불법조업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13.6월, '14.7월)시 불법조업 문제에 대하여 논의 이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중국측 인식이 변화되고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등 후속조치도 원만히 이행 중에 있다.

향후 계획


정부는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어업인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기관별 역할분담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단속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육상단속 전담팀을 강화하여 주요 항·포구 및 수산물 위판장에 상시 인력 배치, 지도단속과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일 어업협정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EEZ 수역에서 불법조업 하는 중국어선에 대하여 중대위반어선 인수인계 강화,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을 동원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조 2,000톤급 대형 지도선 6척과 노후화된 지도선 5척을 대체 건조하여 '19년말까지 국가 어업지도선 총 40척을 확보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협력을 통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국제적인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 양식산업 활성화 추진

가. 양식산업의 첨단화·규모화 추진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사무관 한지용

시행배경

과거 양식산업은 노동집약적이었으며,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해외의 양식 선진국들은 이러한 위험요소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해서 IT, BT등이 융복합된 첨단 신개념 육상 양식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연구하였고, 현재 상용화중인 만큼 상당한 기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바이오플락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한·중 FTA 체결 대비를 위한 수산물에 대한 단위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대규모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양식산업의 첨단화

양식장 배출수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바이러스에 의한 대량폐사 및 항생제 남용이 심각하며, 높은 생산비에 비해 낮은 양식생산성으로 환경친화형, 식품안전성, 고생산성의 기술개발·적용이 요구되는 바,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기술을 도입하였다.

바이오플락 기술은 미생물이 사육수 내 사료나 노폐물 등 오염물질을 자연분해하여 정화시키거나 섭이 가능한 단백질과 아미노산 등 유기합성물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무환수식 친환경 양식기술로서, 기존 노지에서 1ha당 3ton 정도의 생산에 그치던 새우 양식을 1ha당 60ton 정도로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2018년에는 충남·전남·경북에 바이오플락 기술이 접목된 새우양식시설 5개소를 보급하였다.

순환여과식 기술은 양식수조 외부에 설치한 순환여과장치를 통해 양식장 배출수를 정화하여 양식수조에 재공급함으로써, 배출수를 통제하고 최소화하여 사료, 노폐물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친환경 양식기술이다. 2018년에는 충남·전남·경남에 순환여과식 시설 5개소를 보급하였다.

2) 양식산업의 규모화


첨단 바이오플라크 기술을 활용한 새우 양식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2017~2019년까지 충청남도 당진에서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친환경 새우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계획

2019년에는 전남·제주에 바이오플라크 양식장 시설 지원을 위해 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폐사 저감을 통한 양식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남·전남·경남·제주에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지원을 위해 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2020년에는 전라남도에서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순환여과방식을 활용한 넙치 양식단지 건립을 통해 양식수산물 대량생산체제를 구축 할 계획이다.

나. 내수면 어업 활성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사무관 강희정

시행배경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은 1980년대 민물장어, 송어, 향어 등 다양한 양식어종과 기술개발로 성장기를 맞이하였으나, 1990년대 정부의 수질환경 보호정책으로 가두리 양식업이 규제를 받으면서 급격히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육상양식어업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 추세에 있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서식처 파괴, 자원남획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로어업 생산량은 정체된 상황이나, 지속가능한 어로어업을 위해서 수계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식어업은 양식기술 개발과 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한편, 보다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국제적 위생관리 시스템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으로는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인공산란장 설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5년 부터는 유희저수지 자원화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어도개보수 사업을,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내수면양식단지조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내수면 단체 활성화,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내수면 어류의 주 산란기인 봄철에 갈수기 등으로 자연 산란장이 파괴되어 산란된 알이 말라죽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댐·하천 등에 인공산란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고 산란한 알을 보호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과 생태계 복원을 하고자 2018년도에 2개도 8개 시·군에 인공산란장을 조성하였다.

2) 어도개보수

하천에 물 흐름을 가로막는 보(淤), 댐과 같은 수리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은어, 연어, 민물장어 등 주요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이동 및 산란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어도는 내수면 수산자원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동통로이다. 그러나 파손, 노후화 등으로 어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2014년부터 어도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8년 까지 우선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104개소의 어도를 정비하였다.

3) 국가어도정보시스템운영

하천에 설치된 어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3년 전국의 어도설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모바일 전용 국가어도정보 앱(App)도 개발해 지자체 어도관리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도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현황 업데이트, 홍보물 제작 등 지속적으로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개선·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 처음으로 개최한 어도 사진 공모전을 통해 어도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4) 친환경 내수면양식단지 조성

외국과의 FTA 체결에 대비하고, 재래식 양식시설을 첨단기술이 접목된 친환경 양식시설로 전환하여 내수면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4년부터 내수면양식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말 현재 1개소를 완공하였으며, 2개소를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인근 수산식품거점단지와 연계하여 생산, 유통, 가공 및 관광 산업이 어우러진 6차 산업의 모델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5) 유희저수지 자원화

내수면은 난개발, 수질오염 등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한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농업용수 보관용으로만 사용되었던 유희저수지를 수산자원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유희저수지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4개소를 추진해, 2017년 1개소를 완공 하였고, 3개소는 추진 중으로 동 사업이 완료되면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강 등으로 농어촌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계획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1% 수준이지만 생산금액은 5% 이상에 달하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내수면어업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양식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내수면 자원조성 및 보호, 가공 및 수급 관리체계 구축, 내수면어업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전략을 기반으로 2017년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수면어업을 생산, 유통 중심에서 지역산업 중심으로 유어, 관광, 레저 등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할 예정이다.

다. 위생협력강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사무관 최재용

시행배경

수산물 수입 자유화로 국가 간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저품질·위해 수산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위생조건을 강화하는 등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패류 생산 해역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우리나라 수출 패류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하였으며, 일본 역시 수출 활넉치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등 6개국과 7개 약정을 체결하고 있어 수입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출 수산물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향후 계획

미국·EU 등으로 안정적인 패류 수출을 위하여 우리 부, 지자체, 관련 업계 등이 합동으로 지정해역 주변 가두리 양식장에 화장실 설치 등 육·해상 오염원 관리를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해역이용자의 의식전환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수출 패류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위생약정 체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강화하고 내실화하여 불량 수입수산물의 유입을 사전 차단할 것이며, 패류 등 생산해역과 수출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와 수산물 수출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원활한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라. 수산물 검역·방역 개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사무관 이상윤

시행배경

우리나라 양식산업은 1998년 100억 원 규모에서 2018년 현재 2조9천억 원 규모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양식장은 과다 입식에 의한 고밀도 사육과 이에 따른 수질 저하 등으로 인한 사육환경의 악화로 각종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혼합 감염에 의한 피해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연간 약 2,500억 원(사육량의 25~30%)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의 최소화 및 질병의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2008년 제정·시행되었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관세 규제는 약화되고 있는 반면 미국, 일본 등 수산강국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수입위생조건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식현장에서 발생하는 질병 대응 패러다임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수산용 백신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수출·수입 수산동식물 검역기반 구축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수산생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으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각적인 검역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검역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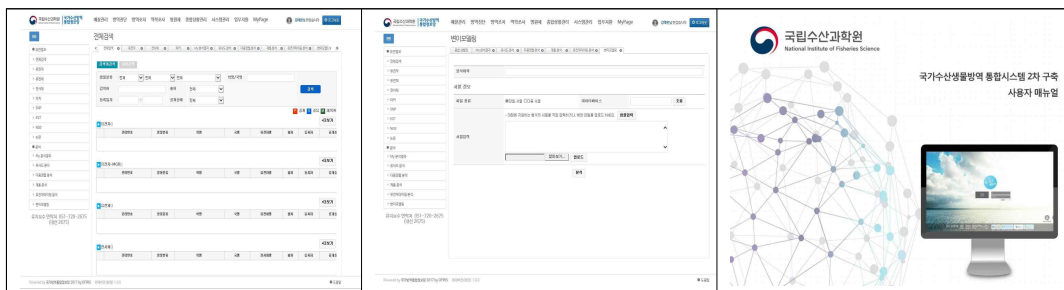
먼저 외래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모든 수산생물에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수산생물 수입량이 많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6개국과 검역증명서 발급요건을 협의 하였다.

또한 수입수산물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던 검역을 냉장 및 냉동 새우류에도 확대 적용하였다. 냉장, 냉동 새우는 국제기준에서 규정

하고 있는 질병 항목이 많고, 처리과정에서도 일부 병원체에서 위험도가 남아있어 국내 수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여행 및 국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을 통해 질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국 24개 공·항만 CIQ에 수산생물 검역관을 상시 배치하여 휴대품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18년 4월 이전까지는 자가소비용(5KG,10만원이내)으로 휴대한 수산물은 반입이 가능하였으나, 4월부터는 무게와 금액에 상관없이 해당 국가에서 발급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수산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4-7 수산방역통합시스템 구성



자료 : 국립수산물연구원 수산방역과

2) 수산용 백신 항원·접종법 개량 연구 및 개발

넙치 연쇄구균(*Streptococcus parauberis*)에 의한 질병은 백신 보급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백신 항원의 개량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의 넙치에 발생하는 연쇄구균(*S. parauberis*)의 혈청형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 상업용 백신으로 사용하지 않는 신규 혈청형의 연쇄구균에 의해 지속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되어 최신 유행하는 연쇄구균에 대한 백신 방어 효능을 검증하였다. 또한 백신 접종의 편의성을 높인 수산용 경구백신 개발을 위하여 백신을 어체내에 빠르게 흡수시킬 수 있는 경구백신(리포솜 코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넙치에 경구투여 시 주사백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백신 효능이 확인되었다.

또한 가두리어종(돔류)의 피해를 유발하는 참돔이리도바이러스(RSIV)의 예방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국내 분리주의 유전형에 대한 병원성 및 초기 면역 반응에 대한 기초 연구 수행하였다.


향후계획

수산물 수입 확대에 따라 외래 질병유입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검역 강화가 필요한 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등재된 질병 중 국내에서 검역을 실시하지 않는 전염병을 지속적으로 검역대상으로 추가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내 넙치에 유행하는 신규 연쇄구균 혈청형을 포함하는 다가백신을 제작하여 백신 효능을 평가하고 있으며, 수산용 백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유행 혈청형 백신에 대한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구백신의 효능 증진을 위하여 항원을 코팅하는 캡슐백신 및 경구용 면역증강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리포좀 경구 백신의 산업화를 위한 대량 생산·제조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중에 있다.

향후에는 가두리어종의 참돔이리도바이러스(RSIV) 등의 예방 기술 개발을 위한 면역원성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 생산단계 안전성 강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사무관 이상윤

시행배경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생산·저장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금속, 항생물질 등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 패류독소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1996년부터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하여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2001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으로 조사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2005년 7월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에서 수행 하던 저장 및 거래 전단계 안전성조사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여 왔다. 2012년에 「수산물품질관리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 개정되면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규정되어 실시되어 왔다.

2013년 7월 일본 원전 오염수 유출 사고 등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국내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

되었다. 그러나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안전성 조사 기관은 검역, 소금 수입검사 등 신규업무 폭주로 안전성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양식장 약 1만7천여 개소)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중앙 단위에서의 안전성조사에 대한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이에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도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분석 장비 구축 지원방안(2009년 7월)을 마련하여 지자체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2009년에 전남 1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 부산·경남 2개소, 2013년 경북 1개소, 2018년 인천·경기·충북·충남·전북·제주 6개소에 각 국비 10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2년 8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안전성조사 업무를 공동수행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2018년까지 4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관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업무를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방사능에 대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은 주 1회~월 2회, 원양산 수산물은 주 2회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결과를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과정을 공개하는 등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향후계획

정부에서는 조사물량을 확대(전년대비 5%)하고 양식장 조사체계를 마련하여 넙치 양식장은 연 1회,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양식장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 양식장은 5년 내 1회 안전성 조사 실시 등으로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국민의 먹을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품종 및 검사횟수 등을 확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협의를 수시로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바. 지속적인 어장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사무관 김건효

시행배경

우리나라 양식어장의 입지는 어장 설치·관리의 용이성, 태풍 등의 연안재해 예방성, 풍부한 먹이생물 등의 조건을 갖춘 반폐쇄성 만을 중심으로 개발됨에 따라 오염에 매우 취약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정 해역에서는 육상기인 오염원의 유입과 양식어장 자가오염 부하량 증대로 어장의 환경오염도가 악화되고, 양식어장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열악해지는 양식업 환경을 고려하고, FTA 체결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우리 양식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깨끗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어장환경의 보전·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993년부터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장기간 양식 등으로 어장이 노후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양식어장, 마을어장 등을 대상으로 52억 원(국고 80%, 지방비 10%, 자부담 10%)을 투입, 3,370ha에 대해 3,222톤의 퇴적물 수거·처리, 바닥갈이, 해적생물 구제 등 정화·정비를 추진하였다.

또한 연안어장의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간 이용으로 오염된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해 어장환경개선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장환경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어장환경기준설정 연구, 어장환경수용력 산정 연구, 이상 어장환경관측 시스템 구축 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안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부표(스티로폼)는 값싼 저밀도 제품이 대부분으로 태풍·파도에 쉽게 파손되고 쓰레기 수거도 어려웠던 것을 감안하여, 2018년에는 경남 등 7개 연안 시도의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100억원(국고 35%, 지방비 35%, 자부담 30%)을 투입하여 친환경부표 104만개를 양식어장에 교체·보급하였다. 아울러, 2018년에는 폐각 17.5만 톤의 친환경 처리를 위하여 35억 원(국고 20%, 지방비 60%, 자부담 20%)을 투입하였다.

한편 어장환경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2017년 평가대상 어장 4개소에 이어 2018년도 3개소(경북, 전남)에 대해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동 결과는 향후 지자체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등 면허제도 운용 시 활용될 계획이다.

향후계획

향후 어장환경평가 등 「어장관리법」의 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어장환경 개선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양식어장 정화사업, 양식어장 환경관리 연구사업,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양식 수산물 생산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3 수산식품산업 육성

가.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사무관 서밀가

시행배경

소득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웰빙식품 선호,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수산물 및 간편 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산식품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체가 영세하여 새로운 수산물 소비패턴 등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수산식품 개발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산식품 관련 인프라의 확충과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등이 요구된다.


시행내용 및 성과

정부에서는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해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1987년부터 산지에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영세한 수산가공업체를 집적화·규모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수산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가공·유통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8년도에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58개소)과 수산물처리저장시설(5개소) 등 총 63개소에 대해 국고 18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는 2018년까지 12개소 조성을 완료하였다.

향후계획

그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의 지원예산 대부분은 시설 신축이나 증·개축 위주의 하드웨어적 지원에 집중되었던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산지시설 등 수산물 가공 관련 인프라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가공품에서 단순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2018년 기준 수산물 가공품 중에서 단순냉동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5.4%로 수산물 가공산업의 한계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고, 수산물 가공품 브랜드화, 수출 확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지원 강화를 통해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수산식품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9개소의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나. 수산물이력제 사업 확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엄익환

시행배경

식품에 대한 안전·안심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로 국민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수산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0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산물이력제가 도입되었다.

수산물이력제는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어획(양식)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판매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산물 이력제 시행으로 식품사고 또는 위험 발생시 즉각적인 제품 회수가 가능해졌고,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수산물이력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매년 수산물이력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성 품목을 중심으로 '14년부터 중점추진품목을

선정('14년 7종→'16년 17종→'17년 20종)하여 해당 품종에 대해 컨설팅 및 물품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이력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18년 말 현재 수산물이력제 참여 품목은 고등어, 갈치, 참조기, 전복 등 41개 품종으로 8,256톤이 이력제 마크가 표시되어 출하되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산물이력제 참여율의 향상을 위하여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 대상 선정과 참여범위 확정을 위해 의무화 협의체를 운영(2회 개최)하였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생굴과 굴비를 품목으로 선정하였고, 대형 유통업체와 시범사업 운영 방안을 검토하였다.

향후 계획

주요 수산물 생산단체와의 업무협약체결, 이력제품을 다량 출하하는 지역 수협을 이력제 거점수협으로 지정하여 지원 및 홍보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도 '19년부터 '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주요 수산물 판매처 및 소비자단체와의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송, SNS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홍보 추진을 통해 수산물이력제의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다. 수산물 소비홍보 촉진 강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엄익환

시행배경

본 사업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어업인 공동이익과 소비자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영홈쇼핑 인정지원, 학교·군 급식의 수산물 사용 확대, 직거래 행사 등 생산자를 위한 판로개척 지원 사업과 '어식 백세 국민건강 캠페인'홍보, 영·유아 수산물 체험교육, 산지체험 등 소비자를 위한 홍보 사업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먹거리와 직접 관계된 1차 수산업을 홍보하여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 수산물에 편중되지 않고 수산업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공익홍보를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어류에 대한 식생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도모하고, 나아가 우리 수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기적 수요개발과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2005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공영홈쇼핑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판로확대, 직거래 지원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소비자 현장견학 프로그램 등을 통한 소비자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2년부터는 수산인의 긍지를 고취시키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수산인을 격려하기 위하여 “수산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식으로 백세까지 건강하게 살자’는 의미의 어식백세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2016년 고등어 미세먼지 논란 및 콜레라 발생 등 부정적 이슈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어식백세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기간 내에 수산물 소비를 회복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6년에는 미래의 수산물 소비자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산물에 대한 교육을 최초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18년에는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트렌드에 맞게 수산물 간편 요리법 발굴·홍보를 위한 ‘대국민 수산물 간편 레시피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향후 계획

2014년부터 시작한 어식백세 캠페인은 방송홍보를 통해 대국민 인지도가 다소 상승하였으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동 사업에 대해 지역축제나 일회성 행사의 경우 국가적 사업보다는 지자체나 민간단체를 통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바, 향후 행사지원을 지양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홍보활동 및 공영홈쇼핑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라. 수산물 수급안정 대책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엄익환

시행배경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을 주 생산시기에 수매하고, 설·추석명절 등의 소비 증가시기에 이를 주요 소비지에 방출하는 수산물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의 정부 비축사업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저장 또는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단체)에게 수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생산시기에 적극 수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필요한 시기에 이를 방출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979년부터 정부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고등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의 정부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비축품은 가격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에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냉동갈치·냉동명태·냉동오징어 등 5개 품목 23,158톤을 수매하여 계획물량의 95.2%를 달성하였으나, 냉동고등어, 마른멸치 등 특정 대중어종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계획 대비 수매량이 다소 저조하였다. 2018년 정부비축 물량 17,236톤은 설·추석 및 어한기 등 수산물 수급 불안시기에 전통시장,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에 방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였다.

2018년 2월에는 가격안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가격·수급 관리를 위하여 ‘2018년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동 대책에 의거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하였다.

민간 가격안정사업은 정부비축사업의 물가안정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설·추석 등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중 정부비축물량과 함께 민간보유물량의 방출은 물가대책 수단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은

오징어 생산량 급감에 따라 가격이 다소 상승하였는데 이때 정부시책에 따라 수산물 구매 지원 사업 참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오징어를 시장에 방출하여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4-72 2018년도 정부비축사업 실적

(단위: 톤, 백만원, %)

구 분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24,313	86,323	23,158	72,880	95.2%	84.4%
고등어	3,546	7,032	3,069	6,549	86.5%	93.1%
오징어	2,919	19,384	2,570	16,838	88.0%	86.9%
명태	15,804	24,873	15,995	24,181	101.2%	97.2%
갈치	1,202	13,504	1,056	12,241	87.9%	90.6%
조기	842	20,300	468	11,860	55.6%	58.4%
삼치	-	30	-	25		83.3%
천일염	-	1,200	-	1,186		98.8%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향후 계획

대중성 어종의 수급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산물 정부비축 물량을 대중어 소비량 (약 69만톤)의 약 4%수준을 목표로 구매·방출하여 수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며, 정확한 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 소비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범운영 중인 수산물 유통종합시스템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비축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정부비축과 민간 구매를 체계적으로 연계 시킬 수 있도록 제도운영 방안도 개선 할 계획이다

4 원양산업 경쟁력 제고

가. 원양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사무관 손소연, 사무관 박순형

시행배경

1994년도에 발효된 UN해양법에 따른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1999년 제23차 FAO 수산위원회(COFI)에서 IUU(Illegal·Unreported·Unregulated) 어업의 예방·억지·근절 방안 논의를 통한 2001년도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승인 등 국제사회의 수산 자원 보호정책 및 어업규제 강화, WTO/FTA 체결확산에 따른 수입 수산물 증가, 해외수역에서 조업경쟁 심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연안국들의 자원 자국화에 따른 해외어장 축소 등 원양산업을 둘러싼 대외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1957년 6월 ‘지남호’의 인도양에서 최초 참치연승조업을 시작으로 1990년대 원양어업 생산량이 102만톤을 기점으로 2000년 이후 55~65만톤 수준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국내 원양선사의 어업경영이 악화되어 원양어업 생산기반이 되는 원양어선에 대한 투자기피로 21년 이상 원양어선이 2018년말 전체 원양어선 214척 중 188척으로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원양어업 생산량은 46.2만톤으로 2017년 43.6만톤보다 2.6만톤(6.0%) 증가하였으나, 생산금액은 약 1조 1천억원으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자국의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세계 각국은 해외 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소수의 수산기업이 생산, 가공, 유통, 판매가 수직 계열화된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하여 세계 수산물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우리도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제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원양수산물의 국내공급을 위해 해외어장개발,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국제수산기구 분담금 지원 및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원양어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957년 국내 원양어업 태동 이후 해외수역을 무대로 하는 원양산업의 특성상 통계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2011년부터 매년 원양산업 전반에 대해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고 있고, 이와 함께 원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물 수출증진을 위한 노후한 원양어선의 현대화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지원 대상 확대, 지원 조건 완화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완화하였다.

원양어업 외에도 해외양식, 가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 현지 조사를 통한 우리 기업에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 및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해외진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해외투자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10개 국가의 투자여건(수산업 정책, 법령, 산업동향, 투자환경) 등을 조사·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원양산업 거점 국가의 교민 9명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임명하여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50년대~'80년대 원양어선 승선 중 사망한 선원에 대한 해외선원 묘지 관리 및 위령비 개·보수와 유골 국내이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원양선원으로 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또한, 원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에 5년 단위로 해외 수산자원의 합리적 보존·관리 및 개발·이용, 국가 원양산업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지원, 원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개발,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제2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14~'18)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차가 종료됨에 따라 1·2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시사점을 파악하고 대내외 원양산업의 정책분석 등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19~'23)을 수립하였다.


향후계획

2009년부터 시작한 해외수산 투자기업 지원 사업의 중요성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 규모가 적은 실정에 따라서 2017년부터는 융자 조건을 개선하고 해외현지 조사사업에 보조금도 지급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19년부터는 원양어선 대체지원은 중소 원양선사의 원리금 상환, 담보 문제 등으로 수요가 없었던 기존 융자사업을 폐지하고 원양어선 안전성 증대 및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선사가 노후 원양어선을 대체하여 새로운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적인 어업환경 및 조업규제를 빠르게 대처하고 지속적인 해외 수산자원 확보기반 마련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ODA 지원사업 확대, 연안국, 지역수산 기구 등과의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소 원양기업 및 원양산업 전문 인력 육성, 노후 어선의 현대화 등 원양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수산자원관리, 원양산업의 경쟁력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19~'23)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나. 수산분야 국제협력 강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서은정, 사무관 김승룡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사무관 박순형, 사무관 김상현

시행배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발효 1994년 11월), 1995년 ‘유엔공해어업협정’의 채택(발효 2001년 12월) 및 1995년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채택’ 등으로 국제수산자원관리에 있어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 간 협력, 각국의 책임 있는 어업 이행이 강조되고 있으며, 주요 상업 어종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 또한 강화되고 있다.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지속수산업에 관한 결의(61/105)」는 해산(海山) 등에서 행해지는 공해상 저층어업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말까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및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FAO 및 각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하여, 그리고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없는 수역에서는 각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저층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FAO는 2008년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 지침(Guideline)을 발간했으며, 각 지역수산관리기구별로 해산 등에서의 저층어업활동이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2009년 유엔은 2006년 결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엔총회 「지속수산업에 관한 결의(64/72)」를 통해 FAO 지침에 근거한 보다 강력하고 조속한 보존관리조치 채택 및 이행을 촉구하였다. 2009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2011년 유엔 차원의 결의 이행평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저층어업 규제 이외에도 상어 등 부수어획종 보호,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멸종위기 생물 보호 등과 관련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또한, 2014년 6월 FAO 수산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소규모어업을 위한 자율지침」을 기반으로 소외된 소규모 어업인 보호문제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고, 「기국평가를 위한 자율지침」의 채택으로 인해 향후 기국의 책임 있는 수산업이 강조될 전망이다.

전 세계의 참치자원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등 5개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동 국제참치기구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

참치는 고가 상업어종이라는 특성으로 한때 과도어획 상태로 인해, 어획 쿼터량 축소, 어업 세력 감소 등 참치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방안이 집중 논의된 바 있으나, 최근에는 ICCAT 및 CCSBT에서의 참다랑어 자원이 회복되고 있으며, WCPFC에서의 눈다랑어 자원량도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등 비참치기구에서도 “어종별 어획한도량 제도”, “선박감시체제(VMS)” 및 “어획증명제도”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 어업질서에 대응하여 우리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조업 보장과 책임 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수산물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국격 및 국익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새롭게 채택된 국제어업 규범의 이행을 위해 국내적으로 관련 법규 정비 및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에의 참여 및 가입 추진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어업규제 강화와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참여하지 않고는 공해조업이 곤란해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가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인도양 공해상의 비참치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저연승 및 트롤어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채택된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Southern Indian Ocean Fisheries Agreement)을 2014년 11월에 가입하였다. 또한 북태평양에서 고도회유성 어종(연어, 다랑어류)을 제외한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의 정식 회원국으로 2015년 6월에 가입하였다. 한편, 북극 공해상의 임시적인 상업적 조업금

지와 시험조업 등을 포함한 북극해 어업관리 협정을 마련하고자 미국, 캐나다, 러시아, 한국, 일본 등 10개국이 다자간 협상에 참여하여 2017년 11월에 최종 타결되었다.

2) 국제수산기구에서의 주요 활동 상황

우리나라는 국제수산기구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은 물론, 해외 어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국제수산기구 관련 회의 및 과학회의를 국내에서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기구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참석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어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유엔, OECD, FAO, APEC 등 수산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68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비공식회의에 참석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참여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문안은 최종결의안(Resolution A/RES/68/71)에 채택되었다. 또한 UN공해어업협정(UNFSA) 개정을 위한 비공식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룰 메이커(Rule-maker)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FAO 수산위원회(Committee for Fisheries)와 관련해서는 FAO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 지침(2008) 이행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2010, 부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련 논의에 대한 국내 수산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켰고, 동 회의를 계기로 한·FAO 고위급 양자회담을 통해 양자 간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2011년 2월, 한국과 FAO는 ‘수산양식 연구 및 역량 구축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개도국 공동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양해각서는 2014년 1월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협력 조항을 추가하여 갱신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통한 인류 식량문제 해결 및 청색성장계획(Blue Growth Initiative) 실현,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을 위한 인적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기본계획을 2013년 6월 FAO에 제출하였다. 제31차 FAO 수산위원회(2014,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는 FAO가 리오+20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색성장계획(Blue Growth Initiative)에 주목하며 한국이 FAO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이 FAO 청색성장계획의 목표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후 제6차 FAO 수산위원회 32의장단 회의(2015, 이탈리아)와 제8차 양식소위원회(2015, 브라질)에서 세계수산대학의 설립제안을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우리나라는 제32차 FAO 수산위원회(2016, 이탈리아)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어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제안서 마련을 위해 2015년 FAO와의 공동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5년 10월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제안서를 FAO에 공식 제출하였으며, 동 제안서를 제153차 FAO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전체 49개 이사국 중 25개국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2017년 9월에는 제16차 FAO 수산위원회 어류교역소위원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의장국 역할을 맡아 국제 어류교역 동향, 어획증명제도 지침 수립 및 이행방안 등 수산분야 주요 현안에 관하여 심층적 논의를 주도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FAO 산하 아·태 수산위원회(APFIC) 의장으로서 제72차 APFIC 집행이사회(2009, 서울), 제3차 지역자문포럼 및 제31차 총회(2010, 제주)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역내 능력배양 논의에 적극 기여하였다. 또한, 2015년 개최된 APFIC 제34차 총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IUU 어업 근절 노력 및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에 관해 참여 회원국들에게 설명하였고,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제안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환영의사를 확보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24일 FAO와 재정기여 협정을 체결하고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을 위한 개도국 역량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ECD 수산위원회(Committee for Fisheries) 부의장국을 역임한 이래 해양수산부가 부활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부의장국으로서 수산자원 회복, 기후변화, 양식 부문 등 주요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OECD 기후변화 워크숍(2010, 부산)을 개최해 향후 수산 부문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2년 12월에는 우리나라에서 녹색성장 양식 워크숍을 개최, 지속 가능한 양식업에 대하여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2013년부터 OECD와 우리정부가 함께 추진한 ‘해양경제 미래 보고서’ 발간을 기념하기 위한 해양경제 미래 심포지엄을 2016년 개최하였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주요 지역수산기구 및 국제기구에서 의장(CCAMLR 이행위, ‘18.10) (WCPFC 총회, ‘18.12), 부의장(IOTC 총회, ‘19.5) 및 사무국장(NPFC, ‘15.9)과 부사무국장(NPAFC, ‘16.9)을 배출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 주고 있다.

3) 양자 수산 협력 추진


우리나라는 2013년 EU와 미국에 의해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어업 국가로 지정된 후, 국내법 및 제도 강화 등을 통해 2015년 지정 해제 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IUU어업 근절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2018년 10월 EU와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현재 EU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예비 IUU어업국 지정해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경주한 노력은 국제적 모범사례로 인용되고 있으며, 태국, 대만 등 국가들에 IUU어업 근절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활발한 양자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계획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개도국 인력에 대한 수산 정책·기술 교육을 담당하고 수산 분야의 국제적인 연구와 논의를 이끌어갈 FAO 세계수산대학의 국내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2006년부터 개도국을 대상으로 물자공여, 기술전수 등 수산 원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지만, 이러한 원조가 개도국의 수산업 발전과 산업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산분야의 고급인력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 동안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을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의 강점인 교육, 기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개도국 인력을 교육하는 사업을 마련하였다. 세계수산대학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수산분야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초빙하여 수산 양식기술, 자원관리, 수산사회과학 분야를 교육하는 대학원 대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과정으로 2013년 6월 컨셉노트 제출이후 FAO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2014년 1월 체결하고 세계수산대학 설립 연구를 위한 FAO와의 공동연구를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FAO세계수산대학 설립 제안서를 2015년 10월 FAO에 공식 제출하였다. 2017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경대학교에서 24개 개발도상국 출신 45명을 대상으로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고, 향후 FAO 관련 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세계수산대학 설립 결정을 위한 안건을 2021년 FAO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 해외어장 확보, 수산자원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ODA사업을 추진하고 연안도서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 지속가능한 해외수산자원 확보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사무관 박철수

시행배경

해외어장 개발은 원양어업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동안 연구기관 및 원양업체 등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무릅쓰고 해외어장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1994년 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152개 연안국 중 125개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상 조업규제, 연안국들의 자원 자국화 정책 강화 등에 따라 원양

어선의 조업어장은 날로 좁아져 새로운 어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원양어업을 유지하고, 공해어장의 장기적인 이용을 위하여 해외어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질서에 부합된 환경친화적인 어구·어법개발, 첨단 장비를 통한 정확한 자원량 파악 등 종합적인 자원조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957년 지남호에 의해 인도양 다랑어 연승어업 시험조업을 실시한 것이 우리나라 해외어장 개발의 효시이며, 동 시험조업의 성공이 본격적인 해외어장 개발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사모아, 인도양 등 다랑어어장 개발, 북태평양, 캄차카, 러시아수역, 베링공해, 북해도 등 명태어장 개발, 뉴질랜드, 포클랜드, 페루, 북태평양 오징어어장 개발, 북태평양 꽁치어장 개발 등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원양어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2003년 「해외어장 개발 장기 정책방향 연구」를 실시하여 해외어장 개발 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러시아 및 일본수역에서 주로 조업해 온 꽁치붕수망어선의 조업쿼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대두되자 2002년 북태평양 서경어장에 대해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주변국의 조업쿼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예비어장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한바 있다.

2003년에는 남태평양 동부공해 전갱이어장을 개발하여 상업적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4년에는 북태평양 중부 돔어장 개발, 2006년 FAO 47해구의 이빨고기어장을 개발, 2011년에는 FAO 47해구를 조사하여 금빛눈돔어장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에는 FAO 41해구에서 오징어어장 개발을 위해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에는 서부아프리카 공해 전갱이 어장에 대한 자원조사와 CCAMLR수역 이빨고기 과학조사(향후 5년간 계속 실시)를 실시하였으며, '16년에 이어 '17년에도 FAO 41해구 VME영향 평가, CCAMLR 수역 크릴 및 이빨고기 과학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도에는 국내 오징어 생산량 감소와 전 세계적 오징어 자원량 감소 추세가 뚜렷해지고 우리나라 원양 오징어 주 생산지인 포클랜드 오징어 생산량까지 감소함에 따라 FAO 87해구에서 오징어 어장 개발을 위해 자원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73 해외어장 자원조사 추진실적

(단위: 억원)

조사기간	조사선	업종	조사수역	대상어종	예산
'01~'02	과학원(탐구1호)	트롤	인도양 심해	오렌지라피	18
'02.8~'10	연수원(갈매기)	붕수망	북태평양 서부공해	꽁치	3
'03.4~'6	연수원(갈매기)	붕수망	북태평양 동부공해	꽁치	4
'03.4~'6	연수원(갈매기)	붕수망	북태평양 서경어장	꽁치	3
'03.8~'12	과학원(탐구호), 상업어선 2척	트롤	남태평양 중부공해	전갱이	24
'04.6~'9	과학원(탐구호), 상업어선 2척	트롤	북태평양 중부공해	돔	29
'05.7~'10	상업어선 7척	채낚기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24
'05.8~'10	상업어선 1척	채낚기	NAFO 동부	오징어	4
'06.4~'6	상업어선 2척	근해통발	마살수역	장어류	8
'06.12~'07.5	상업어선 2척	연승	47해구 공해	메로	10
'07.9~'08.2	상업어선 3척	참치연승	미드웨이	참치	9
'07.7~'8	상업어선 2척	트롤	중부베링	명태	6
'08.8~'12	상업어선 1척	트롤	FAO 41해구	민대구	6.5
'08.9~'11	상업어선 1척	트롤	베트남 EEZ	조기류	6.5
'09.7~'9	상업어선 1척	트롤	FAO 41해구	민대구	4.3
'09.6~'9	상업어선 1척	트롤	베트남 EEZ	조기류	3.2
'09.8~'11	상업어선 1척	저연승	FAO 51해구	체르네	7
'10.8~'12	상업어선 1척	트롤	SAEFO	전갱이류	4
'10.3~'11.2	상업어선 1척	저연승	FAO 51해구	이빨고기	5.2
'10.3~'6	상업어선 1척	트롤	기니아 EEZ	돔류	4.8
'11.10~'11	상업어선 15척	붕수망	북태평양 공해	꽁치	8
'11.10~'11	상업어선 1척	트롤	FAO 47해구	금빛눈돔	1.1
'11.06~'08	상업어선 1척	채낚기	FAO 41·47 해구	오징어	4
'12.09~'11	상업어선 2척	채낚기	FAO 41	오징어	8
'13.10~'12	상업어선 12척	붕수망	북태평양 공해	꽁치	13
'14.5.1~'7.31	상업어선 1척	트롤	서부아프리카 공해	전갱이 등	2.5
'14.11~'15.3	상업어선 1척	저연승	CCAMLR 58,48해구	이빨고기	3
'15.5~'9	상업어선 1척	트롤	FAO 41해구	VME 영향평가	1.5
'15.12~'16.3	상업어선 1척	저연승	CCAMLR 58.4.1/58.4.2	이빨고기	4
'15.12~'16.5	상업어선 1척	트롤	CCAMLR 48.1	크릴	5.5
'17.5~'17.11	상업어선 1척	채낚기	FAO 77/61해구	오징어	4
'17.12~'18.5	상업어선 1척	저연승	CCAMLR 88.3	이빨고기	4
'18.10~'18.12	상업어선 2척	채낚기	FAO 87해구	오징어	7.5

자료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33개 수역에 85척을 투입(317억 원 투자),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어장성이 확인된 11개 수역에서 상업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계획

2001년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된 해외어장 자원조사사업으로 매년 쾡치, 전갱이 등 30,000톤을 어획하고 있으며, 매년 600억 원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다. 또한 공해상에서의 꾸준한 조업실적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수산관리기구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지 공관을 통한 주요 연안국과의 입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어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전 어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해외어장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계속하고, 2014년부터는 신어장 개발을 위한 해외어장 자원조사 위주에서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자원확보를 위한 과학조사 및 어장·쿼터할당 유지를 위한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자료 수집을 위한 시험연구 등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라. IUU 어업근절 및 통제관리 시스템 구축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사무관 김상현

시행배경

국제사회는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강력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원양어업은 원거리에 있는 조업현장을 정부나 선사가 직접 감시·감독할 수 없는 한계와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처벌로 인하여 일부 원양어선들은 IUU(16)어업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지속적인 IUU어업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13.1월)과 EU(13.11월)로부터 예비 IUU어업국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으며,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약 3억달러 규모의 대 미국·EU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수 있는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불법어업국이라는 실추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불법어업의 효과적 통제·관리를 위한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6) 불법·비보고·비규제(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

시행내용 및 성과

정부는 미국과 EU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 철회, IUU어업에 대한 통제·관리 강화,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조업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원양어업자 등과 협력하여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제기한 우리 원양어선의 준법 조업질서 확립 및 조업감시·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국과 EU의 IUU 어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이러한 성과를 양국에 통보하는 등 IUU 지정 해제를 위해 노력한 결과 미국은 2015년 2월, EU는 2015년 4월에 한국을 IUU 어업 가담국 지정으로부터 각각 해제하였다.

1) 불법어업 감시감독 강화

2014.3월부터 모든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선위치추적장치(VMS : Vessel Monitoring System)를 설치하고 우리 원양어선의 조업활동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업감시센터(FMC : Fisheries Monitoring Center)를 설치하여 우리 원양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감시·통제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조업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 조업일지 시스템을 구축('15.9.)하고 IUU 어업 고위험군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등 해외 수역에서 조업 중인 원양어선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2) 법·제도 개선

또한, 불법어업의 예방,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국제수준에 맞춰 2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IUU 어업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국제적 기준으로 재정립하였고, IUU 어업자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 IUU 어업에 대한 항만국 검색 강화, 해외수역에서 자국민의 IUU 어업 금지 등이다.

아울러, IUU 근절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POA)를 개정하여 FAO에 통보('14.10월)하고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한편, EU측에서 제기한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서아프리카 연안국 EEZ 침범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저층트롤 원양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을 추진하였다.

3) IUU 근절을 위한 어획증명제도 시행과 고위험군 선박 특별관리

2015년부터는 IUU어업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선사의 어획물을 국내로 반입할 때에는 항만국 검색과 어획물 반입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어획물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획증명서 제도를 도입·시행(17.6.30)으로 IUU어업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아프리카와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등 IUU어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역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조업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IUU어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향후계획

IUU 어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조업감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여 세계적 수준의 시스템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실시간 조업감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연안국, 국제수산기구 및 NGO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IUU 어업에 대응하는 한편, IUU 어업 취약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EU와의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마. 원양어업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사무관 손소연

시행배경

정부는 북태평양 베링해에서 발생한 원양어선 제501오룡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원양어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원양어선 분야 해사안전감독관 인력확보 등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그동안 원양어선의 안전관련 지도·감독규정이 「어선법」, 「해사안전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원양어선 입출항시 실제 승선원 확인, 어선검사 등의 관리시스템이 미흡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원양수역에서 조업해야하는 원양어업의 특성으로 효율적인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원양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수역인 베링해, 남빙양에서 조업

하는 원양어선의 안전사고 발생 시 승선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수방수복 비치
를 의무화하는 어선설비기준을 개정하였고, 원양선사의 안전관리 책임강화를 위한 자체
선박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양어선 표준 안전관리 매뉴얼을
조업 현실에 맞게 제정하여 제작·배포하였다.

2018년에는 국내항에서 출항하는 원양어선 77척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점검은 물론, 최
저 승무정원 승선 준수여부 등 총 16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북태평양과 러시
아수역 조업어선 15척에 대하여는 안전설비 점검 및 안전조업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3회에 걸쳐 안전
설비시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어선원 188명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향후계획

원양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근절을 위해 원양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도입 등 원양어선
안전관리체계가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계획이고 점점 노
후화되는 원양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조지원과 함께 현행어선에 대한 검사 강
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승무정원 승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항에서 출항하는 모든 원양어선에 대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사안전감독
관 소요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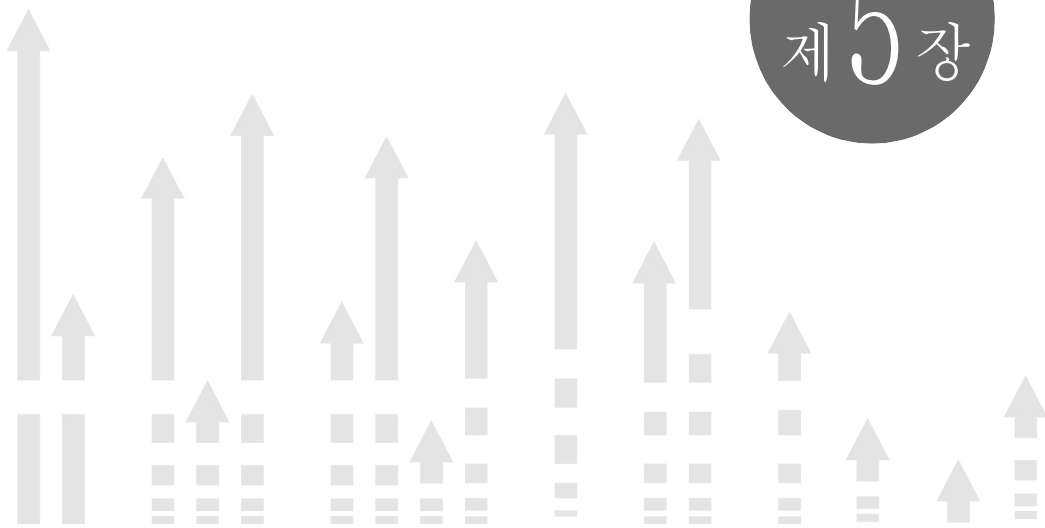
제1절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제2절 교육여건 개선

제3절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제4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및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제 5 장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1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개발과 사무관 박혜민

추진배경 및 개요

‘09년까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특성에 따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각각의 세부사업을 추진해 행정구역단위 분산투자,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 지역 간 유사·중복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0년부터 국토를 초광역개발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3차원으로 구분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광역발전계정을 신설하고 지역개발계정의 200여개 세부사업을 22개 단위사업(시도 자율편성사업 18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4개)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광역화·효율화·자율화를 위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10년부터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을 대상으로 ‘09년 이전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던 1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4개 사업유형, 즉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신규마을 조성,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생활기반 확충,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4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지역희망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확대하고 역량에 맞는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5년부터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 역량 강화’ 및 ‘기초생활인프라’의 유형으로 사업추진 내용을 개편하여 시행하였다.

표 5-1 일반농산어촌 123개 시·군

구분	해당 시·군
경기(10)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강원(9)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3)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21)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23)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1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세종(1)	세종시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표 5-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구분	세부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농촌중심지 활성화	통합지구 선도지구 일반지구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선도지구),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지원조건(5년이하, 국고 70%, 지방비 30%) - 통합지구 120억원, 선도지구 80억원, 일반지구 60억원
	종합개발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지원조건(5년이하, 국고 70%, 지방비 30%) - 10억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 지원조건(5년이하, 국고 70%, 지방비 30%) - 5억원
	경제(체험·소득)	○ 지원내용 -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 지원조건(5년이하, 국고 70%, 지방비 30%) - 5억원(소득분야는 2억원)

구분	세부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환경(경관·생태)	○ 지원내용 -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지원조건(5년이하, 국고 70%, 지방비 30%) - 5억원
	신규마을조성	○ 지원내용 - 마을기반조성, 공동이용시설, 마을운영·관리 등 ○ 지원조건(5년이하, 국고 70%, 지방비 30%) - 3~36억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단위]	종합개발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지원조건(5년이하, 국고 70%, 지방비 30%) - 40억원
시·군 역량 강화	시군역량 강화	○ 지원내용 - 마을역량진단, 주민 및 지자체 역량강화, 중간지원조직 등 ○ 지원조건(1년, 국고 70%, 지방비 30%) - 2.5억원(5천만원 단위 지원)
	시군창의	○ 지원내용 - 창의적인 S/W중심 사업 추진을 통해 시·군 전체에 효과가 파급될 수 있는 사업 지원 ○ 지원조건(5년이하, 국고 70%, 지방비 30%) - 10억원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빈집정비 농업기반정비	○ 지원내용 - 농산어촌의 종합적인 정비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 지자체의 계속소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표 5-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예시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기초생활 기반확충	문화	다목적마당(예시 :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 시설, 쉼터 등), 마을방송, 향토자원정비 등
	복지	고령자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 등), 다목적회관(농어업인회관 등), 서비스전달시설(이동식 세탁소, 도서관, 커뮤니티 버스 등), 마을문화시설(마을박물관,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등)
	주거·수질 환경 개선	빈집정비, 신규마을기반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 공동쓰레기 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혐오시설 철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5일장) 정비(간판정비, 비가림시설 등) 등
	도로·교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소형교량, 공동주차장, 교통안전환경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등
	안전· 재해대비	재난대피안내관, 간단응급처치장비, 안전펜스,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공동 방역시설 및 장비,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생산기반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소규모(집하장, 선별장, 가공장, 저장창고, 로컬푸드판매장 등) 공동 시설,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	농산어촌체험시설(폐교활용, 생태체험장, 야영장 등), 전망대,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지역경관개선	경관·생태	마을경관 가꾸기(수목식재, 산울타리 조성 등), 생태쉼터(둠벙정비 등), 마을 도랑·샘터·옛길 복원 및 정비, 소규모 친환경에너지시설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리더양성, 전문가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 및 장비 구입,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홍보	홍보·마케팅(지역축제 활성화, 마을 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마을기록화, 마을신문 등)
	지역 활성화	유지관리활성화프로그램,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 프로그램,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 조직 발굴 및 육성, 공동체활성화,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등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수립, 감리비,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총괄계획가, PM단, 현장활동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0년부터’14년까지 시도, 시·군에서 수립하는 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시·군 단위로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기획·시행하도록 하였으나, ‘15년부터는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대체하여 포괄보조계획의 법정계획화를 유도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해 시·군의 사업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정주체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및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으로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복지·소득 증진,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생활환경 개선, 마을개발사업 등을 통한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인에 기여하였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시·군 스스로 통합적인 중장기 농촌계획의 수립체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중장기 비전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질 제고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상향식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 체계를 단계적·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운동 확산을 유도하였으며,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시민의 귀농·귀촌 유인에 기여하였다. '18년에는 123개 시·군, 1,889개 내역사업에 8,794억원을 지원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기초인프라를 확충하였다.

표 5-4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도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계	872,334	879,351
세종	5,074	4,903
경기	27,739	32,741
강원	59,177	55,104
충북	81,446	90,500
충남	86,111	94,592
전북	94,713	107,502
전남	160,912	182,312
경북	176,884	144,703
경남	162,059	148,866
제주	18,219	18,12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예산설명서

향후계획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각 시·군의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사업 대상 선정 및 투자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으로 마을개발사업의 통합적 지원과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지역경관 개선,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 내용의 창의성 저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간 갈등, 소득사업 사유화 등 부실 운영, 중간지원조직이나 현장 지원체계 미비로 인한 주민 지원체계의 부족,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각 시·군의 창의적인 사업기획을 위한 다양한 사업군 신설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마을단위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자체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역할 분담 및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시·군 역량 강화 사업비를 확대·차등화하여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사후 역량 강화 지원을 마련하였다. 또한, ‘16년 신규사업부터는 마을 역량에 따라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및 ‘자립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역량 단계별로 지원가능 사업을 체계화하였다.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역개발과 사무관 정수진

시행배경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연간 1만동 이내로 지원하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지역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면서 도시민 유치 촉진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농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처 간

업무 조정에 의해 197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정비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와 협업으로 ‘15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취약지역(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연간 1만동 이내로 지원하며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확대 지원을 위해 2018년에는 농촌주택개량자금 재원을 5,500억원(‘17년 5,0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농촌주택개량자금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 등을 할 경우 소요되는 건축비로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 중 대출자가 선택을 하며, 금리는 연리 2%이다.

표 5-5 농촌주택개량사업 개요

(단위: 동, 백만 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물량(계획)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세대당 융자한도액	60	실소요비용	200	200	200
융자재원	600,000	500,000	500,000	500,000	550,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또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으나, 성장 혜택으로 부터 소외되어 낙후된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여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서는 이들 소외 지역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위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15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상하수도 설치·개량 지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지붕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노인·장애인 주택 장애물 제거 등

집수리,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사업 홍보,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로 기초생활인프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3년간 추진하며 '15년 첫해에는 지자체의 공모를 통하여 55개 지구(마을)를 선정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예산 300억원을 지원하였다. '16년에는 '15년 선정 계속지구(55개소)와 '16년 선정 신규지구(44개소)에 국고 38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7년에는 '15년 선정 계속지구(55개소)와 '16년 선정 계속지구(44개소)와 '17년 선정 신규지구(35개소)에 국고 535억원을 지원하였다. '18년에는 '16년 및 '17년 선정지구에 국고 380억원을 지원하였다.

'15~'17년 선정 134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면, 1,533동의 빈집이 철거되고, 6,985동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철거·개량되고, 3,087동의 재래식화장실이 철거 또는 수세식으로 개선되며 기초생활인프라(상·하수도 정비, 마을 안길 등)가 정비되는 등 11,025가구, 21,684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향후계획

농촌 주거환경 개선 정책은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거주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17년에는 주택개량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등을 통해 농촌주택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문화 정착에 노력하였다.

'15년도에는 개별로 진행되어 오던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안전과 위생에 취약한 마을을 사업대상지로 일괄 계획하여 기초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신규로 도입한 노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사업은 취약한 환경을 알고는 있지만 고령화·저소득 등으로 현실적으로 개선의 여력이 부족한 슬레이트 지붕주택, 집수리, 재래식화장실 등 까지 포함하여 정비·개선함으로써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사업은 마을에 꼭 필요한 소규모 활동(휴먼케어)과 주민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소프트사업 측면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 역할도 하고 있는 점은 이사업을 평가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지역 주민도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충족하며 살 수 있도록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3 농촌마을하수도 설치

☎ 환경부 생활하수와 사무관 성남준

📁 추진배경

농촌지역의 생활양식이 급격히 도시화되어 가정에서 생활수준은 도시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농촌지역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투자를 확대해 왔으나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농촌지역 생활수준 향상,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대부분의 주택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함에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어 하천의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농촌지역의 하수도시설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 시행내용 및 성과

하수발생원인 농촌지역 자연마을단위에서부터 발생하수를 처리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상수원 등 하천 수질오염방지에 기여하였다.

1) 농촌지역 하수도보급률

전국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93.6%('17년)이나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은 70.0%로 낮다. 특히, 면 지역의 평균 하수도보급률은 51.9%로 하수도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표 5-6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 추이

(단위: %)

구 분	'12	'13	'14	'15	'16년	'17년
전국평균	91.6	92.1	92.5	92.9	93.2	93.6
시 지역	94.6	94.9	95.0	95.1	95.5	96.1
농어촌 평균1)	62.1	63.7	65.9	67.1	68.7	70.0
읍지역	83.5	84.6	84.7	85.0	85.3	85.8
면지역	41.9	44.0	47.3	49.0	50.6	51.9

주1) 농어촌 평균 : 읍·면지역(군지역 읍, 면지역)

2) 농촌마을하수도 시설 현황

2017년 말 기준 농촌지역에 500m³/일 미만의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3,412개소(시설용량 271천m³/일)를 운영 중이다.

표 5-7 사도별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현황

구 분	전국	특광역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설수 (개소)	3,412	66	19	228	340	286	314	417	786	387	531	38
누적용량 (m ³ /일)	271	8	1	25	32	25	24	29	49	29	46	3

농어촌마을하수도 예산투자현황

최근 3년간('16~'18) 하수도분야 전체 투자 금액 6조 3,095억원 중 농어촌 지역은 19.6%인 1조 2,356억원을 투자하였고, '18년의 경우 1조 9,695억원 중 농어촌지역은 19.2%인 3,785억원을 투자하였다.

표 5-8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예산 추이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하수도 전체 예산	63,095	22,356	21,044	19,695
농어촌 하수도 예산 (비율)	12,356 (19.6%)	4,083 (18.3%)	4,488 (21.3%)	3,785 (19.2%)
농어촌마을하수도	9,627	3,147	3,478	3,002
면단위마을하수도	2,729	936	1,010	783

향후계획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농촌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에 정주기반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이농현상 등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마을하수도를 새로 신설하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도 개량하여 농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을 2020년 71%, 2025년 80%까지 향상시킬 예정이다.

4 하수처리 등 환경 개선사업

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사무관 박동명

시행배경

농어촌 지역에 매립, 소각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보호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해 국비를 지원(보조율 70%, 개소당 15억원 이내)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94. 2. 7 농업정책심의회에서 농어촌의 공업화에 대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를 촉구하고, 이어 '94. 6.27.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 국무회의 심의(농어촌특별세지원 대상사업에 “농어촌폐기물처리지원사업” 포함) 등을 통해 '95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었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2,825억원(국비기준)을 투자하여 238개의 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2018년에는 53억원을 투자하여 8개의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표 5-9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지원 추진실적

(단위: 억원)


구분	합계	'95~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고지원	2,825	2,210	84	80	84	84	80	79	71	53

자료 : 환경부, 2018년

향후계획

2019년에는 53억원을 투자하여 10개소 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비닐, 폐농약병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농어촌지역 공동집하장 확대 및 거점 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영농폐기물 수거·분리배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

 환경부 수질관리과 사무관 이수일

추진배경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공단지의 공장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하천 및 연안해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농공단지의 분양 활성화,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1988년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988년부터 2017년까지 2,733억원을 투자하여 94개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8개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84억원을 투자하였다.

향후계획

2019년에는 114억원을 투자하여 9개소(계속 7, 신규2) 처리시설 및 연계관로 설치를 지원하고, 향후에도 신규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기존 농공단지 내 처리시설의 증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고도처리 및 시설개량 등을 위하여 국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사무관 강민지

추진배경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할 때 사업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보조율 60~80%)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4,2713억원(국비 기준)을 투자하여 전국에 95개소*(12,031 m³/일)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했으며, 그 중 10개 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로 퇴비화 시설 4개소, 액비화 시설 2개소, 바이오가스화 시설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가축분뇨를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내구연한 증대, 처리효율 개선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이러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수질·생활환경 개선과 더불어 자원순환형 축산 기반 마련, 축산농가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 '17년 기준 105개 이하 증설 시설(강화 등 9개), 하수도시설로 용도변경(문경), 가동중지(순창), 신설(정읍샘골) 사유로 95개로 조정

표 5-1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

(단위: 억원)

구 분	합계	1991~2012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 액	14713	11,459	999	600	589	566	500

자료 : 환경부, 2018년

 향후계획

2019년에는 553억원을 투자하여 30개소 처리시설(계속 21개소, 신규 9개소)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30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시설의 처리효율 저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체 신규 시설 설치 시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가축분뇨 에너지화 처리 기반을 확대·조성해나갈 것이다.

1 농어촌 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 운영

☎ 교육부 대입정책과 사무관 김재국

📄 시행배경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한 농어촌 주민의 이농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996학년도부터 농어촌 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정원 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1996학년도 도입 시 정원 외로 연도별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선발 가능하였으나, 1997학년도에는 연도별 입학정원의 3%이내, 2006학년도부터는 연도별 입학정원의 4%이내로 확대되어 시행되어 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운영 여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며,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5-1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학생선발 현황

(단위: 교, 명)

구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대학수	199	198	195	196	191	187
모집인원	11,900	11,924	10,346	9,962	9,726	9,620
등록인원	11,180	11,124	9,872	9,510	9,292	9,192

자료 : 대학정보공시, 2018년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지원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으로 시행하고 있다.

표 5-12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유형


구분	학생 이수 요건	학생 거주지 요건	부모 거주지 요건
유형 I	농어촌 소재 중학교·고등학교 이수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 거주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 거주
유형 II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수기간 동안 농어촌 거주	-

※ 유형별로 각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 인정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향후계획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함께 농어촌 특별전형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농어촌에서 거주한 학생들에게 대학진학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2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 이한병

시행배경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UR타결 등으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4년도 2학기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해 무이자로 학자금을 용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자녀, 취약계층 자녀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은 졸업 후 2년 거치기간을 거쳐 1학기 분을 1년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사업운영을 위해 매년 융자재원의 일부를 사업을 위탁한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기존 정부 출연금 재원을 활용하여 별도 국고출연금 없이 학자금 융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21,614명을 대상으로 506억원(상환금 재융자액 포함)을 지원하였다.

표 5-13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현황

(단위: 천 명)

연도	국고 출연금	융자 현황	
		지원자수(명)	융자금액(백만원)
1994~2010	408,849	364,345	751,673
2011	60,482	33,273	110,295
2012	35,507	33,694	92,496
2013	31,100	40,267	102,115
2014	20,800	41,661	99,707
2015	11,400	37,191	90,121
2016		28,974	68,042
2017		25,797	60,477
2018		21,614	50,555
합 계	568,138	626,816	1,425,481

2004년부터 교육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당해 사업은 사업시행 이래 수혜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우선, 도입 당시에는 학기당 융자 한도액이 100만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한도액을 확대하였다. 2001년에는 학기당 150만원, 2003년에는 2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학교에서 통보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주민의 대학생 자녀 이외에 농어업인 본인 대학생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원격대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또한 2009년부터 지원 시 직전학기 성적(70/100점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연동되도록 하였고, 2011년 융자금 상환 거치기간을 연장(1년→2년)하여 수혜자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였다. 2014년에는 장기연체자의 회생을 지원하고, 상환율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약정제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제3자의 융자상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농업인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과 연계하였고 일반/취업후상환 대출을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으로 전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8년 2학기부터는 ‘거치·상환기간 선택제’를 도입하여 기존에 졸업 후 2년 거치, 1년 상환하는 방식에서 거치 및 상환기간을 각각 최대 10년씩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별 경제적 여건에 따른 상환규모 조정으로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등 학자금 대출지원을 확대를 위한 신청편의성 제고 및 상환제도 개선을 도모하였다.

향후계획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수혜 학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신청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학 외에도 농촌 지역의 고등학교, 타학자금대출 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농어촌융자 전환대출을 융자심사 완료 후 학생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전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대출자 및 단기연체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환안내를 실시하여 장기 연체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사업관리를 내실화하여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사무관 김미연

시행배경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취약지역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 1) 사업내용: 일반적인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의 국고보조율은 40%이나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는 보조율 80%(최대 16억원)을 적용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건립 촉진을 유도하였고 건립과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건립과 운영을 지원하였다.

표 5-14 최근 5년간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규	지원관수	24	3	6	10	3	2
	예산액(국고)	12,419	2,609	3,000	4,220	1,600	990
계속	지원관수	24	1	4	5	9	5
	예산액(국고)	19,864	800	2,964	4,700	8,300	3,100
계	지원관수	48	4	10	15	12	7
	예산액(국고)	32,283	3,409	5,964	8,920	9,900	4,090


- 2) 성과: 문화적 취약 지역에서의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단순한 정보제공 기능외의 각종 문화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유도하여 여가시간 활용, 자기개발, 인문적 소양 함양 등의 전반적인 농어촌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였다.

향후계획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핵심 문화시설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지속적 건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에는 9개관에 대하여 총 7,953백만원을 지원한다.

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및 개선

 농촌사회복지과 사무관 이승규

 시행배경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부터 추진되었으며, 2000년 12월부터는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상 어려움과 경제능력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률을 22%로 확대(중전 : 15%)하였다. 또 2004년 1월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WTO-DDA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을 연도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는 8%, 2005년에는 18%, 2006년에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 목표치인 28%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휴·폐경지 등에 대한 보험료율 경감, 재해 시 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주민 등 요양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표 5-15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실적

연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 지 원 율	28 %	28 %	28%	28%	28%	28%	28%	28%	0~28%	0~28%	0~28%	0~28%
월 평 균 지 원 세 대 (천세대)	504	484	457	435	413	402	387	368	351	335	326	318
지 원 예 산 (전 년 대 비 증 감)	1,431억 (6.9%↑)	1,559억 (8.9%↑)	1,559억 (-)	1,626억 (4.3%↑)	1,718억 (5.7%↑)	1,704억 (0.8%↓)	1,789억 (5.0%↑)	1,838 (2.7%↑)	1,730 (5.9%↓)	1,682 (2.8%↓)	1,686억 (0.2%↑)	1695억 (0.5%↑)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 지역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이며, 준농어촌은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 7월과 2008년 4월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취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까지 준농어촌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농어촌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 동안 국회 및 감사원에서 지적한 ‘고소득·고액재산가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하였다.(‘15.1.28). 동 법 시행을 위해 농어업인의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15.3.24)하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을 구체화하였다.(‘15.7.29) 즉,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자 중 보험료부과점수 1,801점부터 2,500점까지의 소득·재산 상위 5~1%까지는 정액지원(14,078 세대 지원축소), 보험료부과점수 2,501점 이상인 최상위 1%(3,630세대)를 지원제외 함으로써 보험료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연간 85.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

향후 계획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반적인 의료 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농어업인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의료·보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가.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 김진희

시행배경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노령 인구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 유병률 및 사망률, 교통사고 및 기계 사고 발생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농어촌지역의 의료수요는 매우 높는데 반해 민간의료기관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의 대부분은 공공 보건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공공보건기관은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장비도 노후화되어 있어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농어촌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 만성질환관리 등 포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지원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392억원으로 104개소, 2017년에는 363억원으로 58개소, 2018년에는 325억원으로 75개소의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시설 개선율이 73.0%(18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향후계획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농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향후 미개선된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뿐 아니라 농어촌지역 유형에 따른 지역주민의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를 파악하여, 체계적 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중점을 기울일 것이다.

나. 의료취약지역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 김진희

시행배경

의료시설 및 인력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도서, 오·벽지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은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균점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1981년부터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리’ 단위에 본격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 도서지역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2018년 말 현재 1,904개의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 경미한 수준의 진료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계획

농어촌지역 노인인구의 증가, 다문화 가정,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건진료원 선발 및 교육, 배치기준 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다.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우선배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 김진희

시행배경

공중보건의사제도는 1980년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시작되었으며, 무의촌지역 해소와 국민의 의료균형을 통한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시행된 이래,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주로 배치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1차 책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18년 12월말 현재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3,547명(의과 2,008명, 치과 479명, 한의과 1,060명)으로, 농어촌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3,106명(87.6%)이 근무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진료 및 응급처치뿐 아니라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표 5-16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구분	2018년			
	합계	의과	치과	한의과
합계	3,547	2,008	479	1,060
보건기관	3,106	1,669	448	989
병원선, 이동진료반	28	12	7	9
국·공립병원	199	144	3	52
국가보건기관	42	31	4	7
응급의료기관 등	112	112	-	-
보건단체, 복지시설	5	4	-	1
교정시설 등	55	36	17	2

향후계획

향후 지속적인 농어촌지역 필수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취약성 및 보건의료 수요 분석에 따라 농어촌 취약지역 보건기관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및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촌사회복지과 사무관 이승규

시행배경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써 연금 지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 지원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시행내용 및 성과

1995년 7월에 전국 농어업인과 군 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제도는 2017년 현재 월평균 376천명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99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을, 2004년 7월부터는 기준등급 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률, 기준등급 초과는 해당 기준등급의 1/2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등급체계로 되어 있는 표준소득월액을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금제도를 내실화하였다.

그 동안 정책 수혜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시 농어업인 확인서류를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하여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14년 12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국민연금공단 전상망 연계를 완료하고, '15년 1월 경영

체등록농가에 대한 농어업인 확인서류 제출 면제를 통한 지원신청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11만명의 농어업인의 서류제출 면제의 혜택을 누리고, 별도 증명서류 발급·제출에 소요되는 시간 감소로 약 13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표 5-17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구분	2003.1 ~ 2004.6	2004.7 ~ 2005.12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준등급 (기준소득 월액)	최저 등급의 1/2	12등급 (440천원)	13등급 (480천원)	14등급 (520천원)	620천원	730천원	790천원	850천원	910천원	910천원	910천원	910천원
지원금액 (월/원)	4,400~ 7,700	8,800~ 19,800	9,900~ 21,600	9,900~ 23,400	9,900~ 27,900	9,900~ 32,850	9,900~ 35,550	11,700 ~ 38,250	11,700 ~ 40,950	12,150 ~ 40,950	12,600 ~ 40,950	12,600 ~ 40,950

* 1995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의 지역가입자의 단계별 보험료 확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표 5-18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실적

(단위 : 억 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71	399	502	605	673	731	793	888	861	984	924	1,238	1,403	1,638	1,751	1,759

향후 계획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소득감소 등으로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연금보험료 수급 대상이 되는 농어업인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하고, 가입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촌 보육여건 개선

☎ 농촌여성정책팀 사무관 김재학

📄 시행배경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보육시설 등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젊은 농업인들이 도시로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양육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젊은 층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농촌 보육여건개선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이관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8년에는 공동아이돌봄센터 2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동식놀이교실 3개소를 지원하였다.

표 5-19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실적

(단위: 개소)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10	21	25	27	28	29	29
이동식 놀이교실	2	3	-	3	2	3	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향후계획

농촌의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젊은 층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촌 특성에 맞는 보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의 경우 보육 수요는 있으나 적정 수의 아동 확보가 어려워 민간 보육시설의 진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비 확보 애로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수요조사를 내실화하고, 사업신청 및 선정평가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할 계획이다.

3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촌사회복지과 사무관 이승규

시행배경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사고나 질병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다문화, 고령농 등 취약 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다. 농어촌 인구 과소화 등으로 농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즉각적인 노동력 보충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기초적인 가사생활 보장을 위해 2005년에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2006년부터 취약농가 인력 지원사업(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영농도우미는 농업인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이 어려울 경우 영농을 대행할 수 있는 도우미를 최대 10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 60천원의 70%를 국고로 지원하며, 30%는 자부담이다. 2007년까지는 65세 이하, 3ha 미만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2008년에는 69세,

5ha 미만, 2009년은 70세 이하, 2010년은 75세 이하, 2013년은 80세 이하까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원 조건도 2008년은 14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하였으나, 2011년에는 5일 이상, 2013년에는 3일이상, 입원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고, 2018년에는 15천 농가에 73억원을 투입하여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였다.

행복나눔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고령가구, 다문화 가정, 장애인, 조손가구 등 취약농가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행복나눔이를 최대 12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행복나눔이의 1일 활동비 12천원의 70%를 국고 지원하며, 30%는 농협에서 부담한다. 2006년에는 65세 단독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200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가구를 포함하였고, 2009년에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2010년에는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65세 이상 부부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토록 하였으나, 농촌지역의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부처간 협의를 통해 '14년부터 지원을 재개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농어촌지역의 공동 이용시설인 경로당에 행복나눔이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에는 14천 가구에 13억원을 투입하여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였다.

표 5-20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추진실적

(단위 : 천호, 백만원)

연도	계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2009	31	5,992	12	4,732	19	1,260
2010	33	6,520	13	5,460	20	1,060
2011	28	6,520	14	5,460	14	1,060
2012	25	6,300	15	5,460	10	840
2013	25	7,140	15	6,300	10	840
2014	26	7,560	16	6,720	10	840
2015	32	8,610	17	7,140	15	1,449
2016	32	8,610	17	7,140	15	1,449
2017	32	8,610	17	7,140	15	1,449
2018	29	8,610	15	7,252	14	1,337

* 예산 편성액 기준으로 재조정


향후계획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또한, 행복나눔이 지원을 통해 농촌 취약 농가의 기초생활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취약계층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도우미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비 확보 애로에 따른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조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 일반 국공립어린이집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 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사회적 경제

 농촌사회복지과 사무관 김정은

시행배경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직·간접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농업·농촌분야에도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존재한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2017)에 따르면, 농촌지역에는 5,045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활동중이며, 협동조합 3,250개, 마을기업 792개, 사회적기업 467개 등이다. 사업분야는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이 많고, 평균 자산이 3억원 수준으로 영세한 편이다. 인력 및 자금 부족을 운영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농업·농촌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있고, 농촌공동체회사,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농식품부가 선정관리인가하고 있다. 농촌공동체회사는, 2011년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활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활력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농어촌공동체회사’로 선정하여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양수산부와 분리되면서 지금의 농촌공동체회사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고, ‘18년까지 누적 262개소의 우수 농촌공동체회사를 지원하였다. 한 회사 당 총 5천만원 사업비의 50%를 국비 지원하며, 제품 홍보, 마케팅, 교육,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계획

농촌공동체회사는 기존의 농업법인 및 기타 법인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우에 선정될 수 있고, 선정되는 경우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당초 의도했던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의 확산이 예상보다 더디어,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컨설턴트 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돌봄·교육·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018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실천조직 9개소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비를 개소당 총 6천만원씩 지원하게 하였다.

향후에는 농촌공동체회사와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들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더욱 알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석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

2019년 12월 일 인쇄

2019년 12월 일 발행

발행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전화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23
해양수산부 (044)200-5426

디자인 및 인쇄 : 한라기획(주)(044)868-7334~5
